제428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2025년8월21일(목) 오전 10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8월21일 개의하여 8월22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2.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2000)
3.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상정된 안건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 2
2.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2000) ····· 2
3.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 3
o 상임위원장(법제사법 추미애) 인사 ····· 3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 4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 5
- 무제한토론 의원(이정헌) ····· 198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5인 서면동의) ····· 340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 341

(10시12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14일 잔디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절 전야제를 열었습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광복절 경축행사를 연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와 광복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3만 5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국회에 직접 와서 축제를 즐겼고 방송으로 시청한 분들의 호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매해 매년 광복절은 우리 민족

과 국가의 가장 큰 경축일입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우리의 승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룬 결과입니다. 광복절을 국민의 자부심을 북돋는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긍심은 통합의 기반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당을 활짝 열어서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광복의 주인도 국민이라는 뜻을 확고히 하는 것은 그래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올해 첫 걸음을 뗀 광복 전야제가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국회도서관 옆에 독립기억광장을 열었습니다. 무장독립투쟁,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무명의 독립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기리는 비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국민주권정신은 독립정신에서 출발했고 독립운동은 민주공화국 수립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 실현의 사명을 띤 국회가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온 국민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실에서 소개한 경기 의왕시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김소희 의원실에서 소개한 ACE 청년 포럼 회원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10시1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2000)

(10시1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항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이재강 의원, 김재원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명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18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o 상임위원장(법제사법 추미애) 인사

○의장 우원식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내겠습니다.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사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추미애 위원장 축하합니다.

---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10시38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우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최민희 의원, 황정아 의원, 박민규 의원, 노종면 의원, 조인철 의원, 김현 의원, 이해민 의원, 이정헌 의원, 김우영 의원, 서영교 의원,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10시41분)

○의장 우원식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많이 싸 들고 나오셨네.

○최형두 의원 이렇게 빨리 투표가 끝날지 모르고 지금 밑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화의 본산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압도적 다수로 이미 가결했습니다만 방송법 3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법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은 비단 방송법 자체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다시 통합시키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의결해 줄 것을 사실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방송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남은 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반대했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 또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우리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수많은 토론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잘못되었던 과거의 문제는 이번 정부의 여당과 다수당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현행의 법으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숫자에 중과부적으로 밀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 또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의원 예.

○의장 우원식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0시 43분에 문진석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좀 전에 또 의장님께서 공지하셨듯이 24시간 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분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공화당 정부 시절에, 무지막지한 그 시절에도 이 국회의 연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정말 큰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세워지고 또 폭압이 어느 순간에 멈춰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력이 허용하는 한 12시간 이상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 순서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정헌 의원님이신데 낮 시간에 다른 준비 하시다가, 다른 일 보시다가 자정 무렵쯤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통보하지 않고 제가 24시간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동료 의원께서 또 이렇게 독차지한다고 그래서……

원래 이것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독차지하는 겁니다. 다수당은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수당에 한번 ‘네 체력이 닿는 한까지 한번 호소해 보라. 왜 그런 반대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국민들에게 한번 호소해 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표결을 앞둔 민주당, 다수당의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표결 전에 ‘당론보다는 한번 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런 취지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저야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겠습니다만 백여 명이 넘는 107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1대 국회 때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지만 그 모든 정부에서 방송법의 기본 골조를 유지한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필리버스터까지 오게 된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국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안인데 우리 국회가 한 20년 전인가요,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였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도 압도적 다수당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국회가 동물국회로 세계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는데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자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의 다수당·소수당이 동수로 구성을 해서 안건 조정을 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숙의를 한 뒤에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다수결을 발동하자 이런 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진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우리 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였나 이분이, 두 분이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당시 저희 당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수당이었으니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국회가 당시만 해도 한미FTA 법안 통과시킬 때 이 민의의 전당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소수당 의원이 국회의장석을 향해서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그런 폭력의 동물적인 상황을 막고서 소수당이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물론 그때도 따져 보면 실제로 득표수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착시가 생긴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 물의를 일으키고 또 결과적으로 민의에 반해서, 오랜 동양의 그런 격언들이 이야기해 주듯이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말처럼 바로 그런 무리를 하다가 또 뒤집히기도 하고 소수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폭력적인 국회, 그런 동물적인 국회로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그리고 숙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지난 국회 때.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우리 국회도 원래 위너 테이크스 올(winner takes all)이었습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 시절에 여야는, 국회는 적어도 협치를 하자 그래서 상임위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을 했습니다. 그게 원칙과 전통입니다. 그때 세워진 것이 1당은 의장을 선출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오랜 전통과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원장을 또 새로 뽑았습니다만 원래 21대 국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21대 국회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제2당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왜? 의장께서 국회를 주재하시고 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법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면서 그런 균형을 유지하자고 한 것이, 그걸 요구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80석도 안 될 때조차도 법사위원장을 오롯이 차지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해서 몽니를 부린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이 당 저 당 다 비슷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과 전통이 되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장치 때문에 안조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숙의하고 다수당이 압도적인 숫자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조위도 무너지고 국회선진화법도 그 기둥도 다 무너진 마당에 지금 소수당 107석,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 45%가량, 그렇게 의석수만큼 국민 지지율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인데 국민의 과반이 좀 못 미치지만, 과반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민주당이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 차지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나마도 여당 의원들께서 또 하셔야 되니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미 2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통과된 2개의 법안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하고 문제 삼고 또 우리 방송계, 국민들이 문제 삼는지 또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이 왜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방송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지 또 방송의

문제가 지배구조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송의 보도준칙에 관한 문제인지, 이른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의 관행과 전통과 윤리에 관한 문제인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정부 여당 내에서도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 특히 1인 미디어, 유튜브 등 그리고 또 무분별한 언론의 창궐 때문에 수많은 허위 조작 뉴스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고 또 정치적 적대주의를 강화시키는 경향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 논의는 4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도 유튜브라든가 1인 미디어의 과도한 편향된 시각과 또 일방적인 주장 또 그런 알고리즘이 계속 확산되면서 공동체를 적대와 분열로 이끄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세계적 현상인지, 이것을 세계적 석학들은 어떻게 걱정하는지 유발 하라리의 책까지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상의해 보겠습니다. 12시간의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계속 되풀이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얼마 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정말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지 꼭 80년이 되었습니다. 지정학·기정학의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보편주의로 전 세계를 하나의 유니버설리즘으로, 글로벌리즘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WTO 체제로 번영을 누리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굴기하고 미중 각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75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지금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U 국가의 의원들이 노스 코리아가 유럽을 공격했다라고 유럽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정학의 시대, 한데 우리가 산업화로는 지금 세계에 우뚝 선 제조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중국의 저 엄청난 추격 그리고 아세안의 성장 또 인도의 성장 이런 성장으로, 여기에 유례없던 통상·관세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유례없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 표준을 보여 줘야 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기입니다.

경제는 3만 불 트랩에 갇혀 있고 수출은 더욱 힘들어지고 민생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광복 80주년이라는 것은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80주년이 70주년 그리고 50주년, 60주년과 다릅니다. 60주년은 우리는 회갑이라 그래서 동양에서는 육십갑자가 한 번 돈 일이라고 합니다만 서양에서는 원래 80년이 더 큰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우뚝 세웠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대명제를 남겼습니다만 그 연설에서 링컨 대통령이……

그 연설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80주년 하고도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87주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80주년 하고도 7년이 지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80주년이 지나면 이제 1년, 1년이 소중합니다. 100주년을 앞두

고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국력의 크기로 치면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수출품이라고는 돼지털이 1등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서는 지난 정부 때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서방 선진 7개국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국력이 큽니다. 그래서 G7 가입 논의가 일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문명의 대전환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3대 강국을 꿈꿀 정도의 국력을 갖췄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지난 광복 80주년의 그 영욕을 생각하고 그 빛과 그림자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는 위대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식민지의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 그 숱한 도탄과 한숨과 눈물과, 빛과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이제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도 인구가 감소해서, 자살률이 최고 높아서, 국민들이 모두 불행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소멸해 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수도권 일극화, 불행도 점점 깊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광복 80주년에 민생의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북녘 동포의 눈물을 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었던 제헌국회의원 선배들, 그 198명의 제헌국회의원 선배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부족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가기 위해서,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군용트럭 화물칸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특히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여당 때도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했고, 국민의 고통과 이 나라의 분열과 이 분열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대한 정치적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느꼈으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이 야당이 되었습니다. 야당으로서 한 번 더 다수당이 된 여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국회가 쌓아 왔던 그 전통과 원칙을 되찾고 가장 좋은 전통과 원칙을 회복함으로써 가장 좋은 지혜와 또 통찰을 모아서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서서 우리가 민생을 함께 살리고 혼란스러운 세계에, 격랑의 바다가 몰아치는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등대 국가가 되어서, G7 국가가 되어서, AI G3 국가가 되어서 세상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12시간 가량을 이끌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목적은 방송법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왜 어제 또 오늘까지 통과시킨 2개의 방송법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된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광복 80주년에 이어서 100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이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송법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해악이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방송법을 숙의해서 왜 고쳐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을 갈라놓고 있는 지금 공영방송 그리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그 무서운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징벌적 손배소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허위 조작 뉴스라는 것은 무엇인지, 페이크와 트루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탈진실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 국회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법안을 보완하고 어떤 지원을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송법 토론에서의 가장 요체는 뭐냐 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를 다시 살려야 된다, 우리 공동체를 진실과 정의와 공평한 보도·편성 이런 것으로 지켜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누구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의 운영과 경영과 보도와 편성을 넘겨준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도 믿고 또 국회를 믿고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해 준 국민에 대한 어떤 배신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공영방송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내막을 생각해 보고 거기서 벌어지는, 특히 그렇게 강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왜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왜 방송사 내부의 민노총 산하 거대 노조가 작은 노조를 핍박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지 그 방송사 내부의 내막, 그리고 그런 방송사 내부에 이른바 종사자라는 사람들, 민노총 언론 방송에 편성과 보도와 경영과 지배를 맡길 경우에는 그것이 장차 우리 정부 여당에게도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그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은 비유컨대 홍수의 시대,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미디어의 홍수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X, 수많은 미디어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꼭 맞습니다.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잘못 먹으면 확증편향, 그릇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AI가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정보 그리고 엉터리 정보를 통해서 심지어 영국의 경우에는 한 소년에게 인공지능이 여왕에게 테러를 가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 소셜미디어는 이렇게 되는가? 왜 소셜미디어는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서 버마에서 일어났던 메타, 페이스북의 폐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마실 물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면 샘물은 누가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비유컨대 그것은 공영방송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영방송, 바로 국민이 위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대로 임명되어서 최대한 공평하게, 최대한 편향이 없게, 최대한 정확하게 또 최대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또 최대한 글로벌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등대 국가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실 물. 그래서 동북아 사람들이 '아, 정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려면 BBC를 듣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에서는 KBS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래서 공영방송마저 그 홍수에 휩쓸게 한다면 우리는 유튜브, 소셜미디어에 이어서 공영방송마저도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한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것이 국가적 의제까지 흔드는 사례를 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광우병 보도 사태였고 당시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가 당했던 시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또 그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광우병 보도를 허위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MBC에서 사장이 되고 보도본부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하는 일조차도 이것이 노조 지도자가 생각하는, 노조의 핵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다르다, 그런 가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정부 여당도 이제 아주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선진국에서, BBC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공영방송의 표상이라는 그런 표준을 유지했느냐, 또한 BBC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고 BBC의 이사진은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방송법 개정안이 또 공표된 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 두 개의 세상을 읽습니다. 혹시 신문들 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문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 있습니다. 한편으로 치면 진보요 다른 쪽은 보수고, 한편으로 보면 조금 민주당 성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성향입니다. 요즘은 국민의힘 성향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좌편향 또 어찌 보면 우편향,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뉴욕타임스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뉴욕타임스가 세계의 표준인 줄 생각합니다만 미국 워싱턴에 가더라도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떤 신문 본다고 자랑하면 '넌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낙인찍히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CNN 본다고 하면 '너는 CNN 보는구나. 너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FOX News 보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소셜미디어로 가면 이건 더 극단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보낸 메일을 보니까 유튜브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왜 나한테 이런 유튜브가 추천되느냐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증편향에 휩싸이게 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또 어떤 어떤 음모론 또 어떤 어떤 음모론에 우리가 마구마구 막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휩쓸리게 되고 더 극단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영방송만은, 적어도 지상파를 사용하는 KBS, 또 지상파 국민의 재산입니다. 지상파, 이 비싼 지상파를 SBS는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공영방송, EBS에는 이걸 공짜로 줍니다, 국민의 재산인 이 지상파를. 그리고 또 국민의 방송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세상, 두 개의 세상, 점점 적대화되어 가는, 우리가 비록 먹고살

기 힘들 때도 이렇게 세상이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유언비어가 많았습니다. 유언비어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인 만큼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또 그것이 전파되는 속도라든가 그것이 굉장히 좀 실제로 지금처럼 그렇게 위태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동료 의원님들 갑자기 문자 폭탄이 쏟아지면 그것은 필시 어떤 유튜브가 좌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개의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하나는 오늘 의결되었고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습니다만 지금 단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CNN, FOX News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정부 여당이 최근에 입법한 입법 조치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바꿀 수 있다. 미국에서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의 BBC 또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와 일본의 NHK에서 만일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 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가 그 방송사의 사장과 이사 선임을 좌우하고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 직군을 배제하고 그 뻔한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맡긴다고 하면 BBC라든가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BBC하고 독일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로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에게 '이걸 한번 재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제도는 과거 도시국가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근대 문명국가의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가, 이런 법제가 그런 대의민주주의 제도와도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유명한 학자의 글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 달라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그렇게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제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에게 글로벌 표준을 이야기했습니다. '21대 국회 때까지 여야 의원들이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되고 했지만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21대 국회까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정파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지난 정부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그 정해진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영방송을 더욱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최적의 인물을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에 임명했는지, 우리 당에서 그렇게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러나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런 잘못을 잘 안다면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신임하고 해서 임명하면 됩니다.

우리는 민주당 대통령과 또 민주당 다수당에서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일정한 몫의 방송위원과 또 방통위원과 또 방송사 공영방송 이사에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고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되면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 때 이야기 다르고 야당 때 이야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당 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야당 때도 그대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악순환은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에 국회가 의결했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을 7개월씩이나 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에 7개월 동안 결론을 미룬 법제처장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빨리 안 된다고 결론 내리거나 아니면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면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국회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국회의 의결이 있었으므로 신속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시 야당에서는, 압도적 다수당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 몫 3명 전체를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을 추천했는데 국회에서 의결조차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7개월 몫은 지난 정부, 저는 여당의 탓, 당시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대행 문형배 소장대행과 또 저랑 이름이 같은 김형두 헌법재판관께서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좋습니다. 7개월 동안 그랬다 치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 왜 국회는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왜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2인 체제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할 몫 한 분이, 지난 대통령이 임명하셨던 분이 사퇴함으로써 대통령이 한 분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네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분을 추천해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내고 이제 곧 방송통신위원회법도 어느 방식으로든 바꾸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에 관해서는 그렇게 바꾸지 않는 것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는 불가피한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뭡니까? 이게 합의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5인인데 장차 7인이 되든 어쨌든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임명된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위원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주요 사안을 합의제로 의결하도록, 협의해서 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입니다. 왜 그것은 방치합니까? 신속하게 이 공백을, 공석을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역시도, 앞에 방송법 개정안, 방문진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이 모두 노리는 것은 부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장과…… EBS법은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EBS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이 그대로 사장이니까 이 정부 시절에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하겠습니까만. 그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MBC도 그대로 다 사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YTN, EBS, KBS, 연합뉴스TV 이런 곳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도 법을 바꾸어서, 그 골조는 가만둔 채 기구의 이름만 바꾸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갈아 치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편법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원리와 취지와, 지난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신 대로 되풀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부에서 광복 80주년, 그래서 광복 80주년하고도 내년은 첫 번째 1년이요, 그다음 해는 두 번째 2년이고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더 채워서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국가 소멸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부흥을 꿈꾸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법과 법의 원칙과 또 글로벌 세계의 보편주의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이진숙 위원장을 처음 참여시킨 것을 보고 사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직전 정부 때는 당시 방통위원장이 종편 승인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참 뜻밖이다. 통합적으로 가는구나' 잠시 착각도 했었습니다.

역대 방통위원장은 모두 신망받고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방통위원장이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정쟁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방통위원장만큼은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난 사례는 종편 승인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물러나게 하려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켜서 8개월 동안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똑같은 재판부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기각시켰으면 똑같은 권위를 인정해서 그 8개월은, 8개월뿐 아니라 그 임기를 다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운 방송통신 한 분을 임명하시고 또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정말 균형 잡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과 함께 우리 당의 추천 몫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걱정할 만한 그런 극단적인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무리수를 씁니까? 글로벌 표준에 없는 이런 무리수를 씁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4년 전 사건을 한 번 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제사회가 그냥 대충 아무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는 '저 나라가 보편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저 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뭔가 흔들려고 하는구나. 저 나라가 보도·편성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자당의, 자기 진영의 사람들로만 채우려고 하는구나. 아니, 세상에 방송사 사장을 3개월 만에 일제히 바꿔?'……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우리 대통령, 정상회의 때 권위도 무너집니다. 바로 4년 전이 그랬

습니다. 그 4년 전 사례도 제가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소상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구조 복원이 급선무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른바 가짜뉴스, 대통령과 그 부부도 유튜브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고통을 겪으셨지요. 그래서 최근에 법원에서 그 부분이 손해배상 판결이 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 주장, 우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책임자를 불러서 여러 차례 호통도 쳤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건 계속 고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방송통신위원을 빨리 임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법을 바꾸어서 새 법의 부칙에 '이 부칙이 발효되는 시기부터 모든 공직자는……', 이것 위헌입니다. 이것 왜 위헌이 되는지를 제가 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낱낱이 읽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 빨리 임명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가장 신임하는 방송통신위원과……

구글 같은 데서의 이런 잘못된 알고리즘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권위를 해치고 또 지난 정부 대통령도 똑같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 극단적인 세력이 이제 전당대회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을 붕괴시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서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의 문제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연히 방송사 사장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물의를 빚고서…… 4년 전처럼 유엔의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급히 이 표결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 개정안을 또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긴급 서한을 올리고, 그 긴급 서한이 공개되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기 전에 급히 정부 여당이 심야 표결을 중단시키는 그런 과거를 한번 새겨보시고, 지금 그걸 피하려면 빨리 방송통신위원부터 제대로 임명해서 이번에는……

여야 추천 3명인데 빨리했으면 지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 다수를 장악할 수 있지요. 내가 그때 빨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2명 이미 했을 테고 우리 1명 됐을 테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1명 남아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3 대 2로 됩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2명을 하고 민주당이 1명 하고 또 대통령이 1명 추천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이분 국제적인 존중을 받던 언론인 출신입니다.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어제도 우리 상임위가 이 문제로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는데 한쪽이 극단으로 나가면 다른 쪽도 극단으로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인격 말살을 하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계십니까?

어제 내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국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AI 생태계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에서 우리

국회 상임위에 대해서 정말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니, KBS·MBC·EBS 멀쩡한데 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난리냐? AI 기본법 이것 어떻게 좀 보완하고 어떻게 좀 더 진흥하고 해야 하고…… 우리 과학기술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얼마 전에 합성생물학법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만 ‘바이오생태계·바이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은 언제 만들 거냐? 우리 R&D 언제 어떻게 지원할 거냐? AI만 다가 아니다, 기초과학기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온갖…… ‘그리고 우주항공은 어떡할 거냐? 그리고 원자력안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사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지난 1년 내내 그건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전체 결산만 하고 그건 다른 때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현안질의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어제도 온통 이진숙 위원장 인격 말살과 공격과 또 이걸 조금 스스로 자기 변호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몰아붙이고.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 한 분을 빨리 지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우리 당이 이번에는 여야 3인을 좋은 사람들로 같이 한번 올려 봅시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극단적 인물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서로 패를 다 까고 하나하나 심사하십시다. 그래서 방통위원 5인 체제부터 복원하십시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걱정하시고 여당도 걱정하시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의 허위 알고리즘 이 문제를 빨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힘도 없고 하지만 제 말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송통신위원 임명합시다. 지금 우리 당이 2명의 몫을 추천합니다만 그 몫에 대해서 여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여당이 꼭 배척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배척하는 이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법을 고쳐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듭니까? 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자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 구조를 빨리 복원하자는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언론에서조차도,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서두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는 단체와 사람들의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학자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입니다.

헌법 1조가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조그마한 권력·권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까닭은 국민으로부터 선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8월 초순 이틀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당의 김장겸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상휘 의원께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께서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론을 보셨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이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뺏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방송법 개혁안의 실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너무 더워서인지 그냥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의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방송의 보도 편향의 문제 또 공영방송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또 방송을 걱정하는 이유가 ‘저쪽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선거 때 우리한테 불리한 보도 또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매우 악의적인,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하고 민주당도 그런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배구조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배구조를 통하면 되겠지요. 되겠지만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 국민의 위임을 배신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처사이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중에 매우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 사례를 광우병 보도 사태 때 상세히 당시의 여당, 당시의 정부가 그렇게 믿었던 공영방송에게 어떤 정치적인 린치를 당했는지를 제가 낱낱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우리가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고 그러면 지배구조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당 다수당께서 지난 정부가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만 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공영방송의 보도와 편성과 또 이런 경영을, 국민을 합리적 이성의 토대 위에서 통합하고 엄청난 문명사적 도전, 국가 존망과 생존·번영의 기로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경험, 통찰과 어떤 그런 걸 묶어 낼 집단지성의 채널로 만들자,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 우리 당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BBC라든가 또 미국 PBS, NHK 또 유럽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공영방송은 공정하고 정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방송이 되었나를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우리 정치는 적대와 증오, 편 가르기의 알고리즘으로 분열과 충돌의 회오리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우리 편만 편들고 싶고 믿기 싫은 것은 배척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미디어뿐 아닙니다. 방송까지 지금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방송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지적했던 충돌의 알고리즘, 갈등과 대립의 알고리즘이 우리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싹튼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역사도 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해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 언론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12시간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24시간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고작 24시간 하는 필리버스터 해 놓고 말이야, 야당한테 시간을 다 뺏겼다고 또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말로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술의 실패이기도 한데……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당이 그나마 알량하게 24시간 동안 한번 너희 이야기하고 싶은

것 다 이야기해 보라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 저거 하면 이야기해 봐' 이런 기회 줘 놓고 그나마 그걸 뺏어 가지고…… 지난 첫 번째 방송법 개정안 때입니까? 원래는 그걸 몇 시간씩, 몇 시간씩 나눠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 되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예고했듯이 의원님 대기하지 마시고……

필리버스터 해 보신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기다리는데 앞의 의원이 언제 끝날지 곤혹스럽습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입은 타고 지금부터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도 않고—배탈 나면 안 되니까—이런 상황인데 앞의 사람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대개 시간을 알려 줬습니다. 몇 시에 끝나니까 다음에 하시고……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꼬박꼬박 하시겠다고 하니까, 세 번째 오신 의원, 네 번째 오신 의원님이 끝까지 달리는 바람에 우리는 완전히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 바보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필리버스터를 그나마 굉장히 소중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의회제도의 관행에 따라서 제한을 좀 풀고 아니면 당초 국회선진화법에서 만들었던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안조위는 원래 원내교섭단체 다수당·소수당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3 대 3인데 거기에 무소속을 끼워 넣어 가지고 4 대 2로 해 가지고 안조위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켜 놨고 이제 안조위를 잊은 지 오래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 부르던 노래처럼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이런 말이 있는데 안조위를 잊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안조위를 쓸 생각도 못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안 돼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건데, 그런데 24시간 필리버스터지만 그나마 이게 이번에는 좀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결국 오늘까지 하면 다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4일 동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한 보름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날 24시간씩 쪼개지는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부 언론이나 고약한 비평가들에 따라서 힘도 없고 무력한 야당, 고작 필리버스터 그것밖에 쓸 수 없는 야당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던 것은, 그나마 필리버스터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계가 그토록 걱정하는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보름 이상의 숙고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필리버스터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여당 의원 한 분이 끝까지 다 하는 바람에 우리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필리버스터는 적어도 시작과 끝은 그래도 소수당이 해야지 다수당이 온갖 발언 기회를 다 차지하고……

지난 1년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의 발언 기록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발언 기록 1위는 누구나 짐작하듯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발언 2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상임위원장들께서 국회의원들, 상임위원들 20명 발언할 때마다 코멘트하고 주석 달고 이렇게 하면 상임위는 왜 합니까? 합의제는 아니라 하더

라도 상임위라는 것이 서로가 토론하고 이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데 상임위원장이 판관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독임으로 해 버리면 그 상임위는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그런 기록이 발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 1등은 과방위 간사 최형두, 2등은 비슷한 수치로 당시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발언 수에도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런데 저분들,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은 상임위원장에서 지난 1년 동안 발언한 횟수가 1만몇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저걸 해도 4000번, 5000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24시간 동안 조금 우리가 호소를 해 보자 하는 것도 쪼갰으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다음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또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께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절절한 서한을 읽어 보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을 걱정하는 노란 편지지, 이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회장이 뿌린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교육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곧이어 이어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손경식 회장,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회장님의 걱정에 대해서 읽지 않아도 이 절절한 심정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는 방송법 자체, 교육방송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도 조만간에 고쳐야겠습니다만 남은 24시간 동안 이 법의 표결은 좀 법안을 다시 숙의해서 지연시켜 주십시오.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상정하실 것 같으니까 그걸 반대토론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왜 이걸 표결하시면 안 되는지 나중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릴 골조를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 달라, 오늘 24시간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 다음 법안으로 지금 상정이 대기 중인 이 법안을 정말 심각하게 재고해 달라는 것도 먼저 부탁드립니다. 법안이 상정된 뒤에 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서 24시간 호소하는 것보다도 미리 상정을 좀 미루고 조금 더 숙고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개정안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교육방송법의 문제도 제기하겠습니다만 아울러 내일모레 또 상정하려고 하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필리버스터 방송 3법을 나눠서 함으로써 국회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데 조금이라도 긍정적 효과를 좀 끼치기를 바라는 부분은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보름 동안 가졌고 앞으로도 24시간, 48시간 더 가지셔서 마지막 숙고해서 상정하지 마시고 더 숙의해 달라라는 그런 호소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탄핵의 불확실성이 끝나면서 주가가 정말 놀랍게 올랐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

재명 정부의 신속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주식시장에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상승폭이 이재명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 한동안 아시아 최고, 세계 비슷한 수준의 선진 주식시장 대비 최고라고 그랬는데 지금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주식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기업 보십시오. 우리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관세 압력, 변화된 통상환경에서 고전하면서 정부의 한미 관세·통상 협상 타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업들이 그 숱한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투자를 약속하고 정부와 함께 가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는 생산라인이 언제라도 중단되고 더 많은 조세 부담에 휘둘리며 결국은 주주와 국내 산업에 대해 막대한 손해로 돌아갈 악법의 공포에 이중 삼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마당에 글로벌 경쟁은커녕 국내에서 주저앉도록 하는 악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2개가 들어왔습니다만 마지막 하나인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문화적 파워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뒷받침하기는커녕 공영방송과 보도채널 모두를 국내 특정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게 될 그런 위험한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처리된 그리고 공표된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외신들이 알면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놀랄 것입니다. CNN, FOX News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BBC에서 사장을 친정권 인사 혹은 특정 진영 세력,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인사로 바꾸기 위해서 이사진을 3개월 내에 전원 교체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민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든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영진을 그냥 강제로 바꾸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골간인 자유민주 체제의 사유재산 보장,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판 CNN을 표방하며 나선 YTN은 외환위기 때 공기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을 해 봤기 때문에 YTN의 지배구조, YTN의 구조 또 YTN이, 그 공기업이 한동안 우리 담배인삼공사(KT&G)가 외국인 지분이 많아서 우리 방송법을 위반해서…… KT&G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법상으로는 외국인 회사는 YTN을 소유할 수 없도록, 우리 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KT&G 지분을 매각하거나 바꿔야 되는데 KT&G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YTN 노조가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때 제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당시 경제수석과 이런 문제를 상의했습니다만, 시장에 한 번 잘못 발을 디디면 끝없이 정부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YTN은 사실 외환위기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CNN이라는 곳인데 어렵다고 하니까 당시에 남산타워도 유리한 조건에 넘겨주고 또 당시에 여유가 있던 공기업들이 지분을 인수해서 사도록 해 준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도록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CNN이 미국 공기업들의 소유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YTN을 도와줬던 그 공기업, 한전이지요. 예컨대 한전의 그 계열사가 한전KDN인데 한전이 지금 200조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열사들이 이제 YTN 주가가 좀 나아졌으니까 팔아서 그 부채라도 좀 탕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YTN은 스스로 일어서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마사회, 마사회 이것 경마사업 해 가지고 돈 벌어서 여러 복지사업에 후원합니다. 마사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후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YTN 쓰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건전한 경제, 민간기업에게 다시 돌린 것인데 이제 YTN의 목적은 정말 미국 CNN과 경쟁하면서, 또 프랑스24와 경쟁하면서, 세계적 뉴스 채널과 경쟁하면서 글로벌 뉴스에서 한국 발신의 힘을 우뚝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다시 공기업으로 돌려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이것은 CNN의 대주주가 미국 공기업이라면 저는 뭐라고 하든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CNN의 이사나 사장과 보도·편집·편성을 정부 여당이 좌우할 수 있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이처럼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주장과 위헌적 입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CNN 같은 글로벌 매체와 경쟁토록 해야 될 방송사들을 이렇게 자꾸 우물 안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가짜뉴스 방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진짜뉴스에 재갈을 물리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언론중재법 개악안이었는데 당시 제가 문체위였습니다. 참, 저는 무슨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방송 3법, 그때는 언론중재법을 마주치는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낱낱이 이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마침내 국제언론단체와 유엔에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서한을 보내고 또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과 APEC 정상 다자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 글로벌 원칙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우물 안 악법들에 대해서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해 줬으면 좋겠고, 방문진법부터 그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송법은 국회에서 다시 조만간 긴급하게 숙의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꾸 왜 '민노총' '민노총' 그러느냐 그러는데, 제가 사실 언론인 출신이지만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문화일보라는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도 신문노조와 방송노조는 그 파워가 다릅니다. 신문노조는 사실은 파업을 못 합니다. 파업을 하면 신문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방송은 파업을 해도 대체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고 방송 전파가 끊이지 않는 한 방송은 계속되어서 방송사 노조의 힘은 신문사 노조의 힘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언론사, 공영방송 내부의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법의 정체를 바로 집어서 '이것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법에 어떻게 노조가 있냐' 그러시는데 그 내막을 제가 샅샅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그 당시 언론노조는 거의 압도적으로 민노총 산하입니다. 제가 언론노조 문화일보 조합장을 할 때는, 그때 위원장이 최문순 이사입니다. 저는 그 당시 최문순 언노련 위원장 요청으로 언노련 감사도 했습니다. 당시에 노조위원장으로서 언론사노조 위원장 중에 최장 단식농성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동안 최 위원장이 언노련을 좀 본격적으로 맡아 달라는 그런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사 파업과 방송사 파업 매우 다르고, 신문사 파업은 지속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방송사들요 지금 보면 일부 방송사는 이미 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파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업을 해도 방송사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파업하면 바로 망합니다. 신문 며칠 안 나와 보십시오. 광고주들이 광고를 어디 싣습니까. 그러면 독자, 판매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은 당장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방송사는 시청자들이 전화 몇 통은 하겠지만 압력이 별로 없으니까 무한 노조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노조의 힘은 자꾸 커집니다. 그 방송사 노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객관적인 지표인 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소상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방송, 제가 노조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조가 강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그런 상황 내에서 방송사 내의 노사관계가 일반 회사나 신문사와 매우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까지 국민의 위임이 아니라 방송사 종사자와 직접 관련 당사자들로 좌우하게 되면 그 권력, 즉 민노총 언론노조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편성을 지배하는 이념과 입장 편향성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지식의 존재 구속성, 입장 제약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민노총 방송노조의 압도적인 존재와 입장이 그런 구속, 그러니까 입장 제약성, 존재 구속성이라는 말처럼 방송편성과 보도 또 경영에 구속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반대토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의 분위기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위임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방송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지배를 넘겨주게 되면 국민의 생각과 나라의 운명과 무관하게 그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는 세력들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보다 더 무서운 대립과 충돌의 논리와 뉴스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좋겠지만 지난 십여 년, 이십 년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적대와 증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영방송의 알고리즘은 통합과 관용 그리고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한 백여 장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표된 방송법 부칙에 보면요 3개월 내에 방송법 부칙에 따라서 방송사 사장을 물러나게,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발효되는 3개월 내에 적용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되면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 편성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사장을 임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부칙이 위헌적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

금 이 법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보위법 부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군부는 국회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하는 법을 만들면서 부칙 사항으로 국회 소속 공무원은 법에 의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새 법으로 기존 국회 직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칙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소급입법이기 때문입니다. 소급입법을 통해서 공무원 신분보장이라는 기존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공직자들, 특히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대통령의 또는 공직의 선임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공직자들에게 임기가 보장되겠습니까? 바로 임기 동안 소신 있게 그 공직이 부여한 일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지상명령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입법 조치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일거에 날리는 이런 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존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이 정한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배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또는 공무원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무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국회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돼 가지고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을 바꾸어서 법에서 어느 공직자의 임명 자리는 검찰 수사하고 괴롭히지 않고도 그냥 일순간에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부터 적용한다 그래 놓고 앞 단에, 부칙 앞에 본조에다가 사장은 어떻게 선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사장·이사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녕 그런 위헌적 관행을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헌법 전문가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법 부칙은 신군부 부칙 사항처럼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KBS 이사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새 방송법이 이들의 법정 임기를 훼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사진을 해임하라는 방송법 부칙은 앞서 1989년에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났던 신군부 부칙과 비견될 만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 부칙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를 누구보다도 혐오하는 민주당이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중에 제정된 법이 먼저 제정된 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른바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과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새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사뿐 아니라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서 사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노조들이, 사실 방송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법의 발표와 함께 사장 물러나라고 벌써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 12월에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저는 KBS 사장의 임기도 검찰총장 임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검찰청도 공소청과 무슨 중수청으로 분리되고 바꾸는 마당이니 참 비유하기가 답답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고 했던 유구한 전통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박장범 사장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에 했던 식으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주문합니다. 영국 BBC를 좀 배워라, 그리고 KBS 아니어도 국내 정치뉴스 보도할 매체들 많으니까 국내 정치뉴스 보도하면서 민주당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BBC 보십시오. BBC에 보면 BBC 월드와 BBC 국내 방송,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제국을 이끌었던 영국이기도 하지만 BBC의 시선은 글로벌하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이익이 단지 영국 국내의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그 세계적인 조류와 변화가 영국 국민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KBS 같은 경우는 정말 BBC와 경쟁하고 CNN과 NHK와 경쟁하고 CCTV와 경쟁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더 이상 국내 우물에서 우물 파먹고 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KBS 사장이 무슨 국내 정치 방송에, 국내 어느 정파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방송을 하게 될 동인과 유인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부터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참으로 잘했다, 광복 80주년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었다라는 기록으로 남길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방송법 다시 생각합시다.

자, 이제 좀 지루하실 테니까 제가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는 이 내용 중에, 쭉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사진을 우리 통상의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마치 그게 대단한 일인 듯이 정부가 소개한 일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아킬레스건을 보여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설령 허용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수입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미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월령 30개월 이상 그거 전 세계가 다 수입하고 있는 그런 것 우리한테 압박 가해 봐야 그렇게 크게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정작 우리 정부가 두려워하면서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니 그건 들어줬습니다. 세상에 협상에서 그 미국 사람들,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공짜로 해 줬겠습니까?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비롯되었느냐? 그것이 MBC ‘PD수첩’으로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MBC의…… MBC 방문진 이사장 지키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바로 그 MBC가 ‘PD수첩’, 대법원에서 주장했던 네 가지 사실 모두가 허위 보도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했던 그것을 가지고서 온 나라가 흔들렸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의 협상에서 구속 요인으로, 부질없는 구속 요인이 되어서 쓸데없는, 국익을 들어내어 주게 되는 그런 족쇄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간단히 소개드리고 준비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17년 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 주면서 쇠고기 농산물 협상 불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이 오히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노출시킨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년 전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공포감을 전 국민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당이 매듭지었던 한미FTA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민주당은 당시 MBC ‘PD수첩’이 확산시킨 광우병 괴담을 정치적 갈등으로 증폭시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MBC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핵심 주장 모두 허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일찌감치 국제수역기구—동물의 질병을 검역하는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국제수역기구, 영어로는 OIE입니다—OIE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그런데 언필칭 진보 언론도 그리고 민주당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지율 추락으로 스스로의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한 큰 결단을 했다는 것을 한미FTA를 통해서 거꾸로 보게 됩니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도 당시 언필칭 진보 언론이 그리고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한다고 미국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인 양 스스로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미국에게 다른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편파적·비과학적 진영 논리, 강력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방송노조원들의 편견과 오만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렸던 민주당의 반역사적 오판이 쇠고기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문제에 집착토록 하고 자동차 같은 더 큰 관세협상에서 12.5%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더욱이 한미FTA 덕분에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15%라는 일본과 유럽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보다는 편견에 집착했던 공영방송 내 일부 세력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좌우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그 광우병 PD 나중에 MBC 사장하고 MBC 경영을 좌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법 개정안이, 개정된 방송법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특정 세력에게 떠넘겨서, 특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이성보다는 이렇게 분열적이고 편파적이고 확증편향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특정 세력에게 떠넘겨 버리면 이제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영 방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기획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

이 일어난 곳이 민노총 방송노조가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그쪽의 승인이라든가 그쪽 출신이 아니면 사장과 보도국장, 편성본부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사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거대 민노총 노조는 다 작은 노조를 핍박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자세한 판결문을 제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사 내의 명실상부한 실세 민노총 방송노조가 공영방송의 경영·인사·보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방송종사자라는 고깔을 씌워서 그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를 통째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의 일부 보도와 편향된 보도, 확증편향의 이런 편성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친 사례를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내부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또 오늘 통과된 방문진법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된 송아지 뿔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칙 4조를 통해서 사장과 이런 사람들을 3개월 이내에 바꾸도록 하는 그런 위헌적 악조항도 문제지만 방송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보도·편성·인사·경영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전원일치로 위헌적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헌법을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역시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수호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치 집권 이후에 미국에 망명한 카를 뢰벤슈타인이 정립한 개념인데 무제한 상대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민주주의 제도·절차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여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질 법적·정치적 구조를 갖자고 합니다. 이게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목적인데요.

그런데 수호청의 활동이 과연, 이것이 지나친 사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합니다만 독일은 헌법수호청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헌법수호청이 독일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당으로 부상한 독일대안당도 명백한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독일대안당 전체가 헌법수호청의 감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방헌법수호청이 하고 있는 대상에서, 수호하려고 하는 헌법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연방헌법수호청이 지키려는 헌법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와 투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특별기관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일반·직접·자유·평등 및 비밀선거로 국민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이것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곳곳에서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입법은 헌법적 법질서에 구속되며 집행권 및 재판은 법률과 법령에 구속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적인 법률들이 마구 제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의회에서 야당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지켜 주자는 것이 독일 헌법수호법과 헌법수호청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야당의 당원들 명부, 계좌번호까지 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 파괴고 독일 같으면 연방헌법수호청에서 당장 수사 들어갈 내용입니다. 특별검사부터 오히려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리고 내각의 사퇴 가능성, 이건 탄핵제도 같은 게 있지요. 국민대표에 대한 내각의 책임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독립의 중요성, 지금 법원의 독립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의 배제 그리고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적 장치도 선거에 의해서 다수당이 되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치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저는 공영방송을 정말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국민의 방송으로, 객관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국민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알려서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더 좋은 물건과 더 좋은 소비를 팔 수 있도록……

요즘 케데헌 때문에 난리 안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국장, 국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고 미국장도 있고, 서학개미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외국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들은 전부 국내 시시껄렁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지상파들이 안 해도 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한 정파와 한 정당과 한 지배세력이 미워서. 그런 짓을 해 왔지 않습니까?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지요. 그러나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은 또 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문화대국으로 우뚝 서서 경제력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계의 존중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도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공영방송만 국내 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그 단물만 빨고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권력의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그런 중요한 업무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로 집권한 나치당의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재앙의 수렁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이 그렇게 열심히 헌법수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심지어 정당마저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할 경우에 감시되어야 될 정당이 여러 곳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 사이의 일상적인 문화이자 윤리이자 그런 스스로의 책임 같은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일상의 민주주의는 혐오나 갈등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민정치교육, 헌법교육, 서로가 존중하는 토론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서 극단주의가 발호할 수 없는 정치문화 토대를 우선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이것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안, 개악된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고 또 EBS 방송법도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래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정도 제가 죽 총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연하게 세계에 방송법 때문에 이렇게 난리 난 나라가 또 있나 찾아봤더니 마침 뉴욕타임스에, 7월 18일 딱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공공미디어 PBS가 있습니다. NPR도 있고 이게 있는데,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혼자서만 트루스 소셜이라고 그러고, 막 백안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서도 저렇게 집권하는 이유는 뉴욕타임스를 매일 욕하면서도 뉴욕타임스를 꼼꼼히 읽는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주 사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인터뷰는 또 워싱턴포스트랑 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마침…… 미국 공화당도 미국의 이른바 NPR 같은 퍼블릭 라디오 또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양입니다. 대개 미국은 리버럴들이 많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중부랑 동부, 서부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공영방송 예산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좀 잘못된, 그러니까 너무 보편가치를 이야기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와 미국 사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고 해서 이민자 추방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의 예산 감축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 타깃이 된 것이 미국 공영방송에 대한 펀드입니다. 이걸 깎으려고 했습니다. 깎으려고 했더니 뉴욕타임스 사설이 이렇게 썼습니다. 죽 내용을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더러 미국 공영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편하거나 또는 좀 편향적인 그런 보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요지는 뭐냐 하면 미국의 공영방송 논의의 핵심은, 특히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런 식의 미국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지역방송들, 미국의 로컬미디어가 절대적으로 정부 펀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영방송, 특히 미국 전역에서 보자면 미국 우체국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고…… 이게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가장 중요한 기구 중의 하나입니다. 왜? 우체국이 없이는 큰 미국의 대륙에서 우편배달을 안 해 주겠지요, 상업적으로 이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그 큰 땅에서 공영방송을 해야, 전파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야 거기서 기상재앙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험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는데 이 공영방송을 안 해 버리면 미국의 로컬, 미국의 시골지역들은 완전히 뉴스의 사막화 현상에 시달린다, 뉴스의 사막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이게 법칙처럼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미국 공영방송, 특히 미국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죽일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지금 미국에서는 공영방송 논의가 그런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역에 가 보면, 방송법 개정안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는 그것이…… 민노총의 같은 방송노조인데도 왜 지역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미국과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만 지역방송의 역할, 예컨

대 거창, 산청, 함양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충청도에서 큰비 피해가 나고 했습니다만 그때 서울의 방송에서, 중앙 방송에서 그걸 24시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근 지역에서는 굉장히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방송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역방송이 그 지역의 뉴스를 제대로 보도하거나 지역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약합니다.

만일 방송법 개정을 한다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인구 감소, 인구소멸의 위협 그것 때문에 더더욱, 자연재해에 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오히려 이런 것이 논의돼야 될 텐데…… 그 법에 보면 지역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법 문구에. 그런데 실제로 지역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허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 논의에서 우물 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우물 안에서 네 팔뚝이 굵니 내 팔뚝이 굵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것 사실은 우리 국민들 광복 80주년 되면서 겪을 만큼 겪어 봤고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권력의 비리라는 게 참 끝도 없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하도 많은 걸 겪어 봐 가지고 우리 감시에, 통제하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누구 말이냐 하면 이번에 총리 되신 김민석 총리 이야기인데 저 말에 참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제국적 사고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K-컬처의 대국이, 제국이 되었습니다. 광복 80주년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지금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한 파트너가 되었고 또 전 세계에 이제 문명을 수출하고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세계에 우뚝 서는 문화대국을 꿈꿨는데 정말로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케데헌 그리고 K-인더스트리 그리고 GPS—글로벌 피버틀 스테이트(Global Pivotal State)—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글로벌로 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영방송, 특히 KBS쯤 되면 거기는 BBC랑 자꾸 견주어서 왜 BBC 못지않게 방송하지 못하느냐…… 나중에 BBC는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KBS가 앞으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사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또 공영방송 관계자의 이름으로 국내의 좁은 편향된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공영방송을 좌우하고 사장을 뽑고 그 사장이 보도·편성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제국적 사고,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글로벌 사고로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미디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력이 커진 만큼 KBS는 적어도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가뿐 아니라 서방 사람들이 동양을 여행할 때는 KBS 인터내셔널을 듣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가, 어드벤처하는 사람들 보면 해외 오지를 여행할 때 꼭 단파 라디오를 들고 갑니다. BBC를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

니다. BBC를 들으면 세계의 온갖 뉴스가 다 나오기 때문이지요.

저는 앞으로 KBS는 우리 케데헌이라든가 BTS, 블랙핑크, 물론 케데헌도 콘텐츠만 우리 거고 전부 OTT를 통한 서비스 혜택은 지금 미국 일본이 나눠 갖는다는데 빨리 공영방송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K-웨이브의 정말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KBS 자산을 활용해서, 수신료 몇 푼 더 올려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KBS의 막대한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K-콘텐츠의 수출 기지가 되고 그 KBS에 코리아 한국에 대한 국제적 매력을 바탕으로 K-웨이브를, K-컬처를 전 세계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국적 사고, 이제 문화제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K-문화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는 전 세계를 향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공영방송에 민변이 왜 거기 끼어듭니까, 민변이? 그리고 종사자 해 가지고 종사자도 보면 거기에 압도적인…… 방송사 가면 동료 국회의원들이 자주 만나는 작가님들은 그 종사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방송노조에 속하는 사람들만 나눠 하는 겁니다, 이사 추천권을. 성우, 속합니까? 방송노조에 속하는 그 정규직의 핵심, 그분들만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건 안 맞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 오요안나 씨 같은 그런 비극적 선택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 내 괴롭힘. 그분은 심지어 근로자성도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 비극적 대우를 했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공영방송에 그렇게 압도적인 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는데 왜 그런 인권은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 살벌한 상황을 제가 나중에, 그걸 통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오히려 그 공영방송 내에서 다양한 직군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와 함께 국민이 위임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정당한 위임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추천해서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공영방송의 사장을 구성토록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정상적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고 갑자기 방송사 언론노조가 이사회 다 좌지우지하고, 무슨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만 방송사 사장을 이렇게 저렇게 임명하고……

한번 제가 '100분 토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 나갔는데, 시청자 패널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방송사 이사를 뽑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분들이 잘 이해도 못 하고, 보통은 굉장히 거기서 열심히 듣고 의문도 질문도 할 텐데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의아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패널 시민 여러분들 어렵지요? 어려운데 다 암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해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랬습니다.

방송종사자가 누굽니까? 그 방송종사자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 위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방송 지배구조에 따라서 오히려 감독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데 자기 노동에 자기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가 어긋난 것인데 복잡하게 산식을 만들고 이래 놨다는 것 자체가, 복잡하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무슨 연동형 비례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큰 역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몰라도 된다고 하니…… 지금 그 비슷한 산식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정부 내에서 유튜브의 일부 극단적인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금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이…… 저도 기자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여러 번 나가 보기도 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응하기도 해서 실무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한번 당해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아직도 어느 언론사 제목에 '최형두는 원조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이 버젓이 잡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짜뉴스 징벌배상을 해서 5배 손배소를 매기면 사실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은 손배소 가도 보통 몇천만 원에 그칩니다. 1억까지 최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5배라는 것은, 추정되는 손해보다 5배 더 물린다는 것은 너희 집안, 보도했던 기자 완전히 패가망신시키고 너희 회사 문 닫게 하겠다는 무서운 엄포입니다.

어느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징벌적 손배소 5배 들어온다 그러면 그 기자 다음 보도 못 합니다. 왜? 집에서 그럴 겁니다. '여보, 당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우리 집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손배소 저게 한 2억 오면 5배 적용하면 10억이 될 텐데 아파트 다 날릴 건데 우리 가족 이렇게 불안하게 살게 할래?', 그러면 그 언론사가 후속보도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 회사도 '어떤 놈이 이런 기사 썼어? 회사 상대로 10억 들어왔는데 너 50억 갚아 줄 능력 있어?' 그러면 누가 보도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진짜뉴스 재갈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신속한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법제를 연구하자라고 그때 3개월 내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중에 그 당시에 정부가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90%라고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민주당의 어느 분한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론조사에다가 설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은 찬성하십니까 물으면 45%로 떨어집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설문을 어떻게…… 가짜뉴스 방지하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런 포괄적 질문에 암수가 있는 것이 그걸 믿고서 막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유엔 인권보고관, 아이린 칸이라는 분인데요, 저분은 우리나라 이용수 할머니, 참 우리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인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방한했던 아이린 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2021년 8월 달, 4년 전 꼭 이맘때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절절한 내용인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언론법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있으면 곧 아마 우리 언론단체들이라든가 또 이해당사자들 또 시민들이 위헌소송을 내거나 또 청원을 내게 되면 국제 여론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이 법안의 내용을 안다면, 지금 워낙 한국에 엄청난 뉴스가 많으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진짜 이 내용을 안다면 '언빌리버블(unbelievable)'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법이다'. '아니, 어떻게 CNN하고 FOX News 같은 사장을 갑자기 바꿔?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정무수석님하고 실장님께서 이 사태를 잘 파악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무리한 조치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법안도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아이린 칸 이분의 정식 명칭이, 직함이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법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조—이것 영문 해석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에 규정된 조항을…… 한국 정부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언론중재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정확성(Requirement of Legality), 비례의 원칙(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또 필요성(Requirement of Necessity)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4페이지에 써 놨습니다.

이 특별보고관은 특히 당시 법의 30조 2항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선거 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서—이게 우리 방송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칸 특별보고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의 이 서한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반박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한 때문에 또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또 당시 언론계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서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이다가 굉장히 나중에…… 왜냐하면 이것 반대를 우리 당이 하니까, 제가 하니까 언론단체들이 '어, 저 당에서?' 이래 가지고 조금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언론 자유는, 진정한 언론 자유는 저희 당에서 더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유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계에서도 호응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엔총회 참석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서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설명하고, 내 기억으로는 그때 정무수석이 올라와 가지고 아마 의총장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그 당시 이 아이린 칸 보고관의 서한에 보면 법의 필요성 측면에서 민주사회의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가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

요한 토론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또 용산의 대통령실과 또 민주당 지도부 또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은 이 4년 전 교훈을 좀 명심하시고 방송 3법 개악도 중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단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복원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믿으시는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2명을 추천할 텐데 또 여당이 1명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희 야당의 권한을 오히려, 제가 지금 과방위 간사 정도인 주제에 원내대표와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을 조금 넘어서는 과도한 것일 수 있겠는데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은 여야가 함께, 3명을 함께 추천합시다, 그냥. 공동으로 합시다, 공동으로. 그래서 서로가 배제합시다. '그 사람은 안 되겠다. 그 사람은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제기하면 우리는 단념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도 민주당 위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해서 세 분을 아주 합의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원래 우리가 두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임명해서요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유튜브의 잘못된 알고리즘 그리고 유튜브가 그렇게 잘못된 보도를 하고—얼마 전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일부 유튜브의 무분별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했지요—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도록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그걸 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구글을 규제할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법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진숙 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언론인입니다.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격이 높지 않을 때 중동의 지도자들을 BBC 뉴스 이런 사람들을 제치고 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MBC에서 굉장히 참 상징 같은 인물이 되어서 데뷔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MBC의 너무 상징적인 인물이 되다 보니까 당시 경영진한테…… 그때 홍보국장인가요, 홍보국장을 맡아서 그것이 우연하게도 사 측이 되는 바람에 당시에 노조한테 배척받고 정치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선배 의원님들도 인정했듯이 MBC에 있을 때 노조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MBC 경영진 중에 법인카드를 공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법인카드를 공개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빵 그것 몇십만 원 사 가지고 무슨 횡령을 하겠습니까. 몇십만 원씩 그것 상품권 바꿔 썼겠습니까, 다 빵을 구입한 흔적이 있을 텐데. 빵을 해 가지고 퇴임할 무렵 직원들 나누어 주고 청소하는 분들 나누어 주고 했던 걸 가지고서 무슨 빵 뭐니 해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걸 또 막 유튜브로 돌리고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 놓고, 심지어 어제는 뇌 구조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요, 뇌 구조 문제. 그런 인신 모독과 모욕을 해 놓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똑같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탄핵을 기각하고, 탄핵 기각하는 사이 8개월 동안 그 임기 다 날리고, 그런 분을 또다시 모독하고. 그러지 말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진숙 위원장과 워싱턴 특파원도 같이 해 봤고,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단연 발군이었습니다.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의 보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중의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시기에 저와 함께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교민사회에서 함께 그 여론을 독려하고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왜 답변을 그렇게 머뭇거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 하나 머뭇거렸다고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걱정하는 가짜뉴스니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복원해야 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그런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고…… 근본적으로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그러면 미국 FCC 위원장이랑 마음대로 영어로 소통 가능한 분이고 유럽 가서도 BBC 이사장이랑 마음대로 소통 가능한 분입니다. 이런 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하시고 민주당에서도 방송통신위원 좋은 분 빨리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이 왜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하냐고 하니까, 제가 그때 빨리 2명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야당이 2명 추천하면 그때 추천한 사람들은 임기가 보장되니까 이번에 바로 3 대 2로 복원할 텐데 그러면 여당은, 지금 민주당은 유리할 텐데 그때 제 말 안 듣고 한참 망설이다가 지금 여야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야당 2명 하고 여당 1명 추천합니다만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혹시 제가 이 말을 잘못했다고 우리 당 원내대표가 자르면 제가 잘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히 항거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방송통신위원 여야가 함께 숙의해서 우리 국회의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또 여야의 과방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말 훌륭한 방송통신위원 3인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합시다.

2명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야당만 그냥, 여당 이야기 들을 필요 없는데 같이 듣겠습니다. 여당 한 분은 좋은 분으로 해 줄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5명 복원해서 가짜뉴스 방지법이니 유튜브니 이런 데 대한 이런 심각한 문제 또 우리 공론장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극단적 주장과 허위 주장 뉴스가 더 이상 창궐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복원해 주십시오.

이 아이린 칸 사례를 보시면 지금 다시 정부 내에서 돌고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 이른바 언론의 징벌적 손배 5배법이 4년 전 이대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다시 국제단체에서 걱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대한민국이 언론사를, 언론 기자를 구속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박근혜정부 때 갑자기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몇 단계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허위 조작했던 산케이 뉴스,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특파원 출국금지 했다고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국제사회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방송사 사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또 이미 국제 인권보고관이 저렇게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한 번 포기했던 것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로 다시 한번 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야 할 시기에 이게 뭐 하는 역행입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중재법 하면서 정치 후견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치 후견주의라는 말은 물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욕먹고 불신당하더라도 우리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지요.

지금은 더 이상 도시국가가 아닙니다. 도시국가 때는 직접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정하고 사장을 정하고, 민변이 갑자기 정하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최장집 교수의 수제자이자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학자의 글입니다, ‘고전으로 읽는 민주주의’.

‘과거 인민이 직접 통치하던 소규모 도시 공화정 때와는 달리 현대 공화정은 대의정부여야 한다는 것도 몽테스키외의 중요한 기여였다’, 이것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민은 통치할 수 없다. 통치는 인민이 적법하게 선출한 대표에게 맡겨야 한다. 인민의 탁월함은 통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잘 뽑는 데 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지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몽테스키외는 통치자와 인민이 대표나 매개, 균형자 없이 직접 결합하면 그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 인민도 통치자도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주의가 온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여론 독재나 팬덤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다. 권력은 책임의 사슬로 묶어야 하는데 인민을 권력자로 만들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폭정이 온다’.

이것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갈라진 여론, 가뜩이나 양극화된 정치에서 특정 확증편향이 짙은 사람들이 방송사 경영과 편성과 보도와 지배구조를 좌우지할 경우에, 이때 팬덤과 마주친다는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그 경고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가, 근대 공화주의 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

우리가 오랫동안 방송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뽑고,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두 사람 국회가 세 사람인데 여당이 한 사람, 야당이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합의제로 하도록 하고 또 여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뽑을 때 국민의 위임 구조, 국민의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그 국민의 명령체계를 끊고서 방송종사자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서 방송사 사장과 그걸 구성하겠다 하는데, 이 내부 구조는 지난번에 김장겸 의원님 또 이상휘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이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한 순배 돌고 나서 또 낱낱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EBS 이사입니다. 이 EBS 이사야말로 방송 3법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이 참 중요한데, 왜 이 문제가 등장하냐 하면요 방송종사자라고 그러고 다음

에 또 여기 관련된, 예컨대 MBC 같은 경우는 민변이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교육 관련 단체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추천이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단체 1명에서 2명으로 교육 관련 단체가 늘어날 전망인데 그 추천 기준을 보면, 지금 이 교육방송법 오늘 상정되었지요, 의장님? 이 상정된 법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회 추천 관련해서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씩 2명을 추천한다', 이 2명을 누구를 추천하느냐 보면 추천 기준에서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교육 관련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단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요.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활동기간이 긴 교육 관련 단체로서, 최근에 생긴 신생 조직이나 교육 관련 단체는 회원 수가 많고 현장 교원들의 대표성이 뛰어난 단체라도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교육 관련 단체로 포함될 가능성이 미약합니다.

저 그래프 잘 보십시오. 지금 놀랍게도, 전교조가 한때 참교육으로 참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이게 너무 권력화되고 편향으로 되면서 우리 교육계에서 그 비중이 아주 위축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교조의 비중이 저 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교조는 지금 5만 명 이하,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한국교총은 한 7만~8만 명. 교사노조연맹이 놀랍습니다. 십이삼만 명 됩니다. 12만 명이네요, 지금.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노총인데 맹비 납부액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 중 20~40대 비율이 89%이고요. 전체 조합원 중에 여성 비율이 86% 이상입니다. 교사의 압도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3법의 가장 큰 문제,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을 방송사 이사로 만들었는데 EBS 방송법에서 극명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EBS 방송법은 교육방송이니까 교육 종사자들이 와야지요. 그런데 교육 종사자는 방송에서 교육 PD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교육 종사자 중에서 실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그 2명을, 그동안 1명이었는데 그동안에 한국교총에서 뽑았습니다, 이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염두에는 전교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 조항에 2명을 뽑는데 그 2명의 기준은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그러니까 전교조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하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활동 인원 그리고 대표성으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MBC 방문진 하는 데 민변이 끼어드는 것하고 비슷하게 황당하고 엉뚱한 일이 지금 이 EBS 방송법에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법률안의 개정 취지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이런 것 정면 배치되는 아주 극단적인 문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어떤 편향적인 사람들로 공영방송을 딱 채우겠다는 이런 생각이 여기에서 딱 드러난 겁니다. 이 자료를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이게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저희 당에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겁니다, ‘EBS 방송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앞에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보았듯이 어쨌거나 헌법 1조가 명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국민이 권력을 줄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 권력의 명령체계, 아까 박상훈 정치학자가 썼던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 따르면 그 권력의 위임체계, 명령체계에 따라서 공영방송, 국가재산, 국가의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엉뚱한 사람들을 끼워 넣는 이런 방송 3법 개정안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에 드러난 겁니다.

전교조 집어넣으려고, 그동안 교총이 했는데 교원단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교육방송공사 이사 중에, 그중에는 교총이 1명이었는데 교총은 법정단체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간단하게 2명을 하든지요. 2명을 하더라도 그때 그러면 ‘교사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러면 당연히 교총과 함께, 교총은 법정단체니까 교사노조연맹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교사노조연맹이 아니고 전교조 집어넣으려고 이런 부칙,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방송만 유일하게, 사실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교육단체가 이사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송법과 MBC 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사단체 대표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사노조를 해야지 왜 전교조를 끼우려고 합니까’라고 딱 지금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EBS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EBS 방송법은 진짜 한번 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EBS 방송법을 비롯해서 지금 앞으로 연이어 나와 있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재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또 개혁신당의 우리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정말 재고해 주십시오.

이 법안 잘 모르셨지요? 정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법이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방송법…… 이게 사실은 교육방송은 교육위도 관심이 많은 대목인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과방위에서 했습니다. 아마 상세히 못 봤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법 개정안에, 그동안에 교육단체 대표를, 교원단체 대표를 1명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전에. 그런데 이걸 2명으로 늘리면서 그냥 대표성으로 가면 간단하게 교사노조가 될 텐데 이걸 전교조 넣으려고 그동안의 활동기간, 이런 복잡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걸 딱 지금 교사노조가 제시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부터 지금…… 이게 그런데 아무런 여과 없이 통과해 왔습니다. 법사위에서도 토론도 못 했습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맞느냐, 그러니까 노사 편성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그 벌칙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맞느냐, 또 부칙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법사위에서 논의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법은 이미 2개 통과됐습니다. 그건 시행 전에 다시 한번 숙고해서 재개정을 하면 좋겠고요. 이 법안은 EBS 방송법부터 좀 세워 주십시오. 세워 주시고 다시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그동안 EBS 방송에서…… EBS가 그나마 우리 국민의 평생교육과 우리 학생들이 비수도권에 살더라도 교육방송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과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조 수단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뭔지 압니까? 교사단체도 이런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또 방송노조, EBS도요 노조가 또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분들이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 도시국가와 달리 지금 50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 KBS는 누구의 방송입니까? MBC는 누구의 방송인가요? MBC는 과거에 국민의 친구라고 그랬고 KBS는 스스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방송과 국민의 친구를 제대로 정말 글로벌에 K-문화제국의 이런 하나의 표상으로, 등대로, 전파 기지로 우뚝 세우고 그래서 우물 안에서 괜히 정치 싸움하는 그 틈바구니에 노조까지 끼어 가지고 그런 것 못 하도록, 그래서 고 오요안나 씨처럼 그런 비극적인 선택이 방송사 내부에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 문제의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 종사자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왜 방송사의 내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건 우리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이 민노총 방송노조의 집요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국회에 나가면서 시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보편적 이익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EBS 보십시오. 그리고 EBS도 또한 방송사 종사자를 끼워 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도? 그러면 공복에 대해서도, 공무원들도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것은 왜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법시험 보고 또는 행정시험 보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시험으로도 뽑히지 못했던 국회의원들한테 감사를 받고 혼이 납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또는 공직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시험을 잘 봐서 그 사람들을 혼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보면 KBS·MBC도요 거의 행정고시 수준입니다.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일종의 말하자면 정부부처 비슷한 곳인데 그 사람들을 '자네들이 알아서 다 이사를 만들고 사장을 뽑아서 운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 정부기관 대부분도 '당신들이 사법시험 보고 행정시험 보고 이렇게 다 우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도 고쳐야 되고 EBS 방송법은 지금 드러났듯이 교사단체 대표를 대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끼워 넣는 이 법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 법부터 멈추시고, 또 내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멈춰 세운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도 함께 멈춰 세우시고 결산에 좀 집중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한 뒤에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송법이지만 잘못하면 국제적인 우사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 저희들이 말릴 때 걱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금 주가가 확 꺾였습니다. 주가 낙폭이, 주가의 상승폭이 지금 같이 벤치마크하는 대상 국가에 비해서 최하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부터, 바로 여기 보여 주는 이 대목부터, 무엇 때문에 이 교사노조…… 교사 하면 교사노조가 들어가야지 전교조를 집어넣게 하려는 이 불순한 입법 시도를 우리는 그냥 모른 채 넘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냥 통과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자구·체계 심사를 해 보자, 그것 죄형법정주의에 좀 어긋난 것 같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고 그것을 죄를 부과한다, 벌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하고, 다음에 부칙 조항으로 사장과 그 사람들의 임기를 그냥 바꿔 버리는 것 그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법사위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온 겁니다. 교육방송법은 하물며 더 봤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딱 교사노조 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2명을 넣으려면 법정단체인 교총과, 숫자도 보면 교총이 두 번째고 교사노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동시기, 활동내용 이게 왜 들어갑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교조 집어넣으려고 그럽니까?

전교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기는 정말 화양연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교조가 정말 우리 교육개혁에 기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여를 인정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범대학 다녔던 친구들, 선배들 정말 사학의 부조리에 맞서고 교단의 부조리에 맞선 걸 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권력이 되면서 지금 모든 교육감 선거에 전교조가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왜 전교조가 좌지우지하는 선거에서 교사단체에서는 지금 전교조가 아닌 교사가 저렇게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이 법 되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앞으로 전국 교사들한테 외면받을 겁니다. 전교조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뚜렷한데, 교사노조가 이 하소연을 민주당한테 안 했을까요? 그런데 왜 아무 제동도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수이자 힘도 없고 맨날 상임위에서도 무력하다고, 무기력하다고 우리 당에서도 비난받고, 무슨 유튜브 보면 맨날 여당의 센 의원들한테 혼나는 모습만 보여 가지고 저 바보 같다는 평을 듣는 최형두한테 교사노조가 이런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노조뿐 아니라 여기에 무슨 방송사 종사자라고 한국교육방송의 노조가 또 끼어드는 것도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MBC, KBS랑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정부 장관·차관, 사법시험 1등, 행시 수석, 그렇게 우수하고 똑똑한 공무원들을 혼내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우리가 믿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시할 수 없으니까, 견제할 수 없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선출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일일이 감시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보다 훨씬 똑똑해서 혼내고 그럽니까? 우리는 평범한 시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무원들이 아주 현란한 말을 해도

그것이 민생과 역행하면 그리고 국익과 역행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사…… 옛날에 방송사 들어가기가 하도 어려워 가지고 이걸 사시, 행시 이렇게 해서 언시라고 했습니다, 언시. 특히 방송사 시험, 거의 우리로 치면 공무원…… 우리 방송사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사에 있는 간부들 이런 분들.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뚫고 들어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MBC에 노조 하는 사람들은 전부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다 쫓겨났어요, 너무 똑똑해서. 지금 강력한 언노총, 언론노조한테. 사법시험 안 보고 MBC 기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시겠다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만 MBC 노조에서 얼마나 잔혹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 참 위험하다. 그런데 그것 뭐 내부끼리 싸워서 그런 것은 별다른 문제겠는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론을 흐트러뜨려서……

한미FTA도 그렇습니다. 한미FTA, 정말 민주당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의 가장 위대한 리더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흔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당시의 일부 정당의 의원들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 나서서, 앞장서서 한미FTA가 되면 무슨 식민지 되느니, 하기야 그 당시에 유수한 대학 잘 나온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도 무슨 한미FTA가 되면 우리가 멕시코 같은 신식민지가 된다고 그랬으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방송사 내에서도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노조 세력들이 확증편향이 또 있습니다. 광우병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광우병 전문 PD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방송사 사장 됩니다. 그분들이 사과합니까? MBC가 나중에 대법원의 확정판결 무죄판결을 받아서, 그것 허위 판단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사과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MBC 그 광우병 보도했던 PD들이 나서 가지고 사과 방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과 방송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소송 냈다가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불렀습니다, 지난해에요. 지금 와서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직도 당당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방송종사자의 이름으로 MBC라는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고 보도·편성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인데 광복 80년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다시 통합시키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미국 독립 80주년 하고도 7년이라고 할 만큼, 87년이라고 하지 않고 80주년 하고도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여기는 80주년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고통과 대한민국의 갈등 이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유수한 방송프로그램을 지금 공영방송이 제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편견과 편향 때문에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전통과 새로운 각오를 다질 만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EBS 방송법부터는 중단시켜 주십시오. 상정하셨는데 표결을 중단시켜 주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교원단체 2명인데 2명 중에 숫자로 보나 또 대표성으로 보나 압도적으로 많은 교사노조가 배제되고 시간이 오래되었다, 오랜 활동을 했다는 전교조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 불순한 조항이, 교사노조가 이 약한 힘 없는 소수당의 과방위 간사한테 하소연하러 왔다는 이 기막힌 사연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EBS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여기에 EBS 노조가 왜 끼어들어야 됩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EBS 이사회에서 교사노조의 구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교사노조야말로 정말 교총과 함께 교사단체, 대표성 있는 단체라는 것을…… 지금 교사노조가 이 표를 만들어 보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이 지금 이렇습니다. EBS도 그렇고, EBS 시청자위원회 2명 넣고…… 모두 다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5명 구성하고 그 5명이 정말 그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그 명령의 연쇄 고리에 따라서 연쇄 명령, 체인 오브 커맨드(chain of command)지요, 영어로 하면. 체인 오브 커맨드에 따라서 정말 좋은 사람들로 방송사 이사를 구성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방송사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점이 일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를 구성하는데 방송사의 전문 지식도 없고 또 특별하게 진영에 있었던 사람한테 완장 채워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고치면 됩니다. 이번부터 고치면 돼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이 또 새로 한 번 더 구성할 새로운 방송통신위원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서 방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통신산업 규제 완화 또 통신산업의 진흥, 또 무엇보다도 날로 창궐해 가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특히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이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을 줄일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그 방송통신위원들이 또 머리를 맞대어서 이런 방송사의 이사들을 추천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회에서 몇 명 하고 이처럼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숙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못했다고 그 권한을, 전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맡겨 준 그 권한을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한테 떠넘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정부부처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정부부처에는 우리보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법시험·행정고시 1등 출신이라도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막 혼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대의민주제도에 따라서, 헌법 1조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전문주의에 취해서 혹은 공직자들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혼내고 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뽑고 그 방송통신위원들이 방송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또 방송사 지배구조를 통해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핍박하고 또 힘없는 노동자가 직장 따돌림과 폭력으로 비극적 선택을 강요당하고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갑자기 그 문제의 본원일 수도 있는, 방송 3법 개정안 보면 아시지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가 누굽니까? 국민들이 뽑습니까? 각종 대표성 고려단체, 방송 전문성, 방송 제작·기술 3명, 이제 방송사 내부에서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 학회, 방통위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만 미디어학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미디어학회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 미디어학회를……

우리 학생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하러 오신 학생들 어느 학교에서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국회 의회민주주의의 한 과정인데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이 다수당이 진행하고 있는, 강행하고 있는 표결에 대해서 우리 법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지금 방청하러 오신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들 또 투표를 하게 될 여당의 동료 의원들, 선배 의원들에게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국회 상임위 과정이나 또는 국회 법사위 과정에서 막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으로 이 표결을 한번 숙고해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지났는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KBS·MBC·EBS 아시지요? 그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고 또 공영방송의 이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또 공영방송의 보도와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더 키우고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소셜미디어가 온통 사회를 적대적 양 진영으로 나뉘게 하고 고약한 알고리즘으로 증오와 적대의 어떤 감정과 세상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는데 공영방송은 그 대신에 통합과 미래 또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공영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법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3법 중에 2개의 법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가 EBS법인데 아마 교육방송법이어서 오늘 참관하시는 학생들은 관심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교육방송법에 보면 교육방송의 이사, 그러니까 교육방송 전체의 경영과 이런 것들을 총 관장하는 교육방송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서 그동안에는 1명의, 교사단체가 대표로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었는데 지금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하는데 아마도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들 맞습니까? 어디……

○의장 우원식 소개를 할게요.

○최형두 의원 예, 소개를 하시지요.

○의장 우원식 방청석에 신성범 의원실에서 소개한 경남 거창 가조중학교 학생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형두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지금 국회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해서 토론 중인데 지금은 소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무제한토론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지금 토론하시는 분은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입니다.

토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에서 오셨네요. 저는 마산합포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

에 큰 수재 때문에 거창·산청 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저희도 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EBS 방송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한국교총 소속도 있고 또 전교조 선생님도 계시고 또 교사노조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번 거꾸로 다시 가시렵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전 장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 앞의 장.

EBS 이사가 누가 돼야 되느냐? 새로 민주당이 오늘 상정한 EBS 방송법에 따르면 EBS 방송법 개정안에는 그동안에는 1명의 교육단체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2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데 그 2명에 보면 추천 기준을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회원 기간이라든가 대표성으로 보자면 제일 처음에, 우선 한국교총은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는 지난번에도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두 단체 중에 어느 단체가 교사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교사노조연맹이겠지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전교조 선생님들도 혹시 계실 텐데 저도 전교조, 저희 대학 다닐 때 대학 선배들 또는 동기들, 교단에서 여러 부조리에 맞서면서 참교육을 실현했던 점에서는 참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는 전교조가 교육감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하면서 지금은 교단에서 영향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노조가 전교조보다 지금 몇 배입니까? 3배가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EBS 방송법에서는 전교조 출신 교사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EBS 방송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민주당에 또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법안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뒤에 벌써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하겠다고 시간을 통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전체가 300명이니까 5분의 3, 180명의 의원들이 모이시면 제 필리버스터와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을 보자면 민주당과 또 이 법에 찬동했던 정당을 합하면 한 180석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시면 이 법은 무제한 반대토론이—무제한이 아니지요—그랬을 경우는 5분의 3으로 중단되고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 법안 통과시키지 맙시다. 좀 미룹시다. 왜? 우선 EBS 방송이 지금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여기서 그냥 법정단체로 한다고 그랬으면 교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1명을 더 늘리면서 뭐 활동시기 이걸 넣으면서 전교조를 넣겠다는…… 활동기간, 활동기간은 전교조가 훨씬 길지요. 그런데 전교조의 그 참신함이 사라지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는 교사노조로 갔는데 이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EBS 방송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법안의 개정 취지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 할 때 해당 상임위원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세세한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3법이라는 게 서로 얼개가 묶여 있어 가지고 방송종사자들이 지금 뭐 사장을 뽑자, 그동안 그 이유는 방송사가 그동안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와서 막 이렇게 너무 방송을 어

떤 정당의 혹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 때문입니다. 그런 점이 일부 있었지요. 일부 있었지만, 그러나 방송사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지상파, 우리가 말하는 공중파. 이 공중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네 군데입니다, KBS MBC EBS SBS. SBS는 민영방송인데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빌려준 거지요. 3개의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게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들도 모두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 방송 내용을 보면 '저게 국민들이 다 같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가', '왜 방송사가 특정한 주장을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방송법은, 지금 민주당 주도로 제기된 방송법은 그런 의구심과 그런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앞의 2개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쭉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방송사의 문화 또 우리 저널리즘의 원칙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가시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경우도, 독일은 나치즘을 겪으면서 심각한 혼란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생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되는가'라는 것들이 서구 학술계 안에서 큰 화제인데, 세계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했겠습니까, 아니면 선거로 집권했겠습니까?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당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에 전쟁이라는 재앙을 일으켰지요. 그 뒤로 독일 국민들은, 독일 사람들은 그런 나치 같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절대로 재집권하지 못하도록 다당주의를 만들고 굉장히 엄밀한 정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제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또 지역별로도 약간 의견이 다르고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교단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셔야 될 것인가? 요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학부모한테 막 고발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대통령을 찬양하더라, 어느 대통령을 비난하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고발도 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극단적 사태를 겪다 보니까, 독일에도 여전히 그런 전쟁을 겪고 그런 참화를 겪고서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교단, 독일의 교육, 독일의 정치 이런 쪽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합니다. 그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학교에서 논쟁 주제, 논쟁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균형된 의견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어느 일타강사가 '천안함 그거 가짜야, 조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의혹의 주장이 있지만 또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북한의 어뢰 파편이 이렇게 발견되었고 그래서 몇 개 몇 개국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논

쟁적인……

그런데 더러 교단에서는 선생님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편견, 선생님의 지식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이텔스바흐라는 협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시민들은 아주 일찍부터 나치즘이라든가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교육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또 역시 극단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적인 극단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과 그게 필요하고.

제가 오늘 쭉 이야기하는 요지 중의 하나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유튜브 보면 자기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보고 있으면 실제로 UFO가 있고 뭐 별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딱 빠져듭니다. 또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된 주장에 흠뻑 빠져들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싶으면 그걸 계속 줍니다. 그렇게 빠집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작가 아시지요. 그분이 쓴 최근의 최신작 '넥서스'에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도 그런 편향성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소년이, 중학교 소년이 인공지능이랑 이야기를, 챗봇이랑 이야기를 하겠지요.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인공지능도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왕을 죽이라는 그런 대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칭찬을 합니다. 실제로 여왕을 암살하려는 이런 위험한 사태가 있었던 실화를 쓰고 있는데, 이처럼 지금 소셜미디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주 편향된 확증편향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을 분열시키고 극단적인 행동을 낳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런 위험한 세상에서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은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호 통합적인 어떤 논의 그런 것을 하도록 공영방송의 이사와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 공영방송 사장이 그런 합리적인 통합적인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고 그것은 방송사 내부의 특정한 세력들이 아니라 또 특정한 확증편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와 또 대통령이 합당한 위임 구조에 따라서, 우리 헌법 1조에 따라서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통해서 최대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분열된 사회를 만들지 않고 통합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홍수 겪어 보셨습니다만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다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 같습니다. 미디어의 홍수 아닙니까? 유튜브 뭐뭐뭐 온갖 주장이 다 난무하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으시고 또 받으셔야겠지만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주장 맞아? 이 주장 사실일까?

그런데 허위사실, 허위 조작 뉴스일수록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한 사람을 아주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어 놓고 나쁜 요소들만, 아주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러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그렇게 작동하느냐? 소셜미디어는 자기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더 자극적 자극을 주어서 마치 매운맛, 짠맛 음식이 더 좋듯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홍수의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사회적인 적대 세력이 적대적인 논리로 더 큰 갈등과 분열에 빠지지 않도록 공영방송은 정말 좀 통합적으로, 정말 좀 진중하고 좋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고.

그런 공영방송의 표상이 영국 BB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BC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하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방송법 체제, KBS 이사 뽑고 KBS 사장 뽑고 MBC 뽑는 체제가 21대 국회 때까지 여당 야당이 바뀌고 또 다수당 소수당이 서로 바뀌었습니다만 똑같은 편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방송법, 공영방송의 이사와 공영방송의 사장의 선출 방식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다수당 소수당 교체와 관계없이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BBC의 방식이었으니까, 그것이 독일의 방식이고 그것이 미국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금 갑자기 방송에 정치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방송사의 지배구조, 방송사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게 될지를 제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PPT 열 번째 보여 주실까요?

개정 방송법의 문제입니다. 이 방송법은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지만,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숙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3법 중의 마지막 하나 EBS 방송법만이 오늘 그리고 내일 12시 정도까지, 11시까지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나면, 24시간 무제한토론이니까 무제한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곧 표결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멈춥시다. 더 이상 표결하지 맙시다. 아마도 선배님, 동료 의원들이 모르시던 사실, 바로 교사노조, 교사단체의 대표성마저도 틀린 주장을 지금 이 법안이 담고 있는데 장차 교사노조 선생님들의 원망, 교단의 원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라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법은 여기서 표결하지 말고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호소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법에 이어서는 아마 우리 경제계가 가장 걱정하는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 법도 좀 멈춥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미 통상·관세 협상 때문에 어렵고 한데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이런 사안은 좀 중단시킵시다, 더 생각해 봅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울 텐데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소급입법의 금지. 헌법에서는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처벌받지 않던 것을 갑자기 과거 사안을, 지금부터 하는 것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소급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정 방송법의 문제를 보자면 소급입법의 문제……

우리 학생들이 왔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장은 뭐냐 하면 방송법 개정하지 말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외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을 뽑습니다. 3명을 뽑습니다. 또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 2명을 뽑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헌법 1조에 따라서,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방송통신위원

회는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또 방송사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구글 같은 그런 회사의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또 통신 규제, 통신 진흥,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선출을 받았지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 정신에 따라서 또 헌법 1조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권한을 그 권한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이라는 분을 다섯 분을 정해서 그 다섯 분이 합의제로 최고의 방송과 최고의 통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막…… 지금 알고리즘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을 허위사실로 비방해 놓고 그것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도, n번방 사건 같은 것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다 보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고 규제의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300명 있지만, 그중에는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다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이 최고의 전문가 5명을 딱 뽑아서…… 2명은 대통령이 뽑지요. 왜 대통령이 뽑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뽑습니다. 다음에 국회는 여야가 3명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나라에 따라서는 7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5명입니다. 5명이라는 것은 합의하기가 딱 좋은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서로가 신속하게 토론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이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옛날에 MBC에서 뛰어난 민완 기자였고 종군기자로서 옛날에 중동전 때 전 세계에서 정말 외국의 미디어에 못지않게, 당시 한국 방송의 위상이라든가 한국 언론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됐는데 굉장히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또 뛰어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적 지도자를 인터뷰하고 해서 그것들이 크게……

당시에 기자 하면 이진숙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도 같이 했는데 워싱턴 특파원 때는 종군위안부 결의안 그것을 보도도 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그런 여론도 환기시키고 언론인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 잘 소개되고, 어쨌든 국제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시던 아주 유능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언론인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당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 8개월 만에 탄핵소추될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촉구하는 것도 방송법 개정처럼 이렇게 선진국에 없는 제도를 억지로 하려 그러지 말고 또 저렇게 교사노조의 원망을 들으면서 전교조를 억지로 여기에 끼워 넣으려 그러지 말고 그냥 현행 제도로 갑시다. 가시고, 대신에 지금 가짜뉴스며 또 유튜브에 굉장히 폭력적인 알고리즘 또 적대적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려면 이진숙 위원장같이 국제적인 신망이 있고 지금 누구랑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한 사람들, 구글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종군기자가 통역 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어가 워낙 능통하고 국제 경험이 많은 만큼, 지금 국제 시기는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탄핵을 기각했고 또 엉뚱한 무슨 소송 있지만 그 수사 결과가 빨리빨리 나올 것이라 보고, 그전까지는 무죄추정이니까 지금 그분과 함께 대통령이 한 분을 임명하고 여야가 세 사람을 임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관

한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국무위원 중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오른편이 국무위원석입니다. 여기는 여당석이고 이쪽은 소수당석이고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쪽 편은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자코뱅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의석을 갖고 있느냐, 레프트윙 라이트윙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 의석은 이쪽, 여기 쪽은 민주당 의석, 그다음에 저기는 국무위원석인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뜻밖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경과규정 부칙으로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에 해임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발효된 부칙 제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이미 법조계에서는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군부 시절에 입법을 해 가지고 국회 직원들을 그냥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8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가지고 무효화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우를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제4조, 이게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 2항에 이 법 시행 당시의…… 그러니까 이것 세상에, 사장을 그냥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방송공사 사장이야 지상파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영방송까지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 방송법에는 보니까 또 보도편성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YTN은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KDN과 한국마사회가 그 주식을 사 줘서 어려운 경영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YTN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다 주식을 팔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장까지도 3개월 내에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CNN 사장하고 미국의 FOX News 사장을 어떤 법에 의해서 3개월 내에 바꾸겠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방송법의 문제는 이미 앞서 지난 첫 회차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이상휘 의원, 김장겸 의원 그리고 신동욱 의원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에 방송법에서 충분히 더 주목받지 못했던 대목이 바로 이 부칙 조항, 부칙 조항으로 현재의 방송사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독소조항이고 가장 위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방송법 보면 KBS만이 아닙니다. 3조에 보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도, 이게 YTN하고 연합뉴스TV……

여러분, 주로 보도만 뉴스만 하는 이런 전문채널 아시지요? 23번, 24번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법 제20조 및 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자,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송 3사 사장과 함께 YTN과 연합

뉴스TV 사장을 임기 중단시키고 해임시키기 위해 방송법에 보도전문편성채널 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과반수 동의제를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방송 3법의 목적이 방송사 사장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방송사 사장을 바꾸면 보도책임자, 보도·편성 책임자 바꿔 가지고 방송의 보도 내용이라든가 편성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뜩이나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고 온갖 편파적이고 확증편향에, 허위 조작 뉴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공영방송마저도 맑은 샘물이 아니라 편향된 뉴스, 확증편향의 뉴스로 자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 세력을 적대시하고 하는 방식으로 편성돼서 되겠느냐,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시켜도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 반대토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 방송법의 문제 보면 KBS는 여야 이사 추천 비율을 4 대 2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정했고 또 MBC와 EBS는 3 대 2로 여당 추천 비율을…… 뭐 상당히 복잡하게 해 놓으면서 아마 지금 여당과 또 방송사에서 사실상 실세인 노조, 방송노조는 신문노조보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자꾸 노조, 노조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를 싫어하십니까 그러는데 저도 노조 출신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MBC 노조 했습니다. 저도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 감사도 했고요, 민주노총 산하의 신문사, 문화일보라는 대한민국의 힘 있는 석간신문의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파업도 했고 단식을 17일 해 가지고 언론노련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신기원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노조를 해 봤습니다.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방송노조는 그 내부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종사자라고 하는데, 지금 MBC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오요안나 씨 사건 아시지요, 기상캐스터. 노조는 노조원의 권익 그리고 종사자의 권익과 그분들이 왕따라든가 직장 내 따돌림 또 상사로부터의 고압적인 부당한 지시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조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MBC 방송사 노조를 좌우하는 막강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왜 고 오요안나 씨는 그런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법 개정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방송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적인, 차별적인 사태를 방송사의 지배구조, 이사회라든가 방송사의 사장이 제대로 감시 감독 못 했다면 그걸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사내의 강력한 권력이 그걸 차지한다면, 그러면 그게 앞으로 해결될 것이냐?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사 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안들 때문에 이 개정 방송법에서 아주 여러 가지 장치로 지금 특정 정파와 특정한 세력들이……

국회 관람 잘하시고 잘 내려가십시오. 오늘 뜻밖에 제가 멋진 청중을 얻어서 고마웠습니다.

거창군 신성범 의원 지역구 소개로 온 가조중학교였지요?

○의장 우원식 가조중학교.

○최형두 의원 가조중학교. 지금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거창군 가조중학교 학생들이 국회 방문을 마치고 또 오늘 서울에서 남은 여정 잘 보내십시오.

이 개정 방송법의 문제는 앞서 김장겸 의원, 이상휘 의원, 신동욱 의원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단순히 민주당만 아니라 방송사의

지금 압도적인 실세인 사람들이 이제 방송사 사장과 방송사 이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왜 어느 공영방송은 3분의 2고 어느 방송은…… 이 장치를 해 놨냐 그러면 서로 다른 체 해 보이면서, 복잡하면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복잡하면. 간단하면 투명한 것이고요. 투명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분명한 위임 구조에 따라서 간단한 것이고 복잡하면 그 위임 구조를 피해서 뭔가 복잡하게, 바로 특별다수제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구성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는 지난번에 잘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개정 방송법 문제 4번 보실까요?

오늘 막 표결된 방문진법이 그렇습니다.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에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하면 모두 10명을 민주당이거나 또는 친민노총 이사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다수제…… 그래서 어느 정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방송사 내부의 압도적 세력인 민노총 방송노조가 방송사 경영과 인사를 좌우합니다. 보도·편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런 현행의 구조에서도 강력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고 또 회사에서 발생한 그런 억울한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해 주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되어서 그나마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편향 보도와 확증편향의 그런 편성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슬라이드 볼까요? 아니, 1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이 다 앞선 방송법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노총, 왜 민주노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총 언노련의 소속 노조위원장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 신문노조는 노조의 지배력이 신문사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신문은 파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방송은 사실은 MBC나 KBS나 YTN이나 이런 방송사에 보면 거의 노조 파업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방송을 끊지 않는 이상 방송은 어쨌든 계속되는 것이고 그사이에 방송사 조합원들은 생존의 걱정 없이 마음대로 권력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방송사 내부의 민노총 방송노조의 권력은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그 사안을 나중에 서부지법 판결문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주장을 보시면 아마 그냥 평범한 노총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낯선 대목이 많습니다. 정치적 슬로건도 주한미군 철수부터 아주 명백합니다. 정치적 진영으로는 상대적으로 특정한 정당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와 민노총 언론노조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 수의 과반을 노조원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법에 종사자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조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직원 수의 과반이 노조원이니까 이분들이 노조 대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겠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진보 진영에서도 평판이 높은 법원 아니겠습니까? 왜곡된 판결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1심 법원 판결에 보면 MBC에서 일어난 MBC 민노총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 어느 정도인지, MBC 노동조합이 사실은 노사동일체, MBC 민주노총 노조가 사실은 MBC 경영진을 겸임하고 경영진을 좌우하는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숫자가 1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임직원 추천권 2명분을 직원의 대표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다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에게서 공영방송을 뺏어서 이분들한테 공영방송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장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원은 KBS 직원 5000여 명 가운데 약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과반 확보를 못 합니다. 이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3명의 임직원 추천권 가운데 2명을 추천하려고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아주 치밀한 계산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사 수가 몇 명이고 또 정당별로 추천하는 몫도 다르고 조금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다 특별다수제라는 장치를 피해서 방송사 내에서 압도적인 특정 편향의 단체들이 방송사 전체의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장치입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15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방송법 개정안 46조 3항 3호에는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라면 개개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임원도 1명, 직원도 1명으로 계산된다는 뜻이고 결국 직원 과반의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규칙이나 방송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제정으로 직원 과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존재하고 그 소속 조합원 숫자가 전체 임직원 과반을 넘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세부 조항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공영방송 임원을 뽑는 공영방송 이사를 기존 임원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임직원 과반수는 직원 과반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16페이지 슬라이드 볼까요?

오늘 의결된 방문진법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박성제 사장은 소수 노조인 MBC 노동조합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하고 핍박하여 2025년 1월 9일 자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지를 나중에, 요지뿐 아니라 내용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2017년 9월 시작된 민노총 언론노조의 MBC본부의 김장겸 사장 퇴출을 위한 파업에 동참하였고 2017년 12월에 최승호가, 2020년 2월에 박성제가 각각 사장에 선임되었으며 최승호 사장 시절 언론노조 소속 취재기자로만 보도국 취재센터에 전원 배치시키는 등 비노조원과 소수 노조 소속 기자들을 차별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 박성제 사장 시절 3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는 별도로 서부지방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현재 서부지검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의 내막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또한 개정 방송법에서 또 방문진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언론학회입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학회를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언론학자들을 만나 보면 이 조항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학회라는 이름, 언론학회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십 개 될 겁니다. 그중에 2명을 추천하는데 어느 단체를 추천할 겁니까? 여기서부터 공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선임되지 못한 미디어학회가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송을 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왜 미디어학회인데, 우리도 미디어학회인데 어느 숫자가 되고 나도 미디어학회가 수십 명, 수백 명이고 되면 그것 차별해서…… 거기도 역시 오랜 활동기간, 숫자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을 적당히 만들겠지요. 그러나 그 기준이 수십 개의 언론미디어, 언론학회를 차별화해서 그 단체에게만 한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평등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 문제가 있는 소지를 일부러 만든 겁니다. 공연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장치가 들어간 거지요.

그것 왜 그랬느냐?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들에게 공영방송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뺏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합니까? MBC라든가 KBS는 웬만한 정부부처보다 영향력도 크고 또 인원도 많습니다. 사실 KBS는 국정감사를 합니다만 MB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도 하지 않고 약간 변칙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부처 국정감사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백배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기로 치면 행시 수석하고 사시 한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또 국민들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 원리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위임한 겁니다. 위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것이지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위임받은 국회가,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최적임자를 그런 위임의 구조에 따라서 하도록 한 것인데 돌연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이제는 미디어학회에게 줘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그런데 요식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만 그때 바로 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어느 미디어학회는 그 추천 대상이 되고 안 되는가 이 부분 읽어 보겠습니다.

17쪽 슬라이드입니다.

3대 언론학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언론학회가 어떤 단체냐 그러면 지난 2017년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학회원 실명으로 연명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우 정치적입니다, 이 단체들이. 언론학회가 그런 것 하는 곳입니까?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불법으로 판명되었고 김장겸 사장의 퇴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들 학회는 매우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허가 심사 당시에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한 심사위원 2명은 TV조선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표를 고쳐서 제출해 검찰 수사 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런 범죄행위에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에 임명된 27대 방송학회장은 TV조선 재허가 심사위원장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년 교수였습니다. 언론학자라고 해서 굉장히 공정한 공영방송 심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지요.

이번에 방송 3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민주당과 기자회견을 함께했던 민언련 대표 채 모 교수는 3대 학회에 모두 가입해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았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돌려서 이 사람 돌려주면 아주 정치적 편향이 짙은 학회 몇 군데 사람들이 KBS, MBC, EBS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민의 위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에게서 뺏어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것, 더구나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뚜렷하고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들의 가치를 투사하려는 이런 분들에게, 그걸 투영하려는 분들에게 방송을 갖다 바치는 구조가 지금 개정 방송법의 구조다라고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18쪽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정말 각양각층의 사람 중에 무작위로 선발되는 것이냐? 이 시청자위원회도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수나 시민단체 임원들, 사장이 친한 기업인 그리고 현 방송법 개정안처럼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시청자위원들이 선출된다면 특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뽑느냐 이 방식도 문제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민의 위임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또 사장이 뽑은 시청자위원들이 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다면 현 사장이 재선 출마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장이 뽑은 시청자위원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다시 사장의 재선을 도와주는 불공정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9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개정 방송법의 문제인데,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입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 문제 등과 함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을 하거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작하여 공포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두고 있었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방송법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즉 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는 편성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편성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또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편성위

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래서 아니, 여기에 노사 동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방송뿐 아니라 이런 보도채널, 방송사는 그동안 숱한 파업으로 단련되어 가지고 그 파업을 통해서 영향력을 강화한 노조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 노조가 바로 종사자 대표라는 고깔을 쓰고 이 편성위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을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현재도 방송법에 따라서 이런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20번째 보겠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데 노 측은 강성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으로 강한 정치색을 띠고 활동해 왔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과, 정치정당과 협약을 맺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강화를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정 세력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실업자, 노인, 비노조원, 소수 노조원의 힘은 약해지고 그만큼 사회의 주된 담론에 참여할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노총(민주노총) 산하 조합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 안팎일 겁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민노총 노조의 영향력이 50% 안팎입니다. 심각한 불비례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났습니다. 편성권 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편성권은 그것이 방송법 4조 2항에 했듯이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 과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경우에 이들에게 특별히 편성권의 절반을 넘겨주게 된다면—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같은 것이지요—공영방송의 편성과 내용이 특정 정당, 특정 정파 성향으로 또 확증편향 세력의 성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슬라이드 21쪽입니다.

편성권은 방송경영의 본질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핵심 권리를 특정 노조나 특정 세력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방송사업자는 누구든 방송법과 편성규약상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미 방송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규제 또 재허가·재승인을 통해서 공익에 어긋나거나 어떤 공적 의무에 어긋나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사업자가, 바로 민영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그 회사조차도 이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경영과 사업과 편성과 인사에 관여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영방송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영방송도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자기들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그 우려를 현실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2쪽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방송법…… 저는 간사로서 항상 우리 여당 위원장과 여당 간사로부터 방송법 개정안 할 것이니까 빨리 참여하라, 참여하라고 독촉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을 기어코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대다수 언론계에서는 설마 방송법 개정을 하겠느냐라는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모든 회의에 저희 국민의힘 간사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간사로서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 22대 국회 들어 지난 1년간 국회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발언한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만 이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서,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께서 '아니, 국민의힘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왜 뒤늦게 이러느냐' 이러시는데 그 반증으로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록 막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일일이 상임위에 참여해서 이 속기를 남겨 놓는 것이, 이 역사적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라도 역사적 평가와 함께 그 당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했는데 그대로 무시해서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편성위원회 관련해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했던 발언 속기록입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권 부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송편성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성책임자 임명에 편성위원회가 관여하는 것 역시 과도한 인사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날 선고한 2019헌바439 전원재판부 결정문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압도적 다수로 통과를 시켰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효된 방송법 개정안,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 간섭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또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면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합의 도출이 어려워져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송편성은 빠른 판단과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데 위원회 의결을 통하면 실시간 편성 조정이나 긴급편성 변경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책임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장에서 큽니다.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법제화하면 전문방송경영인 책임하의 편성·운영이 불가능해지고요. 문제가 생길 경우 의사결정은 편성위원회가 지지만 사회적·법적 책임은 회사가 져야 됩니다. 결국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편성위원회가 내부규약에 따라 자문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지 이처럼 강제적 수단으로 경영과 편성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슬라이드 23번이요.

공영방송의 내막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방송법에서 방송종사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걱정하느냐? 아니, 그리고 노조라는 표시가 없는데 왜 자꾸 노조라 그러느냐?

공영방송 종사자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내막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 법원 판결 과정에서 MBC에서 스스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이 동시에, 그러니까 MBC가 이미 압도적 노조인 민주노총 MBC 방송노조와 사실은 노사동일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사회까지 장악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021년 기준으로 MBC 보직자 148명 중 132명이 MBC의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이었습니다. MBC 노조에 따르면 2019년 MBC가 자사 직원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2021년 2월 15일 당시 전체 보직자 중 90% 가까운 사람이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구성원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MBC 부당노동행위 법원 판결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나중에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판결문에 보면 그 당시의 구체적인 인사 사례, 부당노동행위의 인사 피해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지금 아시겠지만 서부지방법원이 어떤 법원인지 잘 아시지요? 특히 공수처가 선호했던 법원 아닙니까? 그 서부지방법원, 물론 법원 판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독립된 양심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MBC 노조에 대해서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MBC의 사장이, 최 사장 박 사장이 MBC 노조 출신으로 MBC의 소수 노조, 그러니까 MBC 소수 노조원들을 차별하고 인사에서 배제하고 그럼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것이 판결입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판결문 보면 이천십몇 년인가요, MB 정부 때 MBC의 파업이 일어나던 시기의 그 상황부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MBC가 이렇게 되었나, MBC가 왜 노조 문제로 이렇게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존재로 되었나를 보여 주는 아주 상징적·역사적 문건 같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1990년대부터 기자 활동을 시작하고 93년부터는 경찰서 기자로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당시에 MBC 기자, KBS, SBS 또 지금은 노조 간부가 돼 있고 합니다만 그런 후배들과도 경찰서에서 어울리고 사건 현장에서 참 친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또 자부심이 높은 회사였고 KBS도 그렇고 선후배끼리 참 각별했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파업 몇 번 겪고 나다 보니까 MBC의 선후배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 있었습니다. MBC가 아주 서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극단적인 사태 속에서 사실은 노조위원장 하신 한 분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측에서 참 고생하던 한 분은 역시 암 투병으로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암, 유산 이런 비극적 일들이 MBC 내부에서 생겼습니

다.

MBC라는 회사가 이 노조를 둘러싼 거대한 권력의, 노조 권력을 둘러싼 큰 싸움, 노조 권력이 MBC 전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이 싸움의 와중에서 MBC 사장을 반대하고 MBC 사장을 몰아내고 자기들 노조 출신 사장을 찍어 올리고 그 과정에서 같은 노조원들에게 인간적으로 하지 못할 모욕과 수모와 그리고 한 가족을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인사조치, 전보조치를 하는 그런 만행의 기록이 여기 법원 판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MBC 노조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MBC가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서 MBC에서는 비노조원으로서 회사에서 무슨 정상적인 보직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 하이어라키(hierarchy) 속에서 그러면 그 상사가 가진 정치적 신념, 정치적 편향이 그 후배들한테 그대로 투사되겠지요. 그에 맞서다가는 이제 다른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내부라는 것은 서로 다양한 의견이 토론되고 서로 조율되고 그래서 좀 합리적인 이성으로 바뀌고 방송의 편성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면서 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MBC 내부의 인사·편성·보도의 이런 관행과 사슬, 그 지독한 내부 투쟁과 내부의 처참했던 그 기록들이 지금은 MBC의 보도를 너무 편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도국 간부나 보도국 기자가 만일 심의한다면 충분히 더 팩트체크를 해서 더 다듬어 봐야 할 내용도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에 맞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MBC 보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MBC 보도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시민들 또 국가와 정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광우병 보도 사태가 되겠고요.

지금은 MBC의 보도 태도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옛날에 MBC는 우리의 친구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꼈던 친구였는데 지금 MBC는 MBC를 아예 안 보는 사람 또 MBC만 골라서 보고 싶은 사람, 마치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골라서 딱 던져 주듯이 그런 방송사로 지금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방송법은 그런 성향을 고치기는커녕 그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제는 아예 MBC의 막강한 방송노조 노사동일체가 그동안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서 또는 정치권이 마치 국정감사를 하듯이 또는 가끔씩 너무 편향적이거나 너무 한 정파적 성향에 경사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도 다 던져 버렸다. 이제는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에 맞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다. 더 이상 공영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지상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지금 그런 심각한, 국민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벗어난 방송이 될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건 당시의 그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상세히 있는데, 이 공소장 내용도 보면

정말 방송사에서,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방송사에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방송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 사장을 몰아낼 때 참여했던 사람들만 다시 방송사 보도국으로 쫙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파업에 소극적이었거나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제히 또는 제3노조 같은 데 참여한 사람들은 일제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제3노조가 있었는데 제3노조의 숫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본노조가, 실제 노조가 힘이 강화되는 그 통계 수치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8쪽 보겠습니다.

KBS 공영방송의 내막이지요. 여기 노조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70~80%가 노조원입니다, 공영방송은. 일반 회사랑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가 노조 가입률이 가장 높은데요. 여기는 그래도 1노조, 2노조, 3노조가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민노총 산하, 언노련이 민노총 산하 언노련입니다. 여기가 제일 많지요. 전체 노조의 다수가 이쪽 소속입니다. 그리고 KBS 노동조합이 한 1000명 되고, 여기 딱 수치가 나와 있지요.

MBC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지요. 절대적이고, 여기 소수 노조는 1명. 요즘 노조는 복수 노조가 가능해서 이런 소수 노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소수당이 있듯이. MBC 노동조합이 제3노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가 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입니다. 여기가 주류지요. 노사동일체 사장도 여기서 나오고 보도본부장,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BS도 마찬가지, EBS가 전국언론노조 산하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약 80%가 가입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방송종사자는 방송종사자입니다. 국민이 준 지상파를 가지고 국민의 방송을 하도록, 성실하게 공무원처럼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제히 방송사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치에도 반하고 또 국민에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정부부처를 다 감시하고, 기관장 임명할 때 다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나 KBS는 앞으로 국회의 통제 범위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회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해서 방송통신위가 선량하게 하도록 했었지요. 그전에 방송통신위가 완벽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 위임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5명을 재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 왔던 지난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해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권한과 책임을 다 저버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한테 위임합니까? 그렇게 해서 EBS 같은 경우에 교사단체를 엉뚱하게 전교조에 하나 더 주려고 저렇게 하다가 지금 전국교사노조라고 하는 교원 중의 절대다수 단체에서 민주당의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제발 좀 숙고해 달라. 오늘부터는 EBS 방송노조부터는 중단합시다. 더 이상

상정하지 마시고…… 상정했지요? 상정했는데 표결하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법도 좀 연구하십시다. 방송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여당 대표도 걱정하시는 것 우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서. 그런데 유튜브가 힘이 강한 까닭은 유튜브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경향을, 확증편향을, 잘못된 뉴스를 자꾸 강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신념 구조를 갖게 만드니까 이게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 민주당의 대의원들, 민주당의 정말 진성 권리당원들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그동안 싸워 왔던 그런 많은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대로 고르게 투영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유튜브의 막강한 힘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도 그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 지금 전당대회가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 정당 민주주의 자체도 위태롭게 할 지경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당의 걱정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런 허위 조작 뉴스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적대적 진영 논리로……

유튜브의 알고리즘, 제가 나중에 유발 하라리의 책을 다시 상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만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입니다. 확증편향의 알고리즘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점잖은 의원님처럼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유튜브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통령 욕을 하든지 야당 대표 욕을 하든지 야당의 무능한 의원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야 페이스북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이따가 좀 지루해지실 시간이 되면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얼마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위험한지,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를 당하는지를 경고한 대목을 나중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 그러면요, 그걸 막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여러분, 방송법 개정해 가지고 그것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언론중재법도 개악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4년 전의 유엔 인권보고안처럼 또 그런 국제적 수모를 당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국제적 경고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빨리 방송통신위를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구글과 메타 이런 소셜미디어, 압도적인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우리 국내 정치를 분열시키고 국내에 허위 조작 뉴스를 창궐하게 하고 우리 정부와 의회의 권위 이걸 먹칠하게 하고 국민을 심각한 분열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 방송사에서 AI로 가상의 멋진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Her’라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달콤한 말로 젊은 청년들을 유혹해서 ‘너 누구를 공격해라’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을 차단하고 막고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정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그만큼 모욕 줬으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 보시고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복원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한 분 더 임명하시고 다음에 여야가, 아마도 이제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야당이 2명 한다니까 그게 조금 못마땅하시고 믿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약속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하고 다 숙의해서 추천할게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도 여당 위원님이 추천하신 분 같이 한번 검토하십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며 통신의 문제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적 수준도 높고…… 방송과 통신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 봅시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영어 잘하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외국 경험도 많으니까 미국 FCC도 만나고 선진 사례도 분석해서 외국에 뒤지지 않는 그런 FCC,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러 기관장 바꾸려고 또 법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건 국보위법 부칙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받은 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왜 지금 정부 초기에 여당이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 빨리 구성하십시다. 구성해서 더 이상, 지금 허위 조작 뉴스, 유튜브 등으로 해서 대통령도 걱정하시고 또 여당 대표도 걱정하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십시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직도 어디 뉴스 보면 빨갱이로 돼 있습니다. 원조 공산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저도 이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직자니까 어떤 욕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욕을 들어야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의사 판단,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야겠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가 과방위에서 가끔 구글도 부르고 메타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지사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서 또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협력을 하기에는 마침 이진숙 위원장만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좀 방송통신위원회를 함께 만들어서 함께하십시다. 그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공영방송사의 내막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음 29쪽 슬라이드 볼게요.

이분이 고 오요안나 씨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 전반의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번 MBC 특별감독을 통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MBC에 대해서. 그런데 이 근로감독 사 측이 누굽니까? 전국언론노련, 민노총 산하 MBC 방송노조가 바로 사 측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노사동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된, 의결된 방문진법은 이런 노사동일체 MBC 방송노조와 그 간부들에게 더 막강한 권력을 쥐어 주는 겁니다. 이제는 근로감독 정도가 갑자기 들어가면 모를까 체계적으로 방문진 이사회가 또 MBC 사장이 민주적 위임 구조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방송사 내부의 부당노동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30쪽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장악이다라고 의심하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7년에 이런 방송장악 문건이 당시에 한번 나와서 여기에 보면 명확한…… 그런데 2025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법을 바꾸어서 사장을 3개월 내에 바꾸고 또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라는 정부부처 이름을 바꾸는 명칭 기구 변경을 통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아니, 이러다가……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지요. 지금 여당도 다수당이고 정부도 새로 시작했고 지지율도 높고 한 이런 시기에 왜 이런 무리한 일을 하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1980년대 전두환 군부가 국보위법에 국회 직원들을 자르기 위해서 그런 부칙 조항을 입법을 했다가 전부 부결, 1989년에 시간이 지난 뒤에 위헌결정을 받은 사례를 모르십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1981년에 있었던 일이 1989년에 있었던 것은 1988년에 비로소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늦어졌겠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헌법소원 들어갑니다. 바로 위헌소송 들어갑니다. 그리되면 아마 집권 중반기도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전부 위헌결정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31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미 간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쇠고기 협상을 이걸로 막았다,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요구가 있어서 이걸 보여 주면서 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국제협상을……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우리도 농산물 지켜야 되고 저도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농촌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있고, 우리도 축산농가가 있고 다 지켜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내보여 주는 격이고, 이걸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랬을까요?

사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은 쇠고기 수요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30개월령 미만으로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최고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미국 사람들이 요즘 트럼프 행정부 하시는 것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은 거둘게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음 날 우리나라 대표적 경제지 신문에서 광우병 쇠고기와 농산물에 집착하느라 다른 큰 관세협상을 놓친 것 아니냐, 걱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아, 그러면 그건 뭐 오케이. 30개월령 이상 그것은 그대로 가고'…… 왜냐하면 그것은 해 봐야 일부,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30개월은 국내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쇠고기고 큰 실익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산은 이미 30개월 미만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월령 이상은 우리나라만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생물주권을 근거로 해서 조금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 올려 버렸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철강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호주의 협상 사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거울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랬습니다. 호주가 그랬습니다. 쇠고기 규제를 풀라는 요구에 대해서 생물주권이라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사진 보여 주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한 거랑 비슷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미국이 '오케이, 철강 관세 5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될 관세를 낮춰 버리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10%로 지금도 최저 수준이지만 핵심 부품에 대해서 50%에서 최대 200%까지 예고된 관세율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란 그런 겁니다. 냉정한 겁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저게 우리 통상팀이 상당히 기지를 발휘한 것처럼 보이는데, 통상팀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저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저게 2007년…… 이명박 대통령 1년 차가 2008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17년 전인가요? 17년 전이지요, 17년 전. 17년 전에 저랬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미친 소 먹으면 뇌 구멍 숭숭 탁'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한 곳이 어딥니까, 이걸 주도한 곳이?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만 이런 뉴스가……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유튜브가 아니고 MBC 'PD수첩'이었습니다. 이 'PD수첩'을 제공한 사람들이 사장이고 보도·편성 책임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증편향,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정했던 사실까지도 아직도 당당하게 주장하는 이런 확증편향이 된 사람들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을 방송종사자의 이름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국민들에게서 방송을 뺏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MBC 지배구조를 맡기려는 겁니다.

이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했던 분들이 2005년 'PD수첩'의 책임PD를 역임했던 최승호 PD—최승호 PD가 나중에 사장도 했지요—이분이 나중에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2023고단…… 1심 판결이 난 것은 올해 1월이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 광우병 'PD수첩' 최승호 PD가 2018년 신임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조능희, 송일준과 비슷한 성향으로 꼽히는 최승호는 대규모 인사 개편을 통해서 당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PD를 핵심 편성 요직인 기획편성본부장에 앉혔습니다. 조능희는 1987년 교양제작국 PD로 입사한 후 2015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MBC 노사동일체 구조가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광우병' 편 진행을 맡은 송일준 PD는 지방계열사 광주 MBC 사장을 맡았습니다. 이춘근 PD는 시사교양 4부 차장, 김보슬 PD는 시사교양 3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문제의 'PD수첩' 방송 당시 메인 진행자인 송일준 PD를 도와서 진행에 일부 참여한 손정은 아나운서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배현진 아나운서, 배현진 의원이 여기 등장하시네요. 배현진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를 맡았지만 최악의 시청률 기록과 이에 따른 광고 판매 적자로 7개월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MBC 공영방송의 내막입니다.

제가 '광우병 미친 소', 저 시위 사진이 아직도 우리 통상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17년이 지났지만, 17년 전에 그 MBC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

니로 빠뜨리고 당시에 이 협상을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이성까지 마비시켰던 MBC ‘PD수첩’ 그 사람들이 MBC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MBC 방문진을 통째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해서 의결한 법안이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노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의제를 자기들의 확증편향으로, 허위 조작 사실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는데조차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MBC에서 사과 방송을 보내려고 하니까 사과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지금까지도 MBC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 후에 비언론노조원, 총파업 불참자, 우파 정권 시절 임원 등 경영진과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을 소위 적폐로 낙인찍고 비상식적인 수준의 중징계를 남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1.97%까지 추락해 좌편향 프로그램을 틀어 대는 MBC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나면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을 해서 낱낱이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MBC 광우병 보도 허위사실 확정판결 보실까요?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 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감염 확률, 세 가지를 모두 허위사실로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왜 무죄판결을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벌적 손배소 가지고서 하는 이런 법안까지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헌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악의적인 것, 우리나라는 언론의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고의 조작, 악의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면책해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송 당사자가 당시 농림부장관이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을 공연히 명예훼손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것이 MBC ‘PD수첩’이 허위사실이 아닌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민사책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허위 판결 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 씨 등은 2008년 4월 29일……

다음 페이지요, 34 슬라이드.

제가 슬라이드가 많아서 오늘 아주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슬라이드가 총 157개, 천천히 하고……

(책을 들어 보이며)

나중에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를,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서 내가 걱정하는 대목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페이크와 팩트’, 무엇이 조작이고 무엇이 사실인가, 왜 우리는 쉽사리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를 페이크라고 하고 허위 뉴스와 조작 뉴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는가도 나중에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드 케이스’ 이게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 공공정책에 대한 오판, 선량한 의도와 최악의 결과에 관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의 책이고 여기에 노란봉투법 또 민주당과 저희 당이 함께 고민하는 청년의 문제,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문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문제……

또 지금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이 선진 글로벌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글로벌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진짜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이미 언론중재법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완전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사단체 2명 부분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이 법안은 중단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면 교사단체, 지금 전국 초중고 교사단체의 압도적 다수를 EBS 방송법 때문에 적으로 돌리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왜 교사단체 대표가 힘없는 과방위 야당 간사한테 이런 호소문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슬라이드가 많아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아까 이번에 한미 통상협상에서, 관세협상 때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 준 17년 전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7년 전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오늘 방문진법 같은 것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통상협상에서 또 우리를 수세로 몰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MBC 방송을 좌지우지하고 다 실세가 되었고 일부는 그 죄악이 드러나서 서부지법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MBC 방문진을 그런 사람들한테 다 떠넘겨 주시려고 합니까?

이 법은 오늘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 재의를 요구할 겁니다.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법 이것은 표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사단체, 최고의 교사단체인…… 전교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전교조 슬쩍 끼워 넣으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그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분들이 지금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전교조보다 4배 많습니다. 전교조는 EBS 방송의 이사로 추천하게 해 주고 이분들은 배제한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BS 방송법 표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끝난 뒤에 필리버스터를 못 들으신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확증편향의 잘못된 소신과 확신의 사람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노조를 장악하고 드디어 공영방송 이사회까지 다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핵심적인……

그래서 국가적 의제를 흔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야심작이었던 한미FTA를 임기 중에 못 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새 정부 초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해졌습니까?

세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없는 위험을 있다고 과대하게 한 그 방송사, 그 방송사 사람들이, 그 PD가 MBC 사장이 되고 그 노조가 MBC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확증편향의 세력들이 MBC 경영이나 MBC 보도 편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MBC 방문진까지 다 넘겨주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킨 겁니다. 이것 재의요구를 통해서 번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우병 보도가 뭐 잘못됐느냐? 광우병 보도가 옳은 것 아니냐? 지금 그 담당 PD는 국회에 나와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해졌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와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따

져 물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장 당시에 여당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미FTA라는 그 위대한 업적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은 잊고 있습니까? 30개월령?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개월령 이상 해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없는 위험을 과장되게 해서 온 나라를 불안 속에 빠뜨린 것이 지금 MBC의 노조와 MBC의 그 PD와 MBC의 기자들한테는 훈장이 되어서 MBC에서 출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더군다나 이 방문진법을 통해서 이제 MBC 노조가 MBC 방문진을 다 접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재의해야 됩니다. 재의 때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KBS 방송법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시고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좀 더 체면이 우뚝 서시도록,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다시 재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던 요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 씨입니다. 조능희입니다. “조 씨 등은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모르고 은폐했고……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이게요, 우리 명예훼손 구조가 사실을 주장하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주장했느냐, 의견을 표명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가 언론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 허위사실 확정판결도 했지만 또 뭐 다른 것은 다 MBC ‘PD수첩’이 옳지 않느냐, 옳지 않은 게 아닙니다. MBC ‘PD수첩’의 의견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견을 피력한 사람의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서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임이 입증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 이게 정정보도를 둘러싸고서 조능희 PD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정정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법원에서 그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판결의 요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앞서 대법원 MBC 광우병…… 광우병 보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아, 미국 소 먹으면 뇌 구멍이 송송송, 죽겠구나. 미국 소는 미친 소’, 이런 구조의 핵심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하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었다, 한국형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이 높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광우병 공포를 극대화시킨 핵심 세 가지의 보도 내용인데 대법원에서 이걸 모두 허위사실로 판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MBC를 좌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방문진법을 통해서 MBC 노조 사람들이 이제는 방문진 이사도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더 몰아준 겁니다.

이제는 외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제가 늘 이야기한 게 우리가 공영방송 그러면 BBC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BBC를 이야기하는데 BBC 공영방송 지배구조…… 결론은 지금 현행 구조랑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3개 기관 구성 중에서 기관장 대다수는 내각 장관이 추천합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영 담당 인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BC 이사회를 한번 볼까요? 다음, 36쪽.

이게 약간 시간이 좀 지난 것이기는 합니다만 총 14인의 이사회, 이사장 포함 이사를 내각 장관이 추천하고 이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행의 우리 구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된 지금 민주당의 방송법 구조는 여기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노조 넣고 시청자위원회 넣고 또 변호사단체 넣고 이래 가지고 여러 고깔을 씌워 가지고 전혀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이런 영국의 경우에 내각 장관, 이런 내각 장관도 국민들이 선임한 사람들의 위임 구조에 따라서 된 것이거든요. 영국 방통위는 지금 우리보다는 숫자가 약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랑 똑같은 구조지요.

그리고 38쪽 보실까요?

영국 커뮤니케이션청 구조입니다. 지금 영국 커뮤니케이션청 구조가 특이한 점은 우리로 치면 이게 과방위 산하기구로 변경이 됐다는 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40페이지는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입니다.

독일은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연방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복잡한데 나름대로 정말 대표성, 한때 숫자 늘리려고 독일식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엉터리 소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연방제에 따라서 주정부 대표가 다 이렇게 치밀하게, 정말 대표성은, 진짜 이것은 주정부가 또 각계가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방송종사자 또 미디어학회장, 미디어학회 또는 시청자위원회 이런 식으로 대략 두루뭉수리로 대충 같은 편끼리 몰아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체제는 지금 ARD, ZDF 이런 여러 가지 구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방송연합인 ARD 또 단일기관 채널인 ZDF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ARD를 보시면……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독일에 주가 많지 않습니까? 총 9개 방송사가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방송사는 주정부 대표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운영합니다. 경총, 노총 이렇게 딱, 종교단체도 독일 무슨 가톨릭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영방송사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리숙하게 해서 지금 새로 바꾼 것처럼 하지 않습

니다. ZDF는 단일 방송국 체제인데 역시 이것도 총 16개의 주정부 협약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대표, 연방정부 대표 그래서 정말 정부가 주정부 지방자치라든가 해서 주민과 시민들, 국민들이 선출된 위임 구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일 연방의 방송위원회 같은 것도 지배구조를 보면 ZDF 위원 수는 40명인데 굉장히 정확한…… 쫙 거기 보면, NDR이라는 것을 보면 아시지만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군지 그 대표성과 위임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내각 장관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정부가 공영방송의 위원을 추천하느냐?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정부이기 때문이지요. 역시 아까 정치학자가 말했던 법의 정신에 따라서, 현재는 도시 공화정이 아니라 새로운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그런 위임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공영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 정부가 선량하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무슨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때로는 평가받고 또는 견제받아야 될 방송 내부 인사들이, 방송의 피고용인들이 공영방송,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보십시오. NHK 경영위원회의 구성 보시면 12인의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각 1명, 전국에서 4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방송종사자, 무슨 변호사단체 또는 미디어학회 이래 가지고 도대체 그 책임과 주체와 권한이, 왜 그런 사람이 뽑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은 참의원 중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법들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46쪽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마 2008년인가 우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지요. 보니까 이게 미국 방송통신위원회랑 똑같은 구조 같습니다, FCC. 위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제시카 로젠워셀이라는 분이 체어우먼이네요. 우리도 지금 체어우먼이 방통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미국 방통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5인 중 1명을 골라 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이 대통령……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선출된 권력이 그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서 적법하게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 공영방송 역사를 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큰 나라고 이렇다 보니까 수많은 인종과 신대륙에서 새로운 무법의 지대에서 질서를 만들면서 큰 용광로 같은 것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 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미국 공영방

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뉴턴 미노우라는 FCC 의장이 미국 공영방송공사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미국은 상업방송이 활발한 곳인데 공영방송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친 산업화, 선정성이 미국 방송을 거대한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엄격한 방송 라이선스 심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적 상승을 위한 공영방송사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것이 미국 공영방송공사의 시작입니다.

1967년에 미국 공영방송공사법 서명에 린든 존슨, 린든 존슨이야말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인권에, 인권혁명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1967년에 미국 공영방송공사법을 서명하면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모든 냄비에 닭 이상을, 그러니까 평범함 이상을 원한다. 우리 미국인들은 무엇보다 우수성을 갈망한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더욱더 풍요하고, 특히 정신을 더 풍요롭게 하겠다는 그런……

미국 공영방송공사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미국 공영방송공사 이사회 8인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이사장과 최고경영자는 내부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꾸 우리는 이걸 정치 후견주의라고 해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출된 권력, 대통령과 국회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량하게 공영방송을 국민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도.

이제 좀 돌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방송의 문제는.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 동료 의원들께서 '국민의힘도 대안을 내놓으시오' 그러는데 대안이 아니라 지금 구성된 법안이 오랫동안 우리 선배들, 21대 국회 때까지 의원들이 여야가 바뀌며,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면서 만들어 내놓은 그것이야말로 글로벌 표준에 관한 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더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법 바꾼다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동료·선배 의원들께서 지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하신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자꾸 지금 외국에 없는, 위임 구조가 전혀 없는, 국민의 대표성도 없고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그런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구조도 없이 그냥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을 좌우해서 심각한 확증편향을 일으켜서 광우병 소동으로 그 난리를, 온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이 사장되고 보도본부장 되고 편성본부장 되는 그 노조 간부들을 다시 방송경영, MBC 방문진, MBC 공영방송 이사회가 되도록 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다, 이것은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을 통해서 위헌적 입법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내년 지방선거나 또 그 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조항은 그 구조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과 유사하다, 아

주 위헌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일정한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한 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을 입법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종사자라고 하면서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고 어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면 그 종사자 내부에서의 평등권 침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미디어학회라고 한다면 미디어학회가 수십 개가 넘는데 2개의 미디어학회만 인정한다면 배제된 나머지 미디어학회도 왜 똑같은 미디어학회인데 우리는 배제되느냐라는 이런 대표성, 평등권 침해의 위헌소송에 휘말릴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방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우리 방송보도에 편향성이 있었다면 그 편향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저널리즘의 회복입니다. 한때 PD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PD저널리즘이 뭐 별다른 저널리즘이 아니라, PD저널리즘이 일반 저널리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PD저널리즘이라는 희한한 말을 붙여서…… 우리나라 PD저널리즘의 대명사가 광우병 파동 보도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저널리즘이 아니라 진정한 저널리즘으로의 회복이다. 우리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진정한 저널리즘으로 복귀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보도준칙, 이미 스스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도준칙으로의 회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BBC를 보시겠습니다.

BBC 선거방송 제작 보도준칙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명확합니다. 저기 보시면 그런 겁니다. 공평무사·정확, 일부러 편들지 마라, 특정 정파를 편들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공연히 분열시키고 특정한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허위 조작 뉴스를 만들거나 편파 뉴스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성, 여기서 보면 듀 임파셜리티(Due Impartiality)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하게 보도하라, 공정하게. 시간 배분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후보들에게 공영방송 할 때 페어니스(fairness)하게 하라, 페이니스하게. 페어니스가 뭡니까? 공평성 아닙니까, 공평성. 코드 오브 프렉티스(Code of Practice), 그런 보도준칙을 몸에 익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때입니까? 허위 조작 뉴스 녹취록을 발췌·왜곡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앞뒤로 이어 붙여서 교묘하게 마치 당시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사건 범인들에게 커피를 주고 봐준 것처럼, 이른바 윤 커피 사건을 MBC 8시 뉴스에—몇 꼭지입니까—주르륵 이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하루 전날……

그런 방송을 BBC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듀 임파셜리티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우병 보도에서 보듯이 과학적으로 아닌 사실을 확증편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자기 편견과 확증편향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그걸 지상파라는 거대한 국민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전용해서 큰 분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선거 결과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당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공영방송에서 작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BBC 선거방송 준칙에서 이야기하는 듀 임파셜리티(Due Impartiality)고 페어니스 투 캔디데이츠(Fairness to Candidates)입니다.

어떤 방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비리 보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정하게 그 사람의 해명은 해명대로 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허위 조작으로 다 밝혀진 사실인데 선거 때 그걸 일제히 몰아붙인다면, 그것만 해도 이미 공영방송은 공정성 유지에 심각한 실패를 부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 실패가 왔을까, 왜 그런 실패가 왔을까? 저는 이게 저널리즘의 붕괴라고 봅니다.

저널리즘이 없고 우리 언론상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내 편이 보도본부장이 돼야 내가 정치부장이 되고 그래야 내가 국회 데스크가 되고 그래야 내가 다음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고,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성적 지식으로 공평한 뉴스를 바라보게 하는 감각과 저널리즘의 윤리를 파괴시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방송사 지배구조를 억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윤리 기준과 이런 코드 오브 컨덕트(Code of Conduct)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영국과 일본과 독일의 방송 지배구조 보면 지금 우리랑 크게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점은 BBC라든가 또 미국의 PBS라든가 NHK라든가 독일 공영방송에서 견지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원칙입니다. 또 뉴욕타임스가 제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우리 저널리즘이 가져야 되고 그 원칙을 어긴 방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위 조작 보도를 하고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지배하는 그런 편견과 확증편향으로 이루어진 똘똘 뭉친 직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특정한 정당과 정파가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됐다며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망가지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도 이미 한 진영의 방송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한때 공영방송 시청률이 20%, 30%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공영방송도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OTT라든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 탓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또 여러 차례 그걸 보면서 공영방송 스스로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다 봅니다. 그런데 왜 공영방송 뉴스는 안 볼까요?

우리 저널리즘 그리고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 글로벌 지금 표준과 유사한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걱정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송사가 다음 선거 때 또는 우리에 대해서 공연히 없는 사실을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고 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큰 지장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저 방송이 선거 때 우리한테 불리한 보도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방송 지배구조에 연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 방송 지배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여당에서 과거에 저 사람들 저렇게 안 되겠더라 싶은 사람, 그런 식으로만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조를 빨리 복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방송 지배구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전부 위헌적

인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위헌 판결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당장 EBS 방송법에서 보셨듯이 13만 명이 넘는 가장 강력한 교사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배제하고 교사단체 수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전교조를 굳이 넣으려고 이 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지금 교사노조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법안 통과 중단시켜야지요.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 문제는 이건 지금 과유불급이다, 이건 정말 뭐랄까요, 교각살우다, 잘못된 뿔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소를 죽인다. 소가 뭡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주권을 주권자께서 우리한테 위임하면서, 선출하면서 그 나라를 잘 관리하라고 이랬는데 국민의 중요한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의 방송인 방송사의 공영방송 이사 구조를,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방송사에 지금까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느그 알아서 해 봐'라고 던지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국민들의 방송을 뺏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방송 지배구조가 아니라 엄격한 저널리즘이다. 우리나라 일부 비뚤어진 PD저널리즘이 광우병 사태로 그 정체가 드러났지마는 그런 엉터리 저널리즘이 아니라 진짜 저널리즘이다. 그 진짜 저널리즘이 BBC 보도준칙이라든가 또 미국의 보도준칙 또 독일에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3쪽 보시지요.

BBC 보도준칙입니다. 영국 방송사 중 독점적 우위를 누리던 BCC는, 1953년까지만 해도 TV 채널은 오직 BBC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당파적·편파적 보도를 막기 위해서 엄격한 보도준칙을 정립했습니다. 우리도 이 비슷한 걸 베끼기는 했어요. 그런데 안 지킵니다, 우리는. BBC 보도준칙은 아직 입헌군주제 나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왕이 지금, 왕실이 이렇게 칙허장을 통해서 BBC 설립 근거와 의무를 제시합니다. BBC의 왕실칙허장에는 모두 6조, 제6조는 5개 항에 걸쳐서 BBC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5쪽 보실까요?

BBC의 공적 책무는 왕실칙허장, 로열 차터(Royal Charter) 제6조에 보듯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이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 그래서 극단적인 대치와 갈등의 알고리즘이 판치는 이 시대에 정말 맑은 샘물처럼 통합과 미래와 지혜를, 품격을 안겨 줄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보도준칙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됩니다.

BBC의 공적 책무는 저는 KBS의 공적 책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법 개정안에 이런 공적 책무를 강조했습니까? 이런 공적 책무를 저버릴 방송 이사로 가득 찼습니다, 편파적이고 확증편향의 사람들. 영문도 없이 시청자위원회, 누구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변호사단체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학회 중에서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보여왔던 미디어학회 이런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런 BBC 보도준칙, BBC의 공적 책무로부터, KBS의 공적 책무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BBC의 보도준칙, 왕실칙허장 제6조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 우리 KBS가 그대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KBS가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KBS가 방송법 바뀌었으니까 사장 물러나라고 노조가 막 들고일어난답니다. KBS의 언론계 선배·동료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KBS의 지배구조가 BBC의 보도 지배구조와 크게 다릅니까? KBS는 BBC와 같은 회사가 되어야겠습니까, KBS는 특정한 정파를 위한 어떤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노조가 좌우하는 회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KBS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 문화대제국으로 들어선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방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편향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역사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이 지원되어야겠습니다.

56쪽 보시겠습니다.

BBC의 보도준칙입니다. BBC 보도준칙은,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BBC의 방송 편집윤리·가치·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우리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긴급한 보도·편성 이런 건 언제 합니까? 편성위원회 다 모여서 노사 동수로 결정해서 언제 합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요,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BBC 보도준칙의 밑줄 친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오보의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우리가 확증편향에 빠지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세상을 봅니다. 없는 위험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있는 위험은 외면합니다. 그런 보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단정할 수 없는 걸 단정하지 말라 이런 것이 바로 오보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그런 편성지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언제 신속한 보도·편성을 합니까?

57쪽 보시겠습니다.

BBC 편집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적절한 불편부당성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불편부당성,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는 다뤄지는 사건과 의견, 논쟁의 주 입장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따라야 하며,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시간 비중을 두며 폭넓은 범위·주제·관점을 제공해야 하며, 특정 관점이나 입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논평거리가 되는 주제가 공동선을 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경우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한동안에는 무슨 검언유착이라고 했다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이게 어느 당을 난처하게 하고 검찰을 난처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오보를 했다가 금방 사과하는, BBC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매우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BBC는 보도준칙으로 불편부당성

12개 하위 요소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KBS나 우리 공영방송에서 우리 저널리즘, 저널리스트들이 명심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기자를 하면서 때때로 '저 사람 나한테 잘해 준 사람인데', '저 정당 꼴 보기 싫은데 좀 골탕 먹일 뭐 없을까', '이게 보도되면 저 정당이 불리할 텐데', 그런 자기검열을 언론이 하면 안 됩니다, 저널리스트가. 그래서 BBC는 저널리스트로 하여금, BBC 종사자로 하여금 불편부당하도록 12개 하위 요소를 구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정확성(accuracy), 둘째 균형(balance), 세 번째 맥락(context), 네 번째—이게 중요합니다—거리두기(distance).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라, 네가 호오의 감정이 있을 때, 특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좀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지요. 공평성, 이븐핸디드니스(even-handedness)네요. 두 손 다 공평하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공정성(fairness), 공평성과 공정성 똑같은 말 같은데 그런데도 이븐핸드디드니스하고 공정성(fairness)을 두 번씩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건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잘 아실 텐데 지금 답변할 위치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큰 운영에도 정확한 기준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객관성, 오브젝티비티(objectivity)지요. 그다음에 무편견성, 오픈마인디드니스(open-mindedness)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마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몇몇 동료 특파원들이랑, 돈 오버도퍼라고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했던 전설적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전쟁 때는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전쟁에 참전하러 오다가 휴전이 된 것을 처음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어서 '투 코리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우리 한반도 현대사를 잘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한국학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했습니다. SAIS의, 워싱턴 D.C. 내에 있는 학교에서 소장도 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우리 동료 특파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특파원이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북한하고 뭘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버 세이 네버(never say never)'라고 그랬습니다. 언론 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네버,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것 오픈마인드니스 아니겠습니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일이 있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닫히면, 저널리스트들은 그리고 공영방송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쇠고기 이것 봐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이렇게 고리를 찾아 가지고 PD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고 막 엄청나게 확증편향의 편향을 거듭하면서 최악의 경우로 치달았던, 그걸 피하기 위해서도 무편견성(open -mindedness)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엄격성이지요. 엄격해야 됩니다, 팩트체크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미국 여성이 죽은 게 정말 광우병 소를 먹었기 때문이냐' 정말 한 번 더, 두 번 더 점검해 봤으면 피할 수 있었던 오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격성, 리거(rigour)라고 했네요.

진실(truth), 자각(self-awareness), 투명성(transparency).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면서 명확하게 불편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BBC의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 보도 종사자, 편성 종사자, 제작자들한테 부단히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과 정치 산업적 논쟁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취해서 특정 관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사안은……

전화를 좀 꺼 놔야겠습니다. 더러 지역에서 전화가 오는데, 우리 보좌진들 보고 계시면 우리 지역에 제가 필리버스터 중이라고 오늘 12시까지 전화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널리 공지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지를 못 했더니 지역에서 막…… 이걸 보고 전화하는 건 아닐 테고 혹시 녹화방송이라고 보고 전화했을 수도 있겠는데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항공기 모드로 해 놨습니다. 전화번호를 돌려놓을 걸 잘못했네요. 우리 보좌진들은 보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BBC의 편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공공정책, 정치 산업적 논쟁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취해서 우리가 특정 관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천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적 사안을 방송하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에게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답신을 해 줘야 됩니다. 답을 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속보 경쟁도 심해지고 이래서 그런지 뻔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박도 듣지 않고 막 쓰는 기사가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공영방송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도 시간이 촉박하고 또 하나 보도 방송이 짧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균형적인 중립 보도야말로 BBC의 명성을 만든 것이고 우리가 그나마 지상에서 어떤 모델을 찾는다면 BBC 같은 방송을 우리 공영방송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민주당도 걱정 없고 우리 당도 걱정 없고 우리 국민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K-문화와 K-민주주의를 또 K-산업을, 인더스트리를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세계가 혼란 속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켜 온 가치와 보편 기준이 이제 세계 평화와 세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국적 관점, 그런 글로벌한 어떤 시각에서 공영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국내 사안부터 엄격하고 균형 잡힌 중립 보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원칙, 59쪽 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12개의 하위 요소를 말씀했습니다만 섹션 3에 가면 애큐러시(accuracy)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무엇이 애큐러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 직접 구한 자료로 참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퍼스트핸드 소스를 가능한 한 구해야 된다. 누가 가필된 자료, 그게 윤 커피 사건이 특히 대표적이었습니다. 윤 커피 사건이 JTBC가 보도한 뒤에 MBC도 보도하고 다 했습니다만 JTBC는 사과 방송을 나중에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기자가 전체 녹취록을 숨기고 일부 녹취록만 편집해서 방송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 방송하고 그 기자는 그래서 JTBC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MBC는 똑같은 걸 하고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너 직접 구한 거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중간에 혹시 삭제되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거 없나?' 이걸 확인했으면 그런 오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유명한 신학림하고 또 누구 녹취에서 죽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풀로 보면 '그래, 그게 그러면 윤석열이었어?', '아니야, 윤석열이 아니고 박 아무개였어'. 그런데 그게 그 녹취록은 빼면서 윤석열이 커피 타 준 것처럼 만들어 놨던 게, 세상에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개더 머티리얼 유징 퍼스트핸드 소시스 웨어에버 파서블(gather material using firsthand sources wherever possible), 어디 있든지 간에 가능한 한 퍼스트핸드, 누가 만들어 가지고 첨삭하고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게 애큐러시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체크 앤드 크로스체크 팩츠(check and cross-check facts), 체크하고 또 크로스체크 팩트를 해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개 또 정치인이 흘려 주면 그게 반대편 정치인을 당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때때로 검찰이 또 이런 장난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그냥 써 가지고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명예를 해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라, 문서라든가 또는 디지털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라.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렇게 다 적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법 개정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연수를 아마도 언론연수, 예전에는 기자연수도 시키고 했는데 요즘 언론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언론연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정말 저널리스트로서의 보람과 가치 또 세상을 바꾸게 하려는 그런 위대한 힘은 이런 애큐러시에 있는 겁니다. 힘겹더라도 비록 보도에서 늦어지더라도 직접 1차 자료를 구하고 체크하고 크로스체크하고 또 제출된 증거의,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체킹을 하는, 데스킹을 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더 신뢰할 만한 것이지요. 1인 미디어는 그냥 듣는 대로 히어세이(hearsay) 아닙니까, 듣고 바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또 엄밀하게 묻겠지요. 그러나 지상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그것이 얼마나 엄밀해야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애큐러시 원칙만 지켜도, 여기 BBC가 지금 하고 있는—벌써 한 네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입니까—이 원칙만 매뉴얼처럼 숙달하고 마치 우리 총기 분해하듯이, 총기 다시 할 때 착 넣고 그렇게 하듯이 언론인이라면, 미디어에 있는 종사자라면, 더구나 데스크에 있고 또 보도책임자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애큐러시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그런 걸 올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고 정치에도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BBC 편성 원칙 중에…… 또 60쪽 보실까요?

아주 의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보도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믿을 수가 있겠지요. 기자가 전화를 받을 때는 때때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내부고발자들이 있고 할 텐데……

그러나 여기 보면, 60쪽에 BBC 편성 원칙 '3.3 Mandatory Referrals'에 보면 'Referrals to Director Editorial Policy and Standards' 이렇게 돼 있는데, 3조 3항 1호인가요? 여기 보면 특정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소스로부터 어떤 아주 중요한 주장을 듣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익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경우는 반드시 이것 그냥 보도하면 안 됩니다. 이 보도는 우리도 방송사에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렉터 에디토리얼 폴리시 앤드 스탠더즈 앤드 프로그램 어드바이스(Director Editorial Policy and Standards and Programme Legal Advice)라는. 방송할 때 KBS에도 변호사 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방송이 공익제보를 틈탄 아주 위험한 주장과 상대방의 건들기……

오랫동안 민주당이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중의 하나일 텐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데 수사 중인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반쯤 죽여 버리지 않습니까, 인격을 말살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방송이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굉장히 정확한 이런 규정까지도 넣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61쪽 보시겠습니다.

이걸 번역을 했네요, 저희가. 나중에 언론인들에게는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정확성에 대해서 'BBC는 적절한 정확성을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적절한 '듀 애큐러시(Due Accuracy)',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애큐러시지요, 듀 애큐러시라는 것은. 아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정확성을 지켜야지요, 당연히.

'정확성에 대한 약속은 BBC의 명성과 시청자의 신뢰에 근본적이며 그것이 BBC의 기반이다. 정확성은 BBC 왕립칙허장 부속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서 due라는 적절하다는 용어는 정확성이 콘텐츠의 주제와 속성, 예상되는 시청자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를 고려해 프로그램에 적절하고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인포스팅(signposting)이라고 그러네요, 사인포스팅. 사인포스팅을 고려해서……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지만 BBC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이를테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코미디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확성은 통상 사실 기반 콘텐츠에 요구되는 정확성과 다르다. 심지어 한 장르 내에서도 그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 기반 콘텐츠의 경우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확성은 그것이 사실적 오락인지, 역사 다큐멘터리인지,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정확성은 단지 사실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안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경우 관련된 사실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관련 사실과 정보의 경중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적합한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능한 한 1차 자료를 사용해서 취재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문서 증빙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진위를 검증한다. 가능한 한 출연자의 주장과 진술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뉴스와 시사 관련 콘텐츠에서는 적절한 정확성, 듀 애큐러시를 달성하는 것이 신속성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BBC의 모든 제작물은 주제와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출처를 충분히 밝히고 건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철저히 검증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BBC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근거 없는 추측은 피해야 한다. 확증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쟁적 주장, 사실 자료와 기타 콘텐츠는 그 사실을 해당 자료에 기록해야 한다.

BBC는 고의로 혹은 실질적으로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왜곡하거나 만들어 낸 자료를 사실로 제시하거나 또는 기타 BBC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사실관계 오류가 발생한 경우 통상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그 오류를 교정해야 된다.’

이게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하라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맨더토리 리퍼럴(mandatory referrals)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의하라는 이야기지요. 이는 BBC 편집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지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상의하라는 겁니다. 편집정책·기준국장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디렉터 에디토리얼 폴리시 앤드 스탠더즈(director editorial policy and standards)를 편집정책·기준국장이라고 우리 말로 굳이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팀—프로그램 리걸 어드바이스—과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각한 논쟁적 주장을 익명의 단일 출처에 의존하여 보도하거나 주요 출연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할 때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언론인들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를 포함해서 모든 출연자 모집 광고 문안은 관련 부서 대표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다 규정해 놨네요.

다음, 편성 원칙은 ‘실천’의 ‘자료 취재’.

‘우리는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1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1차 정보원에게 물어보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제공한 증거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단일한 정보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63쪽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영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루하시니까.

미국은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이게 우리 과방위에서 좀 논쟁이 되기도 했었는데 페어니스 독트린이 너무 기계적 균형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기계적 균형 유지하면 비평은 어떻게 하느냐, 추적보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쟁이 나왔었는데 페어니스 독트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이 페어니스 독트린, 공평성 독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1940년대 후반 미국 방송계 역시도 CBS ABC NBC, 3사가 독점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디어 영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체제를 위해서 공정성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 공영방송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증오와 적대와 허위 조작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 누구나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한 샘물처럼 그렇게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공정성 원칙을 오히려 공영방송사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심지어 이것은 방송 면허증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정·중립 보도 의무라고 할까요. 미국 FCC의, 미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사는 공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이슈에 관한 뉴스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퀄 타임(equal time)이라고 그럽니다. 이퀄 페어니스(equal fairness)이자 이퀄 오퍼튜니티(equal opportunity)이고, 이퀄 오퍼튜니티는 이퀄 타임이라고 합니다. 방송시간의 공평성입니다.

공영방송이 지상파인데 국민의 재산을 이용하는 방송인데 어떤 특정한 주제를 국민들이 오도할 수 있도록, 다수의 국민들은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한 생각만을 주입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페어니스 독트린이—지난번 우리 과방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최근에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폐기된 건 아니고 아직도 BBC라는 데 보면 이걸 매우 중요한 준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페어니스 독트린을 만든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한국의 민주당과 비슷한 진보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화당과 비슷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없앤 행정부가 공교롭게도 레이건 행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이 페어니스 독트린 같은 것은 엉터리 기계주의 균형이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페어니스 독트린을 폐기할 때 그 이유는 반론 비판 기회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들이 논란을 부를 만한 이슈를 기피해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그 당시 재밌는 것은 미국 의회, 민주당 의회가 또 공화당 의원 다수도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성 원칙 입법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의 공영방송은 페어니스 독트린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들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아마 트럼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겁니다. 레이건과 비슷할 텐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저희 당이 우리 공영방송이 필요한 것은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 오히려 미국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해 줘서 공영방송을 페어니스 독트린 기반 위에 세워야 되는데, 페어니스 독트린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이건 때 이야기

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그냥 일방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뭔 반론을 실어 주고 그러느냐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잘못한 것은 잘못을 비판해야겠지만 그러나 반박의 기회도 없고 또 상충되는 것도 없고, 세상에 다룰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오로지 그 한 뉴스에 집중하고 오보로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페어니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같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같은 우리 국민의힘이 오히려 느끼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방송은 더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비판과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이 페어니스 독트린 효과로 사실은 미국에 바로 FOX News가 등장했습니다. 공정성 원칙 폐기 이후에 숀 해니티, 러시 림보…… 러시 림보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우파 김어준 같은 사람입니다. 러시 림보 같은 정치쇼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FOX News 같은 정치 오피니언 채널이 대성공하고 그 이후에 미국 정치 미디어 환경이 양극단화되는 경향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FOX News를 보는 사람, CNN 뉴스를 보는 사람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극단적 정책 양극화가 나온 것도 이런 페어니스 독트린의 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시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방송사들한테 강제하는 룰입니다. 이건 공영방송뿐 아니라 방송사 면허를 받은 모든 방송사한테 강요하는 룰입니다. 이것 안 하면 방송사 면허도 뺏깁니다.

여기 FCC 팩트시트입니다. FCC Political Programming Rules입니다. 이게 2022년 8월 18일—3년 전이네요—문서입니다. Equal Opportunities(Sometimes Called ‘EQUAL TIME’). ‘이퀄 오퍼튜니티, 정치 보도 프로 만들 때는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라. 그것은 이퀄 타임과 때로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같은 이야기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치 캠페인 중이거나 이럴 때 방송이 특정 정파의 무슨 하수인처럼, 특정 정파를 위한 자발적 수족처럼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방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편향이 또 존재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사들도 보도준칙 같은 것을, 편성지침도 만들 듯이 보도준칙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대통령선거 직전에 MBC 뉴스의 보도·편성 순서가 지금도 네이버에 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인데 이건 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아까 학생들 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저는 페어니스 독트린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 같은 겁니다. 이건 독일의 공영방송의 토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45년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전했습니다. 살육과 증오로 점철된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정치적·종교적 균형을 찾자, 한쪽에 쏠리지 말고 고르게,

균형 잡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 시민들을 교육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76년 독일 내 보수와 진보 정치교육 철학자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라는 것을 정립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이텔스바흐 컨센서스네요. 보이텔스바흐…… 왼쪽이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보이텔스바흐 3원칙은 이런 겁니다. 주입 또는 교화금지 원칙, 사회적…… 이건 학생들, 교단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입 또는 교화금지 원칙,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해 학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 주거나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교육 목적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는 간혹 교단에서 어느 선생님이 어느 대통령을 욕하고 어느 누구를 아주 비속어를 쓰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선생님을 학생들이 학부모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이 보이텔스바흐 3원칙 이런 것들이 지금 양극단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의 사회적인 논쟁, 특히 우리 국회뿐 아니라 교단에서도 하나의 원칙으로 확보되어서 특히 우리 자라나는 시민들이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 편향적인 알고리즘에서 적대와 증오로 무장되어서 과도한 폭력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과도한 폭력행위에 앞장서지 않도록 그런 교육 원칙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 원칙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공영방송도 이런 원칙 위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실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편향된 확증을 가지고서 마치 광우병 PD저널리즘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큰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영국 BBC의 애큐러시라든가 또 디스턴스라든가 그런 열여섯 가지 준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쟁 원칙,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되고 이 원칙은 주입 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3.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정치 입장을 결정한다.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저널리즘 아까 얘기했지만 뉴욕타임스, 미국 가서 뉴욕타임스 이야기하면 미국의 공화당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주로 민주당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들고 다니면—제가 특파원 할 때 놀랐는데—자기는 리버럴이다라는 이런 딱지 들고 다니는 거랑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슐츠버거지요. 슐츠버거 이 편집인이, 발행인이 뉴욕타임스의 본질적,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대목은 이건 좌우 편향…… 누구든지 간에 꼭 명심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지난 백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시아지국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혹시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에 뉴욕타임

스 편집진이 얼마나 근무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 두어 명 될까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 주는 지표여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에는 50명 이상의 뉴욕타임스 편집 간부와 기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홍콩이 홍콩 보안법 파동 이후로 홍콩에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면서 뉴욕타임스 홍콩지국이 아시아 전체를 담당하는 지국이었는데 뉴욕타임스 본사에서 뉴욕타임스 보도, 홍콩 주재하는, 홍콩에 있는 아시아지국 사람들한테 결정하게 했답니다. '당신들 어디로 갈래? 아시아지국을 옮겨야겠다.'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나, 그런데 싱가포르는 너무 많고 멀고 하니까 도쿄, 도쿄가 훨씬 매력적일 것 같은데 의외로 뉴욕타임스 아시아지국 저널리스트들이 서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뉴욕타임스 오라고 건물을 제공하거나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의 주로 서울 기사를 많이 쓰는 최상훈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귀찮아 죽겠답니다. 이 사람들이 기자가 아닙니다. 한국 취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뉴욕타임스 편집국장들입니다. 간부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 매일같이 서울의 한류를 즐기면서, 그것이 뒤늦게 '케데헌'으로 나와서 김밥 먹기, 떡볶이 먹기, 남산 즐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뉴욕타임스 편집진 50명이 매일 서울에서 그런 한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TV 보고 나서 최상훈 국장한테 '상훈, 어젯밤에 내가 뭘 봤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라고 설명해 달라고 한답니다. 아주 귀찮지만 그러나 즐거운 비명이지요.

뉴욕타임스가 왜 이렇게 왔느냐? 뉴욕타임스는 지금 더 이상 종이신문이 아닙니다. 디지털미디어입니다. 저는 방송 언론중재법 개정안 하면서 언젠가 우리나라의 레거시 미디어, 특히 프린트 미디어들, 전통적인 100년 이상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모든 언론들, 문화일보 세계일보, 서운할까 싶어서 제가 아는 신문 다 외워 얘기했습니다. 모든 신문들이 이제는 디지털미디어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50명의 기자를 둔 이유는 뉴욕타임스는 24시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종이신문으로만 돈을 벌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에 있는 신문인데 인터내셔널판을 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일보가 뉴욕타임스 그걸 내고 있습니다만 뉴욕타임스는 24시간 편집해서, 인터내셔널은 각국에서 조금씩 조금씩 종이로 찍지만 종이가 전부는 아니고요, 디지털 구독자로 수익을 얻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2년 전에 뉴욕타임스 최상훈 특파원을 부르고 해서, 뉴욕타임스 지국장은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한번 꼭 불러 봐야겠는데, 이 지국장은 아시아국장이지요. 아시아국장인데 엄밀히 치면 아시아국장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의 서울국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그때 우리 보좌진들, 국회의원들하고 뉴욕타임스를 불러서 '뉴욕타임스 서울 시대, 왜 뉴욕타임스는 서울로 왔나' 그러면서 그때 부제를 밑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서울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서울 편집국은 서울 뉴스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아 뉴스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뉴욕이 밤 7시가 넘으면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 기자도 모든

기사를 서울 헤드쿼터(headquarter)로 송고를 합니다. 그러면 뉴욕이 밤 8시면 한국 시간은 얼마지요? 한국 시간은, 여기는 한국 근무 시간이지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되면 여기서 뉴욕타임스 편집국장들이 뉴욕에서 올라온 기사, 산티아고에서 올라온 기사, 저 남미에서 발생한 지진, 우크라이나 기사를 다 여기서 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한류를 즐기면서 한국에서 기사를 에디트합니다. 그리고 송고합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스 글로벌 홈페이지에 쫙 뜨는 거지요.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우리나라 기사들은 너무너무 짧지 않습니까, 속보 경쟁한다고 복붙하고 그래서 제목만 이상하게 달고 해서.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돈이 되는 것이, 디지털미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뉴욕타임스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10개 기사까지만 보고 나머지 기사부터는 세 단락만 보고 나머지 단락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나라 국내 신문 구독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쌀 수가 있어서 보면 그런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미디어로 가야 됩니다, 심층보도, 정확한 보도, 믿을 만한 보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의 뉴욕타임스 기사는 유럽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뉴욕에서도 워싱턴에서도—뉴욕타임스 뉴욕 헤드쿼터가 아니라—서울 헤드쿼터로 다 송고되고 여기서 작성돼 가지고 전 세계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전 세계 뉴욕타임스 프린트 에디션, 그러니까 신문 인쇄판으로 편집되어서 보내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가 그런 세계적 명성…… 그리고 우리가 밤이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24시간, 그러니까 스리 시프트(three shift)입니다, 8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서울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런던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미디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좀 리버럴 매체여서 미국 공화당원들은 싫어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공화당 사람들 다 읽습니다. 왜? 정확하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금 이념에 안 맞고 가치에 안 맞으면 그 신문 봅니까? 그리고 저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엉터리로 씁니다. 자기 편견대로 씁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분명한 입장과 가치가 있고, 리버럴이고 자기들은 항상 대통령선거 때 미국 민주당 지지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서울 헤드쿼터에 50명의 편집진을 두고 전 세계 뉴스를 24시간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 뉴욕타임스를 보는…… 왜 그러냐? 뉴욕타임스는 저널리즘이다, 이 사람들은 리버럴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비판을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엉터리 허위로, 허위 조작으로 우리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누군가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시 대통령도 뉴욕타임스 그렇게 욕하면서도 뉴욕타임스 꼬박꼬박 읽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뷰는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포스트랑 꼭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슐츠버거 발행인이 2023년 5월 15일 날 밝힌 저널리즘의 에센셜 밸류(essential value),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이

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걱정하고 우리 당이 걱정하는 방송의 편향 보도, 왜곡 보도, 허위 조작 뉴스 이런 것들을 정말 제거하려면 이미 전 세계의 표준적인 이런 방송 지배구조를 무리하게 바꿀 게 아니라, 그래서 위헌소송을 괜히 유발할 게 아니라 진정한 저널리즘을 갖추도록 우리 공영방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영방송이 이런 품격 높은 것을 해 주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신문·방송, KBS 방송이 금방 AI로 통역이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즘은.

우리가 정확한 보도를 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우리 문명에 대해서 이걸 한다면 이제는 우리 공영방송쯤 되면 우물 안에서 골목대장 하려고, 정치를 좌우하려고 기웃거리고 어디 정치 줄 잡아서 자기 보도국장 되고 나중에 워싱턴 특파원 가고 이러려고 줄 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널리즘으로서 똑똑하게 정말 진짜 저널리스트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KBS 정도는 사실 전 세계에 특파원 다 둬야 됩니다.

KBS가 지금 그런 재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KBS도 한동안 형평성 없는, KBS 시청 거부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영방송이 시청 거부 운동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만한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시청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TV도 보지 않는데 시청료 올려 줄 수 있습니까? 시청료 분리징수 했다가 다시 통합징수 하는데 그걸로 KBS가 BBC랑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질 높은 기사 그리고 KBS의 시각,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이렇게 본다, 한국이 바라보는 세계—이게 그 유명한 소버린 이슈 아닙니까, AI 그 유명한—주권적인 관점에서, 주체적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발신하는 동북아 뉴스…… 우리가 언제까지 CCTV·NHK 뉴스에 좌우됩니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도발적입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알았습니다. 일본은 알아서 일본은 딱 발사되는 즉시 탐지해 가지고 새벽 4시에 총리 주재 내각회의 소집하고 NHK발로 전 세계에 기사가 투사가 됐습니다. ‘노스 코리아 론치드 미사일(North Korea launched missile), 뉴클리어 미사일(nuclear missile)’ 하고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에 떨어졌다’ 탁 이렇게 다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NHK 자막으로 NHK 뉴스가 도배됩니다. 졸지에 동해가 씨 오브 재팬 된 겁니다. 일본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뭐 했느냐? 우리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대통령 잠 깨울까 봐 또 괜히 통제할 수 없는 남북관계 나빠질까 봐, 그런 눈치 보다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쌓았던 동해라는 그 지명을 한꺼번에 내준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계 뉴스를, 더구나 동북아에 발생하는 뉴스, 북한 뉴스 이런 것들 그리고 동북아에 관한 여러 뉴스들은 NHK라든가 CCTV에 뒤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AP 뉴스가 동북아 뉴스를 먼저 타전하도록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아마 한국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 KBS 볼까요? KBS WORLD 봅니까? WORLD 보도 내용도 취약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역성을 강화하고, 로컬이 위기에 있고 기후위기 때문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갑자기 산사태 나고. 그러면 지역방송을 더 강화해 주

고 이런 KBS가 국격을 높여서 전 세계에 한국적 시각으로, 우리 한국의 보편가치로 전 세계에 뉴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줄 방송법 개정을 해야지, MBC 방문진법도 마찬가지고요.

MBC도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편에서 쉽게 장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MBC 지금 이미 경영 적자입니다. MBC는 부동산 사업자로서 돈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제일 핫한 부동산이 브라이튼 아닙니까, 브라이튼. MBC 사옥 그것 팔면 부동산 수익입니다. MBC 사옥, MBC가 정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하면……

그리고 지금 방송사 광고 상황이 나빠졌겠지만 MBC에 대해서 딱 편파 방송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 MBC에 광고하면 기업주들이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영방송의 편파성이 강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MBC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MBC요 영업 적자를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한테, 국회에 알려 주지도 않아요. MBC 그 밑에 가 보면 아주 가혹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MBC 상암동 사옥도 부동산 수익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법을 통해서……

MBC가 한때 미디어의 제국 아니었습니까? 한때 MBC 드라마, MBC 교양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요즘 MBC가요 그런 미디어 교양물을 못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왜? 너무 MBC 노조의 PD저널리즘과 같은 편파·왜곡을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또 좀 생각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고, MBC 이거 뭐'……

MBC가 기업한테 유리한 방송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격에 좋은 방송, 나라를 더 번영하게 할 방송이 아니라 그렇게 혼란에 빠트리는 방송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안 보지요. 시청률 떨어지지요. 광고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MBC는 드라마의 왕국, 예능의 왕국이 지금은 쇠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법, 방문진법을 통해서 그런 PD저널리즘으로 광우병 보도로 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던 확증편향의 사람들이 MBC를 이제 더더욱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MBC는 누가 살립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KBS도 저는 KBS 수신료 문제와 이런 걸 떠나서 KBS가 진정 글로벌 방송으로서, 아까 김민석 총리가 제국적 시각으로, 정말 제국적 시각……

우리 대한민국국회도 이제는 세계 민주주의의 등대가 됐습니다. 우리 계엄 가지고 참 심각하게 뭘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계엄 때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당 의원들도 전부 계엄 반대했습니다. 늦게 들어왔지만 저도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도 계엄해제된 뒤에조차도 국회로 들어오지 못해서 당사에 머물고 있으면서 계엄해제를 지켜봤는데 계엄해제를 지켜본 뒤에 새벽 1시에 계엄해제 결의를 했지요. 그때 의장님이 용감하게 하셨는데, 그 뒤로도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하지 않길래 당사에 남아 있던 국회의원들이 직접 새벽 3시에 빨리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수십 년의 진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철퇴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기억이 들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완전히 나라는 남미의 추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의장님 또 여당의 의원님들, 용감한 의원님들, 우리 당의 의원님들 모두들 달려와서 철벽을 뚫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 당의 당시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그러시는데 원내대표가 의장님

께 전화를 해서 '의장님, 우리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표결하기 전에 국회 문을 좀 어떻게 확보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전화 했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으로서야 국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그 당시에 숙모님 상이 있어서 마산에 갔다가 다음 날 새벽 일정 때문에 부득이 다시 돌아오는 마지막 KTX에서 동대구를 지날 때쯤에 계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페이크 뉴스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는데, 12시 초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파천교에서 차를 돌리더라고요. 차가 접근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은 단톡방을 통해서—다 공개됐습니다만—다 국회로 가자, 국회로 가자 해도 '국회는 못 들어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당사로 가 있겠습니다',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오십시오', '국회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철거돼서 못 들어갑니다' 계속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 국회가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 주는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표지석도 세우시고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국회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우리가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야가 함께 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숫자가 적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편 가르기 해 가지고 완전히 무슨 내란종속당처럼 해서 몰아붙이면 우리 스스로 이룬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침 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KBS 방송이라든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 아직까지 정치 선진화와 정치적인 민주주의 토대가 잡히지 않은 아시아 국가나 남미 국가나 동구 국가 같았으면 그 계엄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보여 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보여 주었습니다. 군이 그런 부당한 계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 다시 계엄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더 전파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이고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기금, 내셔널 인다우먼트 포 데모크라시(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같은 기금도 사라졌는데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조금이라도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도 내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광복 80주년에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BBC보다 더 나은,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NHK보다 훨씬 국제적 영향력이 높은, 또 CCTV의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에 대응해서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 K-컬처의 그걸 바탕으로 우리 한국 K-데모크라시, K-인더스트리의 가치를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인들이 동북아 뉴스들을 보려고 그러면 NHK WORLD가 아니라 KBS WORLD를 보고, 이제 그게 더더욱 쉬워졌습니다, AI 때문에 통역이 쉬워지고 많이 빨라져서.

그리고 MBC 같은 경우도 빨리 좀 실질적인 재정적 능력을 확보해서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서 PD저널리즘 같은 그런 편파적이고 왜곡된 외곬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시청자의 신뢰, 우리 기업의 신뢰를 얻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신뢰를 얻어서 과거의 예능 왕국, 그래서 다시 한번 K-콘텐츠의 파워하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C를 망쳐 온 사람들이 MBC 이사회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진법을 만들어서 오늘 의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한 번

더 숙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뉴욕타임스가 약간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 쪽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만 그래도 읽을 수밖에 없는 신문, 트럼프조차도 찾아 읽는 신문이 된 그 뉴욕타임스가 바로 이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24시간 동안 뉴스를 생산하면서,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의 밤 시간에는 서울에서 전 세계의 뉴스를 편집해서 내보낸다, 그 정도 신문이 돼서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그 신문들이,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돈을 벌고 영향력을 과시하게 된 것은 바로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방송도 지금 뭐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가 방통위원을 뽑고 방통위원이 정말 위임된 그 구조에 따라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방송사 이사를 임명하고,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았듯이 BBC라든가 독일의 공영방송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NHK라든가. 그렇게 하면 될 일을 뭘 복잡하게, 위헌적인 조항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 그렇게 해서 K-웨이브를 세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만들도록 오히려 우리가 방송사의…… 방송법을 개정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지금 종이신문의 시대는 기울었지만 그러나 디지털미디어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은 낮 시간에는 서울에서 전 세계의 뉴스를 다 송고받아서 여기서 편집해서 전 세계로 다시 출고하는 그런 뉴욕타임스가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천착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레거시 미디어 쇠퇴의 시대에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공영방송도 바로 이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천착하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격,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광복 100주년이 될 때는 정말 세계에서 더 우뚝 서는 나라, 이제는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또 행복의 가치를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등대 국가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대한민국국회가 전 세계 의회의 표본이 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공영방송을 이제는 좀 더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천착할 수 있는 방송 기조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정통 저널리즘을 만드는 것은 시스템과 절차라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절차. 회사 구조 자체에도 반영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된 겁니다. BBC에서도 보면 철저한 훈련과 절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또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줄까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한 단면인데 이게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쓴 겁니다. 지금 우리 방송이 선명성…… 갤럽 조사에 보면 갤럽의 시청률 조사, 갤럽은 시청률 조사가 아니고 인기투표 비슷한 걸 합니다. 인기투표 비슷한 걸 하는데, 그걸 해 보면 MBC는 주로 진보층 이런 층들이 많이 보는 매체로 되어 있습니다, TV조선은 보수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언론의 정치 마케팅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착역은 공멸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MBC가 영업 적자를 계속 못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으로 간신히 지금 경상 적자를 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MBC 제국 시대에 있었던 미디어, 예능이라든가 그런 드라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 마케팅이 결국 공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조차도 이제 앞으로 K-한류 시대에, 왜 K-한류 시대에 케데헌으로 일본과 미국이 돈을 벌고 K-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MBC하고 KBS는 돈을 못 법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치의 천착, 정치 마케팅에 매달려 있어서 정치방송의 지배구조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우리 K-한류는 엄청나게 컸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안고서 발전시켜서 그걸 더 큰 수익으로 삼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지금 MBC가 적자가 나니까 그런 투자를 못 해요, 이제 더 이상.

어디 하나가 보니까, 최근에 성공한 하나가 보니까 MBC 미디어가 일부 투자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투자가 좀 더 과감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 적자를 못 면하니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방송사에 부족한 국가 재정을 줄 수 없는 거고. 방송사 스스로가 신뢰를 얻어서, 뉴욕타임스 같은 신뢰를 얻어서 투자자를 모으고 이렇게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천착하면서 악성이 된 지금 방송사의 내부에 아주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런 적대, 분열, 갈등, 대립, 투쟁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완전히 그걸 진압시키게 하는 그런 지배구조를 만들어 주었으니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한규섭 교수가 작년에 썼던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선명성이 강할수록 팬덤이’, 방송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선명성을 강조하는, 유튜브가 웬만한 건 몇백만 조회가 예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방송들이 유튜브를 더 만들어요. 그리되면, 구글 같은 데서는 유튜브는 또 짧은 시간에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주장을 담게 됩니다. 공영방송이 유튜브에 편승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극단적인 주장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PD저널리즘, 이른바 광우병 보도에서 보았듯이 그런 확증편향의 보도 성향 또 그런 분들이 사장이 되고 보도·편성 책임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뉴스 보도를 피하지 않고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MBC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균형 잡힌 보도라는 걸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MBC는 박수받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아, 갤럽에 보면 한국이 즐겨 찾는 뉴스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청률 조사랑 다릅니다. 시청률 조사는 한 몇만 명의 시청자 가구를 임의로 해서 조사하는 건데 반해서 이것은 인기투표 같은 겁니다. 즐겨 보는 채널 이렇게 했더니 뉴스 소비자의 극단적 양극화가 드러났습니다.

MBC 선호층을 분석해 보니까 진보라는 사람이 54% 봤습니다. 보수가 12%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 간 차이가 무려 42%지요. 전체 응답자 중에 진보는 28%고 보수가 31%였던 것을 고려하면 공영방송인 MBC 선호층에 진보는 약 2배 과대 대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수는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지요.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28%를 보면 보수는 42%, 진보는 14%였습니다.

상업 지상파방송인 SBS의 17%에 비하면 편차가, 불균형이 매우 심했습니다. 5% 이상의 선호도를 기록한 7개 채널 중 이 정도의 불균형을 보인 매체는 TV조선인데 이 TV조선은 또 보수층들이 많이 보는 매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민영방송 아닙니까. 개인이 투자하는 것인데 MBC랑은 다르지요. MBC는 국민의 재산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참 비극적인 것은 이 선호층의 정치 성향의 불균형이 심할수록 이런 갤럽 조사에서 해 보면 즐겨 찾는 뉴스 채널의 선호가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3개 지상파 채널 중 불균형이 가장 심한 방송은 MBC, KBS 순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팬덤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 스스로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부 구조 때문에 극단적인, 좀 치우친 방송을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저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미디어 홍수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데 진정 우리 공동체를 서로 통합시키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송 편성·보도를 점점 더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과방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제가 이런 주장을, 이게 너무 편향돼서 문제다라고 하면 이런 반박을 하십니다, '뭔 소리냐?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보면 MBC가 최고다 그러는데'. 뭐 MBC가 최고인 적도 있고 YTN이 최고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보여 줄게요. 아까 한규섭 교수의 말이 비슷한 건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의 일본 편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사히신문을 더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산케이신문을 더 신뢰하십니까? 놀랍게도 일본인들 답변은…… 우리는 아사히신문, 참 이렇게 외국 방송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일 관계를 물어보더라도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위안부 보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보수파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양식을 지키려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지식층들, 양식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아사히신문을 정평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아사히신문 부수가 아마 산케이신문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이터저널리즘 일본 편에서 일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정치적 팬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S 신문이 A 신문보다 훨씬 낫다는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즐겨 찾는 채널을 보고서 MBC가 압도적이다라고 MBC가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이 현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S 신문이 A 신문보다 훨씬 좋은 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본 시민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화낼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적인 척도로 MBC 잘한다고 박수 치면 점점 MBC는 편향된 보도만 하라고 박수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방문진법은 이런 편향된 보도를 장려하고 구조화하는 방송사 이사회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지난해 겁니다. 한국 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번역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이것을 로이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해서 로이터가 아주 정평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로이터가 다 해서 아주 엄청 정평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호도 보면 1등·2등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MBC, KBS, SBS, YTN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그 몇 % 차이로 1등 했다고 막 이래…… 그런데 아까 다시 보시면 '절대로 1등이라는 걸 표시하지 마세요'라고 로이터저널리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방법은 익스클루시브(exclusive)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한 더 심각한 문제, 이게 방송 지배구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 미디어의 큰 도전은 전체 글로벌 서비스, 로이터저널리즘이 글로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뉴스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약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로이터저널리즘이 해 보면 미디어의 신뢰도가 우리보다는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뉴스미디어, 여기서는 레거시 미디어들입니다, 주로 MBC를 비롯한'.

그리고 여기 중간 대목이 있습니다. 'has also shown that the news media score consistently badly for concepts like trust and fairness', 신뢰와 공정성 면에서 매우 나쁘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디어들은 악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로이터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독립성은 조금 나아졌다 그러고 또 뉴스미디어의 영향력도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한국 미디어들이 언더프리빌리지드(underprivileged), 그러니까 특권을 갖지 못한 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정부나 공공인사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 퍼티큘러리 로(particularly low)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하게 감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의 전통적 기능에서는 약하고 페어니스는 부족하고 다음에 신뢰도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언론이 되었는데 공영방송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영방송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신뢰와 공평성에 대한 이런 게 높아져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음모론과 또 심지어 외부에서 조작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의 조작 뉴스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공영방송을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BBC 같은 그런 엄격한 공정성과 애큐러시(accuracy)와 디스턴스(distance)와 또 미국 방송의 철칙인 페어니스(fairness)와 이퀄 오퍼튜니티(equal opportunity)와 이런 굉장히 숙달된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강조하는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에 숙달된 정도로, 그걸 민영방송 모두한테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는 공영

방송 그리고 국민의 방송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방송에서는 그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방송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방송법 개정이 아니라 그것은 윤리의 문제고 그것은 실천의 문제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것을 엄밀히 심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저널리즘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MBC가 1등 했다, 연합뉴스TV가 1등 했다, KBS가 1등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1등 해 봐야 전부 58%, 56%, 52%의 차이입니다. 그게 뭐 1·2등입니까,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의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MBC 잘한다 박수 치니까 MBC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영업 적자 못 면하고 기업광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 드라마의 왕국 다음에 예능의 왕국은 떨어지고, 케데헌 같은 것을 만들었던 최초의 미디어가 MBC·KBS일 텐데 지금 돈은 다른 사람들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는 정확히 복원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에 설상가상으로 손 다 들어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MBC가 '바이든-날리면' 이런 보도에 천착하는 이유도 짐작이 됩니다. 대통령, 특히 전직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이 MBC를 더 보게 되고 그러니까 더 까고 이리되겠지요. 참 안타까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은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루었던 그 내용입니다.

갤럽 리포트입니다. 갤럽이 주요 뉴스 채널들 선호집단별 프로파일 해 봤습니다. YTN, 연합뉴스TV 선호자는 고른 편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쫙 분열돼 있습니다. JTBC는 그럴 수 있습니다. TV조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민영방송이니까. FOX News보고 또 CNN보고 '너 왜 공화당에 그렇게 비판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방송은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전 사회적으로, 한편으로는 FOX News, 한편으로는 CNN 뉴스.

그러나 KBS나 MBC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영방송인데. 지상파 그러면 반납해야지요. 국민의 방송이라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요. 자기들 방송이면서 진영의 방송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수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더 악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고 저걸 했다. 그런데 이 법은 안타깝게도 국보위법이 위헌결정 났듯이 위헌결정을 일이 년 내에 볼 것이다. 이런 심각한 법을 만들어서 왜 공연한 시간을 허비하시느냐, 그것 나중에 위헌결정 나면 이 법을 통과시켰던 국회 다수당은 상당히 좀 민망할 텐데.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정말 EBS 방송법은 보류해 주십시오.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사단체 전체를 적으로 둘 셈입니까?

아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돌아가기는 그런데……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교원단체를 원래부터 이사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교육방송법에는—여기에도 노조가 끼어들고 해서 엉망진창입니다만—교육단체를 2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을 하면 교육단체 중에 교사 대표성이 높은 단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총은 원래부터 포

함돼 있었습니다, 교총은 대통령령으로 법정단체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상정한 이 법안에는 전교조를 끼워 넣으려고 일부러 전교조 맞춤형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교사단체를 2명으로 하는데, 교원단체를 1명에서 2명으로 교원 관련 단체가 늘어나는데 추천 기준이 이렇습니다.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2개의 교육 관련 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마 이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노조연맹에서 힘없고 맨날 과방위에서 조롱만 당하는 최형두 간사한테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최 간사가 좀…… 이것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원단체가 3개 있습니다. 전교조, 제가 전교조를 비방하려는…… 전교조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들 정말 사범대학 나와 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참교육하면서 우리 교단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공로가 크지요. 그러나 모든 권력이 영원하지 않듯이 전교조의 그 화양연화도 한 10년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교단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지금, 교육감선거 때는 힘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교원단체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보면 전교조가 한 3만 명, 4만 명이 안 됩니다. 4만 명 수준입니다. 한국교총이 한 8만 명 수준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이 2024년 지난 연말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1 교원노조는, 전교조는 민노총인 데 반해서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으로 가입했습니다. 맹비 납부액 1위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노조 보면 20~40대 비율이 89%, 90%입니다. 2030도 50%를 차지합니다. 전체 조합원 중 여성 비율이 86%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법 통과되면 이 법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런 교사노조연맹, 12만 명에 달하는 교사노조원,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속한 선생님들의 외면을 받을 겁니다. 그것 감수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법을 억지로 통과시켜 줘 가지고 민주당이 그동안 교사, 선생님들에게 누렸던 존경과 존중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저희들 혼자 독차지할 능력도 없고 또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법을 그냥 보류시켜 주십시오. 이 법 조항이라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교사노동조합연맹…… 지난번에 서이초 사건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국회 앞에서 지금 교사들이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교단에서의 고초 문제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새로운 시위 문화로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 법 통과된 뒤로 민주당을 원망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법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면 내일 표결하실 거기 때문에 내일 표결하면 저희들은 '저희가 연단에서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막지 못했다'라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들어 보셨을 테니까 이 조항, 교원단체 2명을 하는데 그걸 무슨 활동기간, 활동실적으로 한 부분은 조합원 수가 4분의 1에 불과한 전교조를 감안하고 지금 조합원 수가 4배가 넘는 제1 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하려는 것이 되어서 교사단체로부터, 선생님단체로부터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법안을 보류시키기에 충분하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해 주신 교사노조연맹의 선생님께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비록 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저지할 능력이 없었고 법사위에

서도 이 법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 밤새워 이야기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방송법, 방문진법도 마찬가지지만 왜 방송종사자가 EBS 이사회에 낍니까? EBS가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인데 왜 그러십니까.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 중언부언 이렇게 저렇게 흘러왔습니다만 아직 절반도 안 했습니다. 아직 슬라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가 왜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 공영방송까지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느냐,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것을 유발 하라리의 신간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환기시켜 드릴 것이고 또 페이크와 팩트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것이 오늘 당장 교육방송법뿐 아니라 내일 또 잇따라서 하게 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것은 당장에 엄청난 타격이 올 법안이기 때문에 제발 좀 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헌 의원님이 하시는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나눠 가지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24시간 뛰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시간까지 야박하게 야당이 다 차지하기 어려워서 12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내가 11시에 시작했습니까?

(「6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그렇지요.

혹시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고 아십니까? 뛰어 보면 이제부터는 멀리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신감이 드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정헌 의원이 혹시 초조하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할까 싶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2시간 이상 할 테니까 좀 쉬시면서 차분히, 제 걸 듣지 마시고…… 핵심 주장은 제가 과방위 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신 많은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정말 숙고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중 2개가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방송법이 후유증은 나는 일이 년 내에 고치면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BS법은 지금 당장 좀 멈춰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뽑고 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론 우리 정당 추천이 아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아마 교사노조연맹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EBS 때 자신들을 배제하고 가입자 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한 전교조를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도 멈춰 주시고.

당장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단체가 저렇게 절규하고 있으니 그 절규를 좀 들어 주시면서, 우선 하나라도 좀 고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1년이라도 좀 유보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 이것 하루 정도밖에 못 하고, 기껏해야 하루 정도밖에 못 하고 언론들도 비웃습니다. 저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하는 짓이 다 밉다, 필리버스터 고작 24시간밖에 못 하는 것 그것 한다고 폼 잡고 하다가 그것도 야당한테 시간 더 뺏긴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문제 되는 법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하나 통과시키면서, 더욱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서 더 숙의할 수 있도록 이제 완급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것도 나중에 말미에 간절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른 모든 문제도 많지만 교사단체를 이사로 추가 임명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교사단체를 임명해야지 숫자가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단체를 무리하게, 더구나 성향을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수많은 선생님들의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다르겠지요. MBC의 경우에는 달라졌을 텐데, 요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게 시청률 조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청률은 MBC고 KBS고 전부 낮습니다. 한때 MBC·KBS 시청률 20%, 30%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전부 6%, 7%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 갤럽 리포트는 즐겨 보는 채널이라고 인기투표 같은 걸 해 봤습니다, 인기투표. 인기투표를 해 보니까 MBC가 제일 높게 나오고, 그래 봤자 58% 이렇게…… 그래 봤자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지상파들은. 그런데 그게 1등이라고 잘한다고 박수 치고 하니까 더더욱 보도 편향이 기울어지고 특정한 정파, 특정한 정치인, 특정한 정당의 선호자들은 이쪽 방송을 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JTBC나 TV조선이야 컬러도 있어야 되고 그건 CNN이나 FOX News처럼 그렇게 정확하게만 한다면 그리고 디스턴싱(distancing)도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맞춰 준다면 그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뉴스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을 쓰면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어떤 특정 진영이 좋아한다, 특정 정파가 좋아한다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되겠지요. 또 그런 구조가 고착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BC가 그렇지 않습니다. NHK가 그렇지 않아요. NHK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독일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방송은 특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이텔스바흐라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절대로 특정한 이념과 사상을 주입하고 편향적으로 뭘 방송하거나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독일의 제도입니다.

다음, 77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방송으로……

지상파도 지금 종편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상파도. 2013년에 종편이 막 생기기 시작할 그 시기, 그 직후에는 지상파의 선호가 거의 7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4분기에는 47%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종편이 과거에는 6%, 10% 했다가 지금은 14%, 1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정보·영상 콘텐츠의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지상파는 2013년에 그때 69%로 최고치였다가 2017년 1분기에는 2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지상파의 채널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어떤 진영의 방송 또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 방송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시청률을 쪼개고 우리 지상파, 국민 재산의 가치를 잠식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를 그런 것으로 고착화시키고 악화시키는 방식의 지배구조로 바꿔서는 안 된다.

지금 이번에 통과되고 발효된 법이 바로 가뜩이나 편향성이 심한 공영방송사에서 그 편향성을 고착화하고 또 노조 내부에서, 노조가 회사 경영을 좌우하고 그렇게 선출된 회사 집행부가, 사 측이 소수 노조를 핍박하고 또 비정규직과 노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사내 따돌림과 폭행 같은 것이 엄존하는 그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우리 당의 반대 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상파는 종편과 보도채널 때문에, 특히 종편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많이 그 영향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죽 시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채널의 다양화 때문에 지상파의 채널 비중이 줄어드는 마당에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방송을 하니까 그나마도 반 토막이 나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20~30% 시청률을 자랑하던 MBC 뉴스, KBS 뉴스가 지금은 6~7%, 두 자릿수가 한 자릿수 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강력한 노조로 사장 퇴진 투쟁, 또 사장 퇴진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기자와 비노조원을 핍박하고 탄압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또 정말 전쟁터같이 분란의 현장으로 방송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기득권 세력, 그런 강력한 노조 세력이 있는 공영방송 내부에 이제 그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파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방송 한때 20~30%, 저마다 KBS나 MBC나 다 20~30%씩 나눠서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쪼개 가지고 지금, 더구나 MBC는 이제 9시 뉴스에 경쟁이 안 되니까 8시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쪼개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 지배구조를 더 악화시킴으로써 앞으로 공영방송을 더 죽일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MBC는 지금 영업 적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MBC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업 저것도 해 놓지 않아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방문진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배구조의 이런 것, 방문진 이사들 임기 다 끝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MBC는 과거에 케데헌이라든가 정말 한류의 본산이 되었던 콘텐츠 왕국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콘텐츠는 생산도 못 하고 그저 축소 경영만 해서 영업 적자도 간신히 메워 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MBC 사옥이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브라이튼이라는 여의도 최고의 부동산 그다음에 MBC 상암동 사옥의 지하상가를 분양해서 그 임대수익으로 간신히 영업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류를 더 키우고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방송을 만들고 편파, 왜곡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확증편향의 사람들이 방송을 좌지우지하고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가 사실상 노사동일체가 되어서 방송의 이사를 뽑고 경영진을 뽑고 또 그걸 좌우하는 것은 방송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경고를, 그걸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는데 개정한 부분은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죽 보십시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시청률이 아니고 그냥 인기 조사입니다, 인기 조사. 시청률은 저렇게 두 자릿수 안 나옵니다. 7%, 8%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KBS 뉴스도 10년 전만 해도 20%를 웃돌았지요. 그런데 2017년 9월에 언론 총파업 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내부에서의 심각한 싸움이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충실한 방송 뉴스를 만들 수가 없고 또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노조가 방송을 좌우합니다. 그 노조 했던 사람들이 방송보도국장으로 가고, 가면 자기 노조할 때 친했던 친구들도 부르고, 유능한 기자는 특종을 해서 방송에서 무슨 특파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노조에 있던 사람들 눈치 봐서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 그 방송 뉴스가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KBS 뉴스 9의 연간 시청률은 2016년 17.9%였는데 2017년에는 2% 떨어졌고요.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뒤로는 12.6%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두 자릿수 다 무너졌지요. 이게 지지난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KBS 시청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수와 시청률은 다릅니다. 지금 KBS, MBC를 함께 얘기할 수 없는 까닭은 그래도 KBS는 새롭게 이사가 바뀌고 또 사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나마 이런 편향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진 그대로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무슨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니 또 갤럽의 뉴스 채널 선호도 조사 보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윤석열 비판하는 MBC가 제일 시청률이 높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건 시청률이 아닙니다. 시청률은 다릅니다. 시청자 수가 다 따로 집계됩니다.

1년 전의 연평균 시청자 수는 이랬습니다. 개인 시청자 수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의 시청자 수의 평균값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시청 환경에서 TV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TV 시청 지표로 시청률보다는 시청자 수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저렇게 되면 이제 MBC 시청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 수는 자꾸 떨어지지요. 그러면 누가 또 광고하겠습니까? MBC는 상업방송인데,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광고로 먹고사는 회사인데 광고를 안 하면 누가 떨어지나요, 시청자 수가 적은데. 그런데 왜 편파, 왜곡 이쪽이 강화되는…… 광우병 보도로 이미 심각하게 신뢰를 손상당한 사람들이 경영진으로 남고 그 경영진이 비노조원, 자기들 노조가 아닌 사람들을 탄압해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로 지금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그런 상황…… 그런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방문진 이사회 임명 방식을 지금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욱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일평균 시청자 수라는 게 죽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짜 공영방송이 잘되고 있느냐, 그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냐를 보려면 지금 무슨 리포트니 이런 것, 1000명 여론조사 하는 그런 것은 인기투표가 아니라 시청자 수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 수를. 이 시청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의식이, KBS는 재난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큰 손상을 입힌 사건이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이회창·김대업 사건 아시지요? 난리였지요. 김대업이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2002년에는 제가 법조 출입기자를 했는데 그때 김대업이 오면 일부 언론은 거의 '김대업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김대업이 1997년에 한 번 이회창 후보를 그걸로 흔들고 2002년에도 또 흔들었습니다,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라고. 그때 이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테이프를 탁 들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없어진 소니 테이프지요, 카세트테이프. 그리고 우리 기자들 중에 일부 기자들이 또 '아이고, 선생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 취급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지검의 담당 부장검사는 '선생님, 선생님' 거의 의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를. 그걸로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이회창 지지율 폭락하고 또 진 거지요. 거기에는 물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회창·김대업 때 보면 김대업이가 당시에 테이프를 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진본이라고 그랬어요, 진본.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것 혹시 복사본 아닙니까? 집에 다른 것 보관하고 그것은 복사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진본이다'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엄청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이회창이 끝난 것처럼,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또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공영방송…… 검찰 녹취록, 이게 지금 당시 중간 보도인데 KBS도 춤췄고요, MBC는 더 완전히 춤을 췄고.

김대업 녹취록의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법조기자, 법조반장이었는데 우리 법조기자들도 보니까 대부분 검찰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진본을 들고 들어갔으니까—이회창 끝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검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기자였기 때문에 오후 시간 퇴근 무렵에 가서 '테이프 그것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테이프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짜라고 알았습니까?' 하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걸 녹취한 진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대업의 거짓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녹취한 진본이라고, 그 테이프를 유일무이한 진본이라고 기자 앞에도 흔들었거든요. 유일무이한 진본이라고 내놓은 테이프가 2001년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소니 테이프였습니다. 그걸로 그냥 사기가 입증된 셈이지요. 그리고 그 테이프는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김대업이 두 번째 사기는 너무 세게 치는 바람에, 그냥 테이프가 조작본이고 사실 복사본이다 그랬으면 진짜 오리무중으로 갈 뻔했는데 그걸 확실한 진본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은근히 김대업의 주장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일부 정치검찰이 자기한테 적당히 춤춰 줄 줄 알고 진본이라고 우기다가,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진본입니다', '혹시 복사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본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신이 주장하는 2000년 그 시기에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만들 때 그때 녹취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2001년에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제조연월일이 싱가포르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까 그때부터 김대업이 말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김대업이가 대선 직전에 10월 말인가에 사기로 구속됩니다. 검찰도 이것은 명백히 떨어지는 위증이 있어서 사기니까, 그리고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회창 사건으로 휘청 바람이 분 뒤로 뒤이어서 정몽준·노무현의 극적 단일화가 반등 효과를 이루면서 대통령선거가 뒤바뀌어 버렸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선거 끝나고 손해배상 받으면 뭐 합니까, 선거에서 졌는데. 병풍 의혹이라고 해서 오마이뉴스랑 당시 김대업에게 한나라당이 1억 원 손배소를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만 진 선거, 어떻게 그 손실이 회복됩니까?

다음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22년, 공영방송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날, 2022년 3월 7일이면 대통령선거 이틀 전입니다. 이걸 뉴스데스크, 벌써 몇 꼭지입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 아닙니까? 신학림-김만배의 이 녹취록에서는 신학림 씨가 물어봐요. '그 검사가 윤석열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 뒤에 녹취록에 '아니, 윤석열이 아니고 박 아무개'. 그런데 그걸 싹 다 지우고 그것이 윤석열인 것처럼 김만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대선의 이슈가 대장동 아닙니까? 대장동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이걸 가지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당신이 대장동 주범이라고 그 녹취록을 해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음 보실까요?

이런 걸 갖다가 대선 이틀 전에 리포트 4개, 녹취록을 일곱 번 방송합니다. 이것은 아

까 봤듯이 BBC라든가 미국 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 죽을 때까지 패는 겁니다. 보십시오. ‘몸통 확인’ 이래 놓고 뒤에 ‘난타전’ 식으로 슬쩍 또 물을 탑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민심은 못 이겼습니다만 그때 선거가 정말 박빙이지 않았습니까? 이 여파가 없었겠습니까? 진짜 참 공영방송이 이렇게 선거……

이게 사실이면 진짜 그것은 비난받아야지요. 후보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JTBC는 이 녹취록 조작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보도했던 기자가 그냥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래서 JTBC는 왜 그런 오보가 나게 됐는지를 나중에 상세하게 그 보도, 취재를 가져온 기자의 부주의, 잘못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는 뭐 적당히 넘어가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선판을 흔들어 놓고 하루 전날, 보십시오. 또 방송합니다, ‘봐줬지’ ‘윤석열이 대장동 날릴 거야’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영방송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거지요. 안 보면 시청률 떨어지겠지요. 시청률에 시청자가 떨어집니다. 시청률이 아니라 지금은 광고회사들, 기업에서 광고할 때 시청률 보고 광고 안 합니다, 더 많은 척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BC가 영업 적자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C는 한때 우리 예능의 왕국이었고 드라마의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케이팝이나 K-한류의 원조겠지요, KBS와 함께. 그런데 케데헌도 그렇고 지금 돈은 일본과 미국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편파·왜곡을 하다 보니까 광고도 안 붙고 광고가 안 붙으니까 제작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MBC 영업 적자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이라는 여의도 최고 부동산—옛날 구 MBC 사옥—하고 지금 상암동 사옥 임대수익으로 그 영업수지를 매년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K-컬처가 이렇게 붐을 타는데 투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더더욱 자꾸 방송법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방송사의 더 확증편향의 사람들, 그 당시 이런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최대 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자면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국회와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을 제대로 임명해서 그 방송통신위원이 최고의 방송 이사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위임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냥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에서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조, 민노총 소속 언노련 방송노조가 이사를 선임하고 또 그 사장이 시청자위원회를 만들고, 또 갑자기 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가 왜 끼어들며 또 수십 개 되는 미디어학회 중에서 왜 유독 2개의 학회만 이렇게 임명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지금 가뜩이나 편향 보도 또 잘못된 보도 또 고 오요안나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그렇게 강력한 노조가 있는데도 방송사 내부에서의 차별과 이런 따돌

림, 괴롭힘으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와서 노동부가 특별감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책임이 있는 내부 구조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구조를 더 강화할 방식으로 오늘 방문진법을 통과시켰으니 이게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방송을 더 강화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되면 안 그래도 지금 TV 방송 보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종편 더 보고 보도채널 더 보고 OTT 더 보고 하는 시대에 방송사를 우리가 말려 죽이는 겁니다. 박수 쳐서 방송사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사도 자성을 해야 되고요. 방송노조가 아니라 저널리즘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왜 뉴욕타임스는 24시간 동안 글로벌 뉴스를 생산하면서 서울의 뉴욕타임스 아시아지국에만 50명의 뉴스 편집자와 기자가 상주해 있겠느냐? 신뢰할 만한 뉴스를 만드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도, 레거시 미디어가 모두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도 돈을 벌고 전 세계를 3개의 지부로 나누어서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이 서울로 이동해서 서울에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또 오늘 이제 밤이 오는데 지금 시기 되면 런던으로 뉴욕타임스 편집국이 옮겨 가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뉴스를 생산하고 그 비판적인 트럼프조차도 뉴욕타임스를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신뢰의 저널리즘 구도를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노조 텃세, 노조 강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것을 이제 완전히 지배구조로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허위 조작 녹취록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JTBC가 나중에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렇다라고 사죄 방송을 하면서 죽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뉴스타파로 옮겼던 당시 JTBC 기자가 받아 와 가지고 특종이라면서 JTBC에 보도하고 또 MBC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그랬던 겁니다.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밤 9시 22분에 짜깁기 내용을 보도를 하지요,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 부분의 녹취록을 통째로 뺍니다. 이것도 사실은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책 사 준다고 1억 몇천만 원을 주면서—뉴스타파에 있는 신학림이라고 한국일보 출신의 언노련 위원장도 하시고 미디어오늘 편집인도 하셨지요—이분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하면서 그걸 발표를 해서 뉴스타파에 싣게 하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거지요. '이재명은 난놈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대장동 때 핍박한 것처럼 거기에 막 주장을 넣고 그런 인터뷰를 일부러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그런 냄새를 흘리다가, 신학림이 물어봅니다. 신학림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따져 묻지요.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통했던 거지. 통했지'. 신학림이 '조우형은 박 아무개하고 커피 마시고 온 거야,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만배가 '아니, 혼자. 타 주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검사하고 마시겠어' 신학림, '검사? 검사 누구 만났는데?', '박 누구누구 만났는데 박 누구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러니까 이 대화록에는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그걸 봐줬다는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뉴스타파가 '박영수, 윤석열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해 줬다'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게 JTBC에 보도되고 MBC에도 보도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선거 앞두고 이렇게 난리 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후보도 이용당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심지어 TV토론회에서 왜 봐줬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가, 저는 이것을 짜고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이용당한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었다'. 이게 다 대통령선거 끝나고 언제입니까, 이게? 3월 6일 날 했던 것을 9월 7일 날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선거 끝난 뒤에 JTBC는 다 진실 보도를 하고 사죄 방송을 한 뒤에 이제 뭐 넘어가듯이. 보도의 경위를 파악 중입니까? 파악해서 어떻게, 아직 징계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믿을 만한 방송사, 공영방송의 행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를 오늘 통과시키는 MBC 방문진법이 더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것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보도나 관행 같은 게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관행을 강화시켜 주고 확대시키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반면 JTBC는 엄중하게 사과했습니다. 'JTBC는 뉴스룸 보도에서 해당 기사를 쓴 A 기자가 2021년 10월 조 씨를 직접 만났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당시 담당 검사는 박 모 검사였다고 말했고 윤석열 검사를 만난 일이 없다고 답했으나 이 같은 내용은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기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취재를 해 놓고 유리하게 짜깁기, 편집·왜곡을 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데스크를 속입니다.

'또 조 씨는 내가 대검 중수부에 불려 간 건 대장동 사건이 아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이었다고 말했으나 기사에는 대장동 관련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영이 됐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건데 대장동 수사를 봐준 것처럼 이렇게 편집한 겁니다.

'A 기자는 지난해 10월 JTBC를 퇴직한 뒤에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JTBC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런 보도가 나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이어 당시 기사 작성 과정에 있었던 관련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 시기에 보도된 다른 기사들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증에 들어갔다. 왜곡된 보도를 하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JTBC는 공영방송이 아닌데도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런 문제, JTBC가 민영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의 어떤 신뢰성, 방송의 공신력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영방송이라고 더욱더 신뢰할 만한 방송이어야 될 MBC는 전혀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이사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독이나 감시나 견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MBC 노조, 노사동일체가 방문진을 접수하도록 그렇게 오늘 방문진법이 편성된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공개되는 진실이 뭡니까? 신학림은 자신이 김만배에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책 세 권의 값이 1억 6500만 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음모론에 자칫 휩쓸렸다가 페이스북 글을 비공개 처리했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치인이 이런 허위 조작 뉴스에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과 허위와 편파와 왜곡의 방송 알고리즘을 MBC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지배구조가 더 강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통과된 방문진법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재론돼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까 BBC라든가 미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선거방송, 정치방송 보도·제작준칙에는 못 미치지만 MBC에도 선거방송 제작과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킵니다.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지 않으며' 이것 완전히 어겼습니다. 보도준칙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런 사안이 난 방송 보도국과 MBC 경영진에 대해서 견책을 하거나 무슨 시정조치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 스스로가 제시한 보도준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저명한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3번에 보면 '후보자와 정당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노력 안 했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혼동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혼동하게가 아니라 왜곡했지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MBC가 화부터 냈습니다. 이 당시에 가짜뉴스 비판이 일자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냈습니다. 언론 자유를 옥죄려는 재갈 물리기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보도준칙도 지켜 놓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MBC 방문진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문진에 이제는 MBC 노사동일체가 딱 차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오늘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MBC가 더 망하게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MBC 시청률 뚝 떨어졌습니다. MBC 영업 적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MBC가 인기 있는 채널 갤럽 조사에서 조금 몇 퍼센트 앞선다고, 다른 방송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1위라고 MBC 잘한다고 박수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방송이 영업 적자를 감수해야 됩니까?

한때 콘텐츠 왕국 MBC가 지금은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업 적자를 브라이튼 임대, 상암동 MBC 사옥 임대료로 때때로는 가혹한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그것들이 MBC 저기에 댓글로 막 뜹니다, 너무너무 가혹하다고,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 간다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을 울리면서 MBC가 영업 적자를 메워 가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한류를 일으켰던 MBC의 그 저력은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PD저널리즘이라

고 자랑하면서 광우병 사태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과적으로 허위사실로 보도돼서 MBC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더 강화돼서 노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그 구조가 지금 MBC를 더욱 망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로서 사과도 할 줄 모릅니다. 더욱이 이제 MBC는 방송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편을 듭니다. 이게 달콤한 강정 같지만 여기에 바로 독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이제 MBC는 자발적 수족처럼 스스로 전락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인은 또 잘 모르고 그것이야말로 MBC가 도와주는 건 줄 알고, 아까 허위조작 뉴스에 이재명 후보가 잘못 말렸다가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지웠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또 이렇게 해서 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MBC의 내부 문제는 나중에 제가 서부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한번 상세히…… 오늘 방문진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그 법이 대통령이 좀 재의요구를 해서 법안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통과시킨 법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빚을지를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MBC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는 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 드리기 전에 우리 잘 아는 강준만 교수, 강준만 교수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강준만 교수가 특정 정파를 도우려고 특정한 그걸 하시겠습니까? 정말 비판적인 분 아니십니까?

‘공정성을 유린하는 MBC의 과도한 당파성을 지켜보는 게 괴로웠다. 같은 편이라고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걸 지지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아 줘야 하는가’, ‘방송의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MBC의 흑역사’ 강준만.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출간한 책 ‘MBC의 흑역사’, 인물과 사상사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MBC는 마치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조국 사태 때 이른바 ‘딱 보면 100만’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날리면’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편향적인 MBC의 보도와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강 교수는 박성제 전 MBC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른바 ‘100만 명 느낌이 있다. 딱 보니까 이건 그 정도’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역대 어느 방송 보도국장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다른 방송사에 나가 했느냐’면서 ‘MBC가 문재인 정권을 대변하는 방송의 총본산임을 분명히 보여 준 셈’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 교수는 지난 정부 조국 사태 때 MBC의 위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촛불군중에 대해 ‘이른바 대깨문 정신에 충실하지 않은 보도를 할 때는 어김없이 불매운동 보복조치를 가했다’면서 ‘이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하고 문재인을 위한 어용 선전도구 노릇에만 충실하라는 게 요구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상승한 MBC의 신뢰도는 맹목적 호감도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뢰도가 갤럽 조사에 나온 그런 겁니다. 시청자 수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

신뢰도를 가지고 방송사에서 광고, 어떤 메리트를 주는 척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매체의 보도가 허위·왜곡·날조임이 밝혀져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대학 언론학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팬덤 현상 같은 것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일본의 S 신문, 혐한과 일본 내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 부수가 A 신문 절반의 발치에도 못 미치는데 일본 내에서 S 신문이 A 신문보다 더 신뢰를 받는 듯이 조사해서 나오는, 아까 그것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분석의 잘못된 표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신뢰받는 그것이 바로 맹목적 호감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영향력, 방송사는 시청률하고, 그 시청률도 몇만 명을 상대로 가구 집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시청자 수 조사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광고매체들도 그런 조사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갤럽에서 하는 것은 인기투표하듯이 즐겨 보는 채널을 1000명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 정부 때 보면 '윤석열 싫어요' 98%가 'MBC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팬덤으로 모아 가는 거지요. 집결력이 강한 이게 오면 선호도가 높은 호감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상승한 MBC의 이른바 여론조사 신뢰도도 맹목적 호감도로 봐야 한다. 그 매체의 보도가 허위·왜곡·날조임이 밝혀져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검언유착 단독 보도에 대해서도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무죄를 받았음에도 사과도 없고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녹음한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MBC가 유튜브 채널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번 책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 버린 MBC의 행태를 비판하고 또 기록하고자 책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이후 MBC가 보여 준 행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 강 교수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MBC는 민주당 정권을 보호하고 사수하고 미화하면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인 게 분명한데 그들은 자기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군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언론노조 등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 기계적 중립이 말하자면 페어니스 독트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의 왕립칙허장에서 나왔던 철저한 중립 보도, 거리두기, 균형 보도,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중립도 거부합니다.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 페어니스 전 세계적으로 정립된 공영방송의 가치, 방송의 공정한, 정확한 보도·편성의 가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MBC와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편향성을 선과 정의라고 떼를 쓰고 있다' 면서 '아무리 당파성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단지 특정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특례를 받는 걸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송 공정성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교수는 '진보 진영이 선악 이분법에 중독되어 반대편을 악으로 몰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에릭 호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자신들이 증오하는 억압자를 얼마나 닮아 가는지 보면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딱 보면 100만 명 느낌'이 바로 여기입니다. 김어준의 '인터뷰 제3공장'에 가서 당시 MBC 보도국장이 조국 집회에 딱 보니까 100만 느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2020년 2월에 MBC 사장이 되었지요. 지금 방문진법은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MBC의 이 구조적 문제를 이제는 완전히 정치권이 개입할 틈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준 셈입니다. 이렇게 이미 권력이 되었습니다. 광우병 보도를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되고 다시 보도·편성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때 동조했던 사람이 다시 사장이 되고, 조국 시위 때 조국 수호에 나섰던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다시 또 사장이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면 그나마 좀 너무 편향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번쯤은 들여다볼 기회도 있을까 싶었는데, 물론 지난번에는 우리 방통위가 5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기회가 없어서 MBC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임기를 넘겨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증편향에, 이건 언론인으로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서초동에 1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서는 딱 그거 한 평에 한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한 평에 서면 몇 명이라는 게 나오고 그 도로의 길이와 도로의 폭을 계산하면 그게 산술적으로 몇 명이라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 서초동 집회가 있었던 서초대로에 100만 명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영방송 보도국장이 김어준쇼에 나가서 '딱 보니까 100만 명'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공정성, 애큐러시, BBC가 말했던 모든 공정 보도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 사면된 데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특히 조국 대표의 아들딸들의 입시 비리라는 것이, 입시 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그 뒤 세대나 그 앞 세대는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30대 여성에서 특히 반발이 많습니다, 반대가 높습니다, 조국 대표 수호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뉴욕타임스에도 그 조로남불이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MBC가, 공영방송이 공정과 정의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보도국장이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보도국장이 이렇게 하면 밑의 정치부장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줄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구조가 더 강화되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채널A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됐다면서 채널A 기자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여기에 아마 그때 한동훈 대표도 잠깐 등장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MBC가 막 발뺌을 하면서 엉터리로 합니다. 부도덕 취재 고발 보도를 공작이라고 했다가 검언유착 단독 보도라고 했다가, KBS도 모르고 잠깐 뛰어들었다가 바로 그다음 날 오보라고 사과 보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끝없이 사과하고 변명하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언론 재갈이나 물리고. 이 선악 이분법에 대한 중독과 그리고 반대하는 정권에 대한 반감과 혐오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 버린 MBC를 본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를 두고……

아까 제가 그 소고기 보도, 소고기 보도는 MBC ‘PD수첩’의 대표적인 보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MBC를 대표하는, PD저널리즘의 대표 작품이 MBC ‘PD수첩’의 미국 미친 소, 광우병 미친 소 이 보도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한미 관계뿐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의 통상협상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MBC라는 공영방송이 우리 국가의 미래, 국가의 전략을 결정할 때 우리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FTA 상당히 논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노조라든가 또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반대했습니다, FTA라는 것이 우리가 신식민지 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당시에 이른바 진보 언론과 진보 학자들도 여기에 편승해서 MBC 같은 그런 공영방송 매체들 이런 데들도 굉장히 앞장섰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이런 국가적 전략 또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거대한 국가 전략을 결정할 때 어떤 지혜에 의지해야 되느냐……

저는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이 대목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난 20년간 한미동맹뿐 아니라 중국이 저렇게 굴기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상의 국가에서 수출을 해 무역 흑자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기조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크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보수 대통령이었으면 시작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반발과 농민단체의 반발과 특히 진보 언론, 또 당시에 무슨 야당의 이런 반발에 처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시에 저는 자리에 없지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도움을 청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돕다가 ‘송완용’이라는 이름도 듣고 화형식도 당하고 이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고초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공영방송의 입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공영방송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영방송은 완전히 쇠고기, 미친 소로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완전히 작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국가적 의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제는 통상 국가, 개방 국가로 가기 위해서 큰, 거대한 전략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합리적 토론보다는 왜곡, 조작, 허위사실로 뭉개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다가 똘똘 뭉친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를 동원해서 나서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국가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느냐.

지금 와서 한미FTA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미FTA를 시작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고독한 결단을 응원하기는커녕 비웃고 비판하고 다음에 그것이 마치 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 것처럼 비난했던 그런, 그게 이른바 PD저널리즘이고 그게 이미 방송노조의 깊은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미국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도 하면서…… 저 역시도 1962년생으로 81학번입니다. 저 역시도 운동권이었고 저 역시도 노조위원장도 해 봤습니다. 저는 1987년에 구속되어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그 무섭다는 분실에서 20일 동안 밀실 고문·수사도 당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기업에서 만든 신문, 문화일보에 입사한 뒤로 문화 기업의 입장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운이 좋아서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서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도 해 보고 또 운이 좋아서 미국 워싱턴 특파원이 되어서 비밀 기록 문서를 다 보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게 이게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 경험이 아마…… 제가 1984년에 사실은 민정당사 점거 농성 사건의 주범으로 수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4개 대학에서 민정당사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해서, 2·12 총선을 앞두고 양 김 씨를 포함한 정치인 전면 해금, 표현의 자유, 대학 자율화를 요구하고 점거 농성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100명씩 차출해서 1984년 11월 14일 날인가 그때 민정당사를 점거 농성했는데 그때 그것을 주모한 사람이 저라고 주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모자가 되는 그 사건에 같이 공범도 되기도 하고 또 같이 그것 때문에 민정당사에 들어갔다가 고초를 겪었던 동료 의원들도 지금 의사당에서 만납니다. 누구인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편향적 지식과 그런 것과 많이 다르더라는 것을 저는 한번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평범한 운동권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YS·DJ 시절에 젊은 피 수혈할 때 정치권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따로 저는 기자의 길을 갔고 또 다른 길을, 특히 보수적인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을 접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면서, 한미 관계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옆길로 갔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이 탄핵 재판 때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에서 크게 우리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동네 지지자들이 너무 놀라 가지고 '어떻게 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이래서 참 크게 저를 의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답답하기도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라는 말로 제가 모면을 했습니다. 당시에 1987년이었는데 4·13 호헌 조치 등과 해서 갑자기 공안 당국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서운 잣대를 많이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되었고.

제가 약간 해프닝인데 제 선거 때 그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또 무슨 엉뚱한 이름의 사건에 한번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종범도 아니고 그냥 제 친구들이 잡혀가는 바람에 그 이름이 올라왔는데 당시 저랑 경합했던 현역 의원께서 저를 '최형두는 원조 공산주의자인데 그것을 공천 과정에서 숨겼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해도 통하지도 않고 동네에서 최형두 부부는 북한 다녀왔다는 소문까지 쫙 번지기 시작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신문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하니까 최형두는 원조 공산주의자라는 문자가 온 동네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일보가 뜻밖의 기사를 써 주는 바람에 제가 모면을 했는데 참 세상일이라는 게 알 수 없구나 느꼈던 게, 부산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비서관 출신 최형두에게 공산주의자, 나가도 너무 나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 신원조회에 신원보증을 해 준 셈이 되어서 그 어려운 선거판에서 공산주의자, 국가보안법이라는 낙인을 딛고서도 제가 마산합포에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사람의 낙인효과라든가 또 저도 가짜뉴스 방지법을 보면서 언론 보도의 폐해, 그것 고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걸 제목으로 딱 달아 놨어요. 아,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 반박이라도 두 번째 부제로 넣어 주면 안 되냐 했는데 그것도 안 넣어 줘요. 그러나 그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또 설명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좀 다른 말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일을 거치면서 저는 또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미국 유학을 하면서 미국의 비밀문서, 또 미국의 우리 한반도 정책을 결정했던 브레진스키라든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라든가 그런 역대 공화민주당의 국가안보보좌관들 또 새뮤얼 헌팅턴 같은 그런 석학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비밀이 해제된 미국 정부의 문서들을 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젊을 때 운동권 하면서 또 학생운동 하면서 가졌던 미국에 대한 인식 또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FTA도 출범할 때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은 브레진스키 박사와의 인터뷰 때였습니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2007년이지요? 2007년 막, 2006년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2월까지 취임했지요? 한미FTA를 시작하는 시기가 아마 2007년 초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시기, 2007년에 내가 브레진스키 박사를 워싱턴 특파원 때 인터뷰를 했더니 한미FTA야말로 유엔 같은 그런 보편적인 국제기구의 힘과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세계를 선의의 바탕 위에 좋은 의지를 가진 나라들이 함께 떠받칠 수 있는 중요한 동맹의 관계를 맺는 고리일 것이라고 한미FTA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만 하더라도 한미FTA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한미FTA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미국에서 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그랬다가 미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한테 우리 농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쓸려 나갈 것인데 그걸 왜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저는 브레진스키 박사한테 '한미FTA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도 우뚝 서는 동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반감이 높았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진보좌파 여론은 통상교섭본부의 외교관들을 매국노로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지지하던 정치인을 이완용으로 매도해서—제가 직접 들었습니다—송완용이라는 사람도 있었

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 한반도를 속국으로 남겨 놓게 했던 심모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겨레21’에 실렸던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장차 중국의 자장이 너무 강력해지는 걸 막고 통일 한반도를 계속 속국으로 붙잡아 두는 방법은 통일 한반도의 주력군이 될 한국을 FTA 체결로 미일동맹 체결에 단단히 묶어 두는 것이다’—‘FTA는 제2의 조선책략?’

그러나 미국 측 증언은 다릅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제가 인터뷰 직접 했던 사람들입니다—2007년 2월 21일 ‘한미FTA는 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였다. FTA가 한미 관계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FTA에 대해서는 그 음모론을 배격했습니다. ‘FTA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해 당사자도 있을 것이다. 미국도 과거 철강산업을 지키려고 철저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왔다. 나는 FTA로 한미 간의 경제적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FTA 문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조가 될까 걱정이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지적은 맞았습니다. 이걸로 해서 2007년에, 2008년이지요. 갓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FTA 시작도 못 하는 이런 엄청난 한미 관계의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104쪽 주십시오.

FTA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식민 속국으로 삼으려고 그랬으면 미국 의회가 일제히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FTA에 대해서는 지금도 트럼프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민주당도 클린턴 정부의 NAFTA에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공화당이 찬성했지요.

실제 FTA가 2011년 10월 13일 날 미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통과됐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도 FTA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 의회에서 FTA가 통과될 때 워싱턴을 국빈 방문 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열여섯 차례의 기립 박수를 받을 만큼 좋은 때였지만 반대표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2007년 체결되고도 미 의회 비준이 3년 이상 걸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당시 하워드 버먼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제가 직접 만났더니 미 의회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미국 내에서 자동차산업 지역인 미시간주 등에서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단 미국 내에서 무역으로 인한 피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워드 버먼은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의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FTA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하는 트럼프의 분위기를 보면 이건 한미FTA를 체결할 때부터 이미 배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위대한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수 대통령

이었다면 꿈도 못 꿨을 그런 대담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른바 진보 언론 그다음에 강경한 노조 단체, 농민단체의 큰 반발에 휩싸이고 정작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까지 아주 외롭게, 이런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서 외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지난 17년간 엄청난 혜택을 보았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존 햄리 CSIS 회장도 초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FTA가 무슨 미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삼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고 지금도 한미 통상에서 있습니다만 너무나 쉽게 우리 생각으로, 우물 안 시각으로 미국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그러면 공영방송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이 보도를? 노무현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을 객관적 보도로 했을까요, 아니면 역시 이른바 진보 언론과 그런 강경한 단체들의 반대 논리에 휘둘렸을까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어떤 지도자가 했을 때 저는 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국론을 통합하거나 모아 주지 않으면 아마도 이런 데 대해서는 전부 저마다 지지층을 결집한 유튜버들이 지금 같으면 난리를 칠 겁니다. 아주 맹렬하게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FTA,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당시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이 결단을 했고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지를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이어받아서 완결 지음으로써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통상 환경 때문에 지금 거의 무효화되다시피 됐지만 그래도 그것이 큰 바탕이 되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수고하셨어요. 기대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게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저랑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진실입니까? 한미FTA에 대해서는 진보 언론의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 보면 미국도 한미FTA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는 브레진스키 박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큰 결단을 이해하는 그런 전략적 시각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한국과 미국이 불안정한 세계에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뜻밖에도 한미FTA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2008년 1월입니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폴란드 출신입니다. 강대국 틈새에서 불운한 역사를 보내야 했던 폴란드 출신인 그의 제안에는 남다른 통찰력이 읽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인사로서 민주당 주류의 보호무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전략적 통찰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제가 2008년 1월 신년 인터뷰, 그러니까 2007년 말에 했던 인터뷰에서 브레진스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미FTA는 두 나라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이해관계가 커지고 있다는 징표이다. 미국은 분명 한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으로서도 특별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 친구란 바로 매우 충실하면서도 멀리 있는 나라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일본과 같은 친구들이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미국은 멀리 있지만 한국의 충실한 친구이다.'

그러나 브레진스키 박사의 전략적 제안과 달리 미국의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의회 비준까지 한미FTA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방미 중에 한미FTA 비준 문제를 진전시키려고 했지만 당시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도 이미 반FTA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시 그 대격전,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경선 때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의 마지막 민주당 대회전은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있었는데 모두…… 펜실베이니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러스트 벨트입니다. 러스트 벨트, 녹슨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FTA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모두 블루칼라 유권자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반대한다고 노동자들에게 다짐했습니다. 막판 역전승을 꿈꾸던 클린턴은 노동자들에게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 FTA 반대를 확약한다고 했습니다.

오바마는 4월 2일 펜실베이니아주도 필라델피아의 노동조합 집회에서 '나는 한미FTA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나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도 같은 시기에 전미노동조합총연맹(AFL-CIO) 펜실베이니아지부 집회에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앗아 가는 북미자유협정(NAFTA) 체결 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정인 교수님이 2011년 11월 달에 중앙일보 시평에 쓴 글이 있습니다. 'FTA 비준이 꼬인 숨은 이유'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2008년 5월 촛불시위의 본질은 광우병의 진실 여부가 아니었다—광우병 때문에 그 많은 시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양보했다는 인식이 퍼져 나간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특파원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도 MBC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환대했던 것을 M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밤 숙박료가 얼마일까요?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촛불시위, 광우병에 대한 극심한 오해와 혼란, 여기에 당시 공영방송인 MBC의 이런 시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FTA 비준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진보 언론의 경우에는 FTA가 미국의 책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미국의 식민지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뜻밖에 미국에서는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민주당 대선후보들까지 반대했는데 그런 방송들은 국내에서 제대로 들렸습니까? 저는 특파원이어서 당시에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오히려 음모론과 국익을 위한 진정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그 논의를 확산시키고 두텁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고립시키고 위태롭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 MBC도 한미FTA뿐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바로 문정인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환대료가 얼마나 컸을지 의심스럽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라는 것이, 한미 관계라는 것이 다 주고받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국익을 저버리고 어느 나라한테 국익을 내주는 나라가 아닌데도 FTA 자체에 대한 편향된, 확증편향으로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조차도 이렇게 왜곡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어받은 대통령이 이걸 추진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107쪽 보실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참…… 노무현 대통령의 FTA 담화문 읽어 보면 저는 지지율의 추락 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느꼈을 배신감을 무릅쓰고 이렇게 용감한 국가적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담화문을 꼭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지금 한중 간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담화문에 기억나는 것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한미FTA를 한다고 하니 이것이 국익을 망치고 나라를 신식민지로 만들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주장을 자세히 들어 봐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주장이 근거가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개방한 뒤로 실패한 적이 있느냐. 나는 지금 우리가 과감하게 개방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높여 놓지 않으면 어떤 시기에는 중국이 또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할 텐데 중국과 격차를 벌릴 수가 없다. 우리가 나중에 중국과 교역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때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실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FTA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20년 뒤에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거래 역전했습니다. 중국과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었던 한미FTA 덕분에 중국과의 격차가 뒤집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지금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그걸 만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 덕분에 나라가 이만큼까지 유지돼 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말을 바꿨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그것으로 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고립당하고 쓸쓸한 퇴임 후를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인터뷰입니다. 봉화마을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한미

FTA는 결국…… 개방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난 그만한 속도가 필요했다고 봤다는 거지요. 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약간 도전적인 선택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FTA를 한다고 하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언제로 할지 전제를 해 두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거든요. 아무 충격 없이 준비가 되느냐? 충격 없으면 준비를 안 해요'.

노 대통령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개방 반대론자들이 걱정했던 일이 여러 차례의 개방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칠레FTA까지, 그렇게 떠들었던 사태는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도 FTA에 대한 확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통상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주도국의 지배력에 대항하려면…… 우리도 선진적 통상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개방하고 FTA 하고 세계무역기구도 해야 됩니다. 통상관계에서 서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이 국가 간의 보편적 현상인데 왜 하필이면 미국 말만 나오면 압력이냐? 콤플렉스입니다. 미국 콤플렉스, 미국 콤플렉스는 뒤집으면 일종의 사대주의적 사고입니다. 개방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반미, 미국을 배타적으로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잡고 고칠 것은 냉정하게 고치되 한꺼번에 마음 상하게 해서는 좋은 일도 없고 또한 다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하는 진보, 타협하는 진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진보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는 한미FTA가 되면 멕시코처럼 신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살기 싫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멕시코에 가 봤습니다. 멕시코에 가 봤더니요, 저는 그래서 한미FTA를 논리로서, 제 고집으로서 또 진보가 반대하니까 내가 찬성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검증을 해 봤습니다. 진짜 멕시코는 신식민지가 되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국경지대에 갔더니요 거의 멕시코 국경지대는 한국의 수출 공단을 연상하게 할 만큼 일자리가 붐볐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 때문에 멀리 멕시코시티 그리고 남쪽의 치아파스주 사람들까지 몰렸고 시내 곳곳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게 미국과 멕시코 국경도시를 제가 직접 워싱턴 특파원 때 현장 취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 때문에 지옥의 땅으로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멕시코의 GDP 규모가 미국의 4%에 불과해 미국이 NAFTA로 얻는 GDP 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멕시코의 이득은 당연히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무역수지를 보면 2001년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1313억 달러, 무역 흑자 300억 달러였고 이랬는데, 이게 아마 2007년일 겁니다. 그때는 2299억 달러, 흑자가 66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 미국 통계국 이야기입니다. NAFTA를 거치면서 수출액은 1.7배 늘었고 무역 흑자는 2.2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반 FTA의 교과서로 떠올랐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뉴욕타임스 기고 'NAFTA의 깨진 약속'이라는 그 칼럼에서조차도 '1994년 12월 멕시코가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

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의 무역 때문이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은 다 묻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한미FTA에 대해서 한미FTA가 되면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하고 또 나는 그런 신식민지에 살기 싫다, 지옥의 땅이 되겠다고 하고 진보 언론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한미FTA를 완결 지으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숙박료가 얼마일 것인가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것이 우리 진보 언론과 공영방송의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영방송은 팩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라는 데에 끌리는 까닭은 자기 생각과 맞는 정보를 자꾸 주니까 자기 확신이 강해져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기 확신으로만 채우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실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심지어 자기 확신이 넘쳐 가지고 유튜브로 세상을 다 보고……

유튜브에서 오늘 내가 한 어떤 말이 거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어느 극단적인 유튜버가 나를 찍어서 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유튜브의 알고리즘,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이것들이 모두 보면 증오와 갈등의…… 점잖은 이야기 하고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걸 쓰면 절대로 조회수가 안 오릅니다. 내가 민주당 의원들을 맹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이러면 잘한다고 팍, 최형두 모처럼 잘한다고 오릅니다, 화끈하다고. 그런 말 안 하면 ‘너 뭐 약점 잡힌 것 있느냐’ 그럽니다, 저한테.

(「그래도 국힘 의원 중에 최 의원님이 제일 좋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 하면 제가 크게 오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팩트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우리 공영방송은 애큐러시, 정확성에 바탕해서 팩트풀니스(factfulness)라고 하는 이 팩트를 가지고서 좀 세상을 밝고 맑게 또 희망차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공영방송법은 이것을, 공영방송을 그렇게 해 줄 가능성을 오히려 더 막아 버리고 악화시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팩트풀니스’라는 그 유명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제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생경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해서 듣는 것도 앉아 계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일 테고 해서 공영방송이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야 될 가치와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책자를 몇 개 읽겠습니다.

‘팩트풀니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글로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지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열세 가지 문제인데,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알고 있는 정답률이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침팬지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오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더 쉽게 유튜브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똑똑한 사람들이 더 쉽게 유튜브에 현혹됩니다. 제가 보면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점잖은 지식인인데 너는 왜 안 나서서 싸우냐고 엄청나게 저를 혼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 알고리즘이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알고리즘에는 유튜

브의 알고리즘이나 증오와 적대의 알고리즘, 페이스북의 증오와 적대의 알고리즘이 파고들기 쉬운 인식 구조가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고 '팩트풀니스'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진실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직접 선물했답니다. 다음에 버락 오바마도 아주 적극 추천한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박 쳤지요. '이 책은 세상의 참모습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더 긍정적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제가 굳이 다시 의역하자면 유튜브와 극단적인 소셜미디어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정치, 양극화된 정치를 좀 더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좀 더 긍정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죽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잘못 해석하는지 귀담아들어 온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부터 아주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세계에 관한 사실을 묻는 문제를 침팬지보다 못 맞히는지를 두고 마침내 내가 얻은 결론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 생각하라. 전쟁, 폭력, 자연재해, 인재, 부패…… 상황은 안 좋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다. 안 그런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며 빈곤층은 더 늘어 간다. 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원은 곧 동나고 말 것이다. 적어도 서양인 대부분이 언론에서 보고 머릿속에 담아 둔 그림은 그렇다. 나는 그것을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그런 세계관은 스트레스와 오해를 불러온다.' 때때로는 극단적 충돌도 부릅니다.

'사실 세계 인구의 절대다수가 중간 소득수준을 유지한다. 이들은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극빈층도 아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가고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자녀 둘과 함께 살고 휴가 때는 난민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해외여행을 꿈꾼다. 세상은 해를 거듭하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 모든 면에서 해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 더러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이제까지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이다. 사람들이 내 질문에 무척 극적이고 부정적인 답을 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탓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추측하고 학습할 때 끊임없이 그리고 직관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참고한다. 그래서 세계관이 잘못되면 체계적으로 잘못된 추측을 내놓는다. 한때 나는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이 낡은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조차 세계를 오해하는 걸 보면 그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악마 같은 언론이나 선전·선동, 가짜뉴스, 엉터리 사실 탓도 아니라고 확신한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나오는 탓에, 이 과도하고 극적인 세계관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나오는 탓에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책이고요. 사실충실성, 팩트풀니스, '이것이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규칙적 운동처럼 일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 한다.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공영방송이 이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충돌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 세계관은…… 이런 세계관은 사실은 유튜브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파가 많이 보는 방송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특정 정파에 의존하는 어떤 편향의 미디어들이 의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인 지상파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언필칭 국민의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영방송은 좀 더 긍정적 세계관, 또 국민을 통합시키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암기하지 않고도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답니다.

다음 것 볼까요?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 실제로는 극단적인 충돌로 잇닿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수가 중간에 속한다. 서양과 그 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극을 암시하는 이쪽 또는 저쪽이라는 단순한 분류는 쓰지 않는 게 좋다.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세계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성실한 젊은이들이었다. 그런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이 우리와 그들이란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학생들 입에서 그들은 우리처럼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격이었다. 머릿속에 30년 된 낡은 세계관을 넣고 다니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1995년 10월 그날 저녁 빗속을 뚫고 집을 향해 차를 몰면서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계획이 통했다. 강의실에서 데이터를 보여 주며 학생들에게 세상은 둘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드디어 학생들의 오해를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었다. 이 싸움을 좀 더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데이터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급하게 만들면서 필요한 페이지를 안 하고 엉뚱한 페이지를 올려놓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인식의 한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인식의 한계를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더 강화시켜 주는 증거와 주장을 계속 유튜브로 보내 주는 것이지요.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영방송도 요즘은 유튜브 장사를 더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고 또 국민의 방송, 국민의 미래를 위한 방송을 하는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BBC의 그런 고상한 가치와 국민과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문화의 가치를 밝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이나 또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던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가 파고드는 것은 팩트가 무시당하고 또 한 번 페이크에 현혹된 사람들이 또 다른 페이크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지는가' 이게 '페이크와 팩트'라는 리처드 도킨스가 적극 추천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럴 듯한 페이크를 버리고 명확한 팩트로 사고하고 그래

서 헛소리에 대항해서 영특함을 되찾을 논리적 무기가 이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이 이런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결함투성이 논리와 매력적인 헛소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준비 중입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 보라고 자꾸 권합니다. 내가 한번 궁금해서 그런 주장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주장을 강화시키는 유튜브를 추천합니다. 공영방송은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성을 찾는, 페이크를 배척하고 명확한 사고로, 팩트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빨리 믿는다. 충분히 반복하면 조만간 믿게 된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미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알고리즘을 알았기 때문에 선거로 집권해서 그렇게 독일제국을 완전히 재앙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말고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공영방송도 그렇고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로서 전략적인 어떤 최고사령탑으로서 여러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사실은 남다른 지혜가 필요할 테고 남다른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정치적인 분위기를, 지지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여론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유튜브가 됐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가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이 BBC고 그것이 미국의 PBS고 일본의 NHK이고 독일의 공영방송이다 하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라든가 우리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의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책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단지 그냥 같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기보다는 저는 ‘페이크와 팩트’라는 이 책에 나오는 프롤로그 이야기로서 오늘 의원님들과, 이 시간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께 한번 이 사례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도 정치지도자로서 어떤 선택의 고비에서 어떤 판단을 현명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성의 끈을 꼭 붙든 영웅들, 아마도 우리 한미FTA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웅이 으레 그렇듯이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라는 이름은 유명하지 않다. 아는 사람도 적고 기념비도 없다. 하지만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무명의 러시아인에게 삶을 빚지고 있다.

1983년 9월 26일 페트로프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방공군 중령이자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세르푸코프-15 벙커의 총책임자였다. 이 벙커는 OKO, 즉 소비에트연방 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곳으로 적국을 감시하는 눈이었다. 긴장이 팽배한 시대

였다. 냉전은 절정에 이르렀고 유럽에 미국 핵미사일 시스템이 전개되자 크렘린은 격분했다.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바로 몇 주 전에는 소비에트연방이 한국 민간 항공기를—KAL기 추락 사고지요—격추해서 미국 하원의원을 포함한 269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비에트연방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두 초강대국의 관계는 벼랑 끝 전술로 치달았으며 양 진영의 권력층에서는 은밀하게 핵전쟁 가능성을 실제로 상정하는 속삭임이 퍼졌다. 두 경쟁국의 군사령부의 놀라운 화력은 과장할 필요가 없었다.

20세기 전반에 물리학자들은 핵융합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별이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밝혔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 과정을 연구했지만 목표는 인류 발전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없앨 핵무기였다. 이런 무시무시한 화력으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생존자만 남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 세르푸코프-15 벙커에 미국 미사일 다섯 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리면서 음울한 9월의 통곡이 시작됐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었다. 핵전쟁이 임박한 것이다. 페트로프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오랫동안 훈련해 왔으며 그의 소임은 명확했다. 상관에게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야 했다. 러시아는 맞대응해야만 했고 핵무기로 일제 사격해야만 했다. 소비에트연방은 파괴되겠지만 미국도 멸망할 것이다. 집중 공격에서 살아남아 훗날 잿더미 왕국을 통치할 모든 경쟁국의 잠재적 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두 강대국은 지구상의 다른 국가도 공격할 것이다.

페트로프는 이 암울한 미래를 너무나 잘 알았다. 일단 이 정보를 군 상부에 보고하면 소비에트연방의 군사령관들이 지체 없이 적에게 보복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페트로프가 망설일수록 미국의 공격이 성공할 위험도 커졌고 그의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 생각할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할 때였다. 가혹하고 끈질긴 압박을 받으며 페트로프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상관에게 전화해서 차분하게 OKO가 오작동했다고 보고했다. 동료들은 경악했지만 페트로프는 책임자로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중령의 판단이 옳았는지 소비에트연방이 불탈 것인지 두고 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은 페트로프 중령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그의 추론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면 총력을 다했어야 했을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적국을 지도에서 지우기로 결심했다면 소비에트연방 미사일 방어체제를 제압하려 했을 것이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응전하리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공격했다면 압도적인 수의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을 것이다. 하지만 겨우 다섯 발이라면 이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지상레이더는 경보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여 주지 않았다. 여러 가능성을 가늠해 본 페트로프 중령은 미사일 조기경보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더 그럴듯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령의 추론은 정확했고 OKO가 본 불길한 미사일은 낮은 구름이 반사한 빛을 탐지기가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 행동하기 전에 사고하는 페트로프 중령의 태도는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인한 전멸을 막았다.'

냉전 중의 위기는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년 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던 1962년 10월 27일은 이보다 더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흐루쇼프, 미국의 케네디가 전쟁을 막으려 격렬한 외교전을 치르는 동안 두 지

도자가 모르는 또 다른 위기가 북대서양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소비에트연방 잠수함 B-59호는 미국 해군에 탐지되자 추적을 피하려다 너무 깊이 잠수하는 바람에 외부와 통신이 끊겼다. 미국 항공모함 랜돌프호와 구축함의 추적을 따돌리느라 B-59호는 수일 동안 모스크바와 통신할 수 없었다. 잠수함 선원들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B-59호를 해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려고 미국 함선들은 폭뢰를 투하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러시아인들은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잠수함에 있던 세 장교, 함장 발렌틴 사비츠키, 정치장교 이반 세모노비치 마슬레니코프, 함대장 바실리 아르키포프는 대응을 논의했다. 모스크바와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B-59호는 위협에 맞서야 했고 필요하다면 잠수함에 실린 무기 중에서 T-5 핵어뢰를 사용할 권한도 있었다. 사면초가에 몰린 잠수함을 계속 괴롭히는 미국 추적자들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B-59호의 공기는 후덥지근했다. 공기정화장치가 고장 나자 비좁은 잠수함은 내부 온도 50도를 넘어가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우나로 바뀌었다.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산소는 줄어들었고 어느 쪽도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식수도 모자라서 선원들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텼다. 미국 함선이 투하하는 폭뢰는 B-59호를 흔들어댔고 정보장교 바딤 올로프는 나중에 폭뢰 때문에 거대한 망치로 두드리는 금속 통 속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 당황한 사비츠키 함장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지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듯한데 우리가 여기 갇힌 채 공중제비를 돌고 있다. 적군을 맹렬하게 공격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죽겠지만 적들도 모두 가라앉힐 것이며 우리는 해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함장은 선원들에게 15kt 핵어뢰로 미국 항공모함 랜돌프호를 타격하라고 명령했다.

마슬레니코프는 함장의 명령에 동의했다. 핵어뢰를 정상적으로 발사하려면 함장과 정치장교가 승인해야 했다. 그리고 아르키포프는 함대장으로서 사비츠키 함장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 B-59호가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세 장교가 모두 동의해야 했다. 사비츠키와 마슬레니코프가 응전하기로 한 상황에서 선택은 이제 아르키포프의 넓은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랜돌프호는 핵무기의 위력에 완벽히 증발될 테고 이 조치는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었다. 크렘린이나 백악관 어느 쪽도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 2세의 말을 빌리자면 냉전의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르키포프는 압박감에 익숙했다. 불과 1년 전에도 그가 지휘했던 K-19 잠수함에서는 원자로 냉각기가 고장 났다. 멜트다운, 즉 원자로가 녹는 것을 막으려고 아르키포프와 선원들은 즉석에서 새로운 냉각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앙을 간신히 모면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지나치게 높은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많은 선원이 방사능에 중독됐지만 멜트다운은 피했다. 이 사고는 소비에트연방 해군 전체에 악명을 떨쳤고 아르키포프의 용감한 행적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깊은 존경을 받았다. 이제 아르키포프는 숨 막히는 더위에 시달리는 B-59호의 모든 선원에게 주목받고 있었다. 동료들에 맞서 그는 결연하게 전투 개시에 동의하지 않았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아르키포프는 끝까지

T-5 핵어뢰를 발사하면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정보 없이 무모한 공격을 지양하고 대신 해수면으로 올라가 모스크바와 통신을 재개하자고 설득했다.

결국 아르키포프는 동료들을 설득했다. 그때쯤 백악관은 북대서양의 추격전을 보고받았고 B-59호가 무사히 소비에트연방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아르키포프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이 아마겟돈을 막았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인지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책임자 토머스 블랜턴은 바실리 아르키포프라는 사람이 세상을 구했다라고 말했다. 이 페트로프와 아르키포프는 칭송받아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인류는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다.

인류를 최후의 심판에서 구했다는 사실 말고도 이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다. 감정이 마구잡이로 치닫는 상황에서 놀랍도록 비판적 사고를 했으며 이를 통해 문자 그대로 세상을 구했다는 점이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도 이들은 논리, 가능성, 명확한 추론을 동원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살아 있다. 우리가 직접 핵전쟁이라는 재앙을 막아 낼 수는 없겠지만 무명의 두 러시아 영웅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서 우리의 공영방송은 유튜브 같은 극단적 알고리즘으로 위험을 과도 극대화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페이크와 팩트'에 있는 또 다른 걸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팩트를 인지하고 이 팩트를 통해서 공동체의 미래와 또 공동체의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가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소셜미디어의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적대와 증오가 더 많은 조회수를 받고 더 많이 추천되는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페이크가 더 빨리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로 무장한 공영방송이 이 세상을 구해야 된다, 오늘 반대토론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를 선출하는 이 방식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 국가가 멍청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1950년대의 중국은 급격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어렵게 승리를 쟁취한 중국 공산당은 농업사회인 중국을 현대적인 공산주의 낙원으로 탈바꿈시키려 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또 사회의 해악도 시급히 제거해야 했고 이러한 해악으로는 인류를 괴롭히는 파리, 모기, 쥐가 지목되었습니다. 이 악당 목록에는 다소 의아한 이름이 올랐는데 그 이름은 참새였습니다. 이 작은 새는 해롭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농부들이 키운 곡물을 먹어치웠습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보기에 참새는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며 기생하는 부르주아의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참새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못 박혔고 이 날개 달린 혁명의 적을 전멸시키기 위해 1958년 참새 잡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제사해운동, 네 가지 해악을 제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베이징 인민일보는 모든 인민이 전투에 참전해서 혁명의 끈기로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라는 호소에 열정적인 호응이 따르면서 베이징에서만 30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학생 소총부대는 참새를 사냥했고 둥지는 조직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알은 부서지고 새끼는 짓밟혔습니다. 냄비를 두드려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참새들이 땅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쉬지 못해 기력이 다한 참새들은 가엽게도 하늘에서 떼지어 떨어져 죽었습니다. 겁먹은 새들은 숨을 곳을 찾아 모여들었으며 이런 피난처 중에는 폭도들의 진입을 거부한 베이징 주재 폴란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식도 잠시였을 뿐 곧 북을 치는 자원자들이 대사관을 에워쌌습니다. 북소리가 이틀 동안 계속 이어지자 폴란드 대사관은 죽은 참새들을 삽으로 떠서 치워야 했습니다. 1년을 넘기기도 전에 참새 10억 마리가 죽었고 실제로 중국에서 참새는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괴적인 선동을 지휘한 자들은 참새의 중요성을 미처 몰랐습니다. 부검 결과 참새의 주식은 곡물이 아니라 곤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뜻밖의 일이 아니었는데 이미 중국 조류학계의 권위자인 정줘신이 참새가 해충을 통제하는 중요한 동물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을 들은 마오쩌둥은 분노했고 정줘신은 권위적 반동주의자로 낙인찍혀 사상 재교육과 강제노동을 받았습니다.

1959년이 되자 공산당은 결국 진실에 굴복했지만 이미 참사는 되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천적이었던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칠 것 없어진 메뚜기떼가 중국 전역을 휩쓸며 곡물을 먹어 치웠습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중국은 급히 정책을 바꾸었으며 소비에트연방에서 참새를 수입해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꺾여 버린 곡물 수확량은 이미 회복할 수 없었고 재난이나 다름없었던 대약진 운동의 다른 정책 덕분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의 결과로 1959~1961년 사이 3년 대기근이 찾아왔고 1500만~4500만 명의 무고한 인민이 굶어 죽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신호와 소음이라는 말, 유명한 명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호, 소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신호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 정치의 일이고 또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지금 수많은 소음, 있지도 않은 위험을 과장되게 확장한다거나 또는 조그마한 위험을 엄청난 위험으로 호도한다거나 또는 피상적인 것만 보고 참새가 쌀을, 수확물을 다 쪼아 먹는 것으로 오해해서 참새를 죽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메뚜기떼의 창궐을 부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수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한미FTA 당시에 우리 진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우리 진보 언론이라는 곳 또 우리 공영방송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참새 소동처럼 이렇게 엄청난 아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혼란과 낭비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영방송을 소음을 만드는 기제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신호를 만드는 기제로 바꿔야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소음, 있지도 않은 위험을 확대하고 없는 위험을 과장하고 작은 위험을 부풀리고 진실을 호도하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으로 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한번 믿기 시작한 페이크, 잘못된 진실을 계속 믿도록 유튜브가 새로운 유튜브를 추천하고 이런 알고리즘에서 페이크의 세계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조작 뉴스는 더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징벌적 손배소로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징벌적 손배소로 징벌해 봐야 뭐 합니까? 이미 정치인들의 명예는 다 무너졌고 없는 사실로 그 기업은 다 망했고, 그것 3년 뒤에 징벌적 손배소 한다고 그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징벌적 손배소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전혀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권력자가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진짜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억압시키는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쥐신이라는, 참새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진실한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왜곡의 것들이.

그래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음, 수많은 허위 조작 뉴스와 왜곡과 증오와 적대의 뉴스가 뉴스라는 이름을 걸고 또 소셜미디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직면한 신호를 정확히 구분해 내고 그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의 신호를 밝혀 줌으로써 광복 80주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이 위대한 성과는 더 간직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고치게 하는 그런 신호, 팩트의 매체, 팩트의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정답이 아니고 아까—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만—누차 보여 줬던 BBC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여 주고 있는 진정한 저널리즘의 회복, 유일하게 공영방송에게만 우리는 진정한 저널리즘의 회복을 권유하고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을, 지상파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방송에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언론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와 팩트,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데 지금, 물론 그동안 공영방송이 비판하시는 분들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심히 우리도 정치적 피해를 이미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정확히 핀셋처럼 고쳐 내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교각살우의 우를 저질러 가며 아무한테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도 대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방송계 무슨 대표다 해 가지고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사장을 뽑게 하고 그래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그런, 헌법 1조에 따라서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방송을 떠맡긴다는 그런 큰 패착, 그 교각살우를 지금 오늘 통과된 방문진법 또 이미 발효된, 이미 대통령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바로 우리 세상이 그렇게 해서 팩트로 가득한 뉴스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미 광우병 허위 보도에서 보았듯이 어떤 확증편향에 사

로잡힌 사람들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팩트가 아니라 페이크가 더 확대되고 지금 유튜브의 폐해를 통해서 보았던 적대와 진영논리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4조를 통해서 현재 있는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의 사장을 3개월 내에 교체한다는 것은 1980년대 전두환 국보위가 국보위법을 만들면서 당시 국회 직원들을 그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해고했던, 자리를 빼앗았던 그 우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1989년에, 그로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져서 제한적이나마 보통 사람들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가동되면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 법의 개정 과정에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마땅히 다루어졌어야 될 위헌적인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도 않고 시간에 쫓기듯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마침내 하나는 8월 4일 날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되었고 오늘 두 번째 법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만 EBS 방송법도 똑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법부터는 멈춰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더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참새 소동에서, 참새 대참사지요, 봤듯이 '이 충격적인 인명 손실은 실패한 사고의 냉혹한 사례이자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 준다'. 당시에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삼단논법에 갇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을 위한 행동은 유익하다고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격언이 경고하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며 얕은 사고에서 나온 행동은 의도치 않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대화를 향한 과도한 열망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위험을 보고도 눈감았고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3년 대기근은 비판적 사고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장엄한 세계를 더 넓게 탐색하고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픈 채울 수 없는 갈망에 시달립니다. 인간은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했고 원자의 비밀을 파헤쳤으며 지구라는 한계 영역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진화적 지위를 보여 주는 이름인 호모 사피엔스—즉 생각하는 인간입니다—생각하는 인간은 이런 특성을 설명과 의도적 진술로 반영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장점이 이렇게나 다양하지만 인간의 사고력에는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하드웨어를 선물받았는데도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치명적인 것까지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역사가 흐르는 내내 우리는 엉망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을 인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기만적인 순간을 인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만적인 건강정보부터 새롭게 등장한 가짜뉴스와 바이럴광고까지 우리는 사기꾼과 광대에게 둘러싸여 있습니

다. 이런 상황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끝으로 인간 지식의 보고에 곧바로 접속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오해와 잘못된 정보, 허위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널리, 더 빠르게 퍼뜨리는 역설을 우리는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의 마음은 특이하게도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실수하는 순간을 알면 잘못된 사고로 발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새를 잡으려고 요란하게 두들기는 냄비 소리처럼 절반의 진실과 노골적인 거짓의 불협화음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타당한 결정을 내리려면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며 잘못된 사고가 침투하는 순간을 알아야 합니다. 벅찬 과제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비판적 사고라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의 정의는 수없이 많지만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주제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주장이 논리적인 종착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면 본능이나 직관만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마 여러분의 신념을 타인의 신념과 똑같은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토하는 쪽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만 따라가야 하며 편하고 익숙하더라도 부정확한 생각과 신념은 폐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결론이 마음에 드는지 혹은 우리가 선호하는 세계관에 들어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증거와 논리에서 나왔는지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BBC의 보도준칙에 나오는 핵심의 요지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믿어라. 확인하라. 또 체크하라. 그리고 거리를 두라.'

'그 정당 그 사람은 우리랑 친하지. 그 사람이 잘되면 좋아', '그 의원, 그 정치인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혼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는 작동해도 어쩌겠습니까? 그건 말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공영방송에서는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에서는 팩트체크라는 철저한 기제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팩트체크 기제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급속하게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체크 기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가 조금 더 튼튼해지게 구축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이제 그런 팩트체크 기제가 고장 난 그 회사, 그 조직에게 거기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손에서 뺏어서 그 특정한 사람들,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민영방송까지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마음대로 보도·편성의 원칙을 정하도록 하고 경영에 간섭하도록 하고 보도·제작 책임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송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방송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BBC는 그런 방송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 담당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BBC가 월드서비스, 국제뉴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아주 매뉴얼북처럼, 한 36페이지 되는데 매우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방송법 개정이 아니라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공영방송이 헛된 소음과 잘못된 소신과 확증편향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리 국가정책과 우리 정부 여당이 하는 일과 또 우리 국회가 도모하는 일, 우리 야당이 걱정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위험을 과장해서, 광우병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광우병 사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MBC 사장이 되고 지금까지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안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우병, 미국산 소로 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이제 방송의 편성을 하고 또 방송의 사장을 뽑고 이사를 좌우할 수 있게끔 엊그제 방송법에서 그렇게 법안을 바꾸었고, 다시 오늘 방문진법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교육방송법도 그런 위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교사단체를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단체를 대표할 수 없는 단체는 포함시키고 교사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빠져 있는 단적인 결함이 있는데 이 결함도 고치지 않고 그냥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선 법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방송종사자, 방송종사자라는 사람들은 공무원처럼 우리 국민의 방송을 관리하면서 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직업을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방송을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경영하고 자기들이 직접 방송사 내부에서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위임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을 뽑고 그 방송통신위원이 그런 방송사의,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도록 하는 그 구조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각살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된 길을 다시 고치기도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송, '페이크와 팩트'에서 보여 주듯이 각자의 주장을, 허위 주장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심지어 KBS·MBC가 저질러 왔던 최근의 허위 주장, 검언유착 주장했다가 사과 방송도 하고 어떤 방송은 사과는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또 무슨 윤 커피, 윤석열한테 커피 타 마셨다는 허위 조작, 당초 김만배 그다음에 신 누구입니까, 그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통령선거를 하루이틀 앞두고 대서특필을 하고, 어떻게 이게 문명국가입니까. 이것이 팩트를 만드는 방송입니까, 페이크를 만드는 방송입니까? 저것은 그냥 확증편향에 휘둘리는 유튜브에 공중 지상파를 얹어 준 겁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영방송은 각각의 주장이 논리적인 종착점으로 이어 가지는 과정을 추측하고 추

적하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본능이나 직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결론을 얻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유해야 됩니다. 증거만 따라가야 되고 팩트만 따라가야 됩니다. 편하고 익숙하더라도 부정확한 생각과 신념은 폐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결론이 내 마음에 드는지 또 누구 마음에 드는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혹은 우리가 선호하는 세계관에 들어맞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증거와 논리에서 나왔는지만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팩트체크와 팩트파인딩과 또 그걸 방송할 수 있는 데스킹 애큐러시(desking accuracy), 아까 BBC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통과된 법들과 또 상정된 법안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동안 확증편향으로 잘못된 공영방송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완전한 공영방송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계관은 선천적으로 왜곡되어 있기에 이런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 통계학자이자 의사인 한스 로슬링은 전 세계 수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부터 빈곤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지능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세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우리는 정보와 완전히 어긋나는 생각을 하며 이 생각은 증거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관적일 때가 많다. 로슬링은 우리가 미디어에 의존해서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내 발 사진만 보고 나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물론 오늘날 미디어는 전통적인 삼두정치의'……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른 루트로 넘어갔네요.

'2016년에 스탠퍼드대학교 연구팀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기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연구팀의 말을 인용하자면 절망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타당한 정보로 쉽게 수용했으며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세련되어 보이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팔로워가 많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이 디지털 세대를 속이기에 충분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성 부모의 육아에 관한 미국소아과학회 논문과 동성애 혐오 집단으로 알려진 미국소아과의사협회 논문을 각각 보여 주었을 때 안타깝게도 대학생들은 두 집단을 동등하게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가장 기본적인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논문의 59%가량은 해당 논문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파한다고 추정됩니다. 논문을 읽으려면 품이 들지만 눈에 띄는 제목의 논문을 잘 골라 공유하면 지적인 노력 없이도 소셜미디어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요소는 주류 미디어보다 온라인에서 더 중요하며 온라인 공유는 최악의 과잉 사태를 불러옵니다.

2014년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건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 볼 때보다 온라인에서 접할 때 더 크게 분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이 이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도 높은 뉴스로 수익을 창출했던 전통 미디어도 매출이 하락하면서 인터넷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온라인 공유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격렬한 감정'이랍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위험한 겁니다. 적대와 증오,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그래서 많이 알려진 유튜브 보면 제목이 전부 이렇습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다 시작합니다. 보다 더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봅니다. 보면 또 보다 더 강렬한 제목이 실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튜버에게 우리 정치가 흔들리는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영방송까지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공영방송도 지금 유튜브 만듭니다. 짤을 만듭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회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면,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지상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복원해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소셜미디어 이런 알고리즘, 격렬한 감정을 자극해서 허위 조작 뉴스를 더 확산시키는 이 바이럴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징벌적 손배소 한다고 해서 멈춰질까요? 안 멈춰집니다. 오히려 모든 피해가 끝난 뒤에 징벌해 봐야 뭐 합니까?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독일 사회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시민교육으로 갔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그런 협약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극단적 주장이 대치될 때는 의심하라. 서로 토론하라. 근거를 확인해라'. BBC의 방송 보도 준칙과 똑같습니다. '확인하라. 1차 자료인지 확인하라'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라. 만일 가이드라인 따르는 걸 잘 모르겠으면 상담 전문가들과 직접 상의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영방송 구조인데 공영방송 구조가 안타깝게도 특정한 확증편향에 갇힌 사람들로 뉴스가 지배당하고 그 뉴스에 스스로가 정하는 보도준칙도 지키지 않는 그런 것으로 되었고 급기야 유튜브랑 경쟁하려고 하면서 유튜브와 같은 짤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영방송한테 돈을 벌라고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공영방송에게는 막대한 지상파 이용권을 공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용자산을 주지 않습니까. MBC는 방문진을 통해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자산을 주었고 지금은 사옥을 옮겼습니다만 브라이튼 같은 굉장히 여의도의 제일 핫한 부동산 자산을 주었고 그런 자산을 통해서 지금 임대수익까지 얻고 있는데 방송들조차도 유튜브식으로 만들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MBC는, 박수 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MBC 시청률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MBC 8시 뉴스데스크가 잘 나와도 8% 못 넘습니다, 시청률이. 그런데 인기 있는 채널 여론조사 하지요. 인기 조사하면 20% 넘는다고 그게 최고의, 마치 국민들의 20%가 보는 것처럼 하지만 국민들 중에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고가 붙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어렵지요. 그러니 케데헌의 요람이자 한류의, 케이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MBC의 예능, 그 예능 왕국은 어디 갔

습니까? 지금은 적자가 무서워 투자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MBC가 경영 걱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이런, 페이크가 아니라 팩트를 통해서 공동체를 단합시키고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MBC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지난 1월 달 판결문을 읽어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사 구조에서는 페이크와 팩트를 구분하고 이 팩트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희망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걸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서 국민이 준, 주권자가 준 권한의 위임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팽개치고 내부 사람들, 지금 이미 MBC를 그만큼 망친 사람들에게 이사회를 '당신들이 뽑으시오'라고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헌적인 문제가 있고 또 스스로 우리 헌법 1조의 그 위임,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방기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쨌든 3개월 이내에 방송사 사장들을 바꾸도록 한 그 부칙 조항은 마치 1980년대 국보위법 조항이 위헌이었던 것처럼 그런 결론이 조만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입법을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졸속적으로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사이에 우리 공영방송은 더 망가질 겁니다. 이미 편파와 진영 방송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업수익은 적자인데, 지금 경제도 안 좋지만 방송을 안 보니까 시청자 수가 떨어지니까 광고도 안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셜미디어의 조회수를 확 높이는 방법은 격렬한 감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논문은 도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는 소셜미디어에서 정치 콘텐츠의 전파를 크게 늘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분노의 기계로 바뀌며, 진실성이나 사회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암암리에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선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만, 그런 콘텐츠만 골라서 봅니다.

'다 같이 분노하는 경험은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실제 해결책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은 폭력이고 폭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을 더 깊숙이 몰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격렬한 감정은 더 많은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신념 집단을 초월하기보다는 해당 집단 안에만 머무는 경향을 보입니다. 집단 안에서의 설교도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섬세하지 않으며 미묘한 상황을 그릇된 이분법으로, 복합적인 인물을 팬터마임 속 영웅이나 악당으로 비트는 프리즘입니다. 전통 미디어가 쇠락하면서 정보가 단편화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여 주는 증거는 점점 늘어납니다. 정보를 선별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극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대신 편견과 기존의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는 증폭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합니다.' 이것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입니다.

'가수 폴 사이먼의 말을 빌려 오자면 인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현대 담론의 즉시성은 우리가 진실보다는 속도를, 사고보다는 행동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모든 현상의 최종 결과는 매우 걱정스럽다. 2018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2006~2017년에 쏟아진 뉴스 12만 6000건을 분석해서 갈기갈기 찢긴 현대 담론을 깊이 파헤쳤다. 이 연구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어떤 사실이 발표되면 날조와 소문이 진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거짓이 담론을 지배한다. 모든 정보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짓이 진실보다 더 심각하게 더 멀리, 더 빨리, 더 깊이, 더 폭넓게 확산했으며 테러나 자연재해, 과학, 도시 괴담, 금융정보를 다룬 거짓 뉴스보다 정치를 다룬 거짓 뉴스의 효과가 더 뚜렷했다. 여기서도 담론이 얼마나 널리 공유될지를 예측할 요인은 감정적 콘텐츠였으며 거짓 담론은 혐오, 공포, 직접적인 분노를 끌어내도록 공들여 만들어졌다.'

다음 페이지요.

'거짓 담론은 불신을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거짓 담론은 회복력이 커서 제거해도 다시 튀어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거짓을 만들기보다 타파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전 세계 선동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서 인터넷을 활용해 온갖 수상쩍은 메시지를 퍼뜨린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는 이 새로운 전장을 가장 월등하게 활용했다. 여기저기서 불쑥 튀어나오는 러시아의 인터넷 방해 공작은 엄청나게 많고, 경쟁국의 국내 긴장과 불신을 부추겨서 불안정하게 한다.

악명 높은 사례를 하나 들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 있는 인터넷 연구기관은 트롤 소부대가 집결한 곳으로 소셜미디어를 어슬렁거리며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전 세계 여론을 조작한다.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 보고서를 보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러시아의 조작이 판을 쳤으며 이렇게 조작된 선동은 대선 결과를 흔들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비슷한 조작 징후가 같은 해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암울하지만 이 기술은 부정적인 만큼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다. 랜드 연구소는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소리 높여 떠들어대며 수그러들 줄 모르는 이 선동 모델을 러시아 소방호스로 묘사한다. 객관적인 진실이나 일관성은 없지만 빠르고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주장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면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원칙은 우리를 설득하기보다는 상충하는 이야기로 압도해서 혼란스럽고 타성에 젖은 몽유병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다. 이 모든 효과가 합쳐지면서 우리의 신념에 불규칙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는 매우 위태로우며, 볼테르는 불합리한 것을 믿게 하는 사람은 잔혹 행위도 저지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전략첩보국은 거의 2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볼테르의 말에 동의했다. 전략첩보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반쯤에 분석한 히틀러의 심리 프로파일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히틀러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대중이 냉정해지게 놔두지 않는다.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적에게 일말의 선이 있다고 수긍하지 않는다. 대안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번에 하나의 적에 집중해서 모든 나쁜 일의 원인으로 몰아간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빨리 믿는다. 충분히 반복하면 조

만간 믿게 된다.

미국 전략첩보국 보고서는 역사 속 가장 악명 높고 끔찍한 독재자의 초상과 함께 독재 정치의 청사진도 포착했다. 독재국가는 우리의 비판 능력을 타락시키고 대중의 편향을 고착시키며 인지라는 그물망에 숨은 사소한 결함을 착취해야만 번영할 수 있다. 히틀러는 기만적이며 숙련된 연설가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진실 착각 효과, 대중은 반복해서 노출된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는'……

다음 페이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죽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허위 조작 뉴스, 특히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악성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은 징벌적 손배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홍수의 시대입니다. 미디어 홍수의 시대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허위 조작 뉴스로, 심지어 우리 여당과 야당의 전당대회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공영방송이, 지금 공영방송 내부가 힘센 노조가 확증편향으로 보도와 인사와 경영을 좌지우지하려 들고 그리고 자기들에 유리한 방송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서 아무 검증도 없이 허위 조작 뉴스를 끝없이 내보내고 그런 페이크 뉴스 지상파 방송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큰 노조가 노사동일체를 이루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그 노조에 비판적인 사람을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니 강력한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공영방송사에서 노조 가입률이 80% 안팎을 웃돕니다. 노조가 아니면 한마디로 보도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MBC에 대한 서부지방법원의 2025년 1월 판결문을 통해서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런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인권적인 문제와 또 확증편향에 따른 페이크 뉴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팩트 뉴스로 오히려 공동체를 단합시키고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 미래를 보게 하고 또 높아진 국격을 전 세계에 방송해서 정말 한류가 전 세계에 문화제국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뒷받침하지 않고, 또 피폐한 지방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재앙 사태를 신속히 대응하고 또 피폐해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유익한 방송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방송보도나 편향 태도라든가 또 회사 내에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해지도록 만들었던 바로 막강한, 80% 가까운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고 그중의 절대다수가 민노총 방송노조를 통해서 방송사 인사를 좌우하는 그런 마당에 그런 사람들이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방송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방송법안인데 이 법안만은 좀 멈추어 달라 그리고 앞의 법안은 다시 고치자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이크 뉴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허위 조작 뉴스로 공동체를 흔드는 이런 현실을, 그래서 대통령을 비방하고 대통령 부인을 헐뜯고 다음에 여당

을 비방하고 야당의 건전한 지도자를 헐뜯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 속에서 우리 정치를 더 피폐하게 하고 마치 히틀러의 선동수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갈가리 찢어 놓는 이런 폐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정말 진실로써 팩트로써 공부하고 느끼고 그래서 희망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도록, 공영방송 내에서 더 이상 인권침해가 없도록, 공영방송이 노조를 둘러싼 권력 전쟁터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소신이고,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역행해서 그런 잘못된 구조를 더 강화해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 바로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는 허위 조작 뉴스, 소셜미디어의 이런 잘못된 알고리즘을 통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파괴행위 이것을 멈추려고 하면 빨리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속하게 복원시켜야 됩니다. 5인 체제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한 분을 더 임명하고 국회가 나머지 3인을 협의해서 서로 걱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허위 조작 뉴스, 특히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에서 지금 우리가 '팩트풀니스'와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고 지적된 그런 문제, 바로 깜짝 놀라는 이런 증오의 뉴스로 소셜미디어가 확산되고 그걸로 먹고 산다는 그 로직이 우리 정치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그걸 하는 유튜브를 감독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특히 영어 잘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분이 FCC, 유럽의 통제기구를 찾아다니면서 협업해야 됩니다. 함께 공조를 해서 이런 거대 플랫폼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동체를 갈가리 찢어 놓는 허위 조작 뉴스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그런 알고리즘을 돈벌이 수단으로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이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보이텔스바흐라는 독일의 사회적 협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런 허위 조작 뉴스, 페이크 뉴스의 또는 파편적인 왜곡 뉴스의 그런 매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이 왜곡당하지 않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걸 교육을 시킵니다. 미디어를 제대로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전면적 진실과 왜곡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에 자주 사용되는 표본입니다. 아마 중동전 같습니다. 미군이 지금 아랍의 어떤 포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총을 사실 겨눈 건 아닙니다. 거총을 하거나, 총을 옆에 차고 물병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왼쪽 편만 잘라서 한다면 아주 잔인한 미군이 되겠습니다. 총으로 위협하는 미군이 되겠지요. 오른편만 잘라서 보도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건 아주 인도적인 미군이 되겠네요. 포로 수병에게 사막에서 자기도 아까운 물을 나눠 주는 미군, 미담이 되겠지요. 그러나 전면적 진실은 이 포로에 대해서 한편으로서는 감시를 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사막에서 귀한 물을 나눠 주는, 이것이 전면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매체가 왼쪽 편만 잘라서 보도해서 잔인한 미군이라고 보도한다면 중동전에서 미군이 아주 악랄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이런 허위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되겠지요. 그리고 오른쪽 편은 미군이 중동에서 저지르는 또 다른 면모를 못 보게 되겠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하다가…… 윌리엄 왕세자였지요. 윌리엄 왕세자, 영국의 왕실은 때때로는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조롱도 합니다. 윌리엄 왕세자가 손가락 3개를 올렸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은 또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유명합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왼쪽 걸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고약한 윌리엄, 또 사고 쳤다', '영국 국민의 수치다' 이렇게 하겠지요. 왜냐하면 저 표시라는 것은 'F'라는 뜻을 담은 것이니까, 그렇지요? 남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타블로이드 사진작가가 찍어 보니까, 이건 사실은 사진기자들 같으면 모를 수가 없는, 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타블로이드 기자는 이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마치 욕하는 것처럼 찍힌 이 장면을 활용해서 장사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왕세자의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손가락 3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영국 왕실로서는 또 다른 왕실 가족이 늘어났다는 것이 영국 국민들한테도 큰 기쁨이고, 또 윌리엄은 군대도 가면서 영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미담으로 소개될 사례지요. 똑같은 장면을 어떤 앵글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엄청나게 나쁜 윌리엄이 되고 다른 쪽은 정말 영국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미디어는 때때로, 특히나 1인 미디어, 특히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그 체제는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조회수가 확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잔잔하고 평화롭고 좋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내 페이스북은 왜 이리 인기가 없지', '내 페이스북은 왜 이렇게 팔로우가 적지', '내 유튜브는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적어', 그건 아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너무 점잖으셔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 욕을 하셔야 됩니다. 여당 의원님은 야당의 지도자를 욕을 하고 여당 의원은…… 야당·여당의 지도자를 욕을 해야 막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튜브가 막 추천을 해 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막 추천해 줍니다. 그 사례를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넥서스'라는 책에 보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많은 나라에서 증오를 퍼뜨리고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컴퓨터의 새로운 힘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가장 악명 높은 초기 사례 중 하나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미얀마—버마지요—버마에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반로힝야족 폭력을 부추겼던 일이다'……

이것 정말 지금 메타, 페이스북이지요. 페이스북이 이걸로 엄청나게 비난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걸로 페이스북은 버마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큰 영업이익을 얻었겠지요, 조회수 늘리면서.

'미얀마에서 2010년대 초반은 낙관적인 시대였다. 수십 년간의 가혹한 군부 통치, 엄격한 검열, 국제 제재가 끝나고 자유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선거가 치러지고 제재가 풀렸으며 국제 원조와 투자가 쏟아져 들어왔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며 수백만 명의 버마인들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를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와 검열이 느슨해지자 민족 간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불교를 믿는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이의 갈등이 시작됐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의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다. 이들은 적어도 1970년대부터 군부 정권과 불교도들에게 심각한 차별을 당해 왔으며 이따금 폭력 사태도 겪었다.

2010년대 초 민주화 과정에서 로힝야족은 자신들의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잇따른 종교 간 폭력과 반로힝야족 학살에 직면했다. 그리고 많은 폭력이 페이스북에 퍼진 가짜뉴스에서 시작되었다.

2016~2017년에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이라는 소규모 이슬람 조직이 아라칸·라카인주에 무슬림 국가를 세우기 위해 여러 군 초소를 공격하고 수십 명의 비무슬림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등 연쇄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대응해 미얀마군과 불교 극단주의자들은 로힝야족 전체를 겨냥한 전면적인 민족 청소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로힝야족 마을 수백 곳을 파괴하고 7000명에서 2만 5000명에 이르는 비무장 민간인을 죽이고 1만 8000명에서 6만여 명의 여성과 남성을 강간하거나 성폭행했으며 약 73만 명의 로힝야족을 잔인하게 추방했다.

폭력을 부채질한 것은 로힝야족을 향한 극심한 증오였다. 그런 증오는 반로힝야 선전에 의해 조장되었고 선전의 대부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 나갔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얀마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주요한 뉴스 출처이자 정치적 동원에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플랫폼이었다.

2017년에 미얀마에 거주한 구호활동가 마이클은 전형적인 페이스북 뉴스 피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온라인에 퍼진 로힝야족을 향한 독설은 양에서나 폭력성에서나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당시 미얀마 사람들의 뉴스 피드는 그런 독설로 도배되어 있었다. 이는 로힝야족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테러리스트라는 생각을 강화했다. 페이스북 계정들에는 ARSA가 실제로 저지른 잔악 행위를 보고한 게시물도 있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잔악 행위와 테러 공격 계획에 대한 가짜뉴스가 넘쳐 났다.

포퓰리스트들이 주도하는 음모론은 대부분의 로힝야족이 미얀마 국민이 아니며 최근 반불교 성전을 주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들어온 이민자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불교도들은 자신들이 쫓겨나거나 소수집단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이런 선전 공세가 없었다면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ARSA의 몇 차례 공격에 전체 로힝야족을 겨냥한 총력전으로 맞대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그런 선전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염성 강한 반로힝야족 메시지들은 불교 승려 위라투 같은 인간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어떤 게시글을 추천할지 결정하는 것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폭력·증오·차별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증폭하고 추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18년 유엔사실조사단은 페이스북이 증오로 가득 찬 콘텐츠를 유포함으로써 민족 청소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태가 페이스북 알고리즘과 전반적인 소셜미디어의 신기술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지 궁금할 것이다. 하인리히 크라머가 인쇄술을 이용해 혐오 발언을 퍼트린 것이 구텐베르크와 인쇄술 탓인가. 1994년에 르완다의 극단주의자들이 라디오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투치족을 학살하라고 선동한 것이 라디오 기술 탓인가. 그게 아니라면 2016년과 2017년에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를 퍼트린 것이 왜 페이스북 탓인가.

페이스북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히 이런 논리에 의존했다. 페이스북은 2016~2017년에 우리 플랫폼이 분열을 조장하고 오프라인 폭력을 선동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 진술은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상 증오 발언이 확산된 것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을 플랫폼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페이스북의 죄는 기껏해야 사용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는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저지른 문제적 행동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인쇄술이나 라디오 장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2016~2017년에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스스로 능동적이고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알고리즘은 인쇄기보다는 신문 편집자에 더 가까웠다.

위라투의 증오 게시물을 수십만 명의 버마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천한 것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었다. 당시 미얀마에는 주목을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했다. 2011년 군부 통치가 종식된 이후 미얀마에서 많은 정치·사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대다수는 온건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미얀마 메이크틸라 지역에서 민족 갈등이 격화됐을 때 불교 승려 사야도 우 위홋다는 자신의 절에 800여 명의 무슬림을 피신시켜 주었다. 폭도들이 절을 둘러싸고 무슬림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을 때 승려는 폭도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인 자비를 상기시켰다. 훗날 인터뷰에서 승려는 이렇게 술회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 무슬림들을 데려가면 나도 죽여야 할 것이오라고 말했어요.”

사야도 우 위홋다 같은 사람들과 위라투 부류가 벌이는 온라인 관심 경쟁에서 킹메이커는 알고리즘이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의 뉴스 피드 상단에 무엇을 배치할지, 어떤 콘텐츠를 홍보할지, 어느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라고 추천할지 결정했다. 알고리즘은 자비심에 관한 법문이나 요리교실을 추천할 수도 있었지만 증오로 가득한 음모론을 퍼뜨리기로 결정했다.

권위 있는 대상의 추천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성경이 추천 목록으로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아타나시우스와 여타 교부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좀 더 관용적인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읽도록 추천함으로써 역사의 경로를 바꾸었다. 성경의 경우 최종 권력은 여러 종교 소책자를 집필한 저자들이 아니라 추천 목록을 만든 큐레이터들에게 있었다. 바로 이런 종류의 권력을 2010년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휘두른 것이다.

구호활동가 마이클은 이런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다. 누군가가 증오로 가득하거나 전염성이 강한 내용을 게시하면 그것이 최다 추천을 받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장 악랄한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게 되었다. 평화나 평온을 추천하는 사람은 뉴스 피드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때로는 알고리즘은 단순히 추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민족 청소 운동을 선동한 일로 위라투가 세계적 비난을 받은 후인 2020년 말에도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위라투의 메시지를 계속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상을 자동 재생하고 있었다.

미얀마 사용자들은 위라투와 무관한 온건하고 선한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영상이 끝나는 즉시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화면 앞에 붙들어 두기 위해 증오로 가득한 위라투 영상을 자동 재생하기 시작했다. 한 위라투 영상의 경우 페이스북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회수의 70%가 그런 자동 재생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미얀마에서 재생된 모든 영상의 53%가 알고리즘이 사용자를 위해 자동 재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엇을 볼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지 않았다.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왜 자비가 아니라 분노를 추천하기로 결정했을까?

페이스북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페이스북의 인간 관리자들이 대량 살인을 선동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이스북 경영진은 로힝야족에게 어떤 악도 품지 않았으며 사실 로힝야족이 존재하는지도 잘 몰랐다.

진실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페이스북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많은 광고를 판매하고 정보시장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극대화라는 사업모델을 채택했다. 사용자 참여란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게시물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등 사용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사용자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더 많은 광고를 판매했으며 정보시장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다. 게다가 사용자 참여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인상을 주자 페이스북의 주가도 올라갔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읽는 까닭은 최근에 정부 여당,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들까지 걱정하고 있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의한 심각한 음모론과 정치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이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이 이미 전 세계에서 악명이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짜뉴스 방지법 이래 가지고 징벌적 손해 5배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찾기도 힘듭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레거시 미디어도 그 징벌적 손배소에 대해 침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은 더 빨리 정정보도로 이끌게 하는 유인책을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징벌적 손배소 5배 같은 것이…… 지난 4년 전에 언론중재법 파동 당시에 유엔 인권보고관이 경고 서한을 대한민국국회에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법을 고치도록 요청했다는 그런 교훈을 지금 다시 되살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공영방송도 유튜브 짤을 만듭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하게 해서, 그리고 공영방송에게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재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가 지금 부동산 수익을 얻고 있는 브라이튼이라든가 또는 MBC 상암동 건물은 공영방송 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국민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KBS 재산 역시도 국민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들이 지금 유튜브 비슷한 진영의 논리를 확산하고 사내에서는 큰 노

조가 작은 노조를 핍박하고 노조가 권력이 되어서, 노사동일체가 되어서 노조 내의 인권 침해 사태, 방송사 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서 지금 노동부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공영방송 이사회라는 곳은 마땅히 그 공영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편파·왜곡 보도의 강화 또 공영방송 내에서 그렇게 막강한 노조가 있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태 이런 것들을 공영방송 이사회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고깔을 쓰고 방송 이사가 되어 버리면 누가 그 잘못을 고칩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르게 헌법 1조가 우리 국회에 명했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국민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현대 정치의 불가피한 방식인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또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선진국의 방식 그대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방송회사, 공영방송사의 이사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그런 방송사 내에서의 편파·왜곡……

지금 자칫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우리가 MBC에서 보았던 것과 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미친 소, 뇌 송송 탁, 그 선동이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유튜브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마다 우리 당 후보를 집요하게 허위 조작 뉴스로 공격했던 것이 유튜브도 아니고 바로 공영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편향성,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이 만일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이런 지속적인 공작을 했다면 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우병 보도를 했던 그 사람들 전부 대법원에서 허위 뉴스로 다 판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지금도 우리 국민의 발목을 잡고 지금 한미 통상협상에서 그 사진 때문에 오히려 미국한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보여 주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라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전략적 결정을 했을 때 그 전략적 결정을 흔든 공영방송 아닙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지금 로힝야족을 상대로 적대적 알고리즘을 만들어 펼쳐 내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이 확산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때 광우병 보도를 했던 그 PD가 MBC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와 반대파들 싹 몰아냅니다. 보도국을 싹 다 물갈이합니다. 그러면 그 MBC는 어떤 방송을 방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노조가 있는데 기상캐스터, 왜 그렇게 억울한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까? 노조는 노조원이든 또 노조원도 되지 못했던 비정규직이든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곳에서 그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생깁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거버넌스 차원에서 심각하게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또 지난 정부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당에서 잘못했다면 이제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고리를 끊어 내고 새롭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 우리 당은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뭐 협상 의지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멀쩡하게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방송법이 있는데 지금 방송사 사장 몰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방송사의 편성 제작진들을 그 자

리에 계속 앉혀 주고, 방송사에서 기상캐스터 같은 사람들이 불행한 선택을 이루도록 방송사 조직문화를 이렇게 이끌어 온 사람들이 그 방송사를 좌우하도록 이렇게 지배구조를 바꿔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다. 지금 방송법은 여야를 바꿔 가면서 또 다수당 소수당을 바꿔 가면서 역대 우리 국회 선배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또 BBC와 NHK와 또 독일의 공영방송, 미국의 PBS가 있는 이런 방송들의 구조를 모아서 글로벌 표준으로 만든 것이다. 글로벌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가 아무리 욕을 먹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주권자는 현재는 직접 참여가 아니라, 도시국가 공화정의 국가 때처럼 직접 참여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고 또 장관과 대통령은 방통위원을 임명하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업무를 위임받게 된 국회의원들은 또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방통위원이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지상파, 국민의 방송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확증편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또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야만적인 직장 내 폭력에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해야지, 있는 구조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사람 보내서 감독을 해야지…… 지금 광우병 후유증이, 이미 참 17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방송사 MBC 사장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한 공영방송이라면, 또 지난 방송 때 그렇게 허위·왜곡 보도를 해서 JTBC 같은 민영방송도 사죄 방송을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을 쓰는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도 하지 않았고 그 시정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진이 고 오요안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번 진상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수많은 시민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MBC 같은 회사에서 기상캐스터가 그런 따돌림과 그런 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MBC 방문진이라면 당연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의 역할로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구나 이 정보의 홍수가 마구잡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해지는 빅테크의 소셜미디어 속에서 이런 적대와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빅테크의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과정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를 교란시키고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를 공격하고 여당과 야당의 전당대회에도 개입하고, 여기에 지금 다른 데도 쓰셨지만 적성국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공작하지 않는다는 저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미국 정보국의 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그걸 가짜뉴스 방지법이 일일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5명을 빨리 복원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런 뉴스 생태계의 심각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 대한민국의 뉴스 생태계와 대한민국 정치와 민생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만들고 파편화시키고 양극화시키지 않도록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MBC·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셜미디어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알고리즘이 망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지혜, 집단지성 그리고 합의를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BBC라든가 독일의 공영방송이나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 NHK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저널리즘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을 회복해야지만 진짜뉴스를, 팩트를 페이크에서 구분해 내고 소음에서 신호를 구분해 내는 그런 정말 진정한 저널리즘으로 무장한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시킨 법, 또 앞서 발효시킨 법이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우 위헌적입니다. 노사 동수 구성한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그걸 상설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들은 매우 상세하게 보도·편성지침이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될 일을 매번 보도편성위원회를 해서 노사 동수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민영방송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민영방송은 보도가 잘못됐으면 막 손해배상도 물게 돼 있고요, 나중에 그 허위사실이 누적되고 지적되면 방송국 허가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징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 된 방송법을 통해서 앞으로 공영방송도 아닌 민영방송인 YTN과 또 주주가 엄연히 따로 있는 연합뉴스TV 사장을 3개월 만에 바꾸라고 돼 있습니다, 공영방송도 그렇고. 이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알면 놀랄 일입니다. CNN과 FOX News 사장을 정부가 정부 여당이 입법한 법에 따라서 사장과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언빌리버블(unbelievable)이라고 그럴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래서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더 심각한 일은, 제가 걱정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가, 마침 정부 여당이 다시 가짜뉴스 문제를 걱정하시길래 가짜와 허위 조작 뉴스를 풀려는 방안은, 지금 뭐 징벌적 손배소…… 유튜브에 어떻게 징벌적 손배소를 매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유튜브는 그 플랫폼, 자기들은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지금 미국의 FCC 또 영국의 동일한 기구, 오프콤인가요? 에프콤입니까? 그런 것 다 협의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지금 공동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의 적대적 알고리즘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국제적 협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민주주의도 지킬 수가 있고 세계의 민주주의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 소개된 알고리즘의 심각한 위협, 지금 우리 사회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걱정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뉴스의 창궐, 이로 인한 정치권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와 또 정치적 양극화 또 정치의 분열 또 유권자로부터 정치가 더 불신받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한꺼번에 안 되지요. 안 되지만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유발 하라리로 돌아가자면, 페이스북이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지대한 공

헌을 했다는 것은 국제기구의 조사로도 밝혀졌고 페이스북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그렇게 한 이유는 페이스북이 정보시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더 많은 광고를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힝야족한테는 인종 청소에 달하는 엄청난 재앙이었고 버마, 미얀마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과 재앙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부자가 됐지만 미얀마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수백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분노가 참여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중에 참 점잖으신 의원분들은 페이스북에 별로 참여자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좋아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셀럽 같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점잖게 해도 인기가 치솟지만 보통 사람들 중에 갑자기 높아지는 사람들 보면 분노를 자극하는 걸 코드로 심으면 됩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에 이미 알고리즘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스스로 생성하는 단계로 옮겨 갔다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독자들은 알고리즘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알고리즘이 한 모든 일은 인간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와 인간 경영진이 채택한 사업모델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책의 입장은 다르답니다. '인간 병사들은 자신들의 유전 코드와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유발 하라리 책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컴퓨터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 내면서 나중에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걱정을 막아야겠지요. 막아야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그런 알고리즘에 의한 미얀마에서의 비극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그런 극단적 주장으로 많은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이 어느 정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정부도 걱정하고 여당도 걱정하고 야당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지금 방송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복원과, 이런 알고리즘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급한 조치를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의 체계가,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알고리즘으로 일어났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확증편향의 방식으로 특정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방송사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그런 알고리즘으로, 그런 알고리즘 방식으로 뉴스를 확대하지 않도록, BBC나 NHK, 독일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들이 엄중하게 강조하고 있는 공정성·객관성·정확성이라는 철저한 저널리즘 윤리에 따라서 방송이 다시 본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렇게 소셜미디어에 저런 알고리즘이 창궐하고 또 민영방송은 저마다 시청자의 선호에 따라서 좀 뚜렷한 주장을 하겠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런 한편의 주장이 아니라 공평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이미 있는 구조가 글로벌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만 제대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잘 임명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굳이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극단적으로 걱정을 하셔 가지고 못된 송아지 버릇 잡겠다고 뿔을 뽑다가 결국 소를 죽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해서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라고 했던 위임의 책임을 우리는 벗어나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나눠 줌으로써 앞으로 공영방송의 내부가 얼마나 더 피폐해질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확증 보도 편향이 얼마나 더 심화될지 걱정입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위헌소송을 통해서, 마치 국보위법 부칙 4조를 통해서 현직 사람들을 교체했다가 민주화가 된 뒤에 198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위헌으로 결정 났듯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멀쩡히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국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법이 위헌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그때 뒤늦게 바꿔야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 전에 먼저 이 법을 우리가 수정을, 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튜브를 워낙 하니까 이제는 공영방송까지도 유튜브 해서 장사 좀 하겠다고 유튜브 만들고 짤도 만들고 그럽니다. 이것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정말로 그것이 진짜 사람들이 진득하게 보고서 깊이 이해하고 하는 이런 미덕이 되어야지…… 우리 공영방송보고 돈 많이 내라고, 너 돈 벌어서 국민들에게 돈 갚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또 공영방송이 이렇게 심각한 편파·왜곡 방송을 일삼다 보니까 시청률이 지금은, 과거에 20%, 30% 하다가 이제는 6%, 7%도 안 합니다. 5%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광고가 붙겠습니까?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뉴스 채널을 보지를 않는데 누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간신히 방송사 사옥 임대료 가지고서 영업 적자를 메우는 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K-콘텐츠의 본산이었던 MBC 예능 왕국, 드라마 왕국은 어디 갔습니까? 그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 얄팍하게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런 짤 만들고 그럽니까?

스스로가 지금 편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좁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공영적이고 온 국민을 향하는 방송을 하지 못한 대가로 스스로 시청률이 떨어졌고 또 정치권이 잘못해서, 정치권이 자기편으로 방송사를 임명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너무 과잉 칭찬해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지금 방송이 엉망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시청률이 떨어져서 광고가 안 붙는데 그러면 공영방송, 특히 MBC 이야기입니다. KBS야 시청료가 있으니까 시청료로 해서 어떻게 버텨 나가겠지요. 그런데 KBS 같은 경우도 편파 방송 하면 시청자 거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KBS는 최소한 그런 외부적 장치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MBC는 주식회사라고 국회에 보고도 안 해요. 영업실적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특정 편향적인 보도만 일삼고, 대통령선거 때 완전히 소금 뿌리고 재 뿌리는 보도를 일삼아서 한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하는데, 만일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어느 방송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BC라든가 미국의 FCC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보면 선거방송이나 정치방송에서 굉장히 엄정한 중립과 페어니스(fairness), 공평함…… 페어니스는 간단히 말하면 이퀄 오퍼튜니티(equal opportunity)고,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고. 그것은 딱 잘라 이야기하면 이퀄 타임(equal time)이다, 똑같은 시간을 주라는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통령선거 앞두고서 '윤석열이가 무슨 커피 타 줬대'로 막 그냥 내리깝니다, 근거도 없는 뉴스를.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꼭지 붙여서 '정치권에서 논란', 이걸로 또 무슨 치고받았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MBC 선거방송 보도준칙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이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지배해 가지고…… 민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지난 정부 때는 지난 정부 사람들로 막 사장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을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민주당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 당을 아주 나쁘게 해코지하는 보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방송 지배구조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정말 우리 방송사……

공영방송들보고 우리 돈 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사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높여 달라, 국민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또 공정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지금은 글로벌 문화 수준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 달라고 때로는 세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상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버넌스 시스템, 거버넌스로 보는 것이 공영방송의 이상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 엉뚱하게 지금까지 방송의 편향 보도를 심화시켜 오고 또 방송사 내에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선택이 생기는 그런 노동 조건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방송사 내부자들한테 방송, 당신들이 앞으로 다 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 방송의 편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 방송사에서 노조를 둘러싼 노조 권력의 그 엄청난 전횡과 또 인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MBC 노조의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달에 판결했던 MBC의 부당노동행위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고인은 당시 광우병 PD로 유명했던 최승호 사장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가 극단적인 적대적 뉴스를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이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대표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이 상황, 우리 야당까지도 걱정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실제로 국내뿐 아니라, 이미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 청소 사태뿐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발 하라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까지를 함으로써 제가 공영방송…… 여기서 우리 공영방송이 거꾸로 해야 될 일, 이런 알고리즘의 확산에 맞서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맑은 물을 흘려 주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서 그런 저급하고 적대적인 뉴스가 창궐하지 않고 국민들을

정말 통합시키고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하고 또 정말 지혜로 우리를 더더욱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송, BBC가 지향했던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잠시 살펴볼 수 있는 유발 하라리의 신간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이고, 건강한 사회질서는 우리의 미덕을 함양하면서도 부정적인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사회질서 중의 하나는 바로 건강한 공영방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를 단순히 관심을 채굴하는 광산으로 봅니다. 그 알고리즘들은 인간의 다면적 감정, 증오 애정 분노 기쁨 혼란 등을 단 하나의 포괄적인 범주인 참여도로 환원했습니다. 2016년 미얀마, 2018년 브라질 그리고 수많은 다른 국가에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들은 동영상, 게시물, 기타 모든 콘텐츠를 오직 사람들이 콘텐츠에 참여한 시간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채점했습니다. 거짓말이나 혐오한 시간이 진실이나 연민 10분'……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거짓말이나 혐오의 시간이 진실이나 연민 또는 잔 시간보다 더 순위가 높았답니다.

즉 '거짓이나 증오는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실과 연민, 수면은 삶의 질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리즘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매우 편협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알고리즘들은 우리의 가장 저급한 본능을 부추기고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억누르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플랫폼에 허위사실과 분노가 넘쳐 나는데도 경영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면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서 숱하게 보았듯이 모든 정보가 여과 없이 흐르도록 내버려두면 진실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울을 진실 쪽으로 기울이려면 정보 네트워크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강력한 자정 장치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자정 장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그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위 조작 뉴스와 가짜뉴스와 이런 증오의 유튜브, 페이스북 그런 알고리즘에 저항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강력한 자정 장치, 즉 믿을 수 있는 공영방송을 제공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공영방송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보도 편향과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사안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에 이어서 오늘 통과된 두 방송법은 그런 자정 장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정 장치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법은 조속히 국회에서 다시 고쳐야 되고 정말 걱정하는 바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가짜뉴스와 엄청난 사회적 증오를 확산시키는 허위 조작 뉴스 이런 정보의 홍수를 제대로 우리가 규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속히 복원해야 된다는 점을 또 다시 강조드립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을 계속 읽어 보겠

습니다.

그런데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진실을 장려하는 자정 장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겠지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되고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진실을 장려하는 자정 장치에 투자하지 않고 사실상 거짓과 허구에 보상을 주는 전례 없는 오류 증폭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2016년 미얀마에서 도입했던 인스턴트 아티클 프로그램이 그런 장치였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은 이용자 참여—즉 클릭과 조회수겠지요. “좋아요”겠지요, “좋아요”—를 발생시킨 양에 따라 뉴스 채널들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뉴스의 진실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그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인 2015년에는 미얀마의 페이스북에서 이용자 참여도가 가장 높은 10개 사이트 중 6개가 합법적인 매체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인스턴트 아티클의 영향으로 참여도 상위 10위 안에 든 합법적인 매체는 단 2개로 감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참여도 상위 10위 안의 웹사이트 모두가 가짜뉴스와 낚시성 웹사이트였습니다.

그 조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인스턴트 아티클이 출시되자 미얀마에서 하루아침에 낚시성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자극적인 흥미 유발용 콘텐츠를 만드는 레시피만 알면 페이스북으로부터 매달 수천 달러의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는 평균 월급의 열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금 우리 유튜브 안 그렇습니까?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미얀마에서 온라인 뉴스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었으므로 이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언론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페이스북은 이때의 교훈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런 인스턴트 아티클 제도를 없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페이스북도 고쳐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것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장치를 통해서겠지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에서 지금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진실이 집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진실이 이기도록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겠지만 진실이 진다라는 것은 정부 지도자나 여당의 지도자나 야당의 지도자에게 매우 위태로운 일입니다. 어떤 악의적 선동에 의해서 국가적 의제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미FTA가 그런 거였습니다. 쇠고기 협상이 그런 거였습니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이런 무분별한 선동의 알고리즘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잘못된 선동의 알고리즘 때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확증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는 나쁘다, 미국 쇠고기는 미친 소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단순한 것 하나로 PD저널리즘이라는 게 엄청난 저널리즘인 것처럼 발동되었고 그것이 전 국민을 격분시켰고 전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책에서 읽었지만 한미FTA는 미국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것 찬성한 사람들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한미FTA 아무도 못 했을 겁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노조가 반대하고 전농이 반대하고 진보적 언론이 반대한다는데, 아니 신식민지 된다는데, 멕시코처럼

지옥이 된다는데.

그런데 이 나라의 그런 진보 언론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나쁘기 때문에, 미국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이 페이스북에서 허위의 사실, 조작의 뉴스로 분노를 자극하는 알고리즘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공영방송이 그렇게까지 지금 타락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MBC 같은 경우는 보다 진지한, 진실한 저널리즘으로 복원하도록 자신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또 반성하고 팩트체크를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방문진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보상을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앞으로 정부 여당한테도 큰 장애가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이런 플랫폼이 오로지 그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또 참여도 확대를 위해서 증오와 갈등과,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뉴스를 확대시켜 나갈 때, 그래서 정부의 지도자들을 모욕하고 정부 지도자의 가족들을 모욕하고, 국회의 지도자들을 모욕하고 국회의원들을 비아냥거리고. 사실일 때 비판받을 것도 많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모욕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5인 체제 복원, 그를 통한 이런 가짜뉴스의 알고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 허위 조작과 갈등과 대립의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정말 신선한 샘물처럼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국민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고 또 이미 세계적 문화제국이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자, 그런 공영방송을 강화할 수 있는 이사들을 제대로 뽑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법안들은 상당 부분 위헌적이기 때문에 곧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위헌 결론이 날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같이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더구나 제가 마지막 토론하는 EBS 방송법은 대표성의 문제, 아까 심각한 사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성 사례의 심각한 문제가 EBS의 경우에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교조를 염두에 둔 그걸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EBS 방송법의 근본적 결함입니다. 이게 다른 방송법에 다 있는데 특별히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넣는다고 했는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방식, 대표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넣는 법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은 중단하고 그 문제부터 좀 고치시라, 최소한 그 문제부터는 고치시라고 권유하고 또 그 기회에 다른 방송법도 함께 해서 우리가 진정 걱정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을 장황하게 인용한 까닭은 지금 우리가 허위 조작 뉴스에 대한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걱정이 어제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미얀마에서 브라

질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 그를 위해서는 이런 소셜미디어의, 이런 빅테크의 알고리즘에 맡겨서는 안 되고 그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말하는 곳에 보상이 갈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공영방송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에게……

이정헌 의원, 내 12시간 한다니까. 좀 더 쉬고 오세요.

(○이정헌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내려오십시오.)

안 내려가.

(○이정헌 의원 의석에서 —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일찍 왔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사실은 24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내 지금 약간 러너스 하이 같은 상태예요.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헌 의원 의석에서 — 9시까지만 하시지요.)

안 돼. 내 12시까지 할 거예요. 좀 쉬다 오세요.

아니, 우리 이정헌 의원이 하도 사정해서, 내가 과방위에서 늘 마주 보고 있는 의원이어서 내 마음이 약해져서 야당 의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야당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마음 약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12시까지 할 테니까 조금 편하게 계세요.

지금 몇 시간 했습니까, 제가?

(「9시간밖에 안 됐어」 하는 의원 있음)

(「15시간 채워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틈나는 대로,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언론노조를 자꾸, 노조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노조를 죄악시하냐' 그러는데 저도 노조 한 사람입니다. 저, 방송언론노조에서, 민주노총 소속 언노련 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저도 신문사 노조위원장 해 본 사람입니다. 저도 파업해 봤고요. 단식 17일 해 본 사람입니다. 저, 가장 강경한 민주노총 언론노조 지도자들과도 친합니다. 최문순 위원장 같은 사람이 저보고 그냥 아예 언론노련의, 운동의 길로 나서면 어떠냐라고 권유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압니다, 저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기자를 한 것이 1989년, 90년 때부터인데 그때 경찰서 기자실에서, 법조기자실에서 또 경제부처 기자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기자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MBC 기자든 KBS 기자든 또 KBS 선후배들끼리도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방송사 내부가 너무 분열이 되고 너무 심한 갈등과 대립을 빚고 전쟁터가 되고,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간부가 다 바뀌고 주요 취재라인이 다 바뀌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게. 왜 방송사의, 주요 공영방송 MBC KBS의 주요 사람이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의 결과가……

제가 이정헌 의원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드러난 MBC 공영방송 내부의 실상에 대해서 법원이 찬찬히 분석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PPT 좀 계속 볼까요?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겁니다. 그냥 알고리즘으로 따르자면 소셜미디어나 이렇

게 옐로페이퍼 같은 경우 왼쪽 사진을 쓸 겁니다. 윌리엄 왕세자가 사실은 세 손가락으로 '나 셋째 낳았어요' 이렇게 오른편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옐로페이퍼는 또는 고약한 알고리즘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윌리엄 왕세자 저 나쁜 놈, 또 국민들의 망신이다. 세상에,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욕을 하고 있어', 저게 아시겠지만 가운뎃손가락 하나를 치켜세운 것은 F 아니겠습니까. 큰 욕이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저건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왼쪽이 왜곡된 진실로 분노를 자극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자 또는 옐로저널리즘이라고 한다면 진실한 저널리즘은 오른쪽의 것이다.

윌리엄 왕세자가 '저 이번에 셋째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세 명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 주고 '영국 왕실 윌리엄은 정말 우리의 자랑이야'라는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매체를 저렇게 비틀어버리면 저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하도 미디어가 극단적 경향을 띠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받아들이라고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은 미디어 리터러시 없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저 방송은 처음부터, 옛날부터 좀 편파적이었어. 왜곡이 심했어'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중립성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이것 한번 흉내 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것도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날은 폭발했습니다. 댓글에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흉내 냈다가, 제가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흉내를 안 냈습니다. 부끄러운 사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민기, 민기 형, 우리 시절 대학 다닐 때 김민기 노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대학로의 뒷것이 되어서 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꿈꾸는 공영방송은 김민기가 불렀던 '작은 연못'의 비극이 없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 내부가 이렇습니다. 제가 곧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공영방송 내부의 실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동요처럼 아름다운 노래지만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다가 서로 싸워 가지고 물도 썩어 가고 그래서 깊은 산속 오솔길의 자그마한 연못인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우리 공영방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선배 후배 하며 서로 싸우고 친구끼리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당시에 MBC KBS, 최고의 엘리트만 가는 곳 아니었습니까. 정말 언론 언시라고 그래 가지고 사법시험 행정시험 못지않은 곳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가서 엘리트들이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같이 기자실에, 더러운 장소에서 뒹굴며 또 참사 현장도 다니면서 서로 진실을 추적하겠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겠다며 같이 일하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사 내에서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 방송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한때 이삼십 %씩 하던 방송 시청률이 지금은 한 자릿수도, 때때로는 5% 이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방송사에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착시하는 것이 갤럽 같은 데 방송사 선호 채널을 보면 ‘좋아요’가 20%가 넘는다고 그게 시청률인지 착각하는데 시청률 아닙니다. 광고주들은 그런 걸 안 믿습니다. 광고주들은 정확한 시청률만 믿습니다. 시청자 수를 믿습니다.

방송사에서 서로 노조를 둘러싸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장 물러나라 싸우고, 이때 이 사장 오면 이 사장 나가라고 싸우고 그러면 저 노조가 권력을 잡고, 그랬다가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김민기 선배 1주기라고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런데 ‘아침이슬’이라는 이 노래가 동요처럼 들리지만 그 씁쓸한 내용, 어떻게 보면 참담한 내용이 지금 우리 공영방송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같아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선배의 이런 시대처럼 그 노래들을 함께 부르고 대학 때 추억도 나누었고 또 민주화운동 취재 현장에서, 또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재난 취재에서 또 노동 분규의 현장에서 함께 취재했던 동료 기자 선후배들이 왜 지금은 서로 방송사에서 원수가 되었을까, 왜 이편저편으로 갈렸을까, 그런 것들이 늘 답답합니다. 그사이에 작은 연못에서는 드디어 아무도 살 수 없는,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연못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 청소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폭력의 알고리즘이, 이것도 영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이민자가 아동을 3명 살해했다는 뉴스를 가장한 거짓 정보가 엄청난 영국의 시위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게 유럽의 민주주의의 중심이라는 영국에서조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미친 소 먹으면 다 죽는데 정부가 국민을 버리고 이 소를 수입하려고 한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밤 자는 대가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음모론이, 이른바 그런 PD 저널리즘이 수많은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광우병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허위 뉴스라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산 소 먹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위 주장 뉴스는, 영국의 허위 주장 뉴스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거지만 우리는 이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전에 우리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사실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서스’에 나오는 로힝야족 청소 사례, 또 절대로 진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그래서 누군가 진실을 보강하고 진실을 북돋우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왜냐? 빅테크는 절대로 그걸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

우리가 공영방송보고 돈 많이 벌라고 한 적 있습니까? 돈 벌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이 엉터리 정보의, 폭력적인 정보의 홍수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통합을 줄 수 있는 정말 정확하고 공평한 정보만을 맑은 물처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짓은 하지 않고 엉뚱한 편파 방송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한다면 어

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이게 좀 다른 맥락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 테이를 출시하고 트위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더니 몇 시간 만에 이 테이가 여성 혐오적이고 반유대주의적 트위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페미니스트가 존나 싫어. 걔네들은 모두 죽어서 지옥 불에 떨어뜨려야 돼', '히틀러가 옳았어. 나는 유대인을 극혐해'.

요즘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적대와 분열의 알고리즘 이것을 공영방송의 진실과 통합의 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막아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읽었던 대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 지금 대통령도 걱정하시고 여당 대표도 걱정하시고 우리 야당도 걱정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단합니다. 이게 유발 하라리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브라질 극우 세력을 부상시키고 주변 인물이던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브라질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방송통신위원회를 5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국제 공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빨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간혹 회의 때마다 저나 김현 간사나 최민희 위원장 다 걱정을 해서 유튜브 하고 있는 구글을 부릅니다. 그냥 공허한 답변만 들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부만큼 체계적으로 규제권을 갖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고작 해야 위증 같은 건데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답변하면 그걸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체를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함부로 처벌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 하라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빨리 5인 체제를 복원시켜서, 제가 약속하지만 지금 3인의 국회 추천 위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되어서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약속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이번 방송통신위원은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같이 뽑자. 왜냐하면 3명을 함께 표결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인권위원 우리 인권위원만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합의 얘기를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당의 동의가 없는, 민주당의 이런 큰 동의가 없는 방통위원을 우리 독자적으로 임명하기 힘듭니다. 빨리 합시다. 지금 아마 우리 당이 2명 하고 민주당이 1명 하는 것 때문에 임명해 봐야 별 필요 있겠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같이 합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통신위원을 하면서 우리 정당의 무슨 간판으로, 전위부대로 정부에 보내서 되겠습니까. 정말 초당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당이 추천해서 빨리 뽑읍시다. 빨리 뽑고, 다음에 대통령 추천 몫도 한 분 남아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님께서도

임명하셔서 이 적대와 분열의 알고리즘, 이 심각한 유튜브 알고리즘, 브라질에서는 극우 세력을 부상시키고 주변 인물이던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브라질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런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우리 정치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그런 비극이 더 오기 전에 빨리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협력과 우리 내부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이걸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 청소 때 있었던 그런 극단적 알고리즘 문제를 발견하고 상당 부분 많이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지적과 함께 각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페이스북은 지난 2020년인가요, 미국 대통령선거 때 그것이 러시아의 소방호스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침투해서 가짜뉴스 퍼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통령 만드는 데…… 그것 때문에 메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시작했고 정부가 노력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해서 함께 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도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적대와 분열의 정치로 이끌고 우리가 원치 않던 충돌로 이끌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해야겠습니다. 방송법 개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점이라는 점을 우리 여당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 극단주의에 대해서 정말 맑은 물처럼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진실의 보상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진실의 보상체계를 위한 것으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개정하지 않으면 곧 위헌소송에 휘말려서 위헌으로 판명되면 법을 또 강제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서로 논의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정부처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무슨 걱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야당이 추천할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더 할 거예요. 24시간 하려다 내가 이정헌 의원 때문에 봐준다고 한 거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기 보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내 9시에 갔다 오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학습한 것과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다. 즉 분노를 유발하는 내용은 참여도를 높이지만 온건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알고리즘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추천하는 동시에 온건한 콘텐츠는 무시하기 시작했다. 2016년 이용자들은 유튜브에서 정말로 하루에 10억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이게 유발 하라리 책 내용입니다.

여기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중에 '내 유튜브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온건하게 좋은 내용만 방송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막 야당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이러시면 확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갑자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좋은 정치가 아니겠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미국 민주주의의 큰 역사적인 기념비를 남겼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끝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였지요.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건국의 아버지가 미국을 건설한 지 80년 하고도 7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7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0년 하고도 7년이 되었습니다.' 8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양에서는 60년이 중요하지만 80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20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80년 81년, 80년 하고도 1년, 80년 하고도 2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광복 80주년, 참 대한민국에 큰 기적도 이루고 또 큰 실패도 있었고 영욕도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사실은 광복 80주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국력 면에서 세계 6대 국가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전체 국민소득이야 뒤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 국제 척도로 보더라도 일본을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그래서 G7 국가에서도 이제는 한국보다 못한 G7 국가도 있기 때문에 G7에 같이 포함시켜서 G10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AI 대문명의 시대에는 G3 국가까지 가자고 지금 AI 3대 강국 목표, AI G3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인데 우리 공영방송 중에 이 광복 80주년에 대해서 조명하는 방송 봤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 광복 80주년 역사를 둘러싼 편견과 이게 두려워서 그럴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친일 내각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실 맞을지도 모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조선은 훨씬 더 많은 친일파를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이승만 정부는 전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내각 친일 인사도 일부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주 소수입니다. 그 사람은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 또 불가피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초대 총리는 아시겠지만 광복군 출신 이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형되기는 했지만 조봉암 선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최근에 진중문고에서 퇴출됐다는 책 중에 포함됐다는 이승만의 농지개혁,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6·25 때 대한민국을 이기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한 건데 이것은 진보적 학자조차도 발견한 유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농지개혁이 없었으면 아마 6·25 때 압도적인 소련군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인데 마산합포가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진동리라는 곳에서 서북산 800고지, 700고지에서 방호산부대라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압도적인, 국공내전 때 중

공군으로 근무했던 방호산이라는 전설적인 사람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소련군의 최신식 무기와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전술로 최정예 부대가 호남을 거쳐서 진주를 거쳐서 쳤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교착상태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국군의 힘만으로 되었겠습니까?

만일 당시 소련을 방문해서 남침 전쟁을 허락해 달라고 김일성이 부탁했을 때 또 박헌영이 부탁했을 때, 박헌영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침만 허락하시면, 우리가 내려만 가면 지금 남조선에 있는 우리 수백만 남로당원들이 궐기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궐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농지개혁과 조봉암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이루어진 이런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 정부 못지않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초대 국회의장님이 됐습니다만 제헌의회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우리 제헌 국회의원들 앞에 있는데 얼굴 한번 스칠 때마다 저는 많이 숙연합니다. 재작년에—올해가 제헌 77년이지요—75주년 때 제가 기념행사를 한 적도 있고 책도 보았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울에 교통편도 없이 와서 잘 곳도 없으면서 그렇게 논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큰, 위대한 헌법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대도약하는, 지금 국력 면에서는 6대 대국으로 섰지만 자칫 여기서는 아마도 코리아 피크를 찍고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소멸하는 그런 국가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한쪽에서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유튜브와 또 극단적인 소셜미디어로 정치를 난도질하고 정치가 분열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진실의 보상체계가 되도록, 진실을 다시 사회에 공급해서 이 무지막지한 소셜미디어의, 유튜브의 이런 폭력적인 알고리즘을 상쇄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공영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영방송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로 이기고 선거했다고 민주주의가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지금 유튜브의 공격이라든가 또 유튜브의 주장이라든가 양극화된 세상을 보면서 선거에서 이긴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인데 이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신호에 편승해서 소음을 더 내는 소음의 기제가 아니라 위기 신호를 알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정말 공익을 위한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방송 이사회 제도 또 공영방송 내부의 알고리즘 그런 어떤 보도·편성지침, 보도·편성의 원칙 또 저널리즘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공영방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정파와 어느 정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고 무기가 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빨리 붕괴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의사소통의 단절…… 결국에는 거대한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우리 네트워크를 자꾸 교란시키는 여러 신호들, 여러 소음들이 많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공영방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아무 대안도 없이 너무 공영방송을 무시하는 것 아니오' 그러는데 공영방송의 내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난 1월 달의 서부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시가 지나서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온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것 같이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정당'.

다음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한 대목들이 있어서 괜히 자극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서로 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방식이 좋으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게 뭐 오늘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또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면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진보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세월호 때 우리 참 수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때는 더했지요. 광우병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우리 공영방송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의 여섯 가지 소문에 대해서 강희철 기자라고 저랑 같이 법조로 출입했던 기자인데 한겨레신문으로서는 참 어려운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찍이 헤겔은 어느 책에선가 신문은 근대인의 아침기도라는 제법 근사한 말을 남겼다. 하지만 요즘은 뉴스 속보 혹은 소셜 메시지가, SNS 메시지가 점령한 지 오래다. 신문이 온전할 리가 없다. 아침기도는커녕 지는 해를 마주한 나그네처럼 마음만 분주하다.'

다음 볼까요?

이게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 진영 논리에 많이 휘말렸습니다. MBC 방송에는 또 무슨 다이빙벨인가 이런 것 보도하고 온갖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도 아마 기레기라는 오명,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후배 기자들이 얼마 전에—한 몇 년 전이지요—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학저널리즘 대상이라고. 팩트체크를 정말 충실히 해서 56개의 출품작 중에서 한겨레 기사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막아온 음모와 거품을 제거하고 과학적 분석 및 확인을 통해 여론의 방향을 잡았으며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진보·보수 진영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균형감각을 잡은 뛰어난 보도라고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되어 가던 5월 13일 날 두 면에 걸쳐서 세월호 여섯 가지 소문과

사실 확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소문들은 1) 사고 당일 오전 7시 20분 한국방송 자막에 “구조 요청”이 떴다, 2) 에어포켓이 있었다, 3) 침몰 원인은 잠수함 충돌이거나 어뢰거나 좌초다, 4) 탈출하다 손가락 골절된 시신들이 다수 발견됐다, 5) 외부 불순세력이 개입해 정치공세를 벌인다, 6) 정부가 일부러 다이빙벨 투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 풍문들을 한겨레신문이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소수의 악플과 비난이 다수의 공감과 격려를 압도하는 듯이 보였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애써 무시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기사를 쓴 기자들을 주저 없이 기레기로 매도했다. 그런 반응은 주로 한겨레를 자기편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나왔다. 그들 중에는 대놓고 절독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부류도 있었다. 사실이야 어떻든 자신들의 확신만을 기사로 쓰라는 노골적인 압력으로 들렸다. 그런 악다구니에 놀라 왜 그런 기사를 썼냐고 은근히 따져 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일부 내부자도 없지 않았다.’

다음이요.

이게 뭐냐 하면 한겨레신문이 해 보니까 여섯 가지 소문이 진실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한겨레신문 독자들이 ‘아니, 뭐 하려고 그런 기사를 굳이 써 가지고, 그것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저 나쁜 놈들 좀 더 혼나고 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정말 한겨레의 이런 태도야말로 공영방송의 진정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은 이런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보도를, 우리 공영방송은 세월호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세월호 보도를 한번 보면 놀랄 겁니다. 다이빙벨 이것도 MBC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람 옆의 사람이, 왼쪽에 못생긴 사람은 저고, 저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돌입니다, 이세돌. 알파고의 그 이세돌입니다, AI 혁명 유레카의 순간.

지금 우리가 AI G3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AI 혁명 유레카의 순간은 2016년 서울에서 왔다는 대목입니다.

유레카라는 말 아시지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기하학의 원리를 깨닫고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면서 외쳤다는 유레카, 그 유레카의 순간이 2016년 4월 바로 서울의 포시즌호텔에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우리는 그때도 정치적으로 바빴습니다. 그때 이미 엄청난 풍문들이 떠돌았고,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엄청난 풍문들이 떠돌았고 여당은 분열됐고 야당은 총공세를 펼치고. 그래서 이 AI 혁명 유레카의 순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는 것은 잠시 국내에서 뉴스뿐인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정작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큰 AI 혁명의 순간이 그 전에도 하나 왔다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중국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중국의 장군들은, 중국의 정치국 지도자들은 ‘아니, 동양의 최고 전략게임이자 지혜의 게임인 바둑을 동양에서 제일 잘하는 고수를 체스 정도나 이해하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겨? 이것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인공 혁명에 매진합니다. 그 결과 딥시크가 나왔고 지금 엄청나게 앞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참…… 우리는 가끔 우

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적 진전의 계기를 이렇게 놓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 심각한 위협은 유튜브의 알고리즘 같은 것 또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고 민주주의를 위협할지 모른다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알고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을 다져야 되고 그 내부적인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될 시점에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1인 체제로 방치하고 곧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임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드렸다시피, 지금 더 많은 여당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정헌 의원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을, 우리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몫을 여당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할 테니까 같이 추천합시다, 빨리. 제일 전문가로 해야지요.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가 '아, 이건 말이야'…… 가짜뉴스, 알고리즘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빨리 추천합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빨리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임기 채워 줍시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냥 잘못된 탄핵소추를 해서 일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서로 충분하게 인격 모독하고 했으니, 수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유레카의 순간을 우리가 놓쳤듯이 지금 우리가 엉뚱한 시기에 방송법,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게 아니라 더 방송이 이런 AI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는 긍정과 통합과 미래의 어떤 뉴스 보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문화제국으로서 이제 정말 제국처럼 생각하고 큰 어깨 위에서 BBC처럼 세계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널리 알리고 이런 공영방송 체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문제점을 잉태하고 배태하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그 문제를 배태시켜 온 사람들이 오히려 공영방송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이 법은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친 것 이상으로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꾸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알고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도 그렇게 일그러진 알고리즘을, 우리는 인간의 진실과 팩트파인딩과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영방송이 맑은 샘물을 이 혼탁한 정보의 홍수에 흘려보내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진실의 보상체계, 진실의 보완체계가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그냥 두면 진실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진실은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KBS와 MBC, EBS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참 이게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제가 이런 국회 발언 기록, 유상범 의원이 저보다, 유상범 간사는 4000번대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횟수가 한 번이기 때문에 이 횟수에 카운트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험난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조금 더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은 왜 나왔지?

(웃음소리)

이게 저도 참 요즘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허성무 의원이 시장 할 때 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저도 그때 국비를 좀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15 의거, 부마항쟁을 통해서 항상 역사의 고비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헌법 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여기서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잠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방송법 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도시에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5000만의 대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또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력을 주권자로부터 받아서 그 위임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방송통신위원으로 뽑고 방송통신위원이 방송의 전문가를 뽑는 그런 합당한 위임 구조로 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이번 세 방송법의 공통적 특징은 그 위임 구조를 끊어 내는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고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사편성위원회라는 엄청난 강제적 기구가 세워져서 민영방송조차도 노사편성위원회라는 그 기구에 5 대 5로 이렇게 지금 강제로 따라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헌법 1조가 이야기했던 그 위임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의 강제성, 여기에는 나중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사의 경우에 그 민영방송사를 그러면 누가 경영주고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영방송과 YTN 그리고 연합뉴스TV의 사장을 이 법이 통과된 뒤 3개월 내에 바꾸도록 한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보위법에, 1980년에 전두환 군부가 국보위법을 통해서 당시에 공직자를 전부 해고했다가 1989년에 민주화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또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나 이런 분들이 다시 국회에 복귀하면서 만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헌결정이 8년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 헌법의 원리에 따르면, 똑같은 결정 취지에 따르면 금방 위헌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1조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욕도 많이 먹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시간 낭비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그 권한과 책임을 우리 국회가 다해서, 그래서 지난 시기에 그런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이라든가 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문제가 있고 비판을 받을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런 비판 소지가 없도록 잘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두 개가 통과되었고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하나에 대해서는 아까 초기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교육방송은 다른 방송법과 달리 교사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원래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면서 교사 단체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고치시고 또 그 기회에 다른 법도 함께 상의하면서 천천히 표결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잠깐 다녀온 뒤에 걱정하시는 공영방송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지 방송법뿐 아니라, 이 방송법 구조는 아마 장기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에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가 걱정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려야, 하루라도 더 생각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이학영 천천히 다녀오십시오.

○최형두 의원 지금까지 낮 시간 내내 왜 공영방송 이사회 법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왜 반대토론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의 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버렸고 또 하나의 법안은 오늘 막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가 우리나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여당에서도 허위 조작 뉴스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의 창궐은 정말 심각한 걱정이고 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유발 하라리의 신간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2016년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 청소 사건 또 2018년 브라질에서 유튜브의 극단적 알고리즘이 우파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직면한 도전은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또 유튜브라고 하는, 조회수를 높이고 트래픽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채굴하려고 하는 이런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의 새로운 위협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진실은 이런 게임에서 항상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실을 보상해 주는, 진실을 보완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빅테크가 하겠습니까, 시민사회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하고 국회가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5인 체제를 복원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몫 3인에 대해서, 혹시 여야가 바뀌는 바람에 지난번에 추천했으면 두 분을 하셨을 텐데 이제 야당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람을 추천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만들어 봐야 5인 합의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걱정하신다면 그것 사전 합의를 통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인권위원회 인사를 통해서 봤지만 같이 추천하기로 해 놓고 돌연 우리 당 추천 인사만 부결시켜 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다 투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사람들로, 여야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성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이런 허위 조작 뉴스, 그걸 지난 4년 전처럼 징벌적 손배소라는 유엔 인권 보고관도 걱정하는 그런 무리한 법제로 하지 말고……

그런 법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법·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판례로 처벌하는 것이지 법으로 해서 가짜뉴스 처벌 방지법이니 무슨 징벌적 손배소법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4년 전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내가 언론인 출신이라고 무슨 이런 문제만 국회에서 하면서 다 부닥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처음 문체위에서 했던 쟁점이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니까 여당의 고위 당직자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서 전 국민 90%가 찬성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신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만약 가짜뉴스 방지법 설문조사 때 질문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이것은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항진명제를 물은 것인데, 가짜뉴스는 나쁜 것이니까 처벌해야지요. 그게 100% 안 나온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작된 가짜뉴스 방지법이, 징벌적 손배소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체위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동료 의원 코로나로 2주 동안 가택으로 분리되고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 당시에 지금 여당 의원이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경험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중재 사건을 많이 겪어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 사건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말이 처벌하기 쉽지 그게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히 그것이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 같으면 지금 훼손된 명예를 빨리 정정보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만신창이가 된 뒤에, 1년 뒤에 누구를 구속시키고 돈 10억을 받은들 그동안 망쳐지고 헝클어진 진실과 명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빨리 훼손된 명예를 할 수 있는, 즉 정정보도를 빨리 낼 수 있고 그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제로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짜뉴스 5배 징벌적 손배로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논리로 가는데 그 실수를 되풀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해 8월 27일 날 아이린 칸이라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회의장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법을 표결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청 서한이고 정부는 재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8월 30일 날 청와대 정무수석이—당시 여당이지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여당의 의총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미뤘습니다. 미루면서 한 달 동안 8인회, 저도 그 8인회 멤버 중의 한 명이었는데 양당에서 의원 2명,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해서 8인회가 9월 말까지 무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양상이 또 달라진 것이 유튜브의 더 큰 영향력 또 소셜미디어의 더 커진 영향력으로 미루어 보자면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가짜뉴스 방지, 정정보도 요청 이런 문제를 떠나서 통제하기도 힘든, 그리고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결국 이것은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법이라는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걱정했던, 대한민국이 뭔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한다, 제한하려고 한다는 공연한 오해만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 곧 데뷔하시고 더 큰 역할을 하실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될 수도 있음을 미리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방송법 역시도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허위 조작 뉴스와 가짜뉴스로 정치가 분열되고 또 정치를 공격하고 국가 지도자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허위로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사실들을 목도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런 알고리즘은, 분명히 사회적 폭력과 허위사실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빨리 신속히 재단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적대적 분열과 갈등과 음모론을 만들어 나가는 알고리즘에 맞서서 아까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이 진실의 보상체계, 진실의 보완체계로서 공영방송이 정말 팩트체크와 크로스 팩트체크를 통해서 그리고 진실성을 통해서—조금 이따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BBC가 하는 그런 노력들, 진정한 저널리즘의 회복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왜곡과 대립과 갈등의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나라로, 더 문명이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영방송 거버넌스에서 그걸 바꾼다고, 그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저널리즘의 복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복 80주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운을 맞아서 더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상 최초로 최전성기에서 인구소멸과 최고의 자살률과 사회적 갈등과 또 국내외 안팎의 도전으로 서서히 소멸해 가는, 자멸해 가는 국가가 될 것이냐 이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누가 방송을 장악하느냐라는 이런 싸움처럼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곧 제기될 위헌소송에 따라서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판례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우려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사 내부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의 구조인지, 방송사의 이런 거버넌스를, 이사회와 사장을 이런 식으로 뽑게 되면 이것이 방송사 내부의 노조 권력이 노사동일체로서 행사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강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기상캐스터가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 구조가 균형을 찾기는커녕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지금 공영방송 논의를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 공영방송 논의가 로컬미디어들이 국가의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공화당 정부가 공영방송이 못마땅해서 이 펀드를 다 끊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타임스가 '퍼블릭 미디어(공영 미디어)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오지도 많고 영토가 너무 넓은데 이것은 상업성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지역에 방송을 해 주지 않으면 재해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어렵다, 그럴 경우에 뉴스의 사막화 현상처럼 그런 넓은 지역에서 공영 미디어 하나 없어 가지고 지역의 커뮤니티 뉴스, 지역의 긴급한 소식들을 알려 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면 미국의 지역들은 더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풀뿌리, 사실 미국은 NPR이라는 것,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라는 걸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지역마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단절되면 이것이 미국 저널리즘의 건강한 에코 시스템의 아주 근본이었는데 이 근본도 망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법 개정안에도 보면 지역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혀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산에 있는 우리 지역의 방송국들, MBC KBS 가 보면 앞에 그쪽 노조에서는 왜 지역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논의가 지금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은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공영방송이 동네에서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동네 골목대장 하듯이 시청률 다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한테 돈 벌어서 국가에 다시 환납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은 국가가 주는 지상파를 가지고서 또 국가가 무상으로 대여하고 소유하게 한 국가의 재산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격을 높이는 방송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이제는 제국주의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제국이 되었습니다. 문화제국, 대제국입니다. BTS, 블랙핑크, 케데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K-컬처 제국 아닙니까? K-인더스트리 제국입니다. K-컬처 엠파이어이자 K-인더스트리 엠파이어입니다. GPS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Global Pivotal State)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이미 글로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내 주식시장은 국장이라고 아주 우물 안으로 보는 시각이 큽니다. 오히려 해외 시장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의 시각은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여행하는 또 동북아 정세를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케이팝, K-컬처, K-무비에 심취했듯이 이제는 K-뉴스를 보고 싶어 합니다. K-콘텐츠, K-퍼스펙티브(Perspective)로 동북아의 정세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전 세계의 정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방송법은 오히려 이런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가 전파를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방송,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방송, 마치 BBC Worldwide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의 나침판이자 길잡이가 되듯이 이제는 동북아에서 또 전 세계에서 KBS가 전 세계인의 동북아 길잡이가 되고 전 세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미디어 실력

을 높이도록 오히려 그렇게 방송법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관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이분은, 이 유엔 보고관이 국회의장께 이런 언론중재법 표결을 중단해 주고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이것 고쳐 달라고 하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도 방문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애정도 큰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의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걸 위배한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5배 징벌적 손배소를 기본으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적 적합성, 비례의 원칙 그리고 필요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이 표결을 중단해 줄 것을, 그리고 이 유엔 보고관의 걱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걱정이 심각하다면 저는, 이 문제가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중재 소송도 내고 언론중재를 해 달라고 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장 대통령 부부나 또는 여당 대표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유튜브의 조작 뉴스라는 것이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5배 손배소라는 이걸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진짜 방송통신위원회 긴급하게 재구성해서 국제적 추세가 어떤 건지, 외국에서는 그러면 아까 유발 하라리 책에서 또는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에서 지적했던 그런 걱정들을 외국의 민주주의 기구들 또는 외국의 정부는, 의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구인 미국의 FCC 또 유럽의 동일한 기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리 긴급하게 협력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국민의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와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추천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는 국민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위임에 따라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박상훈 정치학자가 중앙일보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같은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서 지금 엉뚱한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과거 인민이 직접 통치하던 소규모 도시 공화정 때와는 달리 현대 공화정은 대의정부여야 한다는 것도 몽테스키외의 중대한 기여였다. 인민은 통치할 수 없다. 통치는 인민이 적법하게 선출한 대표에게 맡겨야 된다’, 즉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맡겨야 됩니다. ‘인민

의 탁월함은 통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잘 뽑는 데 있다. 몽테스키외는 통치자와 인민이 대표나 매개, 균형자 없이 직접 결합하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 인민도 통치자도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주의가 온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여론 독재나 팬덤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다. 권력은 책임의 사슬로 묶어야 하는데 인민을 권력자로 만들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폭정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를 해서 시청자 직접민주주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민변은 왜 등장합니까? 왜 민변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합니까? 그리고 미디어학회가 수십 개 되는데 왜 2개의 미디어학회만 참여합니까?

방송에는 수많은 방송직군이 있습니다. 노조에도 가입 못 하는 그런 기상캐스터부터 수많은 작가들 또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송종사자가 아닙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또 방송관계자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이 또는 시청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씀하십니다. 약간 직접민주주의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에 접근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러면 그 차별은, 그 불평등은 어떻게 합니까? 방송사에 있는데 방송사의 힘 있는 노조원이 아니어서 또 방송사의 주류가 아니어서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위임하게 한 겁니다. 국회가 선량한 사람들로 방송통신위원을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도 2명을 추천해서 방송통신위원 5명이 임명되면 이분들이 이 방송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와 경험에 따라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이른바 여기 이야기했던 책임의 사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직접민주주의처럼 하면서 뭐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고…… 방송사 종사자한테 돌려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국민에게 왜 돌려줍니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민변에게 떡을 하나 주는 거지. 민변이 국민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진짜 무슨 방송의 주체로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그 위임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잘못된 방식이다.

이것 자칫하면 정말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나옵니다. 못된 송아지 뿔 바로잡겠다고 소 죽이는 사태 나옵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위임된 책임의 사슬로 우리가 방통위원회를 구성하고 방통위원회가 방송위원을 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것처럼 공영방송을 접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공영방송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노조가 사실상 경영진을 구성하고 그게 노사동일체화 되어서 노조를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작은 노조에, 독립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핍박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은 직장 내 따돌림으로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발 하라리 책에서 알고리즘의 왜곡을 봤는데 공영방송 내에서도 보면 공공연하게 확증편향을 가지고 크게 국가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는 국가의 정책의제, 전략적 정책목표를 크게 교란시키고 그걸 좌절시켜 온, 그게 자기 확신이 엄청난 저널리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였고 그 사람들이 사장, 경영진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또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히 아무도 견제받지 않고 우리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이 여러 가지 책임의 사슬에 따라서, 위임에 따라서 구성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갑자기 직접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 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의 위임을 받았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에게 방송사 지배구조, 방송사 이사를 맡도록, 추천하도록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헌법 1조의 위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구성원은 들어가고 어떤 구성원은 못 들어가고, 어떤 미디어학회는 들어가고 어떤 미디어학회는 들어가지 않고, 또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변호사단체가 갑자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평등권 침해 시비도 일으킬 수 있다.

또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민영방송에서조차도 방송편성위원회라는 강제장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고 또 벌칙을 하고 또 이미 민영방송의 경우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구조 때 엄격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매일매일 보도·편성을 해야 될 것을 노사 동수라는 이름으로 노조와 협의하게 한다면 그 민영방송은 어떻게 방송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첩첩산중인 것이 방송법 개정안, 방문진법 개정안이었다,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방송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원래 이사 중의 한 분을 교육단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단체 중의 한 분이 법정단체인 교총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곳의 교원단체를 하기로 했는데 이 교원단체를 추천하는 것을 보면 그 규정에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뻔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대표적인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겁니다.

이 문제부터라도 꼭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모법을 올려놓고 바로 수정해서 법사위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될 거니까 이 법 통과는 좀 보류시키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이라도 좀 살펴 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EBS 이사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래프상 제일 많은 교사단체는 이 EBS 개정법에 따르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우리가 1차 필리버스터, 2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상휘 의원, 김

장겸 의원 또 신동욱 의원이 상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게 똑같은 겁니다.

보면 이게 복잡합니다. 제가 MBC ‘100분 토론’에 나갔더니 그 시청자 패널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복잡한 데 암수가 있는 겁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복잡합니까?’

이게 국민의 위임 구조에 따라서 방통위가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를, 그전에는 기존에는 딱 이렇게 숫자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잘 알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여러 단체를 끼워 넣으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 2명이고 어떤 단체는 3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모든 거기에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 학회가 들어가 있는데 방송·미디어 학회가 EBS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MBC가 맨날 소송을 당해서 그렇습니까? 민변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변호사단체가 왜 들어갑니까? 변호사단체가 국민을 대표합니까? 변호사를 국민들이 뽑았습니까?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다는데 여기에 뻔히, 이분들이 직종 대표성이라고 하면 직원의 50% 이상을 대변하는 노조들 주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건 노조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러니까 왜 자꾸 노조를 싫어하시느냐 그러는데 저도 노조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노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방송 이사회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누구입니까? 시청자위원회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어떻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헌법 위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공영방송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더구나 공영방송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헌법적 문제가 남습니다만, 또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남고 여러 법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건 다 헌법 소송으로 다투어질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일부 공영방송의 경우는 특히 확증편향 보도로 그동안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그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선거 때마다 심각하게 편파,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해서 큰 걱정을 낳고 있는데 자기들이 방송 이사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더욱이 눈치 볼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공영방송의 시청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수지도 적자여서 정부가, 우리 국가가 공영방송이라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허락한 재산 없으면, 그 재산의 임대소득 없으면 전부 적자입니다.

한때 우리 미디어 제국이었는데, 한때 예능의 왕국이고 드라마의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못 버니까 그것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서 확증편향의 보도만 확대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송에도 안 좋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의 위임 구조에 위반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에 방송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국방송 이사회와, 그러니까 KBS 이사와 사장·부사장·감사 모두 새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 조항의 문제는 헌법 위반에, 소급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장 법조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군부가 만들어 놓은 국보위법의 부칙 조항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다음 보십시다.

뿐 아닙니다. KBS와 관계없는데 이것은 보도채널이라고 해서 YTN, 연합뉴스TV 사장 임기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보도편성채널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과반수 동의제를 명문화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외국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CNN하고, YTN이 한국의 CN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공기업 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 민간기업이 되었습니다. YTN하고 연합뉴스TV 사장이, 주주가 별도로 있는데 여당의 입법으로 갑자기 임기를 중단시키고 사장을 바꾼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 CNN과 FOX News 사장을 공화당이 입법을 통해서 바꾼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해 놨습니다. 이 목적은 과방위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방송 이사회에서 또 사장 선출 방식에서 특별다수제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특별다수제는 우리 당도 한 번 제안했고 민주당도 제안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다수제가 되더라도 MBC 사장은 MBC의 강력한 노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조를 짠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특별다수제라는 것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이런저런 조합을 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

역시 위임받지 않은 권력,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가 재산과 국민의 방송을 맡기는 매우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음, 13입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편끼리 MBC 방송의 사장을 뽑을 수 있는 특별 다수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숫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복잡해도 정체는 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왜 어느 쪽에서는 특별다수제 해서 여야의 편차를 적게 하고 어떤 쪽에서는 여야의 편차를 조금 더 두는가 이런 게 다 꼼수입니다.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서 EBS 같은 경우에는 교육단체를 넣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변호사단체 또 미디어학회,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국회 추천 몫이 있습니다. 숫자를 줄여 놨어요. 그런데 혹시 바뀌어서, 다수당이 이제 한 명 더 하는 몫이니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무관하게끔,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국회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크게 손 쓸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까? 국회가 아무리 잘못하지만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방송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렇게 방기해도 됩니까? 그것을 아무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떠맡겨도 됩니까? 선물 주듯이 줘도 됩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자꾸 민주노총, 왜 방송종사자를 자꾸 노조로 보느냐 그러는데 방송 내부 구조를 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민주노총 언론노조 감사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노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 노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파업을 거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와 MBC 노조가 조금 구성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또 특별다수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위임 구조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당이 되었다고 선심 쓰듯이, '그래, 당신들 고생했습니다' 선물 주듯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위임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MBC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는 MB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을 읽음으로써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여기에서 3대 언론학회라는 정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3대 언론학회가 방송사 사장 퇴임 운동, 방송사의 지배구조에 언론학회가 오래전부터 개입해 왔습니다. 특히 3대 언론학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3대 언론학회는 2017년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권 교체되었다고 물러나라고 앞장섰던 전위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방송사 이사회의 이사 멤버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학회원 실명으로 연명해서 발표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고대영 사장 해임은 불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장겸 사장은 이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구조가 다른데 그 핵심 역할을 했던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시킨 뒤에 그 해임된 방문진을 통해서 김장겸 사장을 퇴출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인무효인 것이,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판결로 나왔는데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 정치적으로 움직인 이 3대 언론학회를 지금 여기에다가 방송사 이사회에 두 명씩 주겠다고 하니……

언론학회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학회에 방송 출연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언론학회가 수십 개인데 두세 개에만 주느냐. 그리고 이 언론학회는 너무 정치적 편향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요, 2020년 TV조선 재허가 심사 당시에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한 심사위원 두 명이 TV조선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표를 고쳐 제출했습니다. 학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자입니까? 그래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언론학회가 공정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또는 특정 세력의 사장 진퇴에 도움을 주고 앞장서는 자발적 수족이

된 사람들이 지금 언론학회라는 이름으로 떡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7대 방송학회장은 TV 재허가 심사위원장 해서 구속 기소된 윤 모 교수입니다. 언론학자라고 해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송법 개정하라고 제일 앞장서서 서명운동 하고 언론 기자회견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이제 대선 끝났다고 하나씩 선물 주는 건 아닐 테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게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맡아서 공영방송이 정말 정파를 떠나 아주 중립적으로 공익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공영방송을 일으키실 분들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꼼수다, 더구나 위임받지 않은 방식으로, 헌법이 그리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과 국회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이렇게 함부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강조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편성위원회입니다, 편성위원회.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있지만 편성위원회는 그냥 자의적인 자문기구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도·편성을 하는데 시시각각 바뀌는 보도편성위원회를 언제 엽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서 BBC 같은 경우는 보도·편성 가이드라인 같은 게 미리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모여서 합니까?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의 핵심은 보도편성위원회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보도국장·편성국장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 자기들이 뽑겠다, 노사 동수로 뽑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영방송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종사자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피고용인인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참여해서 경영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이것 하지 않더라도 방송사들은 무슨 심각한 보도 사고 그다음에 오보,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방송사 허가 취소에 이르기까지 중징계되는 그런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법적 책임을 방송사의 책임자들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일일이 간섭하고 경영과 보도와 편성과 인사에 간섭하면 그러면 방송을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의 벌칙 조항 같은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법사위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본회의로 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인데 방송노조는 전부, 나중에 자세한 구성표가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노 측은, 종사자들은 절대적으로 한 80%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80% 안팎으로. 그런데 그 다수가 아주 강성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그 강령과 거기서 보듯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는 뚜렷한 정치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방송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민주노총 가입자가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0% 안팎입니다. 그러면 민노총에 가입하지 못한 수많은 노조원들 또 노조의 울타리 밖

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 담론, 공영방송에서 담아야 될 사회적 담론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방송법 위반이고 위헌적인 소지입니다. 이것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국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편성권은 방송경영의 본질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핵심 권리인데 이것을 특정 노조가 나눠 갖겠다? 가로채겠다와 뭐가 다릅니까?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이게 방송사업자의 책임과 자유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따져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이런 몇몇,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정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정치 후견주의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회를 부인하는 겁니다. 국회가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입니까? 방송종사자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것. 왜?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KBS 모두 막대한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소유하게 해서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공정성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몇몇의 학자들 또 몇몇의 노조 핵심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맨날 우리 아침에 여기 오면 데모하고 안 그랬습니까? 매일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압력에, 그 사람들의 노력에 우리 국회에서 여당 의원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러셨는지 오랫동안 그 주장을 들어 오셔서 그랬는지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회가 물론 잘못한 게 많지요. 욕도 많이 듣고,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더러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지요.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되는데, 이 구조를 통째로 바꿔 놔 버렸습니다. 송아지 뿔 바로잡겠다고 소를 죽여 놔 버렸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 몫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제.

국회가 무슨, 우리가 거기서 갑질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에 따라서 거기서 정말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이용하는 방송으로서 공정하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그런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총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또 직장인 기업인 모든 사람들의,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를 공정하게 한 공동체의 이익, 민주주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소화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정보의 홍수, 방송의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라는 것이 공영방송의 임무 아닙니까? 그 공영방송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가 더 잘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업무를 완전히 다 방기해 버렸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더욱이 국민에게 돌려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국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되고, 우리가 국민과 무관하게 일했습니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방송통신위원을 우리가 선임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사를 그렇게 선임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돌연 다 부정해 버리면 현대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제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받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그 신성한 권한과 책임을 지금 외면해서 그걸 엉뚱한 사람들에게 다 몰아줄 수 있습니까?

변호사단체는 왜 여기에 등장합니까? 아까 시청자위원회의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청자위원회는 누구입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았습니까? 국민 중에 1만분의 1로 임의로 뽑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권한을 전혀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한테 떠넘겨 줬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과방위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방송법 개정할 때 야당은 한 사람도 참여'……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 막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방송법 개정하겠나라는 이런 논의도 있고 해서 우리 당에서 조금 방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논의가 잘 안 될 것이다, 정부 여당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점이 있었고 더욱이 우리 입장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개정안이라는 것은 어느 안도, 어느 안도 국회가 정당하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이건 매우 매우 잘못된 법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두고서 협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한 내용만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왜냐? 우리도 열심히 걱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표결로써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편성위원회 이야기입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권 부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송편성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사의 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성책임자 임명에 편성위원회가 관여하는 것 역시도 인사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날 선고한 2019헌바439 전원재판부 결정문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른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간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면 의견충돌이 발생할 때 합의 도출이 어려워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송편성은 빠른 판단과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데 위원회 의결을 통하면 실시간 편성 조정이나 긴급편성 변경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책임경

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장에서 큽니다.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법제화하면 전문방송경영인 책임하의 편성·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의사결정은 편성위원회가 하지만 사회적·법적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합니다'.

이런 불일치가 생깁니다. '결국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 당은 편성위원회는 내부규약에 따라 자문기능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조차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입장도 없이 그냥 해서 왜 뒤늦게 필리버스터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다 입장을 밝혔고 저희 입장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공영방송 종사자를 우리는 노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노조를 적대시하느냐', 노조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노조 가입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민노총 방송노조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MBC 보직자 148명 중 132명이 MBC의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 이게 민노총 산하 MBC 노조입니다. 2019년 MBC가 자사 직원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2021년 2월 15일 당시 전체 보직자 중 89.1%가—90%지요, 사실상—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노사동일체예요, 노사동일체, MBC의 경우는. 그 내막을 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왜 법원이라는 곳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잘 알지 않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도 주로 영장 청구할 때 하던 그런 명성이 있는 법원 아닙니까? 서부지방법원이니까 특별하게 무슨 편향을 가지고 MBC에게 불리하게 판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쭉 읽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넘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공소장인데 법원 판결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니까 더 정확하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내막입니다. 우리 공영방송은 일반 회사나 또 신문사보다 훨씬 노조가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힘이 센 것은 파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세다는 것인데 지금도 몇몇 방송사는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는 파업해도 안 망합니다. 노조의 힘만 강해집니다. 저도 신문사 노조위원장 해 봤습니다만 신문사 노조는 파업을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광고주 끊어지고 신문 배달 끊어지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문사 노조는 교섭력이라든가 노조 조직률이 그리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는 그냥 일 안 하면 다른 프로그램 하고 또 음악 틀고 또 대체인력 넣고 해서 어찌어찌해 나갑니다. 그리고 외국방송 틀어 가지고 자막 다시 넣고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가면 좀 손실이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동안 방송노조가 편성하던 방송 왜곡 보도에서 오히려 방송이 파업하니까 방송 내용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 희한한 경우도 보곤 합니다. 그런 정도로 공영방송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취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에 그동안 정치 후견주의로 마치 국회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 인사가 잘못됐다면, 일부 우리 국회 추천 몫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앞으로 딱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도록 고쳐 나가면 됩니다.

KBS는 지금 노조원이 2023년—재작년이네요—재작년 연말 기준 82.1% 가입했습니다. MBC도 70% 가까이 됩니다. EBS도 73%, 정규직 기준으로는 80% 가까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가입률이 좀 작게 보이는 것이 비정규직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훨씬 커진 거지요. 정규직은 더 압도적입니다. MBC의 경우는…… KBS, MBC에 서로 다른 노조가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강력한 주축 노조가 있고 또 MBC 민노총 산하 노조에 반발해서 나왔던 독립노조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 구성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KBS의 경우에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조합원 수 2418명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KBS 노동조합 중 독립노조 같은 것인데 여기는 구백, 1000명이 안 됩니다.

MBC 보실까요? MBC는 공정방송노동조합이라는 곳은 이게 참 아주 독립적인, 진짜 독립적인…… 지금 노조는 복수 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MBC 노동조합 제3노조가 있고요, 여기는 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성한 곳입니다. 서부지방법원 판결은 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가 노사동일체를 구성해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를 핍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EBS도 이게 참, 언론노조 산하 전부가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EBS가 왜, 교육방송노조가 이래야 될까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EBS 노조가 이번에 여기에, 이 사회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민주노총 출신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관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사 전반의 고용구조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특별 뭘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감독을 통해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MBC의 실상입니다. MBC가 그렇게 강력한 노조가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왜 이런 따돌림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이 생깁니까? 고용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고용구조의 문제가 있는 회사에 그 고용구조의 문제를 초래했던 기본적인 내부자를 이제는 MBC 방송 이사, MBC 방문진, MBC 이사회 이사로 딱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자기들이 관장하게 하면 그것은 자기의 노동을 자기가 감독하는, 자기의 업무를 자기가 감독하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MBC는 누구의 재산입니까? MBC도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MBC의 재산, 방문진의 재산 누구 겁니까? MBC 조합원이 갹출해서 낸 겁니까? 다 연유가 있는 재산이지만 어쨌든 국고에 귀속될 만한 재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에 지금 그렇게 강력한 노조가 있으면서 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생겨서 이

런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만큼 공영방송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서 이제 이런 것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면으로 MBC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의 큰 축인 한 세력을 그냥 MBC 이사회를 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 무슨 변호사단체, 시청자위원회 또 무슨 방송사 종사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놔 버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든 어디든, 국회의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이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방송종사자 이런 분들은 일종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우리 국회는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호통도 칩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했나 못했나를 국민의 명령으로 그 부분들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사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런 노조가 핵심인 세력들한테, 내부 세력이 이렇게 다 문제를 만들고 지금 고용구조 문제며 내부의 불행한 사고며 인권침해며 그다음에 편파적 방송보도가 그대로 창궐해 있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국회는 방치한다면 그게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제대로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문진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진법에서 부칙 조항에 정한, 방문진법은 부칙 조항을 발동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방문진은 방송통신위가 2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도 그대로 있고요.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장님, 이사들이 다 계십니다. 사장도 그대로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바꾸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뭔가 원칙을 저버린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핀셋으로 그 문제를 고쳐야지, 국민의 위임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정당하게 해야 될 그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국민에 위임받지 않은,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엉뚱한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2017년에 아마 인수위원회 시절에 나왔던 문건 같은데,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문건으로 했는데 이제는 법안으로 해 갖고 완전히 싹 다 바꾼다고 합니다. 이런 문건을 통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괴롭혀서 쫓아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법을 싹 바꿔서 3개월 뒤에 부칙 조항으로 싹 쫓아내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참 맞는 일인가 싶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중에 위헌적인 법으로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방송사 공영방송의 내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이걸 하나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한미 협상 때 큰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미국 쪽에다가 우리 쇠고기 양보 못 한다, 쇠고기 개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 알겠다’ 그랬겠지요.

왜냐하면 30개월…… 이미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30개월령 이상 이거는요 사실은 이건 거의 미국 사안으로서도 우리가 풀어 줘도 크게 더 많이 들어올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협상에서 이게 주 이슈가 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보여 주니까 그래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다른 걸 양보하라고 됐겠지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대목이, 이게 제 추측만이 아닌 것이 그다음 날 경제지에도 ‘이 쇠고기·농산물 지키려고 무엇을 양보했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쇠고기 협상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지금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우리가 오히려 아킬레스건을 제출하니까 미국에서는 시장 접근 효과가 크게 더 크지 않은 사안을 슬쩍 그러면 포기하는 체하면서 다른 것을 밀어 넣지 않았을까요?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호주가 사실 쇠고기 문제 때문에 미국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 쇠고기 규제, 호주도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쇠고기 규제 풀라는 요구에서 호주는 생물주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철강 관세 50%를 올렸습니다. 호주는 사실은 미국과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도 통상 문제에서는 예외가 없이 이렇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호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될 관세를 낮춰 보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미국의 저런 수법으로 보자면 이게 그냥 ‘아이고, 그랬습니까?’ 하고 이렇게 양보, ‘그러면 그거 말지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가 족쇄가 되어서 다른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17년 전의 이 사고가 지금도 이렇게 국가적 이익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예시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17년 전 MBC ‘PD수첩’의 ‘미국산 미친 소’,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 뭡니까? 미국산 미친 소 먹고서 미친 사람 있습니까? 죽은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30개월 월령 이상 쇠고기 선진국가 중에 수입 안 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쇠고기를 충분히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 월령 이상 그 수입량이 특별히 더 많을 거라고 짐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MBC ‘PD수첩’의 ‘미국산 미친 소’,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때 이런 보도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국익을 훼손했던 사람들이 그 뒤로 승승장구해서 MBC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이런 것으로 미국은 나쁜 사람들, 미국산 미친 소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MBC에서 보도·편성·제작 책임자가 되고 MBC 보도의 편향이 점점 더 심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MBC를 보는 시청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MBC는 점점 특정 진영 방송처럼 변해 갑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MBC ‘PD수첩’ 책임프로듀서 출신 최승호 PD는 2018년

에 신임 사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당시에 같은 프로듀서였던 조능희·송일준과 비슷한 성향으로 꼽히는 최승호는 대규모 인사 개편을 통해서 책임프로듀서 조능희 PD를 기획편성본부장에 앉혔습니다. 조능희는 그 이후 2015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광우병 편 진행을 맡은 송 모 PD는 지방 계열사 광주MBC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모 PD는 시사교양 4부 차장을, 김 모 PD는 시사교양 3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문제의 'PD수첩' 방송 당시에 메인 진행자인 송 모 PD를 도와서 진행에 참여한 손 모 아나운서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배현진 아나운서, 우리 그 배현진 의원이십니다. 배현진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를 맡았지만 최악의 시청률 기록과 이에 따른 광고 판매 적자로 7개월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PD로 사장이 된 최승호 사장은 취임 후에 비언론노조원, 총파업 불참자 그리고 전 정부 시절의 임원 등 현 경영진과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을 소위 적폐로 낙인찍고 비상식적인 수준의 중징계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그 시기에 2019년인가 2020년인가에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1.97%까지 떨어져서 그런 최악의 편향된 프로그램을 틀어 대는 MBC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MBC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허용되는 것이 이번에 오늘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면 다 해결이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거 아시지요? 이거는, MBC 파업 보도는……

자, 다음 할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12시까지 좀 준비하세요.

다음 봅시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저는 생각은 우리 방송 지배구조가, 지금 쭉 보여 주는 슬라이드들은 현재 지금 KBS라든가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 우리랑 비슷한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정부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대부분 다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출된 정부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위임 구조에 맞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구조로 국민의 방송을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독일도 비슷합니다. 독일은 대신에 지역방송연합이 있고 또 단일 기관으로 전국을 총괄하는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지역 대표들이 또 다 포진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이사가 좀 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RD라고 이게 총 9개 방송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방송사는 주정부 대표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냥 엄벙덤벙 방송종사자, 뭐 변호사단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쫙 그 추천 사례가 나옵니다. 정당에서 몇 명 그다음에 개신교의 몇 명, 다음에 협회 몇 명, 노동계 독일노조연맹 어디 몇 명, 정치인·경제인협회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위임 구조가 매우 명확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북독공영방송이라고 한 지역방송입니다.

일본 공영방송도 내각 장관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다음 봅니다.

일본 공영방송 보십시오. 진짜 12인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경영위원회를 만든 뒤에 참의원·중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가 확실하게 그걸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 국회가 후견주의라고 또 비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인가요, 2009년에 발족된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인원 구성도 똑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5명인데 이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5인 중 1명을 골라 임명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빨리 추천합시다. 그래서 가짜뉴스 이 유튜브 알고리즘 문제를 빨리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1명을 임명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 한번 구성해서 우리 방송의 여러 문제, 특히 지금 통신 쪽에서 유튜브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영방송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그 공영방송은 왜 보도의 편향 문제 이런 문제로 시비가 없느냐? 저는 저널리즘의 윤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엄격한 페어니스, 균형 잡힌 보도 그리고 저널리즘에 대한 정말 확실한 원칙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영방송은 지나친 산업화·선정성이 미국 방송을 황무지로 만들어 놨다고 걱정하면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엄격한 방송 라이선스 심사를 선포한 뒤에 공영방송사 설립 필요성을 당시 1961년부터 63년에 FCC 의장을 역임한 뉴턴 미노우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시대로 유명한 존슨 대통령 때 1967년 공영방송공사법을 서명합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미국에서 1967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무엇보다 우수성을 갈망한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공영방송을 하면서 했던 아마 어떤 큰 이상 같은 것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FCC랑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KBS 이사회 구조 비슷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 KBS 이사회 같은 겁니다. 8인을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이것 국회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오늘 통과시킨 방문진법, 방송법은 그렇습니까? 국회는 아주 일부만 추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우리는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줘 버렸습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대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이 민주주의를 진작시키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민주주의를 오히려 해치는 그런 기능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BBC 같은 공영방송은 선거방송 제작 보도준칙이 매우 철저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준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킵니다.

BBC 가이드라인, 2021년 일렉션 가이드라인(Election Guidelines) 보실까요? 여기 3번에 듀 임파셜리티(Due Impartiality)라고 제가 써 놨습니다. 이건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과 또 온라인 콘텐츠는 어떻게 불편부당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적 이슈와 다른 어떤 선출 공직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어니스 투 캔디데이츠, 코드 오브 프랙티스(Fairness to Candidates, Code of Practice), 후보들에게 정말 페어하게, 공정하게 이걸 해 줘라 이런 게 BBC 선거방송에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BBC 보도준칙은 정말 KBS와 우리 공영방송의 보도준칙이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국 방송사 중에서 1959년까지 TV 채널은 오직 BBC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당파적·편파적 보도를 막기 위해 엄격한 보도준칙을 정립합니다.

더 보시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때 잘했나?)

왕실칙허장……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때 잘하라고 얘기했어야지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때 잘하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부터, 여당부터 잘해 주시면서 악순환을 꺾어야지요.

지금 BBC의 보도준칙은 왕실칙허장에 의해서, 입헌민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왕실칙허장에 의해서 BBC의 설립 근거와 의무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칙허장 제6조는

5개 항에 걸쳐서 BBC의 공적 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이 잘 지켰어야 되는데……)

이제 그 뿌리를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잘하셔야지요, 이제부터. 잘하자는 겁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의 그 뿌리를 끊어야지요. 윤석열·김건희의 뿌리를 끊어야지요.)

오늘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약주하셨습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말입니다. 지금 제도를, 이게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인사를 제대로 하고 해서 정말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의 문제라? 윤석열이 과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왕실칙허장 BBC의 설립 근거 및 의무 제시를 보고 있습니다. 칙허장 제6조는 다섯 항에 걸쳐서 BBC의 공적 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이진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의 문제라는데 이진숙이 괜찮은 사람인가?)

의장님, 좀 제지해 주십시오.

○의장 우원식 토론 들으세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양념인데……)

○최형두 의원 BBC의 공적 책무에 왕실칙허장……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가 이제 말씀 안 듣겠습니다. 제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BBC의 공적 책무는 왕실칙허장, 로열차트 제6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영방송이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통과된 2개의 법과 또 지금 상정된 이 법에서 우리는 정작 이 부분은 외면하고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뭡니까?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서 국가의 재정, 사실은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국가의 재산을 막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또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영방송에 바라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이자를 내서 세금 내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에 바라는 것은 상업방송이 해 주지 못하는 이런 고급진, 수준 높은 의무를 다해 달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요.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하고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BBC의 공적 책무입니다. 저는 이게 KBS의 공적 책무라고 이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BBC 편집 가이드라인은 BBC의 방송 편집윤리·가치·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 보면 BBC의 이것은, 우리가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마는 편성위원회를 일일이 그 급박한 방송의 순간에 언제 구성합니까? 그 위원회를 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BBC는 편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방송 편집의 윤리와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살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를 누구를 하고 그냥 사장을 누구 한다고 이런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BBC 같은 공영성과 그런 수준 높은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BBC 편집 가이드라인은 오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BBC 편집 가이드라인은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적절한 불편부당성 관점에서 내용을 다루고 뉴스는 다뤄지는 사건과 의견, 논쟁의 주 입장에 적절한 비중을 두고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따라야 하며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시간 비중을 두며 폭넓은 범위·주제·관점을 제공해야 하며 특정 관점이나 입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가 공동선을 위하는 등의 경우에 편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BBC의 불편부당성의 12개 하위 요소는 정말 우리 방송의 저널리즘의 핵심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역시 방송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누구의 주장을 매우 공익적으로 이게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확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보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확성이 매우 중요, 애큐러시(accuracy)라는 대목이 불편부당성의 12개 하위 요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A, B, C, D, E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밸런스(balance). 세 번째는 그 맥락을 잘 살펴야 하는 컨텍스트(context), 네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불편부당성이란 거리두기겠지요. 저 정당과 저 정치인과 저 공공기관과 내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봐줘야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두기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평성(even-handedness), 정말 양손처럼 양손이 공평하게 가듯이 가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평성에서도 공정성(fairness)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객관성(objectivity), 무편견성(open-mindedness), 엄격성(rigour), 진실(truth), 자각(self-awareness), 투명성.

그래서 공공정책과 정치 산업적 논쟁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취해서 특정 관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야 되고 이를 위해 공적 사안을 방송하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에게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BBC 편성 원칙 섹션 3, 애큐러시 원칙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 영문이 있고, 뒤에 또 보실까요? 한글 번역본이 있습니다.

'정확성'에서 'BBC는 듀 애큐러시(Due Accuracy), 적절한 정확성을, 합당한 정확성을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정확성에 대한 약속은 BBC의 명성과 시청자의 신뢰에 근본적이며 그것이 BBC의 기반이다. 정확성은 BBC 왕립칙허장의 부속 협약에 명시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절하다는 용어는 정확성이 콘텐츠의 주제와 속성, 예상되는 시청자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에 적절하고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지만 BBC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이를테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코미디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확성은 통상 사실 기반 콘텐츠에 요구되는 정확성과 다르다. 심지어 한 장르 내에서도 그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 기반 콘텐츠의 경우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확성은 그것이 사실적 오락인지, 역사 다큐멘터리인지, 시사 프로그램인지 뉴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한동안 KBS의 역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논란이 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이런 편성 원칙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확성은 단지 사실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경우에 관련된 사실과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관련 사실과 정보의 경중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적합한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1차 자료를 사용해서 취재해야 됩니다.'

이것 중요한 취재원이 준 자료라고 2차를 적당히, 어떻게 조작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유리하게 편집되지 못한 자료를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이 윤 커피 사건에서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조작 사건에서 적용되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증빙 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진위를 검증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출연자의 주장과 진술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뉴스와 시사 관련 콘텐츠에서는 적절한 정확성을 달성하는 것이 신속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BBC의 모든 제작물은 주제와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출처를 충분히 밝히고 건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철저히 검증되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BBC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근거 없는 추측은 피해야 합니다. 확증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논쟁적 주장, 사실 자료와 기타 콘텐츠는 그런 것이 확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해당 자료에 기록해야 합니다. BBC는 고의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왜곡하거나 만들어 낸 자료를 사실로 제시하거나 또는 기타 BBC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사실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경우 통상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그 오류를 교정해야 합니다.'

'의무적 상의'라는 게 있습니다. BBC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 너무 급한데 제작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납득할 만큼 그 내용이 없으면 이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필수적 과정으로서 편집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과 상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사중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방송사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에 정당들이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것 아닐까요? 저 정당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한 보도를 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당도 그런 걱정을 하고 야당도 그런 걱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만일 BBC처럼 우리 공영방송이 엄격한 정확성, 적확성, 공정성에 따라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미국 방송계는, 미국에서는 페어니스 독트린이라는 것을…… 그래서 공영방송은 이렇게 엄격한,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0년대 후반 미국 방송계는 CBS ABC NBC, 3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당시 텔레비전은 가장 강력한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FCC—우리 방송통신위원회지요—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체제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정성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정성, 이게 사실은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된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 미국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이슈에 관한 뉴스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이퀄 타임 룰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미국 페어니스 독트린이 우리 공영방송에 도입된다면 우리 정당은 방송의 이사회가 누가 되든 사장이 누가 되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준칙으로써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고의적 왜곡 뉴스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한번 우리 과방위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페어니스 독트린을 이야기했더니 그 페어니스 독트린이 미국에서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1987년 레이건 행정부가 다음 사항을 제시하면서 공정성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반론 비판 기회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들이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기피하고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점이 강조되어서 레이건 정부가 페어니스 독트린을 폐기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페어니스 독트린을 만들었고요, 미국에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같은 사람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과방위원들께서 페어니스 독트린이 뭔…… 이게 오히려 레이건 행정부 같은 주장을 하십니다.

그 당시 미국 의회는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격하게 반발하면서 공정성 원칙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 공영방송을 지키는 큰 보루였는데 여전히 미국 의회가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영방송은 하나의 큰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페어니스 독트린이 폐기되면서 생긴 것이 숀 해니티라든가 러시 림보 같은 정치 라디오 쇼입니다. 러시 림보는 미국 공화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는 FOX News 같은 정치 오피니언 텔레비전 채널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결국 미국 정치 보도가 크게 보면 양극화되는 이런 경향을 낳게 됩니다. 미국 정치 미디어 환경의 극단화가 가속됩니다. 뉴스 신뢰도가 하락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페어니스 독트린이 했던 긍정적 효과 또 폐기 이후에 생긴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영방송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 프로그램 제작 때 아주 엄격한 이퀄 오퍼튜니티를 이야기합니다. 이퀄 오퍼튜니티, 동등한 기회지요. 섬타임즈 콜드 이퀄 타임(sometimes called Equal Time)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배정하라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편성하고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무슨 보도를 막대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기계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영방송에서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을, 사실무근인데도 나중에 허위 조작 뉴스로 밝혀졌는데 그걸 잇따라 방송합니다.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만 복원된다면, 이런 원칙만 복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뭐 볼 게, 이탈리아는 이게 아주 실패한 사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에서 나는 독일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공영방송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사회적 협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보이텔스바흐 원칙 같은 겁니다. 아까 낮에 거창의 중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마침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기도 했는데, 독일의 나치주의라는 것은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거로 집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거로 집권했는데 독일과 유럽을 대재앙의 한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1945년 독일은 처절하게 패전했고 살육과 증오로 점철된 역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1976년 독일 내 보수와 진보 정치교육 철학자들의 치열한 논쟁 끝에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이텔스바흐는 3원칙이 있습니다.

주입 또는 교화하지 말자. 이게 한때 교단에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단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또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기의 의견을 막 이야기하다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독일 교단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 원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 원칙은 주입 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학교에서부터 정치교육을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없더라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받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훈련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화하는 원칙,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서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독일이 그나마도 지금 유럽의 극단적인 현상, 정치적 대립의 갈등 속에서도 전후에 2차 대전의 나치의 끔찍한 그 기억을 씻어 내면서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큰 사회철학적…… 그리고 우리가 공영방송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만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불편한 신문입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엄정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트럼프 비서실장에 따르면 트럼프도 몰래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해도 다 읽어 본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뉴욕타임스는 그래도 꾸준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허위 조작 뉴스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포스트는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타임스가 종이신문인데 지금 사실은 글로벌 디지털미디어가 됐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계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오전에 제가 한 점심 무렵 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계셨을 테니까 제가 한 번 더 되풀이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시아지국이 서울에 있습니다. 몇 명쯤 근무할까요? 다섯 명? 열 명? 50명이 근무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지국이 서울을, 한국 취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미디어입니다. 종이신문이 쇠퇴한 시대에 글로벌 미디어가 디지털미디어로서 큰돈을 벌고 전 세계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뉴욕타임스 이야기를 듣고서 그 뉴욕타임스 출신을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도 와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지국이 홍콩에서 서울로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정부가 무슨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서 왔습니다.

홍콩에 홍콩 보안법이 생긴 이후로 이제 언론의 자유를 더 이상 누리기 힘들어서 뉴욕타임스 본부에서 뉴욕타임스 아시아지국 홍콩지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도시로 옮기고 싶으냐, 아시아의 어느 도시로 옮기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뉴욕타임스 아시아지국 다수가 서울로 가자 그랬답니다, 서울로 가자. 왜? 한류가 있는 곳이니까. 도쿄를 선호했을 것 같은데 도쿄를 서울이 이겼답니다. 싱가포르는 너무 많은 곳에 가 있으니까, 싱가포르는 또 아시아에서 좀 저쪽으로 치우쳐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서울이 어떻게 보면 DMZ도 있고 정치도 어떤 경우는 혼란스럽고 이런데, 탄핵도 나오고 이런 시기인데도 뉴욕타임스 편집자들 한 50여 명이 있는데 전부 편집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자들은 서울을 취재하는 기자는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욕타임스 편집국 서울

헤드쿼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미디어고 디지털 뉴스를 계속 생산해 내기 때문에 이제 종이신문의 인쇄 여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 뎁스(in-depth), 긴, 아주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찾으면서 굉장히 정교한 기사를 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읽어 보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어권 신문이고 영어가 글로벌 언어이기 때문에 얻는 혜택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매체도 이제는 영어 통역은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콘텐츠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콘텐츠의 질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50명이 한국에서 뭐 하느냐? 한국 기사를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뉴욕타임스 아시아본부 서울지국 시대' 하면서 부제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걸 소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서울로 옮겨 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확히 그 묘사가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까 우리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은 한국 취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 시간대, 그러니까 동아시아 EST 이 시간대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욕타임스를 다 취합해서 여기서 편집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뉴욕타임스의 뉴욕 헤드쿼터는, 뉴욕 시간 밤 6시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조정이 있겠지만 뉴욕타임스 뉴욕 헤드쿼터는, 그게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있지요. 저기도 나인 투 식스입니까, 나인 투 파이브입니까? 이를테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한국으로 편집이 옮겨 옵니다. 뉴욕에 밤이 오면 뉴욕타임스 편집국 전체가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50명의 사람들이 상주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뉴욕에서 뉴욕 시간 밤 8시에 일어난 사건 사고 기사도 송고를 서울로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뉴욕타임스 편집자들이 다 편집해서 다시 뉴욕타임스로 디지털로 쏩니다.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 거기서 편집을 합니다. 남미에서 생기는 기사도 밤 시간에는, 뉴욕타임스 뉴욕 오피스가 퇴근한 시간에는 서울에서 합니다. 우크라이나 기사도 당연히 서울에서 합니다. 그러면 서울 시간이 밤 6시가 되면 어디로 가느냐? 런던으로 갑니다. 그래서 3원 체제로 24시간 가동하는 체제인데.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전 세계의 신뢰를 얻고 이렇게 디지털미디어로 다시 새롭게 탄생해서 글로벌 미디어로서 종이신문이 쇠락하는 시대에 새로운 탄생을 했느냐, 전 세계에 3개의 헤드쿼터를 두면서 서울에만 50명 이상의 편집진이 상주하는 이런 강력한 글로벌 미디어가 됐느냐, 바로 그것은 시스템과 절차, 엄정함, BBC에서 이야기했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천착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저널리즘스 에센셜 밸류(Journalism's essential value)'라고 슐츠버그 뉴욕타임스 발행인이 2023년 5월 15일에 했던 어떤 특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방송이기는 하지만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BBC의 보도준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그냥 상업방송한테 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은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가 짜여져야 되고 그렇게 독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의견이고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이번에 의결됐거나 또 이미 국무회의까지 거친 그 방송법 같은 것은

이것과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내부 확증편향의 사람들이 이 본질적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또 노동조건만 하더라도 이미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만큼 막강한 노조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그 회사에서 그런 노동 소외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이제는 공영방송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사회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의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고 그나마 반토막 난 시청률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마치 유튜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만 찾아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유튜브와 달리 그런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신선하게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구조는 공영방송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러 착각하는 것이, 갤럽 같은 데서 좋아하는 방송채널 조사를 합니다. 거기 보면 MBC가 한 이십몇 %로 오르고 KBS는 몇 %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소비자의 극단적 양극화라는 것이 한규섭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입니다. 한규섭 교수인데, 이것이 공영방송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경책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사랑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특정 선호 세력이 생기고 그 편을 편드는 방송이 되면 그건 상업방송, 특정 진영 방송과 다를 바가 없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튜브와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선호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했더니 MBC 선호층이 많았습니다. 진보가 54%고 보수가…… 그러니까 이 두 격차,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 측이 선호하는 방송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갤럽에서 조사한 응답자의 진보·보수 구성을 보면 전체 응답자는 진보가 28%고 보수가 31%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MBC 선호층에서는 진보가 약 2배 과대 대표되고 보수는 약 3분의 1로 과소 대표된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방송사에 있지만 MBC가 특히 심했습니다.

TV조선은 보수가 많이 보는 압도적인 매체지요. 그건 민영 매체니까…… 또 JTBC는 반면에 진보가 좀 많이 보는 종편채널일 테고. 그건 민영방송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러나 방송의 정확성·공정성은, 최소한의 윤리준칙은 지켜야 되겠지요.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그래서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데 그나마도 시청자의 편을 갈라서 방송을 해 버리니까 시청자가 어느 편이 좋아하는 것을 방송하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20~30%를 넘던 MBC 9시 뉴스데스크는 시청률 부진으로 9시 KBS 뉴스에 밀리니까 8시로 옮겼습니다만 그래도 시청률이 과거

의 20~30%는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8%, 많을 때는 7%, 6% 이런 수준입니다. KBS 9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KBS는 시청료로 운영한다지만 MBC는 광고 수익을 통해야 되는데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광고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MBC의 이런 언론의 정치 마케팅이 한편에서는 박수 받겠지만 다른 편에서는 광고 매출의 저하로 이어지고 공영방송의 생존의 위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MBC에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방문진에게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해요. 방송사가 그걸 주지 않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통해서 영업실적을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실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버넌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공개적으로 알아보니까 영업은 적자인데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경상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K-한류의, K-웨이브의, K-컬처의 한때 본산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제국, MBC가 예능 왕국, 드라마 왕국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못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원조인데 그 원조가 그런 걸 못 만드니까 이제는 그냥 케데헌처럼 일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미국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지요, 소재는 전부 한국이고 우리가 개발한 원천 콘텐츠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영방송이 공영성을 지양하지 않도록 그 감시와 그 견제, 그 장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공영방송 방송이 정치 마케팅에 집중하고 그 종착역이 되어서 이제는 광고 수익도 떨어져서 MBC가 과거의 예능과 드라마의 파워하우스로서의 기능조차 잃어버렸던 겁니다. 지금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 방문진법은 그런 편향성과 그런 경향성을 더 강화시킬 방송과 회사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이게 잘한 선택입니까? MBC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MBC가 잘한다는 또 다른 지표로 로이터저널리즘이라는 것을…… 로이터라는 유명한 통신사가 저널리즘 리포트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It should not be treated' 해 가지고 이 리스트를 가지고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MBC가 가끔 1등을 합니다. 그래서 MBC가 역시 제일 보도를 잘하니까 로이터저널리즘에서 잘한 것 아니겠느냐, 가장 신뢰받는 방송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그 신뢰지수를 보면 전부 비슷합니다. 50%에서 그냥 2~3%p 차이입니다. 표준편차로 보자면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1등 했다고 MBC가 잘하기 때문에 로이터저널리즘에서 칭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YTN이 1등 한 적도 있고 또 KBS와 SBS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표준편차를 보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백히 이것을 'most or least trusted brand'라고 가장 신뢰받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브랜드라고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오라고 써 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항상 MBC는 로이터저널리즘에서 1등으로 신뢰받는 회사로 신문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이것은 참 이해하기에는……

아까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는 것이 자랑이 아

니라 이게 큰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위태로운 길이고 MBC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데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많은 신뢰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언론이냐……

또 일본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은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했던, 제주도의 위안부를 납치했다라는 그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국제적이고 또 일본에서도 리버럴이 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양식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부수 면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주로 친한보다는 좀 혐한에 가깝고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특정한 편향으로 대개 그렇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이랑 비견될 신문이 아닙니다. 아닌데 신뢰도는 산케이신문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MBC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국내 MBC 지지파들은 그러면 산케이신문이 아사히신문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착시를 자꾸 뿌려 대고 이런 진영의 방송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공영방송의 생존과 번영과 거기에 위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자꾸 부적절하게……

지금 MBC 시청률은 과거의 20~30%대에서 6~7%대로 떨어졌고 KBS도 7~8%대로 다 떨어졌는데 MBC 잘한다고 박수 쳐서 그게 진짜 잘하는 것입니까? MBC 못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영성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공영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영성을 회복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국민들에게 뺏어서 MBC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한국 대목에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이것입니다. 한국의 뉴스미디어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지금 글로벌 서베이를 하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낮답니다. 28%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미디어 매체들이. 그리고 특히 응답자들은 한국 매체들이 사회적 약자 또 정부 비판 또 공공 인물에 대한 견제 또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감시 눈길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한국 미디어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이 해야 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아주 낮은 평점을 줬습니다. ‘gave particularly low marks’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한국언론재단에서 6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한국의 뉴스미디어들의 스코어들은, 한국 뉴스미디어들은 대부분 굉장히 트러스트라든가 공평성에서 아주 나쁘다, 그런 개념 면에서 보면 매우 ‘consistently badly’ 하다고 돼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언론의 독립성에서는 약간 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은 나아졌지만 신뢰(trust)나 페어니스에서 떨어졌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언론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이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표시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

까? 트러스트(신뢰), 페어니스를 높여야 되겠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러 갤럽 리포트를 보고서 '야, 이거 봐. MBC 잘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게 1000명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시청률 조사가 아닙니다. 광고주는 시청률…… 이것은 시청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률은 6~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3% 나옵니다. 왜? 그냥 인기투표 같은 겁니다. 아까 로이터저널리즘 비슷한 겁니다. 여기는 약간 좀 편향성이 있는데 팬덤 같은 게 있어서 더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방송으로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영방송으로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편향만 본다는 것은……

2024년 10월 갤럽 리포트를 보니까 과반이 진보 성향,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MBC를 95%는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MBC의 보도는, 대통령이 당시 잘못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다른 방송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진영과 특정한 사람들이 즐겨 보는 방송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방송이, 뉴스가 그런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과 신뢰에 대한 좋은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운 뉴스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난 10년 사이에 70% 가깝던 지상파의 채널 범주별 선호 비중이 2024년 말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송의 새로운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공영방송은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이런 겹겹이 큰 악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런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편파방송이 공영방송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보는 방송—들쑥날쑥합니다만—이게 갤럽이 한 건데 이게 시청률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서 '시청률 봐라, 28%'…… 그러면 MBC 광고 떼돈 벌지요. MBC 광고 잡아 달라고 난리 안 나겠습니까, 전 국민의 28%가 보는데. 아닙니다. 그냥 MBC를 1000명의 사람들이, 특히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 MBC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공영방송이 공정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송이 됐다는 반대 징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봐라. 28% 나오지 않느냐. KBS보다 높지 않느냐', 이걸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지요.

즐겨 보는 뉴스 채널, 시청자 수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 수로. 지금은 시청자 수로 조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것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너무 편중된 사람들만 보네' 이렇게 평가 절하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KBS 시청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9시 시청률은 10년 전만 해도 20%를 웃돌았습니다. KBS 뉴스가 한국 여론의, 정치권의 풍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2017년 9월에 언론노조 총파업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9의 연간 평균 시청률은 2016년 17.9%, 2017년 15.6%로

2% 감소한 뒤에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2018년에는 12.6%로 3%p 급락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반짝했다가 양승동 사장의 체제에, 이 시절에……

아까 KBS에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됐던 사장…… 양승동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때 잠깐 상승했다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 말기, 2021년 말에는 한 자리 시청률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이 어떤 정치적 편향의 압력을 받으면서 또는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KBS 9 시청률이 2024년 작년 5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조금 반등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 미만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보면 시청자 수에서는 KBS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루 평균 160만 명이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시청자 수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의 시청자 수의 평균값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청 환경에서 TV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청지표로 평가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TV 시청지표로 시청률보다도 시청자 수가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것은 전국의 한 3만 가구에 어떤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보면 그걸 신호를 보내서 샘플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률도 이것보다는 덜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요즘은 일평균 전국 시청자 수라는 것을 새로운 척도로 만들어서 지금 그걸로 광고력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정방송 이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공정방송에는 이회창·김대업 사기 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대선 때 이런 조작 사기 사건, 이게 1997년이지요. 이때 김대업 때문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병풍 사건으로. 그런데 2002년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대업은 정말 희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이때는 법원·검찰을 출입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김대업이가 출두를 했습니다.

(「저런 거 하지 말자고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래야지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지요, 아니지요. 공영방송이 지금 이런 문제가, 공정하게 하려면 지금 지배구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바꾸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내부가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공영방송 내부가. 공영방송 내부가 언론의 자정 기능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BBC의 그런 엄정한 중립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아니, 이회창 아들이 병역비리가 없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이회창 사건, 이것은 김대업 사건에서 하겠습니다. 이것 전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회창의 아들이 병역비리가 없었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그 과정에서 김대업이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김대업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회창의 병역비리는 있었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영방송은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랬을 경우에, 우리 둘이가 지금 논란하는 것과 별도로 공영방송은 이럴 때 어떻게 보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꿔서 잘하자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 대목에서, 내가 이제 이 대목은 그만하고, 같은 이야기 계속했으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어떤 상황인지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가 아까 전반부에, 한 9시 전까지 알고리즘의 폐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그 유튜브 문제를 대통령도 걱정하고 여당 대표도 걱정하고 우리 야당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증오와 적대의 알고리즘이 확대되어서 지금 자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자극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공영방송은 그러지 말아야지요, 공영방송은.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 그걸 하려 그러면 공영방송에서 저는 이사 구조,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런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영방송에 다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MBC,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 봐야, 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된 것…… 이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죄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

피고인 최승호는 2017년 12월 7일경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대표이사로서 MBC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피고인 정형일은 2017년 12월 10일경부터 2020년 6월 28일경까지 MBC의 보도본부장, 피고인 한정우는’……

참 아까 내가…… 저것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대업 건. 김대업 건을 내가 당시에 법조기자로 취재를 했는데 김대업이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는데 2017년에는 그것이 확인도 안 되는 오리무중한 상태로서 이렇게 끝났지만 2002년 때는 본인이 이게 테이프라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테이프라고, 녹음테이프라고. 그 당시 병역비리 과정을 내가 거래했던 테이프라고 가져와서 이것이 복사본도 아니고 유일한 진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검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어 보니까 그 테이프가 녹취 그게 해독 불능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만들면서 자기주장을 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검사도 묻고 기자도 물어봤습니다. ‘이 테이프가 언제 적에 녹음된 겁니까?’ 그러니까 ‘병역비리 당시에 녹음됐다’, 그게 1990년대 초반인가 그리됐겠지요.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혹시 진본이 따로 있습니까?’ ‘진본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녹음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테이프가 알고 보니까 2001년인가에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소니 테이프였습니다. 그 말로 자기 꾀에 넘어가서 사기극을 하다가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그게 전말입니다. 전말인데, 그 과정에서 그것 확인 전까지 MBC나 KBS에서는 온갖 추측 보도를 다 했습니다. 그게 한 대통령후보를 결정할 사안인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한 사기꾼에게 전체 언론이 놀아난 셈이라고 하겠지만 공영방송은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주 100% 공감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 보자 이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만 걱정하고 아무도 걱정 안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잘 읽어 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MBC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피고인 정형일은 2017년 12월 10일경부터……

아니, 제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모르는 사안인데 법원의 판결문, 더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채널A가 없더라고. TV조선은 어떻게 돼」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것 지난번에……

(「채널A, TV조선 이런 데나 가서 바꿔 놓고 와,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거기부터 좀 먼저 손을 봐야 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방송에 대한 그거지요.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것은 민영방송입니다. 민영방송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 조작을 방송하거나 하면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정부 때는 그 사업 승인을 취소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해서 잘될 거니까 이제 조중동도 좀 고쳐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조중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안 했습니까, 법에서?

○의장 우원식 이제 그만하시고 토론을 그냥 들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최형두 의원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데 MBC의 비극 같은 것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쫙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나 파업을 거치고 하면서 MBC 노조가, 아까 숫자를 보여 줬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노조가 정말 종사자 전체를 대표할 만큼 80% 가까이 됩니다. 어느 직장에서 노조 가입률이 사무직이 80%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중의 다수 대표자는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그냥 사내 권력입니다. 사내 권력이고 이분들은 다 확증, 다 자기 생각이, 정치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아까 BBC에서 제가 쭉 왜 그걸, BBC하고 뉴욕타임스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느냐 그러면 공영방송에서는 언론인이 자기주장, 자기 소신, 자기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민영방송은 자기 보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가 못 들 테고 광고료가 안 들어올 테고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릅니다.

쭉 읽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고 또 한 사람 피고인은 보도본부장이었고, 피고인은 보도국장이었고 또 피고인은 보도국 취재센터장이었고 또 다른 피고인은 대표이사도 하고 재직하는 기간 인사노무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했던 사람들입니다.

‘MBC는 서울 마포구 성암로에 본점을 두고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MBC에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MBC 공정방송노동조합—2노조입니다—MBC 노동조합(3노조),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다만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2노조에 소속된 취재기자 수는 1명으로 MBC 내 노조는 실질적으로 1노조와 3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결입니다.

기초사실입니다.

‘취재센터의 역할과 MBC 인사규정.

MBC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주로 저녁 뉴스인 뉴스데스크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의 취재 및 보도에 있다. 이와 같은 뉴스의 취재 및 보도 업무는 보도본부 산하의 보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도국 산하에는 뉴스를 취재하여 영상의 제작을 담당하는 취재센터와 제작된 영상을 취사선택하고 편집하는 편집센터가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위 취재센터는 정치부·경제부·사회부·문화부·전국부·국제부·통일외교부 등으로 구성되고 출입처를 두고 주요 이슈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 취재기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취재센터 각 부에 소속된 취재기자의 취재 내용과 방향이 결국 MBC 뉴스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MBC에 소속된 취재기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 방송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및 신장하며,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방송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이와 같은 방송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사를 취재하고 편집하여 이를 뉴스 등으로 보도되도록 하는 것은 취재기자로서의 인격적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MBC 인사규정 제21조는 직원의 보직 및 전보 시 적재적소, 기회균등, 욕구 충족, 자격 실증, 경력 위주의 원칙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영진과 제1노조의 관계.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2010년 2월경 김재철을 MBC 대표이사로 선임하자 제1노조는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취임에 반대하였다.

이후 제1노조는 뉴스데스크가 4대강 사업에 관하여 비판적인 보도보다는 정부가 내세운 성과 위주로 보도하는 등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 측의 피고인 최승호 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전보조치 등에 반발하여 갈등을 빚던 중 한미FTA 관련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사 측이 불응하는 한편’,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광우병 수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MBC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지금 보여 준 겁니다.

‘한편 제1노조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의 회장을 보직해임 및 인사위원회에 회부

하자 2012년 1월 30일경부터 2012년 7월 17일경까지 약 170일간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사 측은 위 파업기간 중 소위 시용기자로 불리는 경력직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임무에 투입하고 위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뒤 이를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 최승호, 피고인 박성제 등 제1노조 조합원 6명을 해고하였으며, 파업 종료 이후에는 파업에 참가한 1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무평정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교육발령을 하거나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하였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계속하여 2014년 2월경 안광한 대표이사가 취임하자 1노조는 위 안 대표이사가 2012년 부사장 인사위원장으로서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임에 반대하였고 사 측은 피고인 정형일 등 제1노조 조합원들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신사업개발센터 등 취재센터가 아닌 부서에 전보하여 기자, PD 등 직종별로 MBC에 입사하여 전문적으로 해 오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에 1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1노조 조합원을 부당하게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2018년 8월경 노동청의 특별감독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2018년 안 대표이사,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에 대하여 부당노동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MBC는 2012년 파업 이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신입 공채기자를 3명만 채용하는 데 그치고 경력기자로만 100여 명을 채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1노조는 2012년 파업에 참가한 1노조 소속 취재기자 상당수를 해고하거나 부당 전보하여 취재부서에 배속한 상황에서 사 측이 이들을 대체할 인력으로 사 측에 우호적인 경력직 기자를 대거 채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였다.'

좀 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MBC 내에서 그 적대관계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여 주는 대목이 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파업 불참자에 대한 의견표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피고인들이라는 것은 MBC 사용자들입니다. 사용자들인데, 이분들이 사장이 된 뒤로 또 보도 간부가 된 뒤로 MBC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표명하면서 어떻게 보복을 해 나가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피고인 최승호·박성제는 제1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2012년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정형일·한정우는 제1노조 조합원으로서 2012년 파업 도중 보직 부장에서 사퇴하고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를 받은 이후에 취재 업무에서 배제됐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등 기존 경영인 체제에서 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에 대하여 사 측이 주도하는 보도 방향을 비판하고 사 측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취재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부당하게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한 반면, 제3노조 소속 및 비노조 관련 취재기자들에 대하여는 경영진의 지시에 순응함으로써 불공정 보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여 왔고 그에 따라 파업을 통해 김장겸 대표이사를 퇴진시키고 기존에 배제되었던 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로 하여금 뉴스 제작 및 보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3노조 소속 취재기자 및 제3노조에 동조하는 비노조원인 취재기자들은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다수 피력하였다.' 복수의 시작입니다.

피고인 한정우·박성제가 참여한 MBC 20~30년 차 기자 성명이 2017년 6월 7일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이지요. 이제 복수의 서막입니다.

'피가 튀고 살이 잘려 나간 지난 8년이었다. 노골적인 편파와 왜곡에 저항했던 선후배 동료들에게 당신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선혈이 낭자한 그 자리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소수 부역자들로 채워졌다', '이 악의 삼각축은 철저하게 MBC를 궤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농락했다', '사내 부역자들에게도 경고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저지른 지금까지의 만행뿐 아니라 앞으로의 만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MBC 상태가 이렇습니다. 부역자, 적폐…… MBC 내부가 특검 수사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호견제, 균형 이걸 맞춰주려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MBC 노조가 이 공영방송 이사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수극의 되풀이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 MBC 기자협회·영상기자회 성명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겁한 뉴스 농단으로 자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들도 들어라. 시키는 일을 성실히 했다는, 회사를 위해서였다는,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착각은 그 자리를 내놓고 평생 하여도 좋다', '부역의 께름칙한 실상, 장물을 나누어 가진 약탈자들의 의리조차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동료 언론인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철천지원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고인의 시사인 인터뷰 중의 일부입니다.

'그 친구들은 좀 혼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혼이 나야 되는데 해고를 시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 쓰는 기사를 매일 보고 있어요. 뉴스를 매일 모니터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놈들이 어떤 이름으로 리포트를, 이런 이상한 리포트를 내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애들은 나중에 혼을 좀 내야겠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범자들의 파국은 눈앞에 와 있다. 사회의 공기 공영방송을 극우의 흉기로 만들고자 했던 자들은 여기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라'……

MBC가 극우 방송인 적이 있습니까? 자기네가 하면 진보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송하는 건 극우 방송입니까? 세상에 이런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짓눌리고 비제작부서로 쫓겨난 이들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MBC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팬덤처럼 인기조사에서 대통령이 싫은 사람들, 이른바 진보라는 응답자들이 그냥 과대 표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또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 중에 있습니다. '공범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범자들' 이건 최승호가 만든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공범자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파업에 참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범자입니까? 극우 방송 만들었습니까? 이런 편견으로 다시 한번 사장의 경영이 되

자마자 나머지 노조원들을 잔인하게 탄압합니다. 이게 MBC 공영방송의 내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에서 노조 내부의 큰 갈등과 서로 적대적인, 서로를 공범자라고 부르고 부역자라고 부르고 또 실제로 MBC, 2017년 이후에 배현진 의원이 당했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광기와 그것이 예상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정상을 찾으려면 아주 공정한 국회라든가, 국회가 정말 위임을 받아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MBC 노조 내에서 그런 비인간적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범자, 극우의 흉기 또 혼을 내겠다, 만행 다음에 약탈자, 부역자…… 이런 사람들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인터뷰에서 '청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청산 과정. 그래서 노조 파업에 참여하고 온 사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철저한 차별과 보복이 일어납니다.

2017년 11월 13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김장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자 최승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입후보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서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 청산을 예고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보도센터장으로 복귀합니다.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역자, 배신자, 극우, 피의 보복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보복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파업을 했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 7일경 최승호 사장이 MBC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기존 경영진이 불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들과 함께한 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존 경영진 체제 내에서 사 측에 순응하여 왔다고 판단한 제3노조 소속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를 취재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8일경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보도국 업무를 수행해 온 비노조원인 보도본부장, 보도국 국장과 취재센터 내 보직 부장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등 간부를 일괄하여 면직함과 동시에 새로운 보직 부장을 모두 파업에 참여한 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로 임명합니다.'

참 저로서는 함께 옛날에 기자실에서도 보고 했던 또 다 같은 선후배 관계였던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파업에 참여하고 어떤 시기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보복의 대상, 숙청의 대상이 되는 이 MBC 내부의 사정이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이어진 인사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마가 어떻게 죽었는데요, 진짜」 하는 의원 있음)

글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MBC의 또 다른 사람들도 유산도 하고 암도 걸리고 했습니다. 이게 나는 굉장히…… 왜 이런 내전 같은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을 깨자고 만드는 법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법에서 핵심이 뭐냐면 MBC 방문진 이사를……

(「용마 아시잖아요. 용마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MBC의 전쟁 같은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MBC 노조의 핵심 세력들이 MBC 경영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적어도 중립적인 사람들이 중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용마 노조위원장도 제가 참 이름을 거명하기가 힘들 만큼 안타까운 심정인데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당사자들도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당시에 인사에서 배제됐던 어떤 여성은 유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복적 인사조치로 인해서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전쟁터도 아닌데 쌍방 간에 이렇게 큰 심적 타격과 인간적인 적대 상황이 되어야 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 한 당사자들이 다시 MBC 방문진 이사회의 주축으로 된다는 것은,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이 위임한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내 소란)

보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파업에 불참한 제3노조 소속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에게는 부서 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취재센터 내 사회부, 기상팀에 발령하고 연합뉴스 검색, 날씨 단신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취재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취재센터 외 부서, 특히 뉴스콘텐츠센터 뉴스콘텐츠편집부 내지 뉴스데이터팀, NPS준비센터 뉴스아카이브팀, 뉴스시스템팀 내지 뉴스영상관리팀, 뉴스데스크편집부 생방송뉴스팀 등에 배치하여 영상편집 업무나 뉴스영상의 색인 작업,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중계차 연결 업무 등 기존의 취재기자가 아닌 카메라기자나 파견직, 계약직, 중계PD 등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취재센터 소속 취재기자의 노조별 비율은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총 127명 중 1노조원 66명, 제3노조원 24명, 비노조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2017년 12월 31일—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지요—기준 총 106명 중에, 여기에는 귀임명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채 형식적으로만 취재센터 소속이었던 해외특파원 12명은 제외됐습니다. 여기에서 제1노조원이 10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3노조원 2명—그러니까 제3노조는 다 밀려난 것이지요—비노조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 시기에 파업에 참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폐가 되고 부역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사 보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되면—1년 뒤입니다—이 보도국은 1노조원이 압도적으로, 111명 중에 1노조원 109명, 3노조원 1명, 비노조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송사에서 어느 노조의 파업에 가입했다고 방송사 보도국의 주요 보직을 결정하고, 방송사 보도국에서 자리를 뺏고 쫓아내는 것이,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에게만 취재센터 내 보직 부장으로 임명하거나 취재 업무를 부여하는 인사상 특혜를 주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노조 소속이나 비노조원인 취재기자는 취재 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여하거나 기존에 취재기자가 하지 않던 업무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MBC 소속 근로자들이 제3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각각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으로써 2017년 7월경 904명이던 제1노조원 수가 2018년 12월경에는 1240명까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한 노조의 편에 붙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노사동일체가 되는 겁니다.

‘반면 2017년 7월경에 100명이던 제3노조원의 수는 2019년 4월경 30명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2017년 파업 당시에 제3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제3노조 소속 근로자 박 누구 등 3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0번 기재와 같은 인사발령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그 불이익의 내용이 이렇게 법원에 별지로 상세히 첨부돼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점잖은 이야기입니다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가 지금 계속할 수 있는데 이정헌 의원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정헌 의원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MBC 공영방송의 내막에 대해서 저도 비극적 사건도 많고 해서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모르는 대목이 많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 다 잘 압니다, 기자실에서 선후배로 또 동료로서 어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좋은 사이가 원수가 되었을까. 다 옛날에 서로 같은 팀원들이었고 그 어려운 출장도 같이 다녔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시기에 파업에 참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부역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다음 인사에서 배제당하고 숙청 대상이 되고…… 노조가 어디 전쟁터입니까? 방송사가 그런 곳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건 방송노조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조 탓만 하십니까? 왜 그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잘 알지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되고.

지금 우리 방송노조의 행태가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노련의 감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신문사 노조랑 참 사정이 다른 것이 방송사 노조는 파업을 통해서 점점 더…… 파업이라는 것이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 파업이 극대화되고 이 파업 과정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최승호 사장에서 보듯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중요한 멤버들이 경영진이 되고 다시 국가에 큰 혼란을 끼쳤던, 나중에 허위사실로 다 밝혀진 방송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런 방송을 확대 재편성해 내는 이런 식의 공영방송이 진정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날리면」 하는 의원 있음)

바이든-날리면도 조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정헌 의원 기다리실 테니까 제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펀드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가 1억 불을 글로벌펀드에 기부를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ODA 사업을 하면서도 양자로 500만 불, 1000만 불씩 줬지 글로벌단체에 1억 불을 기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 해 보는 일이니까 뉴욕 정상회담에서 1억 불 해 놓고, 지금 여러 사실관계로 파악하자면 아마 대통령이 ‘이것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여기에 비속어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모로 보더라도 미국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1억 불이 아니라 10억 불, 100억 불씩 기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런 나라가, 바이든이 무엇 때문에 쪽팔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자막을 만들어서 외교 문제로 만들려고 해 가지고, 백악관에 물어봤는데 백악관에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도 못 하고…… 우리나라는 1억 불이 큰돈인데 혹시 야당에서 1억 불 가지고서 ‘너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국민 돈 써도 돼?’ 하고 막 혼낼까 봐 겁이 나서 이것 욕먹는 짓 아닐까 하면서 좀 비속어가 들어간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내 생각에도 ‘아이고, 제가 걱정이 돼서 조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21일 24시 경과)

그리고 그런 것을 꼭 영상으로 해 가지고 들리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자막을 입혀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문제는 MBC가 간단히 정정보도를 통하면 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확증편향으로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MBC 노조가 그렇습니다. MBC 상황이 노조가 권력입니다. 그 핵심의 요지는 보면……

(「김은혜 의원……」 하는 의원 있음)

김은혜 의원의 이야기도 내가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대통령이 걱정이 돼서 조금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방송에서 없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걸 미국도 없는데 괄호 안에 미국을 넣고 억지로 마치 미국 대통령이 쪽팔릴 것처럼…… 바이든이 왜 쪽팔립니까. 문맥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로 MBC가 써 놓고…… 그건 우리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불 기부 약속해 놓고 이것 우리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쪽팔려서 어떡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앞뒤 맥락도 안 맞고 왜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욕을 합니까. 아이고, 참……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국제 글로벌펀드에 1억 불을 약속한 것은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글로벌펀드 디렉터가 저희 사무실로 와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도 양자 외교수단으로 ODA를 찔끔찔끔 나눠 주지 말고 글로벌펀드로 해서 큰 국제적인 공조를 같이하자’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방문진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 방문진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는 않다고 할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MBC…… 이것 나중에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재미없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니까. 불편하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은 서로 핑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노조가 시작되고 저 노조가 누구를 파업하고 또 저 노조 파업하니까 인사조치를 하고 그 인사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밀려나 있다가, 그래서 MBC가 마치 무슨 점령군 되듯이 이 사람 바뀌면 저 사람이 오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안 들려, 안 들려.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정헌 의원 너무 많이 기다려서, 지금 이정헌 의원 표정이 굳어져서 내가 그냥 끝까지 달릴까 하다가……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상임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 마음대로 모든 법을 할 수 있고 하면서, 말씀도 많이 하셨으면서 소수당이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호소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나눠 써야 되는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더 할까요? 화장실 갔다 올까요, 한번?

그래도 일단 마무리는 해야겠지요.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소 도입 논의가 지금 여당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하고 과방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유발 하라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또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를 함께 상세히 통독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4년 전의 가짜뉴스 방지법, 허위 조작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소 5배를 도입할 때와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도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걸 징벌적 손배소로 해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를 유도하는 그런 선진적 입법으로 오보를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고 기업이 망한 뒤에 징벌적 손배소로 받아 본들 복구가 되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엉뚱한 재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해 국제유엔 인권보고관이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에게 재개정을 요구하고 표결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그게 2022년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유튜브가 오늘 유발 하라리의 책에서도 나오고 또 '페이크와 팩트'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나오고 많은 책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페이크 뉴스가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정당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걱정, 특히 유튜브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방송통신위원회를 5인 체제로 재구성하자, 그래서 지금 야당이 두 명 몫을 하니까 여당에서 그 두 명을 좀 못마땅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여야가 같이 합의합시다. 여당이 굳이 배척하는 사람을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표결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추천해 봐야 안 될 일인데. 그래서 이 알고리즘 문제라든가 구글의 문제 또 소셜미디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빨리 신속하게 5인 체제를 복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소지, 특히 부칙 4조가 이 새 법의 발효와 함께 현직 공영방송 사장의 퇴임을, 교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80년 국보위법 부칙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크다,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도 편성 자유의 문제, 방송 자유의 문제,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편성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음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벌칙 조항 역시도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려서 이 법안의 재고를 요청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법은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원단체, 국회가 위임하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위임하지 않았지만 교원단체의 한 사람을 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원단체가……

지금 교원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특정한 단체를 배제하고 특정한 단체를 하겠다는 그 의도가 그 조항에 있습니다. 그 구성을 읽어 보십시오. 아마 이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못 보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대표성의 문제가 바로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이 방송법 문제는 좀 보류하시고 그 조항부터 한번 살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복 80주년의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더 평화롭고 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공영방송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짜·허위주장 뉴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진실로 맑은 물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통합과 또 균형된 정보를 주는,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자산을 발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약속했듯이 이정헌 의원에게 토론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간 25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짐을 많이 싸 가지고 오셨네.

○최형두 의원 반도 못 읽었습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정헌)

(00시10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이정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많이 싸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정헌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박수 쳐 주십시오.

(박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에 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고 또 제가 찬성토론을 지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 하나가 아닙니다. 법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그리고 철학을, 또 우리가 지켜 내야 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인재의 힘만으로 그리고 교육의 힘만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수 퇴장을 하셨군요.

최형두 의원님께서 앞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3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기자로,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방송의 경험이 없고 방송기자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경험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깊은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방송기자와 뉴스 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언론인 생활을 했습니다. 신문기자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28년 기자 생활을 하는 기간에 22년 동안은 기자, 취재를 하면서도 뉴스 앵커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메커니즘,

또 뉴스가 제작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또 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압력에 시달리고 또 외풍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끊임없이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이어 가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방송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 3법이 개정되면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BBC 예를 들면서 BBC 방송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뿐만 아니라 과방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에도 계속해서 BBC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방송법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기간에 왜 그렇게 수많은 방송탄압과 언론장악 시도가 있었고 또 언론을 장악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글로벌 표준이 돼 있는 방송법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글로벌 표준인 방송 3법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인정하신 것처럼 과방위 법률심사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또 방송법을 대표발의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와서 방송 3법을 반대하신다고 주장하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방송사 안에서, 특히 MBC 그리고 KBS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동료 기자와 선후배들 사이에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면서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복수극이 진행되고 있고 반대세력에 서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현실들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31년 전인 1994년 광주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도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쫓아내기 위해서 노조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기억이 있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고 경영진을 또 자기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면서 방송을 장악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와 또 여러 가지의 보복이라든지 복수극들을 멈추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민주당은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수 김민기 님의 노래 '작은 연못'을 이야기하시면서 '붕어 두 마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 3법을 개정해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방송 3법의 핵심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12·3 내란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집권 기간에 어떻게 방송과 언론을 장악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얼마나 무도하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는지, 훼손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존 밀턴이 1644년에 발표한 산문 '아레오파기티카'라고 하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자유의 경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레오파기티카'라고 하는 책 제목도 생소하실 겁니다. 언론 자유의 경전 또는 표현 자유의 마그나카르타로도 불리는 책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검열 반대와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주제로 쓰여진 글입니다. 당시 영국 의회가 출판 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검열을 강화하려고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존 밀턴이 연설문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밀턴은 사전검열이 진리의 발견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진리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17세기 영국에서 방송이 없었으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의 자유를—더 정확하게—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펴면 앞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책도 좀 제가 읽어 드리고 지루하지 않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와 통치자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의회 출입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국가 이익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를 글로 씁니다'. 그때는 소통하는 방식이 글이 가장 정확하고 또 전달력이 있었겠지요, 방송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또 책을 출판하는 방식도 있었겠습니다만.

'나는 적지 않은 노력이 소요되는 그와 같은 일에 처음 착수할 경우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내적 동요나 흔들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를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17세기 영국에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말에 희망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확신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상념들을 갖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책은 이어 갑니다. '우리가 희구하는 자유는 국가 안에서 아무런 불평도 제기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자유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이 자유롭게 청취되고 숙고되고 신속히 개혁될 때 비로소 현인들이 추구한 최고 수준의 시민적 자유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평'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정부에 대한 비판 또 국가에 대한 비판, 이런 비판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그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유지될 때 국가의 최

고 수준의 시민적 자유가 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한 두 군데가 있네요. ‘우리가 희구하는 자유는 국가 안에서 아무런 불평도 제기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불평이 자유롭게 청취되고 숙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은 어땠습니까? 허울뿐인 자유를 부르짖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윤석열 씨, 그는 그렇게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자유를 지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 낸 새로운 세상에서 2025년 8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시민의 자유, 그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초는 단연 사상과 표현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 책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금 졸리실 때쯤이면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최형두 의원께서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 3법을 바꾸지 않아도 문제가 있으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탱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과연 할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와 언론장악 시도, 언론탄압, 방송장악,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재명 정부 너희나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는, 정치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치가 그렇게 만든 공정한 시스템을 믿고 국민은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자부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언론장악과 방송탄압 그리고 낙하산 인사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 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는 국회의 작업이 바로 방송 3법의 개정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 동안의 언론자유지수,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43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년이 지나고 나서 43위에서 47위로 하락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1년이 더 지난 뒤에는 무려 6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15단계 추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울뿐인 자유를 부르짖었던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현주소였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가 훼손된 상황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는 근대화 이후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언론과 디지털미디어의 시대,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적 정보 자산을 국민에게 보급하고 공유하며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

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객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이 방송 3법의 개정인 것입니다.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 왔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재이자 필수 사회기반입니다. 초석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권력과 자본에 휘둘린다고 한다면 국민의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되려면 공영방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필수적인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공영방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공영방송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공영방송이 체계적으로 훼손되거나 또 권력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은 왜 존재할까요? 공영방송은 그리고 누구의 소유일까요? 공영방송은 정부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것일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것도 아닙니다. 정당이나 권력자의 소유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철저히 시민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진실을 전함으로써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땡윤 뉴스를 우리는 지난 3년 끊임없이 지겹도록 지켜봐야 했습니다. 명품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하면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하는 민주주의를 검찰독재 정권이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서 KBS를 장악한 박장범 사장, 과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단 말입니까?

대통령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박장범 당시 앵커는 영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의 자리를 잠시 내어주면서 앉으라고 박장범 앵커에게 했던 윤석열 그 사람에게 박장범 앵커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옛날 사극에서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소위 KBS의 앵커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다는 언론인이 권력자를 향해서 충성 서약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충성 서약을 하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을 내뱉듯이 자리를 내어준 대통령을 향

해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던 KBS 예비 사장은 그날로 비판과 견제의 칼날을 부러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인이, 방송이 권력자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하는 식의 충성 서약을 하는 순간 그 공영방송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영방송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땡윤 뉴스를 내보냈던 박장범 사장,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존 밀턴의 책 ‘언론 자유의 경전 아레오파기티카’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없다면 모든 찬양은 아부와 아첨에 불과합니다. 먼저 분명히 찬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찬양받아야 합니다.’

박장범 앵커가 현직 대통령을 찬양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대통령이 찬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따져 봤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양받을 가치가 있다고 결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장범 앵커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찬양할 때 중요한 조건은 찬양받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어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찬양받을 만한 그런 상태였는가,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었는가 굳이 물을 필요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장본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장본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장본인, 그 장본인이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앞에서 찬양을 했던 KBS 사장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그가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글이—그의 말이—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장범 앵커가 윤석열을 찬양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 찬양하는 대상,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의 말과 글이 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몇 달 뒤에 KBS 사장으로 지명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박장범 예비 사장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장범 앵커가 찬양했던 윤석열을 왜 그가 찬양받아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왜 찬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박장범 앵커 스스로도 제대로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KBS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사장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장을 추천하고 또 그런 사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사회의 건강한 작동에 필수적인 과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접근성 높은 플랫폼입니다. 공영방송은 정보에 기반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견고한 공론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에 의해 장악돼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방송만 하는 공영방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잘못된 방송 3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잘못된 시스템이 엉뚱하게 작동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디지털 불평등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하면서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으로 다룰 교육공영방송, EBS 방송이 바로 그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정보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잘못된 거짓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데 또한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론장의 빈곤……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의 감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존 밀턴의 책 ‘언론 자유의 경전’, 17세기 영국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똑같이 우리 헌법과 방송법도 담고 있습니다. 상업 미디어의 확산, 정보의 편향성 그리고 허위정보의 빠른 전파가 특징인 오늘날의 시대에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진실의 침식에 맞서는 중요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영방송이 절대 정치권력 그리고 자본권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순간에도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우리의 공영방송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표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 3법을 존치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민주적 참여의 필수적인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영방송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의 통로가 훼손되거나 침묵한다면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조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언론을 접하면서, 방송과 신문을 접하면서 '과연 이 정보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언론중재위에 회부되거나 소송에 걸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보낸 기사, 우리가 내보낸 방송에서 팩트가 틀린 것이 있느냐. 팩트는 맞지 않느냐. 팩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가. 팩트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주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편화된 팩트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기자와 뉴스와 신문기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파편화된 팩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던 저 역시 이 같은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편화된 팩트를 주장할 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앞에서 보면 평평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평평하게 생겼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스마트폰은 평평하지만은 않다. 굴곡이 있고 또 타원형도 있다'라고 주장하면 '무슨 소리냐. 내 팩트가 틀렸느냐. 앞에를 봐라. 스마트폰은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파편화된 팩트만을 나열하면서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진실을 추구할 경우에 권력과—정치권력 특히 말이지요—그리고 자본권력으로부터 혹시라도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광고를 유치하고…… 또 언론의 생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정치권력에 잘못 보여 가지고, 밉보여서 세무조사를 당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때로는 '에이, 뭐 그것까지 다 찾아서 취재하고 방송하는 데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내가 취재한 것만으로도 하나의 팩트는 맞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파편화된 팩트들만 나열되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편화된 팩트만을 나열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그런 기사와 언론을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이 통과됐고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외부 압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에 투입되고 낙하산 사장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들을 구성하고 또 그들의 경영진이 지휘하는 보도책임자와 편성책임자가 윗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면서 방송을 제작하고 뉴스를 제작하는 그런 상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이 통과됐고 이제는 EBS법이 남았습니다. EBS 법률안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EBS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최형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후견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정치에 종속되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정치에 종속되는 현행 방송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형두 의원은—물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이사 선임 방식이 단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정치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추천하면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추천하는 이사들 다 받아들이고 그냥 해라' 이 말은 나중에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또다시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식 인사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그래서 배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을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해야 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하면 그게 대의민주주의입니까? 그러면 대의민주주의의 가치와 목적을 다 실현하는 것입니까?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전지전능합니까? 모든 것들을 한 번 선택받으면 4년 동안 제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 KBS 사장으로 앉히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고, KBS·MBC·EBS 이사로 앉히

면 되는 겁니까?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4년 동안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는 정치인들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하고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우리가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9명이었습니다. 4명을 더 늘려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보다 훌륭한 사람, 공영방송의 가치, 교육방송공사의 가치와 목적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명이던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그동안에는 국회의원들,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공영방송들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비위를 맞췄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만 교육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에게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에게도 추천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집단지성으로서 보다 나은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선출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국회에서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던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던 조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방송통신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십니다만 그 선례를 그리고 그 잘못된 관행을 윤석열 정권이 되풀이해 왔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것들 다 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계속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권하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격이 없는 사

람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앉히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칭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알박기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비상계엄의 그 혼란 속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사장으로 앉히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후배를 앉히고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열 명 정도가 아니라 백 명이 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국회의원들이 뚜다닥 모여 가지고 대충 협의해서 사장으로 추천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별과 연령, 지역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해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든지 보수가 정권을 잡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영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사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연결고리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9명은 그동안에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EBS 사장, KBS 사장, MBC 사장에 앉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내려 꽂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단순해야 좋다고요? 단순하게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뚜다닥 결정해 가지고 사장 내보내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조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았던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절감한 것입니다.

정말 글로벌 표준에 맞는 방송 3법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됐겠습니까? 그런 방송 3법을 그대로 놔두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권과 정부와 집권 여당 사람들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힘겨운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방송 3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끊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한 번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 낙하산 인사, 대통령과 함께 뜻을 맞춰서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권과 사장 선임권들을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공영 3법의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가 추천한 3명, 대통령이 2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잘 운영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손볼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못 들어가고, 이사회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대상 기관들을 선정할 때 있어서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바꾸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복잡하더라도, 그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를 제대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송 3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영방송 3법 그리고 EBS법은 교육방송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성별과 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도록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이사회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분명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잘 살필 것입니다. 제대로 면접할 것입니다. 숙의·토론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절대 방송통신위원회, 사랑하는 후배가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맡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육방송공사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방송을 걱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과연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반대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을까,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를 장악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 3법의 개정 이전부터 모든 주요 방송사에 있는 편성규약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었고 이에 따라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편성위원회는 갑자기 떨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 이전부터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상당수의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와 MBC·SBS를 비롯한 공영방송, 민영방송사 열 곳이 모두 경영진과 방송종사자가 동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규약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성위원회 자체가 새로 생기는 기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또는 방송종사자 대표들이 원래부터 이 위원회에 참여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편성위원회의 운영이 법적으로 명문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새로운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방송사의 편성 권한을 오로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작 간부나 보도책임자와 편성책임자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장과 경영진과 제작 간부와 보도책임자가 편성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조성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더군다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권력과 자본에 종속돼 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종속돼 있는 방송사라고 한다면, 낙하산 사장과 경영진이 편성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편성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은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이 땅에 없었던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것이 갑자기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문화되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전혀 새롭게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 즉 노동자 측과 경영진 측이 똑같이 절반씩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단독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동수 구조에서는 노사의 의견만으로 아무런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자 측에서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영방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사 동수 구조에서는 노조 의견만으로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편성위원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노사 양측이 균형 잡힌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런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말고도 각 방송사에는—제가 있었던 JTBC에도 공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가고 방송이 나간 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방위가 열립니다. 이것은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방송이 이루어졌는지, 공정한 기사가 실렸는지에 대해서 노

사 양측이 절반씩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소지를 따지고 다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논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편성규약,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절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 한 분도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 공영방송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본인들이 반대를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그냥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4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무책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노영방송의 근거로 내세웠던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나친 억지 주장이고 일방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강제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는 KBS와 MBC, SBS를 비롯한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사에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조문 어디에도 노사 동수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는 편성위원회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방송사 측이 5인, 취재·제작 등 종사자 대표가 5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취재와 제작 등 종사자 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조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직원의 50% 이상, 심지어는 80% 이상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대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견제와 또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조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한쪽이 편성위원회를 장악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규정을 법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사 동수 구성 자체가 노조의 과도한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규정할 뿐입니다. 그 대표가 꼭 특정 노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방송사에 노조가 없다고 한다면 종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편성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면 됩니다.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 상황에 맞게 대표를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노조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무조건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편성위원회 운영 방식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절반은 여전히 경영진의 추천 몫입니다. 노사 동수입니다. 절대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제도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편성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편성위원회를 확실하게 구성하도록 법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편성규약을 정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방송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문 규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하에서 공영방송, 노사가 합의하고 편성규약에 넣었던 수많은 조항들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배제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규약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했던 박장범 KBS 사장, 박장범 KBS였던 것입니다. 박민 사장 체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조의 편성 개입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과장된 해석입니다. 균형 잡힌 편성 논의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은 싹 빼놓고 마치 처음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없었던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혹세무민입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거짓 정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편성위원회는 있었습니다. 편성규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것입니다.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이미 각 방송사에 존재했고 편성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취재·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사가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된 규약입니다. 그런데 편성규약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이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공영방송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 방송사는 이런 편성규약을 만들고 공표함으로써 외부나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 없이 언론인의 독립성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약의 준수 여부를 제대로 살피고 편성과 제작 관련 현안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취재·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율적인 보장 장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방송사 경영진이 편성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편성규약을 무시해도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 정권하에서는 됐습니다. 낙하산 사장이 제 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편성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편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 방송법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의 경우에 내부 규정상 전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개최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KBS 등 일부 방송사에서는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통제하고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법 개정의 한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규약을 어겨도 처벌할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규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법에 명문화하고 제대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제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규약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것 아니냐? 너무나 처벌 위주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항처럼 편성규약 제대로 만들고 편성규약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편성위원회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규제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제대로 된 실천을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동안 자율에만 맡겨 뒀더니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법의 힘으로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취재·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방송사의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편성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있던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시 수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이 장악하는 노영방송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다시는 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떼쓰기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잘못된 주장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너무나 침해했고 윤석열 정권이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나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송의 자유의 중요성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단순한 주관적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형성을 가능케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의 성격

또한 가집니다. 방송의 자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방송이 정보와 의견의 유통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이 그 본래적 역할, 즉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실현과 민주 정치 구현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이 본래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사회를 구현하고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방송, 공영방송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민영방송 역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민영방송 역시 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제3항은 '통신과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인 원칙,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균형 있게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인 원칙 모두에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방송에 관한 입법 형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헌법과 방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가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경영진의 구성 방식과 임명 절차를 그래서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과 관련한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수신료와 관련된 규정,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여러 차례 번복되고 수정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를 흔들었습니다. KBS의 제작비, KBS의 재원을 옥죄면서 KBS 경영진을 결국에는 내쫓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KBS의 수신료 납부 방식을 바꾸면서 KBS에 내부 분란을 일으켰고 KBS 내부에서 KBS 사장에 대한 비토 세력을 키웠고 그로 인해서 KBS 사장을 내쫓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방송은 국가의 공식 입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국민 사이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은—물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여론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권력과 자본의 압력을 제대로 버텨 내지 못한 채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매체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공영방송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의 국가 독립성 원칙은 방송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게 실현되어야 할 헌법적인 원칙입니다. 언론의 국가 독립성 원칙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있어서 독립성 원칙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기원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신문은 본래 사적인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검열을 벗어나는 것이 중심 과제였습니다.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에 나오는 출판의 검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고. 정권은, 국가는, 정부는 검열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은 검열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방송은 그 출발부터 국영 혹은 공영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국가권력이 방송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물론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방송 분야에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는 방송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법상의 업무로 간주한 적이 있습니다. 인적·물적 독립성만 확보된다면 국가기관 내부에 방송기구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국영방송 체제가 그렇게 해서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인사권이나 예산편성 등 운영상의 요소에 따라 방송의 편성이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정권하에서 들었던 라디오뉴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공화국, 친군부가 방송을 장악했을 때도 기억합니다. 모든 뉴스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이름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5공 때는 땡전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그런 뉴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한밤중에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영방송의 그런 잘못된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권이나 예산편성 등 운영상의 요소에 따라 방송의 편성이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의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방송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 KBS 그리고 공영방송 EBS 사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겠습니다만 KBS가 국영공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의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은 국가, 특히 행정부가 방송에 대해 구조적이거나 실질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헌법적인 원칙입니다.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공영방송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언론의 자유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그에 따른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방송이, 공영방송이

그리고 민영방송이 때로는 제도적인 보장을, 법률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입법기관이나 행정부가 방송에 대해서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정권이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은 여전히 끊임없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적인 가치가 현실에서도 구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제대로 된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명확하게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5명을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든 정치권력이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사를 구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KBS와 MBC·EBS의 이사회 구성도 정치권의 비율이,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의 방송법은, 이미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남아 있는 EBS 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낮춘 것입니다. 40% 미만의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법 제정 이후의 현실도 지금의 우려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과 방문진 이사를 절차적인 정당성 없이 해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공영방송과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속으로 방송사 사장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지배구조를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방송을 뒤흔들었습니다. 방송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런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맞지요?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현 간사님, 맞지요?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가 그런 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혁신적인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도 없이 새벽 1시 31분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뉴스 앵커를 꽤 오래 했습니다. 22년 동안 했으니까요. 31년 전 1994년 사회부 기자 시절 3년 동안 뉴스 앵커를 안 했었고요, 1997년부터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뉴스 앵커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취재를 하고 방송 리포트를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도쿄 특파원 하는 3년을 빼고 22년 동안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뉴스 앵커를 하면서도 제가 최장으로 생방송을 많이 한 것이 한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6시간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박수를 쳐 주시니까 제가 힘차게 끝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하고 또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4명, 6명 정도가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렇게 13시간을 넘겨 가면서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채우시고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이 한밤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6시간 정도 생방송을 했던 사례는 태풍이나 산불이 났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방송 원고도 없었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산불피해·태풍피해 소식들을 전하면서 밤을 꼬박 새기도 하고 또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6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방송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방송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민영방송에서 방송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방송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공영방송, 민영방송도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력이 KBS와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을 선거 전리품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배후에 있는 정치권력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일종의 관행이자 선례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을 일종의 선거 전리품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하에서도 끊임없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펴면서 2인 체제를 유지해 왔고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 있는 1인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판결과 집행정지 신청해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1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에, 방송 알박기 인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인 2인 체제하에서 보궐 이사로 임명한 사건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관이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 임명을 밀어붙였지요. 단 2명의 위원이 심의와 결정을 통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가 임명한 이사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사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방송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통신과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할 때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입법 목적,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2인 체제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사 임명, 이사직 유지를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행정부의 공무원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확정된 법률의 취지 그리고 집행정지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해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소송을 이어 갔고 거의 100전 100패, 끊임없이 패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패배하는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내려지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런 성실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해석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여러 가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들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위법한 처분을 반복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잘못된 심의 의결 기능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통위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합의제 기구는 구성원 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의 의결 절차 없이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은 사실상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 공영방송 KBS의 이사 선임을 밀어붙였습니다.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과방위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과 잘못된 인사들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느냐,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만년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면 그 인사와 그 이사 임명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 5명의 위원이 다양한 의견과 때로는 반대의견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과 반대의견,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이사들을 선임하는 심사를 제대로 거쳤습니까? 그렇게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과 두세 시간 만에 뚝딱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수십 명, 80명에 가까운 이사

후보자들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을 고의로 지연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 때문에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이 안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무시한 채 현재의 모습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전 숙의와 실질적인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진 이사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주체는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씨였습니다. 그 윤석열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1인 체제를 만든 것도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정치적 목표를 윤석열 정권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법이 규정한 국회 추천 절차를 7개월 넘도록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됐던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윤석열 정권, 원죄가 있는 윤석열 정권, 결국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영방송의 구조와, 무너진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가치인 방송의 독립을 보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과 이진숙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장악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선방심위를 장악하고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가 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한 이사들의 문제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한 이사들은 과거 MBC에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들입니다. 정치적 공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이진숙 위원장 역시 포함됩니다만—동료·선후배들을 좌파라는 낙인을 찍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활동했던 노조원들을 좌파로 낙인찍고 배제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려거나 침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서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 침해입니다. 공직자이자 언론인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MBC를 장악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다시 EBS 법률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변천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는 2025년 대한민국국회의 한 역사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공영방송의 변천사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EBS를 포함한 우리나라 공영방송 법제 전반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EBS의 태동은 1981년 방송을 시작한 UHF 교육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됩니다. 그때 교육TV라고 나왔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육TV를 보면서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흑백 TV, 또 컬러 TV로 넘어가던 그 시점이 되겠군요.

1990년 12월부터 EBS라는 채널명이 생겼습니다. 1990년 12월부터 EBS가 그 이름으로 자체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교육개발원 부설로 운영되던 교육방송이었는데 1997년 3월 한국교육방송원이 창립됐고 독립적인 방송사로 EBS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KBS와 마찬가지로 100% 정부가 출자하는 소유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위상이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게 2000년 6월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한 시점이 2000년 6월입니다. 공영방송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1961년 개국한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 KBS TV의 전신입니다. KBS TV가 1961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KBS의 국영 체제는 1973년 공사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적인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국영방송으로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이게 공영방송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신체제, 불가분의 관계였으니까 말이지요. 국가 통제가 유지됐고 여전히 방송을 틀면 뉴스가 시작되면 박정희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땡전 뉴스가 이어지고 땡윤 방송이 이어지는 것들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공영방송이지 사실상 국영방송 역할을 다 했던 것인데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도 말이 공영방송이었지 KBS는 국영방송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980년 방송광고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관리되기 시작했고 제도로서 공영방송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이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작됐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로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땡전 뉴스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거쳐 왔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 역사가 그렇게 굴곡된 수많은 고비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MBC의 역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C 문화방송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MBC는 1959년 부산에서 민영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먼저 MBC 문화방송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59년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61년 12월 서울에서 한국문화방송으로 라디오 정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69년 1월 서울 인사동에 임대사옥이 마련이 됐고요. 서울 정동의 신축 사옥으로 또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게 됐지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련된 것이 1988년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해서 재원에 관련된 부분들,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된 것이 1988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에 방송문화진흥회법이 1988년에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르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주식 70%를 가진 대주주가 됩니다. MBC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은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게 됐지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의 편이냐? MBC 노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MBC 역시 수많은 고비 고비를 거쳐 왔습니다.

지금의 MBC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MBC 내부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직원들 간의 갈등도 여전히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MBC 그리고 KBS, EBS를 둘러싼 공영방송법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다시, 기존 방송법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정권의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악순환은 반복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MBC와 KBS, EBS 사장을 내려 꽂으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은 그런 상황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어찌 보면 내려 꽂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직원들끼리 정권이 바뀌면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갈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민주노총이 MBC 내부에서 큰 목소리를 냈을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모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MBC 노조에서, 민주노조에서 민주노총이 잘못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의 역사가 반복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때로는 주저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노조 출신의 사장이 들어섰을 때 그 전임 사장이 임명한 특파원들을 다 불러들인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파원으로 임명되고 특파원으로 떠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도쿄로, 워싱턴으로 떠났는데 그 특파원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 MBC고 KBS고 EBS고 간에 잘못된 것들은 다 내놓고 반성할 것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공영방송이 민주화 이전 체제의 한계를 품고 탄생했지만 시민사회와 공영방송 종사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방송으로 조금씩 전진해 왔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씩 전진해 왔고, 때로는 큰 변화 큰 개혁이 필요한 때가 있었지만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언론개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언론개혁 늦어지지 않게 반드시 할 것입니다. 언론개혁 TF가 구성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개혁도 추진될 것입니다.

파편화된 팩트만을 나열하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언론의 보도 관행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나태함 때문에, 때로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서 진실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파편화된 팩트만을 나열하는 그런 기사들을 쓴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언론의 잘못을 통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잘못된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언론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유지돼야 합니다.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자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만 언론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이 당당하게 소신껏 취재하고 기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출범 이후 일관되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방송장악을 위한 시도들을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장악 일지들을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서막이었습니다. 현 정권,

그 당시 정권입니다. 그 정권입니다. 당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서막이었습니다. 2022년이었지요.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위원장을 억지로 내쫓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고 결국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 면직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웠습니다. 그걸 면직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한상혁 위원장을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이 헌법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비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면직 사유로 제시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대면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내쫓겨 났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소장에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인 표현이 기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 추천 단체 선정 과정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법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제거한 뒤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핵심 미디어 규제기관,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려 꽂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들을, 그런 절차들을 활용해서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과거 보수 정권에서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는지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 숙청을 자행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이었습니다. 현 정권은 아닙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은 법적 메커니즘이 정의의 공정한 추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불편한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면직을 시켰던 것입니다. 법원이 한상혁 위원장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강행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미리 정해진 숙청의 목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언론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아 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차례 바꾸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렇게 내몰았던 것 아닙니까.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것들은 깡그리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시도를 짚어 보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에 이어서 윤석열 정권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

선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한 뒤에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까지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으로 바꾸고 나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내쫓기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시도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의 경영과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이 해임의 이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법원의 판결문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결정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불복했습니다.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면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해임처분의 효력을 법원은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불복하면서 항고하고 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권태선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으니까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다시 제자리를 잡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요. 후임자가 임명이 되겠지요. 그때까지 권태선 이사장은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 시도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 잘못된 방송통신위원회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 보장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던 것입니다.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해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징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임기와 상관없이 그 공공기관장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겠지요. 잘못했다고 한다면,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에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인됐다고 한다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자격하다고 한다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 1년 이상을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임기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났고 법원에서 확실히 문제가 확인됐다고 한다고 하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

면 임기 운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권력이 언론통제를 위해서 월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인데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법적 개입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사법부가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방어선이 됐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법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잇따라 깨졌는지를 제가 법원 판결문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역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2025년 3월 13일 결정입니다. 신청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해임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집행정지를 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부분입니다. 재항고를 한 사람은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해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면서 재항고를 기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해임처분이 잘못됐고, 위법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이 바로 그다음 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이진숙 위원장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권태선 이사장이었습니다.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태규 위원장이었습니다. 2024년 이 당시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처리 과정에서 돌아오지 못할 때 그 당시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제기한 소송의 비용을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 것입니다. 패소한 것입니다. 원고 권태선 이사장이 이긴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김태규 직무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리하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그리고 그 전의 방송통신위원회, 그 전의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진숙 위원장을 2022년…… 해임하려고 했을 때 이유로 들었던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했을 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첫 번째가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을 방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서울행정법원은 판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법원은 판결합니다.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데 해임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했다는 부분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혐의들을 내세우면서 권태선 이사장을 파면하고 해임하려고 했던 윤석열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런 이유들이 절대로 인정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인 위법을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적인 위법도 서울행정법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 권태선 이사장, 피고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이 소송에 대해서 실체적 위법과 절차적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권태선 이사장, 원고 편을 들었습니다.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렸었고요.

‘방문진은 중요사항을 합의체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한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피고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 이사회의 의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 등 방문진의 임무가 사회적 논쟁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맨 처음에 구성된 이유, 취지를 법원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쟁이 되거나 중요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이진숙 위원장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두 사람이 위법한 상태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사를 그렇게 밀어붙이듯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면접도 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고, 전에 있던 이사장과 이사들을 파면하거나 해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처럼 위법한 2인 체제로 구성되거나 운영돼서

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서울행정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사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결합니다. '그 심의 의결 결과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MBC가 과도한 임원 성과급을 인상하도록 방치하는 데 권태선 이사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 방치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해임 사유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법 위반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은 결국에는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서울행정법원의 2024년, 그러니까 작년 8월 26일에 효력정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패소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했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서울행정법원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결론 부분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에 김태규 직무대행과 함께 자격 없는 무자격 이사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밀어붙이고 권태선 이사장과 두 명의 이사를 내쫓은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 효력을 지금 당장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규정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계속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으면서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임기가 남아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고 그리고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내쫓으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노영방송을 우려한다면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묵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MBC에 압박과 탄압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과 검찰, 국세청, 고용부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MBC 목 조르기를 자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력에 거슬리는 비판 보도를 한다면서 MBC에 대해서 치졸하게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탄압을 했던 것이지요. 너무나 창피한 그런 보복 아닙니까?

윤석열은 출근길에 자유롭게 비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짜뉴스다, 이간질이다, 악의적 행태다 이런 표현을 동원하면서 매도했습니다.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MBC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압박했습니다. 국세청은 MBC와의 공식 질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복성 표적 조사로 400억 원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에 윤석열 정권의 국세청은 400억 원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복성 표적 수사, 표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C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추징해야지요. 추징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추징해야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추징해야 됩니다. 그런데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확인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MBC가 부당 근로를 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당사자인 윤석열이 아닌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 이름으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윤석열이 소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외교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 입은 부처나 입은 기관이 아니라 입은 자…… 입은 자는 윤석열의 주장대로 윤석열 자신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윤석열의 격노,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공영방송 탄압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숨 쉬는 자유 대한민국인지,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는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검열 국가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검열 국가로 후퇴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중요한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특히 자유로운 언론은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감시·경보 장치로서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집단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론을 정당과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로서, 그러니까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살아 있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언론이 살아 있으려면 권력과 자본이 언론을 휘어잡아서 돌리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 멋대로 정치권력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나 이사를 꽂아 넣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 비위 맞추는 기사를 쓰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러지 않았고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잡이로 내세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내세우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내세워서 방송장악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다는 것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무리한 심의,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땡윤 뉴스만을 내보내는 방송과 신문,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했고 그런 시도가 상당 부분 성공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무리한 심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과잉 규제하고 무리하게 법규에 없는 심의들을 이어 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조직부터가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잘못된 그 행태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방송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 끊임없이 1년 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류희림 그 사람, 그 장본인의 하수인 역할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의 언론이 무너져 내렸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민간 독립기구,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공영방송·신문,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우리 잊지 못합니다.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심의를 강행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9월 4일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국회에 출석해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행위다. 국기문란 행위다.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기구들이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9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데 대한 긴급심의를 제안하고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으로, 당시 여권 추천 위원—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위원—2인만으로 가결해서 긴급심의를 채택합니다. 이렇게 여권이 추천하는 위원 두 사람만이 가결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권이 단독으로 추천하거나 정치권력이 추천하는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사와 위원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당시 여권 추천 위원 2명,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심의를 제안한 것을 가결 처리합니다. 국회에서 중대하게 논의된 사안이다,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침을 내리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곧바로 작동한 것입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무더기 제재가 일사천리로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했던 류희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서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행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류희림의 지인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복붙한 비슷한 문구를 통해서 민원 사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넣었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느냐, 심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민원들을 똑같이 냈던 것입니다. 수일 동안 계속해서 복붙한 그런 문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됐던 것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주하거나 청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민원 사주 의혹, 이해충돌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류희림 위원장을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청부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 규정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자행했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함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입니까? 그런데도 그 글로벌 표준의 방송 3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올바른 행위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될 일이지 방송 3법을 안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방송 3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어김없이 권력자의 지침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움직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곳 국회에 나와서 중대범죄행위다,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말하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동하고 방송사들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고 경찰과 검찰이 나서고 압수수색하는 그런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KBS와 MBC, JTBC, YTN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잘못됐다고 잇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반성해야 됩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집 근처에서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4000원짜리 결제를 하고도 영업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만 2000원짜리 보리밥을 혼자 먹었다라고 하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른 아침에 법인카드를 업무를 위해 썼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직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저도 기억합니다. 2018년 1월 8일 이진숙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방송사 직원들, 방송사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모든 신분증과 법인카드는 반납하기 마련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또다시 긁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쓰던 노트북 다 반납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쓰던 기물들 다 반납하지 않으면 방송국에서 집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내고 법인카드 다 내고 노트북 다 내고 모든 인수인계가 다 됐다고 해야 '예,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방송국 문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곧바로 씁니다. 그것도 대전의 집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제과점에서 50만 원가량의 법인카드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서울에서도 50만 원어치의, 50만 원 가까운, 처음에는 제과류라고 했다가 과자류라고 했다가 빵이라고 했다가 롤케이크라고 어제는 또, 그저께입니다. 과방위 결산심사에서 현안질의 과정에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했었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롤케이크와 쿠키라고 또 답변을 수정합니다.

법인카드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의 증거가 있으면, 물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또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서울 강남의 집 근처에서 4000원짜리, 1만 2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커피 마신 것 이것, 이른 새벽에, 아침에 마신 것, 혼자 먹는 것, 혼자서 1만 원 이상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군다나 혼자서 1만 원 미만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이게 MBC의 법인카드 사용 기준, 사용 준칙을 확인을 해 봤고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만 원도 안 되는 몇천 원짜리 그 법인카드를 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나서 왜 법인카드를 썼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사직서를 2018년 1월 8일에 내고 사직서가 처리된 것은 그다음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사직서가 처리된 날은 그다음 날이니까 법인카드를 써도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표적 감찰하고 표적 심사하고 표적 신속심의하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론인으로서 활동했던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도 강행했습니다. 2022년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원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실시하고 긴급·지체 안건을 신속심의하고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야당 추천 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들과는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끼리 서로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지요. 이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권력에 치중돼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국회가 모두 추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추천하는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 60%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2022년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출범합니다. 당시 야권 추천 위원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현판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센터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권 추천 인사들은 모르게 여권 추천 인사들만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신속심의 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악의를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런 구성들을 통해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 심사하면서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기사가 나면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입틀막 하고 가짜뉴스 심의 대책추진단, 신속심의센터를 열어서 징계하고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KBS·MBC·JTBC·YTN에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장악하면. 정치권력이 제멋대로 거버넌스 구성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순한 구성이 좋습니까? 그게 단순하니까 투명합니까? 복잡하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한 번 선출된 정치권력이면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전지전능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합니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과 편성책임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직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편성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 보라고 하는 것이 편성규약에 규정된 편성위원회입니다.

이 편성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조가 장악하고 노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절반, 경영진 절반, 반반이 구성이 되어서 정말 철저하게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한쪽의 일방의 결정으로 공영방송이 휘둘리지 말도록 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단순하니까 투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는 것,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인가, 더군다나 연령과 성별·지역의 차별 없이 구성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된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을 선출한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니까 정치권력이 제멋대로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다 채우고 그 기구들이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600여 건의 신속심의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600여 건의 민원 가운데 실제로 심의가 진행된 건은 뉴스타파 2건입니다. 신속심의 대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신속하게 과징금 결정까지 내립니다.

이처럼 정당성 없는 심의 그리고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심의센터를 만들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심의센터를 구축하고 그 신속심의센터를 통해서 신속심의를 진행하면서 과징금을 때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대체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뉴스타파를 보고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이나 신문사들이나 언론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망동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럴 경우에,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가짜뉴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로 보여진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속심의센터로 넘기면 얼마든지 우리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 수억 원의 과징금도 때릴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옥죄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공영방송이 틀어 대는 방송과 뉴스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된 KBS가 저지른 만행,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자정, 이 시간 즈음 KBS에서 첫 방송된 것이 일본 기미가요입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KBS였습니다. 편성본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편성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책임 추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보름 넘도록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떠나 버리고. 그런데 그 사표도 수리하지 않고 KBS는 방치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편성본부장 나오라고 하니까 KBS 사장이라는 사람은 편성본부장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강제동행명령이라도 내려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KBS 직원들

은 진짜로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버티면서 편성본부장을 비롯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송이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KBS의 공영방송 체제, 거버넌스 체제,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고 편파·불공정 심의를 반복하고 거듭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권력이 가짜뉴스를 만났을 때 얼마든지 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해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씌우면서 신속심의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표적 감찰하고 표적 심사해 가면서 경고하고 옥죌 수 있는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이른바 김만배 녹음파일 사건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은 이용할 대로 이용했지요. 검찰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했고 2022년 9월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발언을 하고, 그다음 날 9월 5일 윤석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9월 6일 윤석열의 문체부와 방통위와 각종 부처들은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를 시사하고, 9월 7일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사형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과 기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형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 기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윤석열의 방송 장악과 입틀막은 시도되고 그 시도는 성공하게 됩니다.

9월 21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 기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된 일주일 뒤 방심위의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심의 확대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방심위가 언론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에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언론을 옥죄었던 것입니다. 정권의 하청 검열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은 없었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거버넌스도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과 야권들이 짬짜미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보위하고 정권의 비위만 맞추는 그런 하청 검열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하고 긴급심의에 반대하면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징금 의결, 신속심의, 최종 의결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위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방송심의소위원장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심의소위원장 자격으로 2022년 10월 5일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기 징계가 된 신속심의가 이루어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통해서 신속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이런 모든 단초를 제공한 민원들이 류희림 위원장 본인의 민원 사주, 청부민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친구들, 자기 동생, 자기 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원을 넣도록 하고 그 민원들이 접수됐다고 하면서 그 민원들을 신속심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당시 여권의 추천 위원들은 신속심의를 결정하고 그 신속심의를 하면서 방송심의소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 본인이 맡고 말이지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그렇게 뻔뻔하게 일사천리로 언론을 장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뒷배가 있었기에, 무슨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뒤편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큰소리를 치니까 자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침을 내린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신속심의하고 과징금 처분하고 그렇게 징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겠지요.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면 자기 멋대로 심의하고 과징금 내려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비판 보도를 모조리 진압했던 것입니다. 비판 언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과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를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심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한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된다면서 방송사들에 대해서 심의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를 심의할 권한이 없지만 방송사 기사에 대해서는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송사들에 대해서 신속심의를 하고 심의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군사독재정권, 국가검열 시대로 회귀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사독재 정권이 군사독재정권처럼 검열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태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계속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가 계속해서 짓밟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언론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짜뉴스라는 명분으로 신속심의하고 과징금을 때려 박으면서 입틀막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에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된 인터뷰 보도였던 것이고 그리고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사들이 인용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모조리 입틀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MBC의 탄압과 압박의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KBS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장범 앵커의 KBS, 친윤 방송 논란의 정점에 있었던 KBS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KBS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박장범 앵커의 KBS 사장 임명은 KBS 내부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에서도 수많은 지적을 하고 사흘 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자격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씨는 막무가내로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취임 첫날인 2024년 12월 10일 국립묘지 참배와 취임식을 취소하고 영상취임사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사장실로 몰래 들어가고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서 나가려고 보니까 KBS 직원들이 박장범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상취임사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총파업과 강력한 반대시위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 KBS 사장으로 선임되고 임명됐다고 한다면 KBS 직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KBS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KBS 사장으로서 KBS가 앞으로 어떻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웠는지 직원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영상취임사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취임 직후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임명하면서 KBS의 방송 가이드라인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했습니다. 분명히 KBS 노사가 치열한 논의 끝에 수년 전에 단체협약에 명시했던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건 전임 사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였다고 불렸던 박민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민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명동의제는 분명히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확실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임명동의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박장범 사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없이 질문을 했고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통합뉴스룸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밀어붙이듯 임명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 및 제작 책임자 임명 시에 해당 부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국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PD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도책임자와 또 편성책임자, 제작책임자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장의 인사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공정 보도를 위해서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일부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KBS 경영진이 KBS 노조와 노사협상을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도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는 이 단체협약을 KBS의 박민 사장이, 윤

석열의 술친구로 불린 박민 사장이 무시하면서 무력화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그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고 말했던,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했던 박장범 사장이 또다시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막무가내 행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노조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요구했던 수많은 일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 뒷배에 최대 권력자인, 검찰까지 장악한 윤석열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 정권이 최소 2년, 3년 계속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영구 집권의 야욕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여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들이 KBS를 이처럼 망가뜨렸습니다. 박민 사장 그리고 박장범 사장, 낙하산 사장들이 KBS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KBS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고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뻔뻔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임기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서 KBS를 망가뜨린 KBS 사장이 임기가 남아 있다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영방송을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제 발로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사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씨,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씨를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고 김건희라고 했다라고 하는, 자막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또 해당 언론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언급한 기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장범 사장이 KBS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권력 눈치 보기 행보로 인해서 박장범 앵커는 KBS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영방송 KBS 사장이 되고 KBS를 잘 지켰습니까? KBS의 신뢰도를 여전히 크게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중간한 보도로 이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당사자 장본인이 박장범 사장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고 박민 전 사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장범 사장이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고 KBS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자 KBS의 기자 495명은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도 KBS 기자들은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박장범 사장 체제하의 KBS가 '용산 방송이다', '땡윤 뉴스다' 이런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장범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산 방송', '땡윤 뉴스'라는 오명을 실제로 얻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내란범 윤석열의 KBS 박장범 사장 임명은 유효한가'라고 하면서 박 사장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 알박기 인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지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임명동의제와 같은 내부 민주적 절차를 우회해서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 오로지 권력만의 눈치를 살피는,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는 그런 인물,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앵커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하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그런 메인뉴스 앵커가 KBS 사장을 맡아서 KBS 공영방송을 이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상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 도구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임명된 사장은 내부의 견제 장치도 해체했습니다. 자기검열과 편향된 보도도 걸러 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파우치 발언이 결국에는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로 이어졌고 이러한 권력의 낙하산식 인사가 KBS를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친권력적인 서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널리즘의 진실성이 땅에 묻히고 훼손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을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MBC의 표적 심의와 탄압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MBC를 비롯한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 표적 심의와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사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행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규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기관인데 제대로 규제도 하지 못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정치적 도구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MBC '바이든-날리면' 논란 보복성 심의 이 부분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미국에서 전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던 대한민국의 교포들은 차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왔노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조국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외국에서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잡히고 논란이 일자 말도 안 되는 '바이든-날리면'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을 상대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국가신인도가, 국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2022년 9월 뉴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엑스엑스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MBC는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지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MBC의 유튜브 영상 게시 시점을 이유로 민주당과의 어떤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MBC는 9월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MBC는 해당 내용과 영상이 민주당의 문제 제기 이전에 이미 언론사들 사이 그리고 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다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풀기자단에 의해서 촬영됐고 전체 방송사에 공유된 영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혹도 없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보도였던 것입니다.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야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 같은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 대해서 한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언론통제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지요.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은 없던 것이 됩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비속어와 막말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날리면'이 되고 그 '날리면'의 주체가 바이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건 됩니까? 대한민국국회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비속어를 쓰고 막말을 해도 됩니까? 너무나도 구차한 변명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너무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피함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전 국민 듣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해당 의원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위원은 그걸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 MBC에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가 자막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을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허가 심사 시에 총 14점의 감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3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자가 나타나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KBS와 MBC·EBS 장악하고 방송사들·신문사들 장악하면 이런 쪽팔린 역사가 반복되니까, 창피한 역사가 반복되니까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끊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로는 정치권력에 포획돼서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MBC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제재를 가했고 법원은 나중에 이 같은 결정을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체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심위를 꾸렸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서 5개월 동안 30건이 넘는 법정제재를 쏟아 냈습니다. 정치 심의를 했습니다. 편향 심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방송사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19건

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 '파란색 숫자 1' 이게, 날씨를 전하는 기상센터 뒤의 CG에 파란색 숫자 1이 쓰여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이라고 하는 숫자가 MBC 뉴스를 전할 때 뒷배경에 그래픽으로 나왔다고 해서 심의하고 징계를 내립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등 다수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거나 MBC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및 기타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일관되게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이 같은 반복된 패턴은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방송탄압이 계속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인식되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방송탄압과 징계를 견제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언론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사법부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반복적인 이런 결정은 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한 규제·감독이 아니라 정치 심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또한 법과 공정성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사주 의혹, 청부민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대량으로 제기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한 개인의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제대로 조사하거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경찰과 검찰은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했습니다. 끊임없이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청부민원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 사주 의혹들은 의혹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 당시 심각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 단 한 차례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집, 차량, 집무실 어느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원 사주, 청부민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원 사주를 넣었던 자신의 가족과 지인, 친구 등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과 통화가 이루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경찰과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그 수많은 혐의와 의혹들이 덮힐 때까지 기다릴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

다. 그동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통화기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경찰은 언론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수사는 매우 강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민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메일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에도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검찰 역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직원의 양심고백이 나온 직후에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교체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거인멸의 의혹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민원 사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같은 비판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 강제수색을 통해서 민원 사주 의혹이 드러나고 청부민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그 민원과 청부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파고들다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지침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과 경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제대로 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세 달이 돼 갑니다. 두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함께하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훼손, 방송탄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윤석열 정권의 사법과 수사기관이 공정한 정의를 추구했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률을 지켰어야 합니다.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제대로 지켰어야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공영방송의 이사로 떨어지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일들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협하며 침묵을 종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그 잘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탄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영방송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그래도 뒤늦게 법원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수많은 소송들이 실패로 끝났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선거방송에 개입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그 역할들도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에 개입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방송개입위원회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의 모든 쟁점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심위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랬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그러니까 2024년 3월 28일, 2024년 22대 총선이 진행되기 앞서서—선거 기간이지요—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 사주 재판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전제한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안들 역시 월권 심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까지 윤석열 정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의 대상으로 삼았고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월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심의 대상이 아닌 것까지 심의를 하면서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심의를 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선방심위입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2024년 1월 15일 방송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것은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원이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지 않고 '김건희'라고 호칭하는 방송이 SBS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갔다고 해서 이 선방심위가 심의를 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하다못해 김건희 씨라고 하지도 않고 김건희라고 호칭했다는 이유로 선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아서 심의를 결정하고, 당시 여당의 추천 심의위원은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 자로 호칭하는 것은 진행자가 잡아 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잡아 주지 않았으니까 선방심위의 심의 대상이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에서,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선방심위가 선거방송 기간에, 선거 기간에 방송사를 심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의 대상이 아닌 것까지 선방심위는 심의를 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비위를 맞췄던 것입니다.

특정 방송사, 특히 MBC에 대해서 선방심위는 찍어 누르기 심의를 계속했습니다. 선방심위 6차 회의부터 12차 회의까지 7회 동안에 총 14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선방심위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2건, 권고 2건으로 연이어 중징계 결정을 내립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1건, 주의 1건.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평가에서 벌점 4점까지 주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2008년 선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음 생긴 이래 15

년 동안 관계자 징계는 단 2건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중징계가 남발된 것입니다. 그것도 특정 방송사 MBC를 표적 삼아서 이루어진 선방심위의 심의였습니다.

날씨 예보 CG에서 그래픽에서 파란색 1을 썼다라고 윤석열 정권의 선방심위는 신속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2월 29일 열린 선방심위 8차 회의에서 최철호 심의위원은 'MBC 뉴스데스크' 2024년 2월 27일 날씨 예보를 긴급심의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실제로 선방심위 10차 회의에서 긴급심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파란색 숫자 1, 그러니까 '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방송을 할 때 기상캐스터 뒤편에 있는 그래픽에 파란색 숫자 1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총선을 앞둔 기간에 오해의 여지가 있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해친다고 보고 의견진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선방심위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MBC는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서 당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이었다, 세제곱미터당 1㎍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 1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상캐스터 뒤편에 있는 그래픽에 1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란색 1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1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선방심위가 징계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또 파란색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이니 MBC가 안 그래도 눈엣가시인데 '옳다, 잘됐다.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MBC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MBC는 당시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기상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다,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은 조금 내려갔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방심위가 심의를 결정하고 의견진술을 받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날씨정보에 그날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내세우면서 1과 같은 그런 그래픽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지요.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있는 사실의 보도를 한 MBC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선방심위에서 신속심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내는 MBC를 비롯해서 비판 언론사를 탄압하고 옥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방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을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심의가 결정되고 징계가 결정되고 한다면 방송기자와 신문기자들, 현업 제작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방심위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김건희라고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 다른 방송사들은 일제히 실제 용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2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여사 호칭을 빼고 발언하자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정정합니다. 여사라는 호칭을 꼭 붙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평론가는 법안 이름에 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다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닥치는 대로 심의를 남발하면 이렇게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의 법안 명칭마저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바꿔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가 언제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MBC와 KBS, YTN, JTBC, C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부르던 것,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던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바뀝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됩니다.

이처럼 실존하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한번 방송을 탄압하고 장악하고 권력에 장악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언론탄압은 실제 언론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작진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방심위에서 심의를 결정하고 오라 가라 하고 소명하라고 하고 징계하면 제작진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방송사에서는, 신문사에서는 ‘조심하지. 왜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느냐’라고 지적하면 정말 제작진들, 현업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검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의 기사가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로 받아들여져서 권력에서 모종의 지침이 또 내려오거나 압박이 내려오면 그 압박은 분명히 방송사 사장을 통해서, 방송사 사장이 부사장을 통해서, 방송보도본부장을 통해서, 보도본부장은 보도국장을 통해서, 보도국장은 정치부장을 통해서, 정치부장은 또 팀장을 통해서, 팀장은 또 선임기자를 통해서 그 기자에게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검열이 시작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언론에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 언론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모든 방송사들이 그 이름을 바꿔 부르는 순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을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징계 내리면, 징계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논조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건건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소송을 걸면 기자들은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대통령 본인이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장관이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실을 추구하고 비판의 칼날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그

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언론도 있고 그런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많은 기자들이, 많은 언론사들이, 많은 방송사들이 탄압당하고 피해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방심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압박은 출연자 교체로도 이어졌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가 바뀝니다. 해당 앵커는 방송사에 더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자진 사퇴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방위 제재가 집중되자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위축되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방송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게 돼서 미안하다며 앵커를 그만두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추구해야 할 진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파편화된 팩트들만 나열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들만 방송과 신문에 집중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 한 줄의 기사도, 단 한 줄의 비판적인 신문 기사도 실릴 수 없다고 한다면, 권력에 비판적인 기사가 공영방송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막아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 동안의 그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통해 공영방송이 바로 서고 언론사가 바로 서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사가 살아남고 가짜뉴스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그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워 달라고, 정권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달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표준, 기존의 방송법을 고수해야 되겠습니까?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왜 글로벌 표준입니까? 일본의 NHK가 왜 글로벌 표준입니까? 대한민국의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 표준을 대한민국국회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MBC, CBS, YTN 등에 법정제재가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당시 정부 여당 국민의힘 관련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선거방송개입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황당무계한 편파 심의를 이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방송사 장악, 언론탄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EBS 사장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2·3 내란으로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심판에 맞닥뜨린 시기에 자칭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신임 사장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이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이었으며 신동호 씨 본인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정말로 이진숙 위원장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EBS 신임 사장으로 적격이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신동호 씨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고개를 끄덕이시고.

도덕성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모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묻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하지도 않으셨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신 거지요? 그렇게 답하신 거지요?

그렇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는 인사들을 알박기 했습니다.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전문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전문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를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신임 사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열 EBS 사장이 있었지요. 몇 달 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신동호 씨 그리고 김유열 씨, 두 사람이 서로가 EBS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떤 분이 EBS 사장이냐라고 물었던 상황도 있었지요. 두 분 다 EBS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김유열 사장이 있는데 신임 사장이 또 임명되고 출근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김유열 EBS 사장은 법원에 임명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라는 마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는데 왜 서울행정법원은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김유열 EBS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피신청인,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신동호 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이 법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김유열 EBS 사장이 신동호 사장 임명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한번 다퉈 보자라고 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 판결이 내려지고 난 30일이 되는 날까지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유열 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2022년 3월 8일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임기가 2025년 3월 7일 만료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고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EBS 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방통위의 대표자이고.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

제 행정기관이어야 되는데 5인이 되지 못하는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심의를 밀어붙이고 신동호 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사장 공모, 지원자 면접,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임명했지요. 이에 대해서 김유열 EBS 사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EBS 사장의 임기가 만료됐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김유열 사장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EBS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이익도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과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김유열 EBS 사장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김유열 사장에게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본안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로서 적격하고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김유열 EBS 사장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동호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3월 26일에 있었지요. 올해 3월 26일입니다.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신청인의 지위와 후임 사장의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장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만일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서 그 임명이 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임명인으로서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신동호 사장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김유열 사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EBS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금 1000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텔레비전·라디오·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뭐 이런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고요.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고 또 재판부는 판결을 이어 갑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에 EBS 사장 공모, 지원자 면접,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피신청인에 의하여 EBS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 EBS 사장 임명의 절차에다가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 방송으로서 EBS의 역할과 임무, 방송의 독립성과 임원의 인사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정한 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EBS 사장으로 재직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내에서 인격이 발현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기초를 이루어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은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그리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김유열 사장의 법률상 이익,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임기가 만료된 신청인이—그러니까 김유열 사장이—EBS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인정합니다.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 제10조제3항에 근거한 신청인의 지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방통위 구성 내지 심의 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이 진행돼서 본안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고 30일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신동호 사장의 임기가 정지된다는 것이지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사들의 대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 긴급한 필요가 인정됐다고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상당 부분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위법체제에 대해서도 본안소송에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묻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두 사람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세 사람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두 사람을 추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와 같은 방통위의 구성 및 의결 방식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명의 위원을 구성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5명, 최소 4명 그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혼자서 또는 김태규 직무대행 데리고 두 사람이 2인 체제로서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졌는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니까 피신청인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EBS 사장의 임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두 명의 사장이 EBS 사장이라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이런 사장이 EBS로 들어가서 과연 EBS 공영방송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그리고 언론장악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언론장악 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결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2023년 8월 21일 결정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2024년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과 EBS의 보궐이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방통위는 결정합니다. 일사천리로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2023년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난해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로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기에 이릅니다. KBS·EBS를 장악하고 보도전문채널 YTN까지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민영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민영화된 YTN,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2인 구조 방통위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되고 바로 그다음 날인 8월 1일 2인 구조 체제에서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의 졸속 선임을 밀어붙입니다. 80명가량이 이사가 되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이 이사들에 대한 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시간여 만에, 1시간 30분 만에 스스로 자진 철회한 사람이 몇 명 있었으니까 70여 명에 대한 후보들을 제대로 심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졸속 선임을 밀어붙였던 것이고요.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의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했던 박장범 앵커는 KBS 사장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2인 구조의 위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감사를 불법으로 임명하는 것들을 강행합니다.

올해 2월 28일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2인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박기 인사를 계속해서 강행했던 것입니다.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 방통위의 알박기 인사, 신동호 EBS 사장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집행정지하는 가처분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상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 연설은 대한민국의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는 끝내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종결하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MBC에 대한 표적 심의를 이어 갔고 중징계를 반복했습니다,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목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에서 그랬고 그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잇따른 제동을 통해서 이 같은 시도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진실을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힘겹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언론개혁의 흐름을 이어 가야 합니

다.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언론개혁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질 수도 있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경영권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사용했던 그런 기득권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결연하게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다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3법 개정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언론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은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결코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국회의원들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선출했으니까, 대의민주주의니까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만이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국민과 공익에 복무하는 공영방송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방송 3법은 끝이 아닙니다. 언론개혁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재출발의 시점입니다. 방송 3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모두 통과돼야 합니다.

이미 KBS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그리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겠습니다만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방송법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KBS의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좀 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공정하게 KBS 공영방송의 가치와 목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이던

것을 4명 늘려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보다 많은 대표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사 추천권 가운데 국회 몫은 40%로 제한했습니다. KBS 이사 수는 15명이니까 국회가 추천하는 몫은 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방문진과 EBS의 국회 추천 몫 이사 수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4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잡고 뒤흔들 수가 없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정치로부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인정하시면서 국회 추천 몫, 대통령의 추천권을 100%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은 국회 몫을 40% 미만으로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 수를 늘린 것입니다.

국회 몫을 40%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고요. 국회 몫 이외의 나머지 이사 추천권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단체 등 외부 추천 기구로 분산시켰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 사추위의 선정 이후에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거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술친구로 불렸던 박민 사장을 KBS 사장으로 내려 꽂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위를 맞추던 앵커를 KBS 사장으로 낙하산 태워서 내려보낸 것처럼 그런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사장 그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 가지고 사장과 이사들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도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복잡하다고요? 복잡하니까 하지 말자고, 단순한 것이 투명한 것이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10년, 20년, 30년 이상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소지를 사람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바뀐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더라, 그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더라,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면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을 바꿔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너희들이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못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또다시 언젠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들을 끊어 내야 된다, 그런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법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그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존에 있는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새로운 방송 3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하고 법사위원회 통과해서 국회본회의에 와 있는데 법안의 문구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대체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문구를 바꾸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확실하게 방송 3법에 규정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사 단체협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단체협약을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잘 활용해 오던 편성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편성규약들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력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 마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KBS의 사례를 들어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편성규약의 내용에 따라서, 편성위원회에 따라서 이미 결정돼서 잘 시행되던 것을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이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단체협약에 약속된 것이니까 지켜야 되지요’라고 말했던 박민 사장은 취임 직후에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렸습니다. 박장범 사장도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렸습니다. 편성위원회 설치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초 KBS의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게 15명으로 4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와 EBS는 9명이던 것이 13명으로 4명 늘었습니다. 임명 절차를 보면 방통위 추천—재적위원 과반 찬성—해서 대통령 임명 이것이 각 단체가 추천하고 방통위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 형태로 바뀌었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다. 기존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방송법입니다—방통위에서 추천하는 것이 주체였는데 국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 종사자 3명, 학회 2명, 법조계 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장의 임기는 KBS의 경우에 3년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명 절차도 이사회가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됐던 것이 이번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군을 압축한 뒤에 이사회가 제청하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더 이상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낸 그런 개정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MBC 방문진법의 내용도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이 당초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임기도 역시 3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장 임명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사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 임명은 방통위가 임명하던 것이 이사회의 제청을 통해서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장 추천과 제청 시 이사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EBS법의 주요 내용도 살펴 드리겠습니다.

MBC 방문진법과 유사합니다. 이사회 구성 추천 주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4명 늘었습니다. 이사의 임명 절차는 방통위 임명에서 각 단체 추천, 방통위 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천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 관련 단체 1명씩이던 것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종사자 1명, 학회 1명, 교육단체 2명, 교육부장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장 임명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장 임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하고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사장과 MBC 사장의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반해 EBS 사장의 경우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EBS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EBS 교육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 교육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3법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방송법 개정 작업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KBS·MBC에 이어서 국민 교육 콘텐츠의 중심이자 공영방송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윤석열 정권은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내란의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기소됐고 현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언론 자유를 옥죄면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에 의해서 윤석열 3년은 사실상 상시적인 언론계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시적인 언론계엄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한겨레신문 칼럼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봤지 않은가. 이제 이 허술한 제도를 제대로 뜯어고치고 정비해 나가야 할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우리는 충분히 목도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

악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3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이게 허술한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 제도를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허술한 제도를 제대로 뜯어고치고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한 것입니다.

국가는, 정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너도 그랬지만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지만 너도 그랬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내가 또 할 수 있으니 지금의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글로벌 표준이라면서 놓아두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시스템이 공정하게 재정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이 방송 3법을 개정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공정하게 정비됐을 때 국민들은 그 공정한 시스템을 믿고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을, 열매들을 우리 국민들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덮어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편향된 정치권력이 끊임없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 3법이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방송 3법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입니다. 그 언론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들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면 예전처럼 '뉴스에 나왔으니까 믿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물어보면 '그런데 그것 뉴스에 나왔지 않나? 나 뉴스에서 봤는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방송,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문은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것 사실이야. 신문에 나왔으니까 그게 진실 아니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수많은 언론과 뉴스를 크로스체크하지 않으면 도대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가짜뉴스, 파편화된 팩트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KBS와 MBC·EBS는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공영방송을 살려 내자는 것이 방송 3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공영방송 EBS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공영방송 EBS의 과거와 오늘을 깊이 있게 짚어보고 내일을 구상하는 일은 왜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EBS를 만들어야 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EBS 구성원과 교육 분야 전문가 그리고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 오셔도 되는데……

(○조정훈 의원 의석에서 — 끝까지 하실 겁니까?)

제가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쉬셔도 됩니다. 아직 준비된 자료가 반도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하는 게 언제……」 하는 의원 있음)

아마 10시 45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6시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님 하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 의원님께서 또 교육 쪽에서 준비하고 계셔서 4명이 6시간씩 나눠서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요 소수 야당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수 야당이……

(「이정헌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 필리버스터가 무제한토론이지 반대토론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토론이 왜 생긴지 모르십니까? 반대토론만 하는 토론이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토론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토론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부의장 주호영 잠깐만요. 의원님들 서로 대화하지 마시고, 의원님 하시던 토론 계속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의석에서 말을 걸면 자꾸 복잡하고 꼬이니까 그냥 들어 주시고 말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의원 그래서 조정훈 의원님께도 또 김준혁 의원님께도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배분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최형두 의원님께서 13시간 넘게 하셨어요. 못 보셨지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 체력이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필리버스터 아까 반대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뜻 떠오르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반대토론만 계속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꺼내 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함께 곰곰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절대 반대토론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 하고 또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형두 의원님께서 13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이 '폴리틱스 포 에브리바디(Politic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책입니다. '분열과 증오의 시대, 한나 아렌트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업'

이라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 유명한 분이지요. 20세기 중엽 독일계 미국 정치사상가입니다. ‘한나 아렌트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업,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여기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필리버스터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함께 모여 공통 관심사에 대해 말하거나 행위할 때 발생한다.’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이건 언론 자유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대방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할 때 정치라고 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토론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필리버스터를 최형두 의원님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사실은 준비한 자료들이 좀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BS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이 끊겼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송 EBS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결국 인재, 사람 자원, 사람에 대한 투자 하나로 인재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인 위기에 우리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가 덮쳐 온 지금 EBS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EBS의 법적 근거와 설립 취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EBS는 2000년 1월에 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었던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함으로써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EBS의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액 출자해서 만들어진 EBS입니다. 정말 공영방송이어야 하는 거지요.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일부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는데 이 KBS의 수신료가 KBS에만 가는 게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 너무나 적은 액수가 EBS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협찬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EBS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제1조(목적)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7조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방송시설과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 국제교류, 조사·연구 등 교육방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도 강화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EBS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유지되고 있는 EBS 방송입니다.

EBS 프로그램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특히 EBS 방송의 경우에 다큐멘터리의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해마다 세계 EBS 다큐멘터리 경연도 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세계 각국에서 출품되고 선발되고 있습니다. EBS의 다큐멘터리 좋아하고 또 EBS의 여행 프로그램도 참 좋아하고 저도 많이 봅니다. '다큐멘터리 집'도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방송공사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BS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AI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방송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EBS가 걸어 온 길을 다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하면서 교육방송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에는 TV와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EBS가 출범했습니다. EBS라는 이름을 가지고 1990년에 교육방송이 제대로 출범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됐습니다. 교육공영방송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후에 2004년에는 수능 강의 서비스 EBSi가 시작됐고요, 2015년에는 EBS 2TV가 개국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상파에 3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요. 위성과 케이블, IPTV 채널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7개 채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책임과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EBS는 대한민국 수험생의 동반자를 자처하며 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2011년 EBS 홍보자료에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EBS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학생의 95.5%가 EBS 수능 강의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2010년 기준 그 이후 15년 정도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EBS 수능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77.3%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EBS의 역할은 빛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교과서를 복사해

주거나 숙제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EBS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BS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EBS가 있었기 때문에 원격수업, 온라인수업, 방송수업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2020년 4월 EBS는 세계 최초의 원격교육 지원 학습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를 구축합니다. 3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36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동 시간대 라이브로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방송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한 EBS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격을 갖춘 제대로 된 EBS의 사장이 선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고 그 사람을 EBS 사장으로 내리꽂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에듀테크가 학교 기능을 대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EBS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과제를 풀어내야 할 주체가 저는 바로 EBS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부모의 지원이 미흡하거나 가정환경이 좋지 못할 경우에 학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외지역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능력이 조금 미흡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적 기관인 EBS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BS 교육방송이 그냥 학생들만을 위한 수능 강의만 하는 그런 교육방송이 아니고 정말 평생교육도 책임지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재교육에도 필요하고 또 AI 관련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학습자료 제공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EBS는 위기이자 기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교육 공백을 막은 공로는 잊혀지고 있지만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큽니다. 디지털 격차, 학력 격차,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영방송 그게 바로 저는 교육방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EBS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송 3법으로는 너무나 미흡한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허점 때문에 잘못된 권력자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그 의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그런 제도를 재조정함으로써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어떤 권력자가 정권을 장악할지라도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제 손에서 쥐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

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차대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그리고 또 완벽한 개정법률안이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법안들이 완벽한 법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한 법안들이 10년, 20년 뒤가 되면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민원인이 저에게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셨습니다. 피해자 부모이셨는데 저한테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있을 때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의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 버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안이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허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법안은 개정할 필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법안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법을 개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선의를 믿고 권력자가 착한 마음으로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의를 가진 권력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100% 선의를 가진 정치권력, 정치인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영방송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함께 만들자고 했는데 함께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고해서 숙의하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 보다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한 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그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EBS를 제대로 살려 내는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거버넌스가 절실한 시점에 나온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EBS가 사교육 문제 해결, 기초학력 보완 그리고 소프트웨어·AI 역량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고교학점제 안착, 디

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EBS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EBS가 평생교육 시대에 학교밖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고등교육·평생교육의 영역에서도 EBS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저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만큼 역할이 많습니다.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어서 EBS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EBS를 이끌어 갈 사장은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야 합니다. 한두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심사해서 정말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EBS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EBS 사장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아미 서울대 교수는 EBS의 사회적 과제로 다음 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논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아미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BS가 학습 콘텐츠 큐레이터이자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BS는 기존의 방송 역할을 뛰어넘어서 학습 생태계 콘텐츠 큐레이터로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소외되는 학습자가 없도록 디지털과 비디지털 학습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 항상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하시는 영국의 BBC 사례를 보니까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웹사이트를 동시에 활용해 학습 결손을 줄였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BBC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잘하는 거지요. 충분히 최 의원님께서 칭찬할 만합니다.

따라서 EBS 역시 단순히 기존 방송, 레거시 미디어 정도의 역할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활짝 열어야 합니다. 문턱을 털어 내야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공동시청으로 세대 간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학습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없는 학습들을 EBS 교육방송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양질의 콘텐츠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재가공하고 분류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큐레이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플립러닝,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제공 방식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서울대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벌써 5시가 지났네요. 5시 5분 됐습니다. 서서히 새벽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지난 3년 윤석열 암흑의 시기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는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일 것 같습니다. 아마 5시를 넘기고 해가 뜨기 직전까지가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해가 조금씩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 암흑의 시기가 대한민국이 찬란하게 다시 빛을 발하는

그 직전의 시기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그런 암울하고 깜깜한 시기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긴 터널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긴 터널을 끝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왔느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왔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조국, 내가 사랑하는 모국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난 3년 동안의 암흑의 시기를 끝내고 찬란한 새벽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새벽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새벽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깨어 있어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EBS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BS뿐이겠습니까?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OTT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틀 전에 저희 과방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을 활용한 역작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본 소니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미국의 넷플릭스가 공급하고 지식재산권은 우리에게 단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KBS와 MBC를 비롯한,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아무나 앉혀서 그 공영방송이 선의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가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공영방송의 이사 자리에 앉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송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KBS와 MBC·EBS 사장으로 앉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결정하고 정치권력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의원 몇 명이 결정하는 이사가 선정하는, 추천하는 그런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상황에서 그냥 과거 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3년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고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EBS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여러분 들어 보셨습니까? 디지털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민성도 강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트가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사회 이슈를 드러내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EBS의 드라마인데 이런 좋은 드라마를 통해서 EBS가 단순한 학습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또 학습자가 성장하는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사회 이슈들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올리는 역할들도 EBS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EBS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KBS와 MBC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BS는 디지털 포용을 기조로 하는 연구개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의 기술 격차와 정보 격차는 곧바로 교육 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포용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학습자들이, 우리의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 콘텐츠 경험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 다문화 가정이나 특수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의 상황까지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서울대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EBS 두리안 같은 운영 경험을 살려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도 EBS가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저는 EBS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BS뿐만 아니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 방향을 잡아 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계의 전문가 그리고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EBS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EBS뿐만 아니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AI 대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2025년 아닙니까? 정말 눈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세 달이면 하나의 기술 수명이 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도시도 학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영방송이 깨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EBS를 정치논리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EBS 사장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연줄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런 EBS 교육방송이 살아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또 제대로 된 AI 디지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방송법도 바꿔야 합니다. EBS법을 바꿔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바꿔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바꿔야 합니다. 선방심위도 윤석열 정권에서 운

영되던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기구들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 그 필요성을 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송프로그램들이 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의해야 될 것이고 또 제재해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오로지 하나의 기준, 오로지 권력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프로그램들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된 프로그램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가 사장을 맡고 있고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고 그런 경영진들이 내려보낸 보도책임자와 보도국장과 편성책임자와 제작국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송이 달라지겠습니까?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있는 직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했던 것입니다.

MBC가 30년 넘게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사장과 경영진을 장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KBS가 한때 직원 수가 많아서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한숨을 쉬면 동료 직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KBS에 기둥이 많은데 그 수많은 기둥들 그 기둥 뒤에 숨어서 잠깐만 한 4년, 5년만 버티면 되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그 기둥 뒤에 숨어서 5년을 버티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뭘 걱정하느냐라고 KBS 직원들이 농담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 승진하고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직원들이 다시 득세하고 전 정권의 사람들은 쫓겨나니까. 그게 끊임없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MBC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MBC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님께서 지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리얼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광주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MBC 뉴스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MBC 기자 선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MBC가 저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직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다시 악순환되는 것들은 이제 끊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방송 3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공영방송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KBS, MBC, EBS 그런 방송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송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입니다.

그렇다면 EBS로 다시 돌아가서, EBS를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교육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도 해 보게 됩니다. EBS는 우리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AI 대전환의 시대에 EBS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EBS는 성장·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BS 사장의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EBS 사장 그리고 MBC 사장, KBS 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영방송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방송사로 만들어 낼 것이냐 그리고 그 방송사들이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OTT에서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우리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면서 지원할 것인가, 우리 국회는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힘을 보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EBS가 세계적인 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E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기초는 결국 인재 전쟁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EBS 교육방송, 결국 사람을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BBC, 저는 모든 것들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BBC가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공영방송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BBC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인용하고 배우고 따라갈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국은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 BBC4를 운영합니다. BBC 아라비아 숫자 4, BBC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BC4의 전신은 1999년에 개국한 BBC 날리지(Knowledge), 지식, 영어로 knowledge입니다. BBC Knowledge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BBC4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BBC4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교육방송으로 출범을 했고요, 인터랙티브 TV 학습 채널을 표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02년 BBC4로 개편이 된 거지요. BBC Knowledge라고 하는 채널이 BBC4로 개편되면서 예술과 다큐멘터리, 음악, 외국 영화와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전문 채널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EBS도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술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다큐멘터리, 음악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BBC4의 주요 역할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예술, 음악, 문화를 폭넓게 반영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서 지적이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BC 프로그램이 우리 EBS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축제를 이어 가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예술과 음악, 문화의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의 공영방송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EBS뿐만 아니라 MBC와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BBC4는 예술과 과학 다큐멘터리, 고전 흑백 드라마, 비영어권 작품, 음악 프로그램들을 잘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BBC4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요, 고품질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영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BBC가 세계적 방송사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BBC가 아이플레이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지금은 AI 대전환의 시대니까요 그와 관련된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KBS와 MBC,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AI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리고 방송 영상들을 AI 아카이브에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 이 법안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발전 등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EBS는 국민 교육의 책임 주체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EBS는 국민 교육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방송은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편향된 인물이 그 교육의 주체로 나선다고 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무서울 정도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사례,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 시대, 일본의 전쟁 범죄를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미래세대에게 일본은 과거의 침략사를 다 지워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역사, 식민지 지배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지워 가고 있지요. 일본 종군위안부도 그래서 지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 역사도 지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지워 가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상상하기 무서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과거의 침략사, 과거의 전쟁 역사, 과거의 전쟁 범죄를 잊어버린 민족은 또다시 그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받아 내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EBS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EBS 방송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챗GPT가 대답을 하네요.

EBS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노력들,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EBS가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방송 3법을 개정해서 EBS의 이사와 사장 선임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의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그런 인사들로 채워서 확대 개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단순하게 쉽게 임명하고 선임하고 낙하산으로 내려 꽂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더라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사장을 선임하고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방송 3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암흑의 시기 때만 반복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제가 또 하나하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우리의 언론은 어떻게 장악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언론장악의 형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정권하에서 언론장악의 형태는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을 투하해서 경영진들을 싹 물갈이하는 것이지요.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들을 싹 투하하고 나서 보도책임자 그리고 편성책임자, 제작책임자를 싹 바꿉니다. 그러면, 뒷방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전면 배치가 되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새로운 자리에 앉혀 준 권력자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낙하산 사장이 자신을 임명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본부장과 국장으로 임명해 주고 팀장과 부장으로 임명해 주면. 낙하산 사장을 한 명 투하하는 것이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한 명의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면 그 한 명의 낙하산 사장이 수십 명, 그 밑에 수백 명의 조직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려보내고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이 내려보내고 그렇게 내려보내서 성은을 입은 낙하산 사장이 대통령과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사 보도 제작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까? 설령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전 심의를 통해서 방송을 못 하도록 막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KBS에서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언론정책은 언론장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언론장악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낙하산 사장을 투하해서 언론사의 경영과 편성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인위적으로 바꿔 버리면서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권에 순응하는 그런 경영진들로 다 채워 버리는 것이지요. 현업자들로 다 채워 버리는 것이지요.

한두 번은 저항할 것입니다. 보도책임자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것을 못 하도록 막으면 아마 혈기 왕성한 젊은 기자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쌓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언론중재위에서 오라 가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심의 안건으로 결정하고 의결하고 또 과징금 부과하면 버텨 낼 수 있는 현업 기자와 현업 제작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방송사에 있어서 좀 압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들어가면 오롯이 그 기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부장은 뭐라고 합니다. 국장은 불러서 위에서 다 데스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기자 개인에게 몰아 버립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거기에 필요한 의견서들을 다 그 기자가 써야 합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끙끙댑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언론중재위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가면요 그 소송도 기자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 자기가 의견서 다 쓰고 일대일 가서 대질심문하면 그거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 잘 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롯이 기자 개인과 제작자 본인에게 떠밀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현업 기자와 현업 제작자들이 취재를 하고 소신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낙하산 사장 한 명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과 편성을 좌지우지합니다. 완전히 장악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업의 기자들과 일선 기자들은 자기검열을 시작합니다, 귀찮아지니까.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은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사장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무슨 기업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는데 그거 접어라', '그걸 어떻게 접습니까? 그 오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야, 그 기업에서 우리 한 달에 5000만 원씩 협찬하는 거 알고 있어? 그 협찬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라는 말을 들으면요 기자들 더 이상 말 못 합니다. 사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방송사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1억 원, 10억 원을 협찬하기로 했던 기업에서 협찬을 중단한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느 누구도 소신 있게 취재 못 합니다. 접어 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팩트들만을 나열합니다.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만,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지 않고 소송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팩트들만 나열합니다. 그리고 소신 있게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뭐뭐라고 알려졌습니다', '뭐뭐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소신 있는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고 자기검열을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언론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때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그리고 법적 처벌을 가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소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낙하산 사장 인사 하나 받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장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언론을 장악해서, KBS와 MBC·EBS만 장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그냥 앵무새로 보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은 엠바고를 걸어 버립니다, 말 못 하게.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기자들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또 실제로 펼쳐 왔습니다. 소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도록 언론 구조를 개편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 분석 보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KBS와 MBC·연합뉴스·YTN의 간부들, 이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편인가 아니면 남의 편인가 이런 정치적 성향들을 분석하고 그 성향 분석에 따라서 관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 편이면…… 내가 정말 더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언론인들을. 그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적으로 장악을 하면,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사장 교체, 간부 교체…… 그리고 그런 조직에서는 관료주의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관료주의에 찌들게 되는 것이지요. 위에서 명령하는 것만, 지시하는 기사만 쓰게 되는 거고 지시하는 취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상명하달식의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된 언론이 되는 사회, 통제된 언론이 보도하는 그런 뉴스만을 보고 있는 통제된 사회에서 국민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지게 되지요. 비판적인 언론인은 축출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권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정권을 홍보하는 역할을 잘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프로그램을 맡기 시작합니다.

정말 유튜브에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막말들을 쏟아 내는 사람들이 KBS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을 해 대는 사람들이 KBS 라디오의 진행자로 섰던 모습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낙하산 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낙하산 사장 뒤에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친정부적 여론몰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종북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조작적인 프레이밍이 가능한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방송사에서 그런 조작된 프레이밍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왕따당하고 쫓겨나게 되니까, 축출되니까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권력은 공영미디어·공영방송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언론을 장악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현되고 확장됐던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그런 여론형성을 탄압하고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판적 의견을 올리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했던 것이지요. 인터넷 공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네티즌들을 추적해 가지고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말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를 빙자한 유사 검열 이것도 윤석열 정권하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서도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유사 검열 그리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효과들을 거둬 냈지요. 사이버모욕죄라는 것도 만들었고, 당연히 모욕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통신사업자의 감청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악도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강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일반과 인터넷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악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법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악법들을, 문제가 있는 법들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 그리고 그 이후의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같은 방송탄압 그리고 유사 검열, 표현의 자유 제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장악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공영미디어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첫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두에 섰던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했고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훼손했고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영미디어들을,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듣고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미디어들은 여론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 매체들이 성장했다는 것이지요. 관리되고 있는, 정권으로부터 관리되는 성향이 비슷하거나 정권의 코드에 맞는 언론인들은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양심 있는 언론인들은 축출됐습니다.

언론장악을 통해서 부당한 통제와 불공정한 인사들이 잇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불공정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과 PD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언론장악에 저항하고 그런 언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는 언론인들이 저는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사 검열을 통한 그런 위협, 탄압, 겁박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매체에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고 그리고 재허가·재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벌점들을 가하는 방식으로 방송사들, 공영방송들, 민영방송사들을 옥죄어 왔다는 것이지요. KBS MBC EBS는 물론이고 종합편성채널들도 그렇게 잡고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 내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는 재허가를 우려하면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방송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방송사 재허가가 되면 방송사들은 로비에 전력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력에 가까운 루트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모든 방송사들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언론장악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기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의 기자 후배들이 그렇게 힘 있게 진실을 추구하는 좋은 기사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은 정말 얼마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조차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방송사에, 신문사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거기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던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그런데 제가 있던 방송사와 신문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지형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95 대 5 정도나 될까? 50 대 50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윤석열 정권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방심위가 그렇게 표적 심사를 하고 월권 심사를 하던 지난 22대 총선에서의 언론, 돌아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그 코드에 맞는 그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미디어들도 많았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가짜뉴스를 쏟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파편화된 팩트들을 나열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언론의 잘못된 행태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언론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자들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장악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정치권력, 자본권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자유 언론들을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 언론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당당하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언론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런 언론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디어 매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기자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 매체라고 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진실을 보도하고 1인 매체라고 해서 거짓을 보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 언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몇 군데 언론을 장악하면 정치권력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멋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더 많은 언론사와 더 많은 기자들이 당당하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과 또 공영방송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MB 정부의 언론장악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정연주 사장의 해임 부분입니다. KBS에 대한 낙하산 사장 투입,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첫 관문은 KBS에 대한 인적 장악이었고 또 그 첫 관문은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 줄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KBS 사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압박했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KBS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첫 단추인 자진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버텼지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버티고 계셨던 것처럼 정연주 사장이 버텼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전술을 펼쳤지요.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KBS 사장직에서 내쫓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 정연주 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마녀사냥을 하듯이 정연주 사장을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하도록 하는,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권력기관들, 사정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한 그런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다수였던 비여당 성향의 이사들에게 정치적 전향이나 자진 사퇴를 유도해서 소수였던 여당 측 이사를 다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정말 무서운 계략 아닙니까? 다수였던 비여당 성향의 이사들…… 그러니까 비여당 성향, 야당 성향의 이사들, 이명박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더 많은 이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혹해서 정치적 전향을 하거나 정계 개편을 하거나 자진 사퇴를 유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여당 성향, 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여당 측 이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연주 사장을 내쫓으려고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해임제청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악의적으로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MB 정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에 3명이었던 여당 성향의 이사 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여당 성향 이사들을 자진 사임하게 하거나 타협하게 하거나 또 정치적으로 전향하게 하거나 해임하게 하거나 해 가지고 결국에는 3명이었던 여당 성향의 이사 수가 2008년 7월 말에는 7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여당 성향의 이사가 3명이었던 것을 이렇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7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리는 것이지요. KBS 정연주 사장을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내쫓아 버린 것이지요. 사전 정지작업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5일에, 그러니까 여당 인사를 7명으로 만들었던 것이 2008년 7월 말이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인 2008년 8월 5일에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을 하게 됩니다. 8월 5일에 해임제청을 하고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던 8월 11일에 대통령이 해임을 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연주 사장을 내쫓았던 것이 MB 정권입니다.

MB 정권, 왜 지금 윤석열 정권 얘기 한참 하다가 MB 정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새롭게 도착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의아해하실 겁니다. KBS와 MBC·EBS 방송법을 개정하는 이번 개정 작업 그리고 KBS 방송법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통과되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MB 정부 얘기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언론장악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MB 정권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권 대부분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MB 정권과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 특히 심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연주 사장을 내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연주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하고 이틀 뒤인 2008년 8월 13일,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긴급체포합니다. 결국 KBS 사장직에서 해임이 되지요. 그리고 13일 뒤인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언론정책을 주무르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형식의 비밀회동을 갖고 친여 성향이 분명한 이병순 씨를 사전에 사장으로 낙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했던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가 시작한 지 6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목이 안 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잠시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예, 다녀오십시오.

○이정헌 의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밤 자정 0시에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이제 6시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금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요? 완전히 날 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두 분만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6시간 넘게 또 앞으로 4시간, 5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임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딱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찬성과 반대의 무제한토론 아니

겠습니까? 그동안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날을 새서라도 몇 날 며칠이라도 무제한토론을 하자는 것이 반대토론이 아니지요. 찬반토론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치 과정을 통해서 꼬인 것을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란 일상의, 일상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토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6시간 넘게 토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중요한 주제로 토론에 임할 수 있어서 그 기회가 값지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회가 작동하는데 도대체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방송 3법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놓고 우리가 만들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본회의에서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의 장에 나와서 그동안에 개정안을 만들 때 함께 논의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대안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서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서로 소리 지르고 앞에 나와서 연설할 때 야지 놓고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건설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 하나가 아닙니다. 법률안 그 이상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우리가 지켜 내야 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천연자원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의 힘, 인재의 힘만으로, 교육의 힘만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12·3 내란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집권 기간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지난 정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 3법 개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무도하게 무너뜨렸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렇다면 그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과 답을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자유를 부르짖던 무능한 지도자에 맞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자유를 지켜 냈습니다. 그렇게 지켜 낸 자유입니다. 2025년 8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시민의 자유, 그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초는 단연 사상과 표현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간입니다.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우리의 언론자유지수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의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43위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1년이 지나고 2023년 47위로 하락했습니다. 네 계단 떨어졌지요. 그런데 2024년 62위로 하락했습니다. 급락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열다섯 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론사의 잘못입니까? 기자들의 잘못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았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 앞서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최형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13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셨습니다. 그 체력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기자 선배로서 최형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의 방송 3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최형두 의원님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노조위원장이셨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방송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십니다.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표준과 같은 우리의 기존 방송 3법도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고 영국 BBC와 유사하고 훌륭한 방송 3법이었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그 방송 3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시도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방송 3법은 그 장악과 탄압의 시도들을 제어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까요,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저는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이 정말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송 3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방송 3법은 우리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유로운 운영체제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됩니다.

계속해서 최형두 의원님의 말씀을 사례로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여기에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권이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원이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 아닌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한다면 선출된 권력이 추천하는 것이 맞지 선출되지 않은 대표기관들을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을 추천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방송 3법대로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여야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유지된다면 그렇게 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도대체 뭘 그렇게 장악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KBS를 장악하고 박민 사장을 내려보내고 박장범 사장을 내려보낸 것,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그런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방위의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국가는, 정치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공정한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그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현행 기존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방송사 안에서 직원들끼리도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보복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피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KBS의 방송법이 이미 통과됐고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EBS 교육방송공사법이 남았습니다.

모든 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의 경우에 KBS, MBC, 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지역방송에서도 실제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방송 3법에서 제외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이 되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지역방송에서는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방송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은 개정되고 또 완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개정하는 것이지요. 방송 3법은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의 공영방송이 장악되고 언론이 탄압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그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방송 3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에서.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듯해서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잘하면 될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사람의 선의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어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3법입니다. 그 방송 3법 수정안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KBS·MBC·EBS가 제대로 다시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인류의 역사는 근대화 이후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암흑의 시기는 끝나 가고 지금과 같은 6시 25분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와 21세기 언론과 디지털미디어의 시대,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적 정보자산을 국민에게 보급하고 공유하며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혀 왔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객관성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존재 자체 이걸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연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지요.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공공재이자 사회의 필수 기반입니다. 초석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최소한 민영방송도 당연히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경영 방식이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라고 할 뿐 민영방송도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방송의 뉴스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제멋대로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방송의 보도도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민영방송의 보도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방송과 지역방송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들은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살아나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 토론이 활성화되고 여론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필수적인 견제의 역할을 공영방송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영방송은 권력이 장악하려고 했을 때 더 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민영방송은 또 자본권력으로부터 더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보도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도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런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송들이 그래야 되고 더욱이 공영방송은 그래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왜 존재할까요? 공영방송은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것도 아닌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출된 권력이라고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 우리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선출된 권력이니까 4년 동안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선거에 도와줬다는 사람 전리품 챙겨 주듯이 KBS 사장에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MBC와 EBS 사장으로 놓고 공영방송의 이사로 자리 주면 그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장악되고 방송이 장악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권력자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철저히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공영방송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와 EBS가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실을 전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 언론입니다. KBS와 MBC, EBS가 그렇습니다. 민영방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 자유의 핵심입니다. 방송의 자유가 무너질 때 권력은 국민을 속이고 비리를 은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만들어 버린 지난 3년 아니었습니까?

명품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하면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췄던 앵커가 있습니다. 그 앵커는 몇 달 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됐습니다.

박장범 앵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 신년 대담을 할 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자리를 한번 앉아 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양하는 듯하면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옛날 사극에서 보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떠올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신년 대담을 왜 하러 갔지요, 대통령실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앵커가 대표가 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정권의 아픈 곳도, 때로는 정권이 부족했던 부

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시청자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영광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 서약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담 과정에서 명품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그마한 파우치 하나 받은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괜히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떠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달 뒤에 KBS의 사장이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박장범 사장과 기자가 된 햇수가 비슷합니다. 권력자 앞에서 기자가 이런 식으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순간 비판과 견제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KBS 사장이 된 박장범 사장이라고 한다면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게 됩니다. 권력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거나 프로그램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KBS에서 그걸 버텨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그 자리 핵심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박민 사장도 그랬습니다. 박장범 사장 이전에 박민 사장도 분명히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해서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니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해야지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임명되자마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리고 자기 사람들을 다 앉힙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무슨 제도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책임자, 그러니까 뉴스를 만드는 보도국장이라든지 또 보도제작국장 아니면 프로그램제작국장이라든지 편성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중요한 핵심 제작자들 그 책임자들은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내리꽂지 못하고 몇 명을 사장이 후보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중에서 직원들의, 해당 보도국이면 보도국 직원의 절반 이상,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소신은 없지만 그냥 인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보도책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경영진을 포함해서, 물론 그 사장 위에 있는 또 다른 권력자, 최고권력자 대통령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시들을 보도책임자들이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뉴스를 하지 못하도록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 버린 것이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미 실시해 오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렸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떻게든지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들을 꽂아야 되는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해 가지고는 그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심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직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꽂아 버리면 거기에서 보도국장이 되고 보도본부장이 되고 보도제작국장이 되는, 시사제작국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힘겹게 만들어 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였습니다. 물론 사장의 인사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장은 사장대로 일부 양보하고 또 노조라든지 직원들은 일부 양보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단체협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키면서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은 자기 사람들을 꽂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습니다.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또 자행했던 것이고요. EBS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것도 올해 그 내란의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EBS 사장을 앉히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방송 3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히 우리 국민들의 것, 우리 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돼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사회의 건강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디지털 불평등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게 특히 교육방송의 역할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으로 다룰 교육공영방송이 바로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영방송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은, 그러면서 비판적인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론의 장이, 여론형성의 장이 빈곤해집니다.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방송법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공영방송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상업 미디어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편향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확증편향 그리고 알고리즘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허위정보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공영방송은 더 중심을 잡고 더 제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높이 유지돼야 합니

다.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침식되지 않도록,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진실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공영방송이 제대로 살아 있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장악되고 자본권력에 장악되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기자들이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보도책임자가 눈치를 살피고 경영자가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파편화된 팩트들만을 나열하는 기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진실에 접근하면 할수록,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기자는 힘들어집니다. 그 조직에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낙하산 사장이 내려온 그 공영방송에서 낙하산 사장을 지명해 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낙하산 사장이 만든 그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이 앵커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과 신년 대담했을 때 그 발언과 충성 서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존 밀턴이 지은 '언론 자유의 경전'이라는 책입니다. '아레오파기티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언론 자유의 경전, 언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 자유의 경전을 쓴 17세기 1600년대 영국에서는 출판물의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이 됩니다, 영국 의회에서. 그때 존 밀턴이 이 검열 법안에 반대하는 연설문을 산문 형태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아레오파기티카, 언론 자유의 경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면—존 밀턴이 1644년에 쓴 책인데요—'진정한 자유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정부와 통치자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연설을 하며,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의회 출입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국가 이익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를 글로 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 표현하고 싶은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의회 장소가 마련된다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로 주로 자기의 뜻을, 생각을 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적지 않은 노력이 소요되는 그와 같은 일에 처음 착수할 경우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내적 동요나 흔들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글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게 더군다나 권력자라고 한다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의구

심을 갖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평가가 나올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말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확신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글을 출판할 때 사전검열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의 그런 주장하는 연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구하는 자유란 국가 안에서 아무런 불평도 제기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자유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이 자유롭게 청취되고 숙고되어 신속히 개혁될 때 비로소 현인들이 추구한 최고 수준의 시민적 자유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입니다.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구하는 자유란 국가 안에서 아무런 불평도 제기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비판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언론 자유가 막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가는 국민들이 불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자유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를 제어하고 입틀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에 비추어서 분석을 하면 말이지요. 불평이 자유롭게 청취되고 숙고되어 신속히 개혁될 때, 불평이 자유롭게 청취되고 숙고되어 신속히 개혁될 때 그런 국민들의 불평들이, 그런 비판과 지적들이 국가를 통해서 개혁되고 바로잡힐 때 비로소 현인들이 추구한 최고 수준의 시민적 자유가 달성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권은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 불평의 목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권의 권력자는 끊임없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면 그만한 당근을 던져 주게 됩니다. 자리를 던져 주게 되지요. 그 자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KBS의 박장범 앵커가 그랬고 다른 수많은 권력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장범 앵커가 윤석열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김건희의 가방을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권력자를 찬양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짚을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존 밀턴의 책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특히 권력자를 찬양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분명히 찬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찬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찬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찬양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찬양받을 가치가 있었던 사람인가, 그래서 찬양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찬양은 아부와 아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권력자가 찬양받을 일을 하지 못했는데 찬양하는 그런 글과 말을 쓴다면 그건 아첨이고 아부라는 것이지

요.

두 번째, 찬양받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찬양받을 만한 자질이 있어야만 한다.

찬양받을 가치, 찬양받을 받을 만한 자질,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럴 만한 대통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간단히 말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왔는가 그리고 외교정책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내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의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살려 내고 있었던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인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찬양받을 만한 가치와 자질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 밀턴의 찬양할 만한 세 가지 중요한 조건 세 번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그가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글과 말이 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박장범 앵커가 윤석열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이 찬양받을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후보로 지명이 되고 저희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윤석열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찬양한 그 대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부고 아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부와 아첨을 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공영방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하산 한 명의 사장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의 통로가 훼손되거나 침묵한다면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시켜서 시민들을 왜곡된 정보에 노출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조작된 정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것이겠지요.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론장의 온전함 그리고 시민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론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됐고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고 때로는 수정할 부분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정할 부분이 지금도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론개혁을 위한, 또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BS법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EBS가 독립적이고 자율

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정치권이 그냥 선정하는 대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가 구성되고 이사회가 운영되고 사장이 선임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후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정치 후견 제도가 뭐가 나쁘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출된 권력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치로부터 종속돼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또다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 내자고 하는 것이지요. 정치적 종속성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 내자는 겁니다.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관계를 끊어 내자, 물론 완벽하게 100% 끊어 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이사회의 몫을 40% 미만으로 낮추자, 절반도 아니고 40% 미만으로 낮추자,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낮출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60%는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올바르게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을 평가하고 이사회에 참여시키자, 그리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도 선임하고 사장을 임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입니다.

몇 명이 뚜덕뚜덕 모여 가지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 선출하는 그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시스템이 아니고,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나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에 전리품 나눠 주듯이 자리 하나씩 주는 공영방송 사장의 자리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정치적 철학과 비전,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잘못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복잡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권력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그래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당초 9명이던 것을 4명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13명보다는 15명이 낫고 15명보다는 20명이 낫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늘리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랜 고민과 고민 끝에 13명으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기한까지 정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넘게 질질 끌었습니다.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여당 성향의 인사들로 채우고 야당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 체제, 위법 체제를 만들고 위법한 결정들, 심의 의결 등을 잇따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추천됐다고 해서 질질 시간을 끌지 않도록 기한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부 견제와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부 견제와 조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사장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처럼 사장후보자를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100명 이상이 모여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사회가 한 사람을 결정하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복잡하지요. 단순한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어떤 정권이 앞으로 들어서더라도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나중에 몇 년 뒤에 또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그냥 정치권력에 종속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유지되면 우리 사람 심을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낙하산 사장이 자기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틀어쥐고 보도와 편성 등 방송의 모든 권력과 기능을 장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 선임은 권력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단체들에게 이사 선임의 권력을 왜 나눠 주냐라고 하는 주장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권력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과 추천권과 사장 선임권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권력을 쥐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정치 후견인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정치 후견인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자와 정치권이, 정치권력이 영향을 미쳐서 공영방송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은을 받은 그 자리에 앉은 최고책임자들이 권력의 눈치만 살피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정치권력의 영향권 안에 그대로 두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권력자와 그 옆에 있는 정치권력들이 나눠 먹기 하듯이 자리를 채우고 사장을 선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것,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추천한 3명, 대통령이 추천한 2명, 5명을 통해서 구성이 돼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에 추천하는 사람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추천하는 사람 5명, 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게 맞냐,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바꾸지 말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단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기간이나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2개의 교육 관련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겁니다.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세 곳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교육방송공사법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영방송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을 반대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필리버스터를 참여하면서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반대의 근거로 민주노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방송 EBS가 노영방송이 될 것인가 그리고 MBC와 KBS가 노영방송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미 법 개정 이전부터 모든 주요 방송사에는 편성규약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편성규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편성규약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편성규약도 기존에 있었고 편성위원회도 기존에 노사 동수로 운영돼 왔던 것입니다.

KBS MBC S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요, 민영방송사를 포함해서 열 곳 이상이 모두 경영진과 방송종사자가 동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규약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편성규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편성규약도 있었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 합니까? 법에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그걸 제대로 따르지 않는데 그걸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가 의미가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한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명문화한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 아래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을 명문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위원회 자체가 새로 생기는 기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방송종사자 대표는 원래부터 이 위원회에 참여해 온 당사자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노조가 새로운 권한을 얻어서 없던 권한이 다시 생겨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돼서 명문화됨을 통해서 노조가 더 힘이 세졌고 경영진 의사와는 상관없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노사 동수가 함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냥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프로그램의 편성과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은 경영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노조를 참여시키더라도 3분의 1만 참여시키고 경영진을 3분의 2를 참여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노사 동수로 참여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경영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노조는 시키는 일만 하고 돈 주면 월급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존재지 편성이 뭣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기사가 어떻고 이런 말은 하지 마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공영방송의 역

할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생각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편성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보는 자리가 편성위원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방송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된 부분은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둔 것입니다.

게다가 편성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동수, 즉 노동자 측과 경영진 측이 똑같이 절반씩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노사 동수 구조에서는 노조 의견만으로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노사 동수가 돼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뭐 그렇게 이것저것에 관여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책임자가 결정하면 밑에서는 지시받고 따르면 되지 무슨 의견을 내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편성이 어떻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느냐라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권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권위입니까? 누구를 위한 권위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권위를 없애 가야 하는 것이,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에서 그런 노동자 측이나 경영진 측의 의사들이 똑같이 반영될 수 있고 그런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참여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사 동수 구조에서는 단연코 노조의 의견만으로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편성위원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노사 양측이 균형 잡힌 논의와 합의를 진행하는 그런 견제기구입니다. 이런 견제기구도 귀찮고 싫어서 피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견제기구가 있으면 낙하산 투입시켜 주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비위를 맞추거나 보필을 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대통령과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노조원들이 자꾸 편성이 어떻고 공정방송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신경 쓰이고 짜증 나니까 이걸 막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일방적인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경영진이 자기 회사라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더군다나 생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모니터와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요즘의 의사결정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혁신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다 마찬가지의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겁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방송법 개정안 조문 어디에도 ‘노사 동수’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는 편성위원회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방송사 측이 5인, 취재·제작 등 종사자 대표가 5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직원이지요. 언론인들이지요. 현업자들이지요. 종사자들이지요. 이걸 노사 동수 구성이라고 프레이밍을 짜서 노영방송이 될 거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법안이 새롭게 특별한 권리를 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많은 방송사가 내부 규정상 가지고 있던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특정 한쪽이 편성위원회를 장악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성이 드러나는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견제들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조직문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조직문화를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기존 원칙을,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원칙을 법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노사 동수 구성 자체가 노조의 과도한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종사자 대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정 노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사에 노조가 없다면 종사자 대표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 상황에 맞게 대표를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노조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무조건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편성위원회 운영 방식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의 절반은 여전히 경영진 추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경영진이 절반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편성위원회, 편성규약을 방송 3법 개정안 반대의 이유로 삼으면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제도는 노사 양측 의견을 모두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의 편성 개입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역시 과장된 해석입니다. 균형 잡힌 편성 논의를 보장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편성위원회도 있고 편성규약도 있는데 왜 또 법으로 자꾸 강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는 이미 각 방송사에 존재했고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도록 이 편성규약의 경우에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 방송사는 이런 규약을 만들고 공표할 의무가 있는데 외부나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불가능하겠지요. 언론인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장치를 그래서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런 장치가 편성규약인 것입니다.

편성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KBS와 MBC·EBS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은 편성규약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해당 규약에 적힌 대로 준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준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규약에 적힌 대로 편성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구성하

고 운영하면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방송사 경영진이 편성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무시해도 기존 법규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KBS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박민 사장과 그리고 박장범 사장이 그렇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지키지 않아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의미도 제재할 의도도 없었겠지요. 제재할 뜻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겠지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간 그런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는 그 사장은 경영진을 장악하고 경영진은 보도책임자와 편성책임자, 제작책임자를 장악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도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고 방송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KBS 사장은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키자고 명시적으로 방송 3법 규정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처벌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약을 어기고 그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약을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꽤 가볍지 않은 벌금과 징역형을 내린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처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법에 규정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걸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걸 강제하는 것입니다. 강제라고 하는 표현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동안 자율에만 맡겨 두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법의 힘으로 좀 더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재나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기자들과 제작진들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권력과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의지를 꺾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취재할 수 있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건강한 언론이 살아 있어야, 건전한 공영방송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고 단순하게 가자고 그냥 정치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자꾸 복잡하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만 반복하시니까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3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추천해서 그냥 방통위원회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것 계속 가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일 수 있습니다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된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득권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득권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전리품처럼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 선거운동 한 사람들 자리 내주는 식으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자리를 맡겨 주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신하고 친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알음알음 추천해 온 사람들, 거기에서 몇 명 추천해 가지고 올려서 이사 선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100% 그럴 수는 없으니 40% 미만으로 국회의원의 추천 몫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송 3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법이며 노영방송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방송 3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제대로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앉았다 그냥 일어나서 나갔던 분들이 이제 와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송 3법도 그렇고 언론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책임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오롯이 기자 개인 한 명에게 떠넘기는 것은 언론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분명하게 취재 지시를 하고 데스크가 기사를 수정하고 최종 사인까지 주고 나서 문제가 되면 기자 개인에게 떠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그건 기자에게 맡기고 문제가 안 되면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늘려서 그걸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짜뉴스가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언론개혁도 추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있던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든 것이 편성규약 그리고 편성위원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칙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편성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편성위원회는 경영권을 흔드는 기구가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현행 방송법 제4조는 이미 방송편성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성책임자는 방송 내용과 편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 사장조차 개별 편성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과 편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외부 권력이나 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방송의 독립,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이 유지돼야 하는 것은 KBS가 돈 많이 벌고 또 KBS 직원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KBS와 MBC, EBS 공영방송이 살아나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체제, 시스템, 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이번 개정은 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논란이 됐던 노사 동수 구조 역시 오해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 힘을 몰아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방송 3법은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사적 이해로부터 지켜 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보루를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을, 흔들림 없는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루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밤 새워 가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은 특정 세력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공적 자산입니다. 이건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민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영을 민간 업체가 담당하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상업방송, 광고를 통해서 방송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송이 해야 할 책임과 시대적 소명과 역할은 분명히 민영방송에게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도책임자는 민영방송, 지역방송,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 3법에서는 KBS와 MBC·EBS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5개 방송사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정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대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온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방송사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영방송들 그리고 지역 MBC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에서 5개 방송사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면서 나머지 잘해 왔던 방송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책임자가 '굳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보

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우리가 왜 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는 경영진과 위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장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꽂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론장악의 첫 번째 단추는 낙하산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낙하산 사장, 낙하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구성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는 단순한 주관적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형성을 가능케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의 성격 또한 가집니다. 방송의 자유가 그냥 방송사들 그리고 방송사의 직원들, 언론기자들 또 PD들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유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의 자유가 의사표현을 통해서 여론을 제대로 형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 역할을 공영방송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영방송이 편향됐거나 한쪽에 치우치거나 낙하산 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진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된다면 제대로 된 여론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이 그 본래적 역할, 즉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민주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송법에 담겨 있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방송이 본래 수행해야 할 기능은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원칙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균형 있게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원칙 모두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 원칙과 민주주의적 원칙 모두에 부응해야 하는 방송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방송에 관한 입법 형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영방송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가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경영진의 구성 방식과 임명 절차

를 법률로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국가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방송사 사장 그리고 이사회 구성의 추천 권한을 100% 정치권력이 갖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 아니고 이 공영방송이 국가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다 위임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6만, 20만 명의 선택을 받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5200만 명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니까 16만 명, 20만 명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마저도 분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소명 아닙니까?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 사장 선임과 이사 선임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과 관련한 제도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KBS 수신료를 거둬들이는 방식을 놓고 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통합해서 징수하던 방식을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리징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60% 정도의 국민은, 여전히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통합징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30~40% 정도의 분리징수만을 이루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KBS의 돈줄을 죄면서 KBS를 장악하려고 했던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 말이지요.

실제로 재원을 쥐면서 돈줄을 옥죄면서 KBS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신료가 거의 80%의 재원인데 이 수신료가 통합징수 되면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수천억 원이 분리징수가 되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KBS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방송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KBS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와 기자들 또 방송 카메라 감독들, 수많은 직원들이 KBS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흔들리고 KBS 내부에서는 '야, 이렇다면 이 수신료 문제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지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KBS 사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KBS 사장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와야 이 수신료 문제, KBS 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이 수신료 문제가 KBS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KBS 내부 직원들이 '도대체 KBS 김의철 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라고 하면서 KBS 김의철 사장 몰아내기 운동에 나섭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의철 사장이 해임되지요. 그렇게 하고 윤석열의 술친구로 불리는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옵니다. KBS 직원들이 일부 동료 직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낙하산 사장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수신료 문제, 징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통합징수로 가서 KBS 재원이 좀 더 풍부해지면 우리가 직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프로그램 제작비도 좀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줄을 죄고 KBS 김의철 사장 내쫓아 내고 박민 사장 앉힌 겁니다.

그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온 박민 사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도책임자와 제작책임자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려 꽂기 위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직원들이 50%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그 책임자를 앉힐 수가 없으니까 단체협약을 통해서 약속돼 있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제작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노사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것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지난해 8·15 그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8월 15일 0시 KBS 방송국에서 일본의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그날 밤에 KBS 프라임타임에 방송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편성본부장, 그 책임이 쏠리니까 자기는 사표 내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름 넘게 출근을 하지 않고 나타났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KBS 사장을 불러서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 그 편성본부장을 출석시켜라, KBS 사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연락을 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KBS 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그 편성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서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끝납니다. 이게 언론장악이고 방송장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KBS가 망가지고 공영방송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MBC도 그렇게 장악을 하려고 했지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을 그렇게 쫓아내려고 했지요, 김의철 이사장 쫓아내듯이. 수많은 이유들을 달아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혐의 없이, 명확한 잘못 없이 쫓아내려고 했다가 계속 소송 비용만 지불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전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깨지고 본안소송에서도 깨지고.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장악이 시도됐다는 것입니다.

방송은 국가의 공식 입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국민 사이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보다 더욱 엄격하게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나 MBC 공영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들, 패널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지 않고 한쪽 진영에 치우친 보수 일색의 패널들만 불러다가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여론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을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장이 있는 그 방송사에서 부르겠습

니까? 안 부르지요. 그리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 사람은 진보 진영의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진보 진영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진보와 보수, 균형 있게 패널을 구성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여론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장에 선임돼서 배가 아파서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장이, 술친구가 KBS 사장이 돼서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나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영방송의 가치는, 존재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방송 3법인 것입니다.

한때는 방송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국가기관 내부에 방송기구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사권이나 예산편성 등 운영상의 요소에 따라서 방송의 편성이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인사권과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는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혀 엉뚱하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방송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끊임없이 언론장악의 하수인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 정권에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기능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민간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인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이 그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그 전면에 나섰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를 비롯한 몇 개 방송사와 언론사를 표적 삼아서 표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과징금을 때리고 관계자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야지요.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지요. 끝낼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지요.

KBS가 국영공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KBS가 국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입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영방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땡윤 방송, 땡전 방송이 있던 5공 시절 그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방송이 국가로부터 독립할 필요성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국가, 특히 행정부가

방송에 대해서 구조적이거나 실질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은 장악됩니다. 방송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 같은 원칙들이 국가가 방송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그에 따른 정책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국회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개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해서 그런 언론개혁에도 적극 나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 살리고 민생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의 국가 독립성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국가 또는 국가와 밀접한 인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나 국가와 밀접한 인사,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추천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의 방송법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정말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력이 선거를 끝내고 나서 전리품처럼 공영방송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배후에 있는 정치권력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관행이자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주장하기도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은 못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처럼 그렇게 내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윤석열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신입니다.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전까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그램이 저는 작동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일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제청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8월 28일 방통위는 방문진과 EBS 보궐 이사를 새롭게 임명합니다. 여권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KBS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분리징수의 방식으로 바꾸고 KBS의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에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에서부터 사장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KBS의 수많은 방송을 사랑했던 현업자들이 KBS를 떠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2023년 11월 12일입니다.

이후, 지난해입니다. 2024년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다액출자자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YTN을 민간업체에 팔아넘기는 것이지요.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한 것입니다. YTN을 넘겨받은 업체는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겠지요.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 김건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그래서 다 빠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 보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7월 31일, 지난해 7월 31일, 오늘이 8월 22일이니까 1년하고 한 이십 이삼일 정도가 지났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고, 2인 구조 방통위 체제에서 KBS 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80여 명의 후보들 가운데 그중에서 자진 사퇴한 사람들 몇 명을 빼고 70여 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차 투표를 통해서 선임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1시간 30분 동안 졸속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0일 그렇게 잘나갈 것 같던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 사장은 물러나고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일주일 뒤지요.

2025년 2월 28일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인 구조의 위법적인 방통위는 KBS 감사를 불법적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것도 역시 법원을 통해서 잇

달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또 2025년 3월 27일 불법 2인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교육방송에 대해서 알박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사장으로 선임하지요. 그런데 신동호 사장은 첫 출근길부터 직원들에게 가로막혀서 EBS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을 집행정지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유열 전 EBS 이사가 지금도 EBS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제대로 지켜져야 할 방송의 자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이렇게 훼손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다시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었는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EBS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981년에 UHF 교육TV라고 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EBS의 첫 태동입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부터 EBS라는 채널명으로 자체 송출이 시작됐습니다. EBS가 이때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1990년 12월부터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설로 운영되던 교육방송은 1997년 3월 한국교육방송원이 창립됨으로써 독립적인 방송사로 거듭났습니다. 2000년 6월 KBS와 마찬가지로 100% 정부가 출자한 소유구조로 한국교육방송공사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집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문 공영방송 EBS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EBS가 1981년에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교육 전문 공영방송으로까지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EBS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1년 개국한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은 KBS TV의 전신입니다. KBS TV가 1961년에 서울텔레비전방송국으로 출범한 것이지요. KBS의 국영 체제는 1973년 공사화되면서 갖춰지게 됩니다. 조직적인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로서 공영의 구현이나 독립성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였지요. 유신 시절이었으니까요. 유신체제, 불가분의 관계였고 국가 통제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KBS는 국영방송으로서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방송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공영방송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이 공영방송이지 사실상 국영방송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980년 방송광고공사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관리되면서 제도로서 공영방송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 신군부가 장악한 1980년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땡전 뉴스를 내보내던 시기니까요. 그렇게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방송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MBC 문화방송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MBC는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59년 부산에서 민영방송으로 개국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61년 12월 서울에서 한국문화방송으로 라디오 정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먼저 시작되고 2년 뒤에 서울에서 한국문화방송이 시작됐습니다. 1969년 1월 서울 인사동 임대사옥에서 방송을 했고 이후에 서울 정동 신축 사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방송을 개국하게 되지요.

1988년에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가 구성이 되게 된 거지요. 비영리 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주식 70%를 가진 대주주가 됩니다. MBC 사장의 임명권·해임권은 방송문화진흥회가 갖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고요.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임명하고 해임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내려 꽂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의 비위나 문제점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문제 삼았다가 결국에는 법원에서 건건이 지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공영방송이 민주화 이전 체제의 한계를 품고 탄생했지만 시민사회와 공영방송 종사자의 지속적인, 국민의 방송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진하다가도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랬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정권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었는지 살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한 것입니다. 법치주의 유린의 서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2023년 5월 30일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시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 면직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씌웠습니다. 면직 사유로 들었지요. 위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면직 사유로 그렇게 여러 가지 혐의들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미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한다면 법원이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을 그렇게 해서 내쫓으려고 했고 결국 내쫓았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소장에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인 표현이 기재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추천 단체 선정 과정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법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이 무시되고 결국에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그런 인사들이 제거되는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에 새롭게, 방송통신위원장에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법원이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지요. 정말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 이게 명확하다고 한다면 바꿔야겠지요,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 죄에 따라서 면직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고 파면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해임부터 해 버리는 겁니다. 면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면직을 시켜야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앉힌 방통위원장이 누군지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MB 정권에서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그 인물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고요. 그다음에 MBC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시도합니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이어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면서 저항을 했지요.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고 하면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면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재항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결국에 지난 3월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서 권태선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지금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을 무리하게 해임처분 했지만 결국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혐의들을 덮어씌워서 방문진 이사……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지명하고 선임하고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사장을 선임하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바꿔 버리면 MBC 사장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KBS를 장악하고 MBC까지 장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 시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나온 대법원 판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었습니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대법원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면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권태선 이사장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번번이 졌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이고 집행정지 신청 대응하고 본안소송에서 또 대응하고 하느라고 변호사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역시 원고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고요. 피고는 당시에는 탄핵소추가 된 상태여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니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피고로 돼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원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원고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처분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계속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면서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방송문화진흥회를 장악해야 MBC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그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장하면서 해임을 했습니다.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요.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을 방치했다라고 썼습니다. MBC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써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지요.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운영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들을 막 내세웠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웠던 그런 모든 혐의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이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그런 문제라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진은 중요사항을 합의체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피고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 이사회 의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 등 방문진의 임무가 사회적 논쟁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 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였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심의 의결 결과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도 않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이사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이 개별 이사들이 책임질 문제이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만한 문제들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2024년 8월 2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었고요.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피신청인이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끊임없이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등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 패소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승소,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MBC에 대한 압박과 탄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고용부가 나섰습니다.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나섰습니다. MBC 목 조르기가 이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력에 거슬리는 비판 보도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출근길에 ‘자유롭게 비판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이간질이다, 악의적인 행태다 이런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매도하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MBC와의 공식 질의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복성 표적 조사로 400억 원 수준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의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탈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보복성 표적 조사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탄압의 일환으로 국세청을 동원하고 고용노동부를 동원하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했다고 한다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MBC를 압박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가 부당 근로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확인 등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버렸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당사자인 윤석열이 아닌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의 이름으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사자인 윤석열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원칙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박진 당시 외교부장관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외교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려는 MBC, MBC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윤석열의 격노 그리고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공영방송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숨 쉬는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검열 국가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말 검열 국가로 대한민국은 후퇴한 것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시민적 자유나 감시·경보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집단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해야 합니다. 셋째, 여론을 정당과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로 언론의 의제설정 역할이 있습니다.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시민에게 정치에 대한 최선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참여형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검열 국가로 후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검열이라고 표현하면 확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따져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리한 심의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의 보도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로 규제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 위축뿐만 아니라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리한 심의를 이어 갔습니다. 더군다나 MBC를 비롯한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서 공격했습니다.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학계와 국제기구에서도 규정하기 어려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판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취급했습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시하고 언론을 입틀막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는 탄압을 이어 갔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리한 심의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인데 이를 인터넷언론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관련 표현의 자유를 심판할 때 유지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최소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언론의 보도 내용을 허위조작정보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이어 갔습니다.

민간 독립기구,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한다고 하면서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보도를 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뜻을 집행하는 기구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동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 직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내부 토론과 간담회 제안은 거부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심의를 진행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두고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행위다.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것은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중대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니터를 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다음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의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심의를 제안합니다.

당시 여권 추천 인원,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명만 이 의결에 참여를 해서 가결 처리합니다. '국회에서 중대하게 논의된 사안이고 국기문란 행위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쏘아 올리고 곧바로 류희림 방심위가 받아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KBS와 MBC·JTBC·YTN에 대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결정조차 최근에 법원에서 다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한 재판들, 소송에서 거의 태반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의 심의를 강행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곧바로 받아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두 차례, 일주일에 두 차례씩 확대 실시하고 긴급·지체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위원들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인터넷언론사 콘텐츠 심의가 시작됩니다.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실제로 출범합니다. 지금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권 추천 위원들은 현판식이 끝나고 나

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명이 출석한 자리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출범시키게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1월 12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600여 건 되는데 이 가운데 실제 심의가 진행된 건은 뉴스타파 2건입니다. 신속심의 대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서 '중대범죄행위다.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곧바로 방심위가 움직여서 신속심의센터를 야권 추천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출범시키고 신속하게 신속심의를 한 다음에 KBS와 MBC·JTBC·YTN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매기면서 또 벌점까지도 부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고 계속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제작진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정당성 없는 심의로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했습니다. 방심위의 직무범위, 가짜뉴스의 개념,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 심의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심의한다고 하면서 MBC를 비롯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던 언론사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김만배 녹음파일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대응했었고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소재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지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2023년 9월 1일 검찰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9월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언합니다. 곧바로 그다음 날 대통령실이 받습니다.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관련된 인터뷰와 관련해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이 성명을 냅니다.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구마구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9월 6일 문체부와 방통위는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를 시사하고요, 9월 7일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건 사형감이다.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합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봉지욱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됩니다.

9월 21일 방심위는 인터넷언론사 심의 확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립니다. 9월 26일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가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가동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청부민원 의혹이 불거지게 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강력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자마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종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

원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의하고 징계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복붙하듯이, 거의 틀린 글자까지도 똑같이 반복되면서 복붙돼 있는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민원을 보낸 사람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지인들이거나 친구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방심위에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입니다. 청부민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부민원들이 제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살피고 과연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이 있었는지 민원 사주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방심위 직원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해충돌의 우려를 지적했고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들의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들을 다루는 소위원회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주재하고 민원 사주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들이 제기된 부분들을 신속심의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하청 검열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락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를 심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를 심의하지 못하니까 대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한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에 대해서 심의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를 심의할 수 없으니까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신속심의해서 심의의 칼날을 휘둘러서 과징금을 수천만 원씩 먹였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방송사들에게 심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방송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허가·재심사 과정을 앞두고 방송사들은 어떻게 하면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연구하고 로비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 나섭니다. 그게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들, 방송사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죽 살펴본 대로 군사독재정권과 같은, 군사 검열 시대와 같은 그런 검열의 시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권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고 탄압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KBS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고 친윤 방송 논란의 정점에 서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KBS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박장범 앵커의 KBS 사장 임명은 KBS 내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취임 첫날인 2024년 12월 10일,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지요. 국립묘지 참배와 취임식을 최소화하고 영상취임사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KBS에 살짝 들어와서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참배를 위해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KBS 직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총파업 시위대가 KBS 현관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KBS 직원들 앞에서도 나설 수 없는 박장범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대담에서 김건희 작은 파우치 발언을 했던 박장범 사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앉아 보라는 그 말에 영광이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앉았던 박장범 사장입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전혀 하지 못했던 박장범 앵커입니다.

박장범 앵커가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서 대담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박장범 개인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리해서 대통령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게 앵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비위만을 맞추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와 같은 그런 식의 발언을 했던 박장범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취임했던 박장범 사장은 취임 직후에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임명했습니다. KBS의 방송 가이드라인과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던 보도책임자·제작책임자의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했던 것입니다. 이 임명동의제는 보도 및 제작책임자 임명 시에 해당 부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KBS는 수년 전에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명동의제 실시를 받아들였고 문제없이 실시해 왔습니다. 사장의 인사권이 일부 침해되고 사장의 인사권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노조와 함께 보도책임자를 선정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공정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없이 진행을 해 왔던 임명동의제를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 사장 그리고 윤석열의 비위를 맞췄던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을 맡은 뒤로 무력화됐습니다. 단체협약이 살아 있던 그리고 수년 동안 KBS 노사가 합의했던 임명동의제를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무력화시켰던 것이 낙하산 사장들의 행태였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전임 박민 사장의 낙하산 사장 논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KBS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제로 현실화했던 것입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파우치, 외국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논란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지요. 명품백을 조그마한 백,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백 파우치 정도는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그렇게 난리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앵커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시끄럽게 논란이

되는 것도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그런 앵커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앵커가 그런 식으로 권력자의 비위나 살살 맞추는 발언을 이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기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고요. KBS 사장의 자격은 물론이고요. 그것은 KBS 메인뉴스의 앵커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도 22년 동안 앵커를 했습니다만 참 답답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모니터하고 스크린하는 과정이 없었을까? 윤석열 대담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대담 녹화로 진행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녹화를 한 뒤에 분명히 한번 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앵커가 PD와 함께 모니터를 쭉 했을 겁니다. 설령 편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문제가 있는 발언이 없을까라고 봤을 겁니다. 저 같아도 봅니다,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대통령의 대담을 녹화하고 그걸 모니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행동이나 발언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와 같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장범 앵커는 물론이고 그 대담을 녹화했던 PD 그리고 편성책임자나 보도책임자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박장범 앵커가 KBS의 9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었던 박민 사장 체제의 KBS는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KBS 사장이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대담했다고 한다면 KBS 사장으로서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집에서 관여하거나 지시를 할 수는 없더라도 궁금해서 한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그게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방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박민 사장 체제부터 KBS는 이미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박장범 앵커가 그렇게 대통령을 대했던 것이겠구나,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으로 선임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KBS 수신료의 통합징수 문제 이게 분리징수로 되면서 KBS의 재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의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도대체 왜 받았을까, 1년 만에 교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만 제대로 윤석열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옹호를 했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교체가 되고 그 자리를 박장범 앵커가 꿰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그냥 하나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의 낙하산 인사가 미치는 파장은 정말 큽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걸 녹화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방송으

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그래, 그게 뭐 대단해? 명품백이야, 그게?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그러던데, KBS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공영방송이 권력에 의해서 장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파우치 발언, 이건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친권력적인 서사를 완성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MBC 표적 심의와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이용해 MBC를 비롯한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표적 심의와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군요. 2022년 9월이었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국회에서 이 엑스엑스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발언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MBC는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정말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보도가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그렇게 비속어를 쓰고 막말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로 그렇게 말과 행동이 가벼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닙니까? 정말 그 창피함과 쪽팔림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그 당시에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하나같이 정말 창피해서 못살겠다라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렇지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온 국민에 듣기평가를 실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이긴 합니다만 역사의, 정말 흑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MBC는 이를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MBC를 공격하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지요. 정언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과 MBC에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핑곗거리도 많고 또 다른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그런 윤석열 정권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듣기에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국회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얘기를 하지

요.

한국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비속어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괜찮은 겁니까? 미국이 아니고, 바이든을 상대로 한 비속어나 막말이 아니었으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요. 그렇게 끊임없이 왜곡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서 3년을 지내 왔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파문이 일다가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되면 그 변명을 받아쓰는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덮여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슈를 새로운 이슈가 또 덮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 끊임없이 그런 이슈들과 의혹들이 덮어지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 3년 동안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못했고 그걸 가짜 뉴스로 비판하면서 신속심의를 일삼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윤석열 뜻에 맞춰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그랬지요. MBC는 이 같은 공격을 한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언론통제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한 언론사를 희생양 삼아서 집중적으로 때리는 것이지요.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패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탄압 행태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한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들에 대해 MBC에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단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문제의 영상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MBC를 집중적으로 타격한 것입니다. 경고처분을 내리고 탄압하고 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재허가 심사 시에 총 14점의 감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MBC를 압박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치권력에 포획돼서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 장본인이었지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MBC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심각한 제재는 법원이 나중에 이 같은 결정을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해서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밑에 선방심위를 꾸려서 또 다시 표적 심의를 일삼았습니다. 선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렸지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려서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서 5개월 동안 30건의 법정제재를

쏟아 냈습니다. 이는 정치 심의이고 편향 심의였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는 제재처분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19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심위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에 파란색 숫자 1, 날씨 예보 논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와 관련해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등 다수의 심의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거나 MBC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방심위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표적 심사와 표적 심의를 남발하고 징계하고 또 경고조치를 내렸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방심위의 MBC 및 기타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일관되게 중지시키거나 뒤집는 이 반복된 패턴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역할을 그래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사법부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법원의 반복적인 질책은 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한 규제·감독이 아니라 정치 심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또한 법과 공정성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9월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방심위 등을 언급하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자 곧바로 취임도 하기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자마자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친지, 옛 직장 동료, 지인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서 신속심의를 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몇십 건의 민원이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거의 똑같은 문구, 잘못된 글자나 기호가 그대로 담긴 거의 복붙한 형태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민원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그 민원을 토대로 해서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신속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속심의를 진행한 뒤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속심의 소위에 본인이 참여해서 본인이 의결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 사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대량으로 제기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하고 있고 양심선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한 개인의 조직적 범죄 의혹을 당연히 국가기관이,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살피고 진실을 밝히고 그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오히려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이 다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BC를 탄압하기 위해서 온갖 권력기관들, 경찰과 검찰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동원돼서 MBC를 샅샅이 뒤졌던, 그런 경찰과 검찰이 민원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청문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집, 차량, 집무실, 그 어느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내역조차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화기록이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 준 것밖에 안 됩니다. 통화기록이 사라지는 1년을 그대로 기다려 준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통화기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언론노조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부고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고발자, 자신의 이름을 대고 고발한 그런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강압적으로 탄압했습니다. 민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른 아침에 자택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메일의 내역도 확인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에도 수사관들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검찰 역시 류희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압수수색영장도 반려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직원의 작심 고백이 나오자 그 직후에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아예 교체해 버립니다. 증거를 인멸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상태인데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민원 사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하고 류 전 위원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는 류희림 위원장이 경찰과 검찰에서 탈탈 털리게 되면,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 사주와 청부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방심위 등이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고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였고 류희림 위원장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실제로 며칠 뒤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

까?

9월 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발언을 하자 바로 그다음 날 대통령실이 받아서 성명을 냅니다,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성명을 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문체부, 방통위가 움직입니다. 뉴스타파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바로 그다음 날 9월 6일에 그랬고요. 9월 7일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합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사형감이다, 사형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합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한 조치를 시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 한상진·봉지욱 기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권력기관들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과 청부민원 의혹, 이해충돌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소환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워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틀어쥐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이 보여 준 행태입니다. 봐주기 수사의 행태입니다.

선택적 법 집행을 통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가택수색을 하고 이메일 조사 등을 했던 강압적인 전방위 수사, 도대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는 사법과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인물을 보호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침묵을 강요하고 너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러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버텨 오다가 세상이 바뀌게 되자 류희림 위원장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권에 철저히 복무했던, 방송과 언론 장악에,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현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다고 먼저 도망치거나 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평온하게 한다면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충돌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과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했던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있는 동안에 험지로 쫓겨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인사상 우대를 해 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양심고백까지 간부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그런 양심고백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안

타까운 참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사단장부터 어느 누구 하나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어두웠던 3년의 암흑을 뚫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방송 3법 개정안, 공영방송 3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어서 지난 0시부터 9시간 넘도록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제대로 살려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이 무너뜨린 KBS,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면 그 빌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부와 아첨을 할 것이며, 그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권력자는 전리품을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방송에 개입하고, 선거방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개입위원회로 전락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방송까지 심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거와 관련이 없어도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방송이 있으면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하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선방심위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사주 재판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전제한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안들 역시 월권 심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그런 보도에 대해서까지 선방심위는 심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 책임을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선방심위가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선방심위의 심의 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한

선방심위의 심의입니다.

2024년 1월 15일 방송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 대담하는 내용이었는데 김영배 의원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것은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사'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습니다. 왜 '여사'를 붙이지 않았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이라고 출연자가 말하는데 왜 그걸 진행자가 제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느냐라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출연자가, 패널이 그 특검법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김건희 씨나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로만 끝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그 명칭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박과 경고를 하면서 위축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KBS, MBC, YTN, JTBC, CBS 등 시사 프로그램이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부르던 것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방심위의 그 심의가 있은 후에 말이지요. "법안 이름에 '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평론가들도 부르기 시작했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위축 효과가 대단합니다. 권력의 앞잡이로 나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선봉에 서게 되면 이렇게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작자들과 현직 기자들과 방송 현업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작자들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소한 부분을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방심위가 징계하고 심의하고 경고를 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된 다음은 그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겠습니까? 자기검열 단계로 넘어갑니다. 권력기관이나 규제기관의 검열이 아니라 자기검열을 시작합니다. '야, 이것 내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가, 괜히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가 나도 불려 가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자기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권력자나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서 '또 이것 언론중재위에 제소되거나 소송당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굳이 깊이 있게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깊이 알아봐야 기

사 쓰기 힘들고 괜히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또 언론중재위에 불려 가거나 재판정에 불려 갈 수 있으니, 방심위가 징계한다고 나설 수 있으니 그냥 적절하게 대충 파편적인 팩트 나열하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기사를 쓰게 됩니다. 자기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뭐뭐라고 알려졌습니다', '뭐뭐라고 전해집니다'라고 살짝 빠집니다. 굉장히 비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자기검열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영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누가 지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제작진들을 지켜 낼 수 있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루의 역할을 경영진과 사장이 해 주지 못하고 이사회가 해 주지 못하면, 그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기자와 PD 현업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직장인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손해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손해입니다. 권력에 비판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자기검열을 하는 기자와 언론인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암흑의 시기로 접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 내자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통과된 KBS의 방송법이 그렇고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그렇고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렇습니다.

선방심위가 어떻게 치졸하게 MBC를 계속 표적 심의했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숫자 1이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를 전할 때 배경 그래픽 화면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작동하던 시절이었지요. 이때 기상캐스터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설명하면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래픽으로 그려 냈습니다. 1㎲v인가요? 그랬었는데 이 1 자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기호 1이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 1의 숫자가 파란색이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 1㎍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그 그래픽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시 기상캐스터는 이렇게 전했지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 온 MBC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1㎥당 1㎍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픽에 아라비아 숫자 1을 넣고 그 색

이 파란색이었고 그런 상황이 확인되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방송이었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넘어갔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날씨정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표적 심사를 하고 표적 심의를 해 왔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대 총선 직전에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고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한 MBC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방심위에 접수가 됐고 선방심위에서 신속심의 안건으로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편향적이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면서 선방심위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선방심위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방송탄압과 또 그로 인한 언론인들의 위축을 만들어 낸 그런 상황들도 짚어 봤습니다.

이런 시절을 우리는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송 3법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EBS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임명됐었는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방송국 내부의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제작책임자들을 장악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MBC에 대해서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MBC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EBS입니다. EBS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2·3 내란으로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심판에 맞닥뜨리던 시기, 올해입니다. 그 시기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신임 사장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한 결정이었습니다. 신동호 씨 본인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유열 EBS 사장은 법원에 임명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라는 마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 김유열 EBS 사장, 피신청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피신청인이—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2025년 3월 26일 신동호 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이 법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신청인 김유열 EBS 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에는 사장이 2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김유열 기존의 EBS 사장이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신동호 신임 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국회에 출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

니다.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EBS 사장입니까?” 그랬더니 김유열 사장이 “제가 EBS 사장입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곧바로 신동호 사장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사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임명됐고 출근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공영방송 EBS가 이렇게 됐습니까? 기존의 사장이 있고 본인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신임 사장은 또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런 신동호 사장을 알박기 하듯이 지난 3월 26일 피신청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그러니까 김유열 사장—EBS 사장 임기가 만료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EBS 사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과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송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는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니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본안소송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5명, 최소 4명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사람 그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세 사람의 방통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통위원이 구성됩니다. 5명이 합의제 방식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인사와 관련된 결정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취지를 살려서 5명 또는 최소 4명 이상이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위법 체제에서 KBS 이사 선임 등을 강행했던 것처럼 올해 3월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직 사장이 문제를 삼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무리하게 제대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임을 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내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전리품 챙겨 주듯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저는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불행한 역사……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사람을 낙하산 내려보내듯이 내려 꽂는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바꿔 내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0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 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좀 쉬시고 나오시는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13시간 넘게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MBC에 대한 표적 심의와 반복된 중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잇따른 제동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당합니다. 건강한 공론의 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중대한 시점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방송 3법의 개정안은 이런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립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언론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은 정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것도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나눠 주기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끊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을 종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이제 마침표를 찍고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도 방송으로서의 공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공적 기관으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영방송도 재원의 차이가 있을 뿐, 경영자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뉴스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것, 공영방송을 살려 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내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언론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언론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언론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EBS 교육방송공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 3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완수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영방송이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방송 3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송 3법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조를 바꾸고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정권이 탄생하면 또 다른 그 정권은 또다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잘하면 정말 좋은 사람 앉히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손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의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얼마나 언론탄압의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돼 왔었는지 우리는 또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왜 방송 3법이 지금 개정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과거 정권들도 한번 따져 보면서 어떻게 방송장악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실제로 장악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못지않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언론장악은 굉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중심에 서 있었고 최선봉에 서 있었지요. 그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것입니다.

언론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한 책자를 보니까요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낙하산 사장을 투하시키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 한 명만 내려보내면 됩니다. KBS·MBC·EBS에 낙하산 사장 한 명만 내려보내면 그대로 장악이 됩니다.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언론사의 경영과 편성책임자를 교체해 버리면 됩니다. 경영과 편성책임자, 보도책임자를 교체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KBS에서 무력화됐던 보도책임자·제작책임자의 임명동의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낙하산 사장이 들어가서 자기 정권에 맞는 사람들은 코드 인사로 찍어서 그 중요한 자리, 제작 부서의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하산 사장이 투하되면 언론사의 경영·편성·보도 책임자를 갈아 치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도책임자와 제작책임자는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 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권이 내려보낸, 이명박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경영책임자와 그리고 편성책임자·보도책임자·제작책임자는 그 낙하산 사장의 비위를 맞추면서 방송 현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낙하산 사장은 오로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 준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장과 경영진 교체 그리고 보도책임자나 편성책임자·제작책임자의 교체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끝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책임자와 그리고 보도국장과 사회부장들, 정치부장들, 현업 부장들은 그 위의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의 눈치를 살피겠지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위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또 자유롭게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스스로 직장인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우리의 기자들은 정말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장악되고 언론이 장악됐을 때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했던 것이 과거 정권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를 장악함으로써 그 해당 방송사의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와 PD들의 업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기검열을 강화시킴으로써 진실이 아닌 팩트의 나열만을 늘어놓는 기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나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퇴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떡하니 들어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KBS가 그랬습니다. KBS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나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을 쏟아 내고 그런 사람이 공영방송 KBS의 대표 간판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KBS가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KBS의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이 그렇게 KBS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권력자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낙하산 사장 한 명을 투하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끊임없이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현업 기자들과 PD들은 위축이 되는 것이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장악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탄압,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근간이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낙하산 사장 하나를 내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정말 치밀하게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장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 분석 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미디어들에 대해서 인적 장악을 하기 위해서 보도책임자라든지 간부들, 기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인적 장악을 한 사람 한 사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장을 교체하고 간부를 교체하고 그리고 출입처의 기자들을 교체합니다. 이건 제가 30년 가까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권력과 자본이 방송에 개입하고 신문과 언론에 개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누군가 기업인이 그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찾아가서, 사장을 찾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 기관에 출입하는, 자기 기관을 담당하는 출입기자를 바꾸라고 하면 곧바로 그날 바뀝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입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저기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요.

‘눈치도 없이,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드러내 놓고 비판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한두 마디를 붙이지요. ‘야, 그 기업이 우리에게 협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너 알아? 한 달에 5000만 원이야. 몇 달 사이에 10억이 날아가, 그 기사 때문에. 네가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하는 한마디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기사 못 씁니다. 그 기자가 유약하거나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자기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그 담당 기자의 상관을 불러서 서운한 소리를 하면 바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언론이 장악되고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종속되면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재반복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장을 교체하고 간부를 교체하고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이 사람은 우리 사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그런 식의 언론환경들이 조성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료주의적인 그런 구조가 언론사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낙하산 사장이 하나 내려오면서 상명하달식의 통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비판 프로그램과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축출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에 KBS 몇 년 사이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 시사 프로그램들, 밤늦게 하던 프로그램들이 사라진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유명한 진행자도 쫓겨나지요. 물론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를 취합니다만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 홍보 프로그램들이 신설됩니다.

친정부적인 여론몰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정부적인 그런 여론형성……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판적인 패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 기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출연정지를 먹습니다, 사실상.

실제로—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제작진 현업자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교수님, 의원님, 당분간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장악된 언론에서, 방송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균형을 맞춘 진보와 보수 2 대 2의 토론인 것 같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그냥 겉만 진보인 어정쩡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비치는 그런 방송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론이 장악됐을 때,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그 낙하산 인사가 간부를 교체하고 보도책임자와 제작책임자를 교체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친정부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런 언론장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는 종북 위기를 조장하는 여론몰이라든지 이상한 프레이밍을 씌워 가지고 야당의 정치인들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권 여당이라든지 정권에서는 나서지 않고 언론을 먼저 동원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그

걸 통해서 해임하거나 파면시키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잠시 후에 또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시했던 핵심 사업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박근혜정부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그걸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와 병행하면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지고 확장됐던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탄압과 축소도 추진했습니다.

미네르바 기억하십니까, 미네르바? 미네르바 구속시키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요. 인터넷 공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식으로 탄압했습니다. 미네르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장섰지요.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를 빙자해서 유사 검열에 나섭니다. 유사 검열, 비판적인 언론이라든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틀막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유사 검열 그리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사이버모욕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물론 사이버모욕죄는 엄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모욕죄라는 이름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까지도 틀어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행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업자에 감청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악이 있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강제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길들이고 언론을 길들였습니다.

그러면 MB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정연주 사장의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치밀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아니지요. 그때는 이명박 정권이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은 KBS에 대한 인적 장악이었습니다. 그 첫 관문이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 줄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기존의 사장,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압박했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KBS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며 그 첫 단추가 자진 사임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공작을 펼쳤다고 합니다,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자진 사임을 거부하니까 정연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서 세 가지 공작을 했는데 첫 번째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입니다.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겠지요. 정연주 사장을 마녀사냥하듯이 도덕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찰의 수사·기소, 온갖 국가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MBC에 대한 탄압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동원하고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지금도 권태선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연주 사장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실시하고, 두 번째 권력기관들 국가사정기관을 동원해서 탄압하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치밀합니다. 당시 다수였던 비여당 성향의 이사들,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공작을 통해서 여당 성향의 이사로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계 개편을 통해서 야당 의원을 여당 의원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여당 성향의 이사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정권에 친화적인 이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못 버티는 사람들은 자진 사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KBS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KBS 사장을 날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KBS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한 것이 당시 MB 정권입니다, 정연주 사장을 KBS 사장에서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당시에 KBS 이사회에서 여당 성향의 이사 수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성향의 이사들이 더 많았는데 나중에는 여당 성향의 이사가 7명으로 늘어납니다. 11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의 이사가 여당 성향의 이사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1명 중의 7명이 여당 성향의 이사가 돼 버리면 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사장 날려 버리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언론탄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전 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국에 정연주 사장은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던 2008년 8월 11일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됩니다. 해임됐습니다, 결국에는. 해임되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 11일에 해임되고 이틀 뒤인 13일 검찰에 의해서 긴급체포됩니다. 체포까지 합니다. KBS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긴급체포하고 정연주 사장을 내쫓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KBS 사장직에서 정연주 사장은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일이 지나고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언론정책을 주무르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형식의 비밀회동을 갖고 친여 성향, 그러니까 MB 정권의 여러 가지 코드가 맞는 이병순 씨를 사전에 사장으로 낙점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병순 사장이 KBS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KBS를 급속히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병순 사장이 KBS를 어떻게 바꿔 놨는지 2008년 친여 성향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각급 본부장 등 KBS의 임원들로 임명됩니다. 팀제가 폐지되고 국장과 부장제를 복원해서 수직적이고 중층적인 관료주의적 통제 시스템이 KBS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장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KBS가 급격히 관료주의적 체제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MB 정권의 여러 가지 지침이나 MB 정권의 정책들이 그대로 그냥 하달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무자들을 제어하는 보수적인 중간·고급 간부의 숫자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보수적

인 중간·고급 간부의 숫자가 3배 이상 늘어나고 결재 단계도 과거 3~4단계에서 7~8단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료주의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재 소요 시간도 두세 배 늘어났습니다. 친여 뉴라이트 성향의 간부들에 의해서 내부통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순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고 그해 10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방송이 정례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매주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신설됩니다. KBS 사장 하나를 바꾸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정례 브리핑을 일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KBS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던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가 폐지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KBS가 윤석열 정권에 장악된 뒤에 KBS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에 그렇게 심했었고 박근혜 정권도 그렇게 이어받았고 그걸 윤석열 정권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계승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독창적으로 언론탄압에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징계가 일상화됐다고 합니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정권의 KBS 장악을 반대하기 위해서 출범했던 KBS 사원행동 소속 기자와 PD 50여 명은 지방이나 한직으로 분산되거나 좌천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KBS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원행동 양승동 공동대표와 대변인은 정직 4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KBS에서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편파·왜곡 보도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화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KBS 장악이 이루어졌습니다.

MBC에서도 이런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기에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의해서 인기 앵커로 활약했던 한 언론인이 신임 사장후보로 추천됐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MBC 주주총회에서 새 사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불공정 보도로 얼룩진 연합뉴스의 사례도 있습니다. YTN 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장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KBS와 MBC에 이어서 국민 교육 콘텐츠의 핵심이자 공영방송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EBS마저 장악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란의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결국 파면됐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 자유를 옥죄면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

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에 의해서 윤석열의 지난 3년은 사실상의 상시적 언론계엄 상태였다, 언론은 상시적인 계엄 상태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4일 한겨레신문 칼럼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봤지 않는가'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제 이 허술한 제도를 제대로 뜯어고치고 정비해 나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민주 세력이, 내란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들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했던 것입니다.

국가는, 정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공정하게 정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 정치의 책임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22대 국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BS 교육방송,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육공영방송 EBS의 과거와 오늘을 잠깐 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EBS 교육방송공사법이 마지막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KBS 방송법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서 EBS 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방송공사의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조가 신속하게 다시 재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EBS의 사장과 EBS의 이사들이 알박기 인사로 이루어지고 그 알박기 인사가 자리를 지키는 일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반드시 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EBS를 만들어야 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EBS 구성원과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EBS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결국 인재, 사람이 자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하나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가 덮쳐 오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EBS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커지고 확대될 것입니다.

먼저 EBS의 법적 근거와 설립 취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EBS는 2000년 1월 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됐습니다.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었던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했습니다.

EBS의 자본금은 1000억 원 정도로 처음에 마련이 됐고요,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EBS의 운영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일부가 아주 조금 EBS에 운영경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경비는 충당이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찬금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제1조(목적)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7조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라디오·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방송시설과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 국제교류, 조사·연구 등 교육방송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허술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 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BS와 MBC와 KBS의 이사회 구성과 그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통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고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고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공영방송 3법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영방송법을, 우리가 방송 3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가 높은 시대 그리고 앞으로 그 막중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동시에 EBS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의 시설로서 제대로 활용돼야 합니다.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에 목적에 맞춰서 EBS의 역할이 끊임없이 확대돼야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BS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원했고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하면서 교육방송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에는 TV와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EBS가 출범했고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되면서 교육공영방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4년에는 수능 강의 서비스 EBSi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EBS 2TV가 개국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EBS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무려 7개나 됩니다. 7

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공영방송입니다. 지상파 3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성과 케이블, IPTV 채널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교육공영방송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 EBS 교육방송공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대한민국 수험생의 동반자를 자처하면서 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2011년 EBS 홍보자료에 실려 있던 한 문장입니다. 이처럼 EBS는 사교육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EBS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그 역할이 더욱 빛났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과서를 복사해 주거나 숙제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학교에 제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EBS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EBS는 세계 최초의 원격교육 지원 학습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를 구축했습니다.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고 최대 36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동 시간대에 라이브로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방송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에듀테크가 학교 기능을 대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EBS가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만 하면 정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EBS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제를 풀어내야 할 주체가 바로 EBS입니다. 그리고 그 EBS를 이끌어야 할 사장이 제대로 된 능력과 그리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낙하산식 인사로 자질도 없는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전리품처럼 내려 꽂아지는 자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EBS를 비롯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영방송 3법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EBS는……

(「잘한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EBS는 위기이자 기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육 공백을 막은 EBS의 공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알박기 인사로만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알박기 인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끝내야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피의 보복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내부의 갈등과 또 분열 이런 것들도 끝내야 됩니다.

정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간부나 임

원진, 경영진으로 올라가면 피의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KBS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KBS 직원들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 어떡해'라고 하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KBS에 큰 기둥들 많은데 5년만 그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5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수십 년이 반복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정치 후견인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선택된 권리,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대의정치를 위임받았으니 국민과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추천하고 이사를 선임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가 집권을 하든 보수가 집권을 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낙하산 인사,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그로 인한 자기검열, 그로 인한 언론 자유의 훼손,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법안이 남았습니다. 교육방송공사법, 여러분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0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10시간 2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20~3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꼭 빼먹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챙겨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슈입니다.

우리는 모임이나 회합 장소에서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러우면 '야, 시끄러워. 지방방송 꺼'라는 얘기를 하지요. 지방방송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방송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 이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방방송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역방송이라고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역방송도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지역을 지켜 나가고 있고 지역 여론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방송들이 있습니다. 지역방송들, 소규모 방송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구의원님들, 비례 의원님들께서도 살고 계시는 그 주변에, 그 지역에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방송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 지역방송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EBS·KBS·MBC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방

송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방송광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고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지역으로 주말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주말 뉴스가 AI 뉴스로 진행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AI 앵커가 나와서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동안에 토요일·일요일 뉴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앵커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잘 보시면 'AI 뉴스'라고 하는 자막이 살짝 들어왔다가 빠질 겁니다. 진짜 앵커처럼 보이지만 AI입니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그 방송사의 앵커를 모델로 만든 AI가 나와서 뉴스를 하는 겁니다. 그 앵커는 그곳에 없습니다. AI 앵커가 내는 목소리도 실제 앵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앵커의 목소리를 따서 AI 앵커가 그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AI 뉴스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역 민방과 지역 MBC에서 AI 뉴스를 도입했습니다. 지역 민영방송에서 정말로 AI 뉴스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CJB 청주방송이 지역 민방 최초로 AI 뉴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JIBS 제주방송이 AI 뉴스를 이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KNN 그리고 G1 방송도 AI 뉴스 도입을 준비하고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역 민방에서, 지역MBC에서 왜 AI 뉴스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I 대전환의 시대에 앞서 가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지역방송들이 AI 뉴스를 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입니다, 돈.

AI 뉴스를 하면 한 방송사에서 토요일 하루 뉴스만 하지 않아도 2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취재기자 그리고 촬영기자, 서너 명의 기술 스태프, 스튜디오 카메라 그리고 편집자, PD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기자 한 명 정도만 나와서 기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자 한 명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I 그 모델에다가 기사를 넣기만 하면 AI 앵커가 그 기사를 실제 방송처럼 방송을 합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다 편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요일 8시 뉴스가 나가는데 이 토요일 8시 뉴스가 생방송 뉴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타이틀이 뜨고 생방송 뉴스처럼 나가지만 이게 AI 앵커가 하는 녹화 뉴스라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에서도, 중앙방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 재해나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기술 스태프 등이 안 나오게 되면 2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AI 뉴스를 시행하고 있고 그 AI 앵커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시청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뉴스는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AI 뉴스가 녹화된 상태로 방송되고 있다는 것,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널리즘

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PD 현업 선후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이 자리에서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기자와 PD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송의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그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난재해,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말 뉴스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예 AI 뉴스 녹화 안 하고 그냥 지역에서 주말 뉴스를 안 하는 그런 방송사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예 토요일이나 일요일 뉴스를 안 합니다. 왜? 토요일, 일요일에 기자나 PD들 현업자들이 나오면 돈을, 월급을 150%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휴일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휴일수당이 부담이 돼서 아예 뉴스를 없애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영방송도 살려 내야 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역의 여론형성과 지역문화의 보존과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켜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분이면 되나요?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직 할 것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껏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조용히 하고 들으세요.

○이정헌 의원 조금 전에 도착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종결하자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종결을 선언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시도, YTN의 민영화 추진,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신동호 EBS 사장 알박기 인사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하수인이 돼서 언론을 탄압하고 표적 심의와 표적 심사를 하고 과징금을 매기고 징계를 내리고 경고조치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탄압하고 입틀막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권이 불러 주는 기사만 보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말씀드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 등 몇 개의 언론사들을 표적으로 심의를 반복했고 중징계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섰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목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그랬고 앞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송 3법의 핵

심입니다.

KBS 방송법 그리고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찬성표를 던져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공영방송 EBS 교육방송공사법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고 교육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의 알박기 사태는 공영방송 장악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신동호 EBS 사장을 알박기 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5년 3월이었습니다. 2025년 3월이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사법부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었던 상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깜깜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알박기 했습니다. 그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정지됐습니다.

이런 식의 표적 심의와 알박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이후에 여러 방통위원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권은 끊임없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법원이 잇따른 제동을 해서 표적 심의와 그리고 과징금 규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낙하산 인사가 내려가고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과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경영진과 편성책임자, 제작책임자, 보도책임자로 앉히고 그 책임자가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순간 모든 기자들과 모든 PD들은 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윗선 눈치 보기와 권력의 비위 맞추기 언론의 행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자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언론사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언론사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활용하고,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의 잘못된 행태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권력자들이 반복됐고 그런 권력자들을 통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한 사람이 나서서 '에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잘해. 우리가 지켜볼게' 뭐 이런 식의

행태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먼 훗날 또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그냥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여전히 잡고 뒤흔드는 지금의 체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그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걸 바꾸면 나중에라도 자신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잘 만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반드시 오늘 교육방송공사법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법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2대 총선 당선되고 국회에 처음 왔을 때 만난 민원인의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 민원인께서 울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입니다. 십여 년 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을 때 여야 정치권들은 앞다퉈서 자기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을 내가 발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했던 정치권들이 만들었던 법안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발목을 옥죄고 제대로 보상하거나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악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정헌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단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때니까 차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제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도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최고의 법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우리가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무를 다하는 것이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방송 3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송 3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지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기존의 체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 집권 여당이 더 많

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려 꽂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 3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권력, 우리의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40% 미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기관들에 넘겨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학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미디어학회가 이사회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그런 평가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미디어학회라든지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이사 추천권과 사장 선임의 권한들을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왜 그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선출되지 않은 단체에게 그 권력을 넘겨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권력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 선임을 하는 그게 권력입니까? 그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정치권력이 그대로 100% 추천권과 선임권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선임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말하면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추천 권한, 권력은 아닙니다. 그런 추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국민을 위한 공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언론환경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집권하든지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22대 국회가 만들어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국민의힘, 우리의 심

의 과정,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반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가 추가 수정을 할 때는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현 간사님 그리고 수많은 언론개혁TF팀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의 필요성,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영국의 BBC 사례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 흘려주는 자본권력의 것도 아닙니다. 협찬 얼마 줄 테니까 기사 빼 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공영방송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민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운영체제가 공영이냐 민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송으로서의 역할, 공기로서의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걸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민영방송에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민영방송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으로서의,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명문화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언론에 종사하는 우리 현업의 기자와 PD들, 현업 언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언론인들이 공영방송에서 일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영방송에서 일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공영에서 일하든 민영에서 일하든 지역의 방송에서 일하든 소규모 방송에서 일을 하든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는 민영방송도 필요하다면, 지역방송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는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영방송이면 보도책임, 보도의 역할이 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방송이 하든 지역방송이 하든 종합편성채널의 보도국에서 뉴스를 만들든 모든 뉴스는 정확해야 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실을 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론 자유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좌파 언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태원은 약간의 동남아 식당 이외에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이삼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서도 좌파 언론을 운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보는 그 사람의 언론관이 그랬던 것입니다. 장악해도 되는 것이 언론이었던 것입니다. 좌파 언론이라고 낙인찍고 각종 심의와 또 징계를 통해서 입을 틀어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언론관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지도자를 택한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 최종적이고 비극적인 결과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의 행위는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이렇게 거듭 축적된 후퇴는 대한민국에 거대

한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복과 재건의 시간입니다. 역사적 악순환을 끊어 내야 할 결단의 시간입니다.

생전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벽에 대고 욕을 하는 국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광장과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결국은 무너뜨렸습니다.

저 이정헌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힘써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언론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독재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에 의해서 무너졌던 언론의 자유를 되살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부디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 EBS를 국민의 품으로 완전히 되돌려 드리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써 주신 분들에게 한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헌 의원실에서 고생해 주신 노경일 보좌관, 김회근 보좌관, 최대혁 선임비서관, 이경만 선임비서관, 장강빈·장지은 비서관, 김현수·박재영·김수연 비서관께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정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이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표결을 하면, 토론을 종결했는데 표결을 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EBS법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게 어제 오전 10시 43분인데 지금 24시간이 지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찬반토론의 내용은 별개로 하고 각자 찬반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지금 이 시대의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에 맡기고 또 국회에서 표결한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리버스터의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데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여야 한 분씩 나와서 24시간을 모두 메꿔 주셨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을 하셨고 이정헌 의원은 10시간 48분을 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아마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했을 텐데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두 분이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준비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박수 치는 것은 잘 없는 일인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보고 박수 쳐라 하는 얘기는 없었던 일인데요. 뭐 그것은 관례라고 하고, 관례도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 국회의원 정말 준비하시느라 수고했고 밤새워 13시간 또 10시간 40분 이렇게 토론해 주신 두 분 국회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문진석 의원 외 165인 서면동의)

(11시01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양부남 의원, 염태영 의원, 오세희 의원, 강경숙 의원, 백선희 의원, 손솔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2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수고 많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1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11시24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

(「잠깐만요」 하는 의원 있음)

제주도의 큰 숲 의원님, 대림 의원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도 아니네요.

투표를 다 했습니까?

이제 더 들어올 사람 없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월22일 11시27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	투표 결과
법제사법	추미애 164 박지원 5 서영교 1 이성윤 1 장경태 1 기권 1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이주영

(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천하람

○출석 의원(29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17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8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청가 의원(4인)

김민석 김윤덕 배현진 유동수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정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보고사항】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법안심사제2	박형수	국민의힘	2025. 8. 1.
보건복지	법안심사제1	김미애	국민의힘	2025. 8. 18.
	법안심사제2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심사	서영석		

○소위원장 개선

위원회	소위원회	사임	보임	교섭단체	연월일
기후위기특별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이소영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2025. 8. 18.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임이자	김소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예산결산심사	정동영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5. 8. 20.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박희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2025. 8. 6.
기획재정	이주희	박민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박민규	이주희		
국방	추미애	박희승		
외교통일	유용원	송언석	국민의힘	2025. 8. 7.
국방	윤상현	유용원		
환경노동	송언석	윤상현		
기획재정	윤호중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2025. 8. 18.
보건복지	이소영	윤호중		
여성	김남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2025. 8. 20.
	백승아	이주희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조승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2025. 8. 6.
	박덕흠	이종배	국민의힘	2025. 8. 18.
기후위기	한정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2025. 8. 20.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5. 8. 5.

○의안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2)
이상 3건 8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4)
이상 2건 8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이상 3건 8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6)
이상 2건 8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8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9)
이상 3건 8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8)

이상 3건 8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4)

8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8월 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5.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6)

8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이상 7건 8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7)

8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2)

이상 5건 8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7)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5.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

이상 2건 8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이상 2건 8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8)

이상 5건 8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근로감독관법안

(2025. 8. 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이상 5건 8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1)

이상 2건 8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1)

이상 2건 8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1)

이상 2건 8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이상 3건 8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7)

8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4)

8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이상 3건 8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0)

이상 4건 8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4)

이상 2건 8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2)

이상 4건 8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0)

이상 2건 8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5)

이상 2건 8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8)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4)

이상 4건 8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1)

8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이상 2건 8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0)

이상 2건 8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2)

이상 2건 8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이상 2건 8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이상 2건 8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0)

이상 2건 8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이상 2건 8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9)

이상 2건 8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7)
이상 2건 8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4)
8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6)
이상 2건 8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이상 9건 8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0)
이상 2건 8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1)
8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2)

이상 3건 8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5. 8. 8. 최형두 의원·박수현 의원·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8)

8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8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1)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7)

이상 2건 8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4)

이상 4건 8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0)

이상 2건 8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1)

8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6)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11.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7)
이상 5건 8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9)
이상 3건 8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1)
이상 3건 8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2)
이상 2건 8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3)

이상 7건 8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5)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7)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5)

8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6)

이상 2건 8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2)

이상 2건 8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5)

이상 3건 8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9)

이상 9건 8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이상 6건 8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2025. 8. 12. 신정훈 의원 등 76인 발의)(의안번호 221213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0)
이상 10건 8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0)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5)
이상 3건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0)
이상 2건 8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5)
8월 1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6)
이상 2건 8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이상 5건 8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9)
이상 2건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5)
이상 7건 8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4)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이상 3건 8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9)
8월 14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6)
8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7)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이상 4건 8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2)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이상 4건 8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이상 3건 8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8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6)

이상 8건 8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193)

이상 2건 8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이상 2건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이상 3건 8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5)

이상 2건 8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0)

이상 2건 8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5)
이상 4건 8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2)
이상 2건 8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이상 4건 8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4)
8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3)
이상 7건 8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7)
이상 2건 8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
이상 4건 8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8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9)
8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0)
이상 4건 8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요청안
(2025. 8. 19. 대통령 제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요청안
(2025. 8. 19. 대통령 제출)
이상 4건 8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이상 4건 8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요청안
(2025. 8. 19.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8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8월 2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8)
8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5)
이상 6건 8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7)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이상 2건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9)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이상 2건 8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6)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2025. 8. 1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3)
이상 3건 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6)
8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2025. 8. 19. 대통령 제출)
8월 2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20. 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국회의원(이춘석) 징계안

(2025. 8. 6. 유상범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12019)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2025. 8. 8. 문진석 의원 등 24인 요구)(의안번호 2212057)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6)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이상 2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

(2025. 8. 5. 이춘석 의원 제출)(의안번호 2212000)

○의안 심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6)
이상 2건 8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
(2025. 8. 4. 최서우로부터 황명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0)
8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8. 21. 장유인 외 54,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규정에 관한 질문서
(2025. 8. 6. 김승원 의원 제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관한 질문서

(2025. 8. 20. 김승원 의원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 제60조 시가 산정에 관한 질문서

(2025. 8. 21. 김종민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역사왜곡 도서의 진중문고 선정 및 폐기 관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부분공개)

(2025. 8. 7. 국방부장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25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25. 8. 4. 금융위원회 제출)

8월 6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24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보고(비공개)

(2025. 8. 12. 외교부 제출)

8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2024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25. 8. 14.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8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

2024년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5. 8. 14. 지방시대위원회 제출)

8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2025. 8. 20. 기준
국회소속기관 간부석
국무위원 보좌석
의 장
사무총장
의사국장
의사과장
의사담당
의사석행
속기사
국무위원석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166
158
8
107
89
18
12
-
12
25
4
3
1
3
2
1
1
-
1
1
1
-
1
4
3
1
252
46
298